

한국 노동운동 리더십의 위기

- ‘이기주의자’라는 ‘정치적 낙인’에 관한 논의 -

유 범 상

목 차

요 약	i
제1장 문제 제기	1
1. ‘이기주의자’라는 정치적 낙인	1
2. 연구 물음	6
3. 주제와 내용	9
제2장 개념과 관점	12
1. 선행 연구: 노동운동의 위기, 리더십, 담론	12
2. 리더십, 헤게모니 프로젝트, 담론정치	22
3. 변혁적 리더와 실리적 조합원	38
4. 한국의 노동운동에 대한 지배담론: 빨갱이, 경제위기 주변, 이기주의 집단	52
제3장 의인의 등장과 리더십의 형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투쟁	61
1. 민주주의의 연대와 담론	61
2. 노동의 시민권 획득과 리더십의 제도화	73
3. 의인들의 등장	95
4. 리더십의 확보: 시민권의 제도화와 대항담론의 사회적 승인	107
5. 내재된 문제들과 어설픈 봉합: ‘전투적 경제주의’	131

제4장 담론정치의 패배와 리더십의 위기 : 강자의 이익을 위한 투쟁	142
1. 위기설의 실현과 세계화 담론	142
2. 유연성의 노동정치와 노동운동의 무기력	155
3. 리더십 위기의 징후들: 거부, 비리, 균열, 경쟁, 단절	177
4. 대안을 위한 논의	201
5. 담론투쟁: 지배담론의 사회적 승인과 노동운동 리더십 위기	219
제5장 요약과 토론	226
1. 요 약	226
2. 성찰과 토론	232
참고문헌	238

표 목 차

<표 2-1> 노동운동 리더의 이념형	42
<표 2-2> 노동조합 조직률 추이	45
<표 2-3> 지배담론과 대항담론	55
<표 2-4> 노동운동 배제의 지배담론	58
<표 3-1> 총파업 지지도	91
<표 3-2> 복수노조 조항 논의 과정	94
<표 3-3> 노사정위원회 전개 과정과 특징	167
<표 4-1> 조합원 규모별 노조 예산운용 관련 부정이나 횡령 등으로 불신임 경험	182
<표 5-1> 경제위기 이후 노동운동 리더십과 담론의 전환	230

요약

현재 노동운동 리더십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것은 엄밀히 말해 노동운동 지도부의 정치적·지적·도덕적 지도력이 조합원들과 시민사회(국민)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글은 그 원인이 노동운동 지도부가 정당성의 위기에 빠져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본다. 그동안 세 가지 차원에서 노동운동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은 담론들로 표현되어 왔다: ‘빨갱이’, ‘경제위기 주범’, ‘이기주의자’. 이들 담론들 중에 현재 ‘노동운동(리더들) = 이기주의자’라는 담론이 가장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노동운동은 (정당성의) 위기에 빠져 있다는 것이 본 논문의 입장이고, 이것을 통해 현재 노동운동 리더십의 위기를 이해하려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이기주의자’라는 담론은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노동운동은 노동자들의 이익을 더 이상 대변하지 않는다. 이것은 노동운동이 비정규직, 중소기업 노동자, 여성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등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이 담론은 노동운동이 소수의 정규직 대기업 노동자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특수 이익집단이라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 담론은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 외에 다수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다른 노동자들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노동운동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까지 담고 있다. 이 담론이 노동운동 또는 그 지도부에게 위협적인 것은 당위적으로 또는 역사적으로 갖고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연대성, 계급성, 보편성, 대표성 등이 한국의 노동운동에는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둘째, ‘이기주의자’라는 답론은 노동운동이 국민경제를 무시한다 것을 내포하고 있다. 즉, 이 답론은 노동운동은 국민경제가, 기업이 그리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자신들만을 위한 임금과 복지에 몰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답론은 노동운동이 ‘경제위기의 주범’이라는 적극적인 공격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 답론이 노동운동 또는 그 지도부에게 위협적인 것은 이제 노동운동의 ‘적’ 또는 ‘상대’가 자본 또는 국가뿐만이 아니라 국민일반 또는 시민사회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현재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승인된 듯이 보이는 ‘노동운동은 이기주의자이다’라는 답론은 노동운동에 대한 정치적 파산 선고, 다시 말해 정치적 낙인효과를 갖고 있다. 즉, 노동운동이 노동자들의 대표성을 갖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과 노동자 일반의 이익에 반하는 이익집단이라는 낙인은 더 이상 노동운동이 정치적 주체가 아니며, 주체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과거, 정확하게는 1997년 말의 경제위기 이전으로 돌아가 보자. 노동운동은 정당성의 승인을 통해 지적·도덕적·정치적 지도력을 조합원들과 시민사회에 갖고 있었다. 이때 노동운동은 노동자들과 시민사회의 ‘의인’으로 인식되었다. 노동자들에게는 그들의 권리와 삶을 향상시키는 존재자로, 시민사회에서는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는 존재자로서 묘사되었다. 즉 개발모델에서 이루어진 모든 억압과 착취로부터 노동자의 국민의 몫을 찾아오는 의인으로서 이해되었다. 따라서 그들에 대한 국가와 자본의 공격이 거세어질 때, 노동운동 지도부는 ‘순교자’, ‘박해자’ 또는 ‘의인’으로 평가받았다. 이 당시에, 현재 공격받고 있는 노동운동의 전투성은 계급성과 변혁성 또는 조합원들의 권익 옹호의 수단이자 존재성의 표현으로 환영받았고, 대기업 정규직 노조들의 투쟁은 일반 노동자들을 위한 ‘선도투’로서 받아들여졌다. 그들의 정치적 이슈에 대한 투쟁은 시민사회의 민주주의를 위한 헌신으로 인정받았다. 따라서 노동자들과 시민사회는 이들의 헌신성과 선구적인 행위를 약자를 위한 투쟁으로 인식했고 그

경제위기 이후 노동운동 리더십과 담론의 전환

	민주화 시기	경제위기 이후
노동운동 리더	순교자, 박해자, 의인	이기주의자, 귀족노조, 경제위기 주범
관련 담론	민주노조, 노동해방, 평등 세상	집단이기주의, 노동귀족
요인	민주노조운동, '전투적 경제주의'를 통한 임금, 복지, 권리의 향상	정규직 대기업 노동자의 고립, 비정규직 증가, 노동운동 내부정치의 실패
정치경제 상황	3저 호황, 권위주의, 개발 모델	외환위기, 절차적 민주주의, 신자유주의적 유연화 모델

것에 대해 감사하는 듯이 보였다.

이 당시에 노동운동에 대한 다양한 담론의 공격이 주기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존재했었다. ‘빨갱이’와 ‘경제위기 주범’ 담론은 물론이거니와 ‘이기주의자’라는 담론도 당연히 노동운동에 대한 공격의 무기로 동원되었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성공한 듯이 보이지 않았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1997년 경제위기 이후 노동운동에 붙여진 스티그마, 즉 ‘이기주의자’라는 담론의 광범위한 사회적 승인과 노동운동의 실천이 강자의 이익을 위한 투쟁으로 인식되는 것은 노동운동이 담론투쟁에서 패배한 것을 의미한다. 담론투쟁의 패배는 두 가지 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첫째, 실제로 그런 담론이 그럴듯하게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질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 둘째, 그러한 사실이 사회적으로 승인될 뿐만 아니라 확대 재생산되어 권력관계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시선’이 되거나 되는 구조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객관적인 사실과 관련하여, 두 가지가 지적될 수 있다. 첫째, 노동시장의 분절화에 앞에서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만이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 그리고 둘째, 그동안 노동운동이 임금인상의 정치에 몰입함으로써 시장에서 탈락한 노동자들이 사회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 또는 사회보장의 사회제도를 만드는 데 기

여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이상의 ‘사실들’ 중에 첫 번째 것은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즉 기업별노조와 관련이 있다면, 두 번째 것은 노동조합의 성격 및 전략, 즉 실리주의적 노동조합주의와 관련이 있다.

이상의 사실들을 참조한다면 노동운동이 이기주의자라는 정치적 낙인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대안들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기업별노조에 대한 대안으로서 산별노조 건설이고 실리주의적 노동조합주의에 대한 대안으로서 사회적 노동조합주의 또는 변혁적 노동조합주의이다.

산별노조 전환과 관련하여 우선 형태뿐만 아니라 내용까지도 진정한 산별노조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진정한 전환과 관련하여 계급적 차원의 단결과 통일성의 확보 및 비정규직을 포괄하는 연대성의 추구는 물론, 산업 내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임금조건 및 노동조건 통일적 구조를 만드는 것을 지향해야 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조직형태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노동과 자본이 산별 노동조합을 승인하도록 만들어야 하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노동조합은 기업주들 및 정부와 임단협 및 정치적 요구들을 관철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실리주의적 노동조합의 극복과 관련해서는 노동조합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를 우선적으로 필요로 한다. 그동안 노동운동은 자신의 이념을 형성하는 데 실패하고 다양한 분파 또는 정파들의 각축장이 되어 왔다. 따라서 이들간의 토론과 논쟁을 통해 노동운동의 정체성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노동운동은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가운데, 이러한 자신의 정체성과 이에 기반한 어젠다는 외부화되고 수용될 수 있는 시민사회와 정치사회에서 정치적·제도적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한편, 담론의 생산과 유포를 통한 헤게모니 장악의 전략이 논의되어야 한다. 이것은 담론생산과 담론투쟁의 영역, 즉 판매와 유통의 영역에서 논의될 수 있다. 생산과 관련해서는 어떤 어젠다와 정책을 개발할 것인지가 논의되어야 한다. 어젠다는 노동자들의 작업장 내

에서의 이익, 즉 임금이나 기업복지뿐만 아니라 계급 전체의 이익 또는 국민으로서의 이익을 확보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상의 어젠다들과 이와 연관된 담론의 생산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점은 소위 당파적 내용의 지식체계를 동원할 수 있는 유기적 지식인과 그들의 역할이다. 따라서 노동조합과 사회단체 또는 진보정당의 연구소를 보다 체계적으로 활성화하고 유기적 지식인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어젠다와 담론은 구체적인 정책을 통해 실현되어야 한다. 이것은 노동운동이 정책을 만들고 동시에 정책형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을 의미한다. 사실 그동안 노동운동이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기간 동안에 새롭게 열린 정치적·정책적 공간을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노동운동은 이제 복지제도의 발전, 사회보험 운영 참여, 교육과 직업능력개발, 공공기관 운영 참여, 경제사회정책 참여 등 큰 틀에서 국가의 사회적 운영체제에 참여하는 구조 구축과 그런 참여구조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확보하는 매개로 활용하는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한편 담론투쟁의 영역과 관련해서는 첫째, 소위 ‘조중동’으로 불리는 보수언론과 다양한 자본과 국가의 매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함께 대안언론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이것은 향후 인터넷을 활용하는 것에서부터 대안매체의 창출까지 다양하게 모색되어야 한다. 그리고 둘째, 조합원뿐만 아니라 일반 노동자 또는 국민들이 지배담론에 길들여지지 않도록 다양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이것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내부민주주의 활성화와 함께 사회적 연대를 통한 시민사회와 정치사회에 대한 노동운동의 개입일 것이다.

제 1 장 문제 제기

1. ‘이기주의자’라는 정치적 낙인

한국의 노동운동은 1987년 노동자대투쟁으로부터 1997년 경제위기 이전까지 10년의 짧은 기간에 급속하게 성장해서 시민사회와 정치사회에서 시민권과 리더십을 획득한 듯이 보였다. 이 기간 동안에 노동운동은 파업과 단체협약 등을 통해 조합원들의 이익을 급속히 증진시켰고, 노동조합 내부민주주의를 제도화했고, 정당정치 참여 등을 통해 정치세력화의 길을 모색했으며, 노동법 개정과 사회정책 등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공했다. 특히 1996년 말의 노동법 개정 반대 총파업은 시민사회로부터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정치사회에 영향력 있는 행위자로 성장했음을 알리는 계기였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노동운동은 위기에 빠져 있는 듯이 보인다. 조직률이 1989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해 와서 현재 한 자리수로 떨어지기 직전에 있고 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대안으로 제시된 산별노조를 위한 발걸음은 더디며, 일정한 성공을 거둔 것으로 보였던 사회적 협의의 제도화와 정치세력화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기 힘든 상태에 있다. 특히 최근에 비정규직의 확산과 고용위기에 대항해서 전개한 노동운동의 파업들은 번번히 좌절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치적 행위자로서의 노동운동의 존재성 자체를 부정하는 사회적 인식이 급격히 확

2 한국 노동운동 리더십의 위기

산되고 있다. 노동운동은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과 노조 간부들만의 ‘이기주의 집단’ 또는 ‘귀족노조’, 비리와 부패로 얼룩진 집단, 북한 정권에 동조해 온 ‘빨갱이’ 등의 비판을 받고 있고, 국민경제를 외면하는 ‘천덕꾸러기’ 또는 ‘공공의 적’으로 취급받는 경향이 있다. 즉, 더 이상 한국의 노동조합이 진보적인 단체로서 민주주의와 국민들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일반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시민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이처럼 현재 한국의 노동운동은 조직률과 조직구조 등 객관적인 지표에서뿐만 아니라 노동운동에 대한 사회적 지지 측면에서도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운동은 위기를 인정하고 내부 논쟁과 혁신을 통해 노동운동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해 오고 있지만, 현재로선 이같은 흐름이 쉽게 반전될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본 논문은 이상의 한국 ‘노동운동의 위기’ 대신에 ‘노동운동 리더십의 위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그 리더십의 위기를 ‘이기주의 집단’ 또는 ‘귀족노조’라는 담론, 다시 말해 노동운동에 덮어씌워진 정치적 낙인¹⁾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려는 시도이다. 즉 이 논문은 노동운동이 이기주의 집단인지에 대한 검증이 아니라 이기주의 집단이라는 낙인을 찍히게 된 근거를 찾아내고 노동운동을 이기주의 집단 또는 귀족노조로 호명하는 것이 노동운동 리더십에 치명적인 이유를 밝히려는 것이다.

이처럼 본 논문이 ‘노동운동의 위기’라는 용어 대신에 ‘노동운동 리더십의 위기’라는 용어를 선호하는 이유는 첫째, 노동운동의 위기를 노동운동 지도부의 전략과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서 분석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노동운동 지도부와 조합원 또는 노동운동 지도부와 국민(또는 민중)의 관계에 분석의 초점을 맞춘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리더십

1) 낙인의 사전적인 의미는 한 번 붙여지면 좀처럼 씻기 어려운 불명예스러운 평가나 관정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이다. 노동운동이 이기주의 집단으로 호명되는 것을 낙인으로 보는 이유는, 노동운동에 대한 이같은 평가가 노동운동을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집단으로 보기 때문에 매우 치욕스럽고 불명예스럽다는 점과 한국사회의 보수화의 경향 속에서 당분간 이 평가가 지속될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을 정치적인 것으로 보는 이유는, 이 담론이 이면에 권력관계의 변형을 목표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담론의 효과가 해계모니적·정치적이기 때문이다.

이라는 개념이 기본적으로 리더와 추종자(leader and follower)의 관계를 전제로 해서 성립될 뿐만 아니라 리더십 분석이 리더의 특성이나 리더와 추종자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리더십의 차원에서 노동운동을 살펴보려는 시도는 노동운동의 리더십의 위기를 동의, 정당성, 헤게모니 등의 차원에서 분석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리더십이 물리력이나 강제와 친화적이라기보다는 사회적 동의나 정치적 정당성 또는 이데올로기와 연관된 개념이기 때문이다.

한편, 본 논문이 리더십의 위기를 ‘이기주의’ 또는 ‘귀족노조’라는 담론에서 찾는 이유는 이 담론이 노동운동의 정당성을 가장 근본적인 차원에서 비판하고 있고 따라서 현재 노동운동의 리더십을 ‘결정적으로’ 훼손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노동운동을 특정 노동자들 중 일정 부분만을 위한 이기주의 집단으로 낙인찍고 있는 이 담론은 노동운동을 정치세계와 시민사회의 하나의 주요 주체라는 것을 부인함으로써 노동운동의 존재 자체를 의문시하고 노동운동을 정치와 사회로부터 고립시키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²⁾

그렇다면 이기주의자라는 담론은 어떤 의도를 그 안에 내포하고 있는

2) 담론 차원에서 볼 때, 그동안 한국의 노동운동에 대한 전통적이면서 주요한 공격은 대체적으로 세 가지였다: ‘빨갱이’, ‘경제위기의 주범’, ‘이기주의 집단’. 냉전반공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사회에서 노동운동에 대한 공격으로서 ‘빨갱이’ 담론은 노동운동을 제압하는 데 가장 손쉽고 효과적인 수단이었지만 1987년 민주화 이후부터 그 효용성이 의심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 자본주의의 순환적 위기와 한국 자본주의의 취약성을 기반으로 한 경제위기의 주범이라는 담론은 ‘경제위기설’ 담론에서 파생된 것으로서 세계의 모든 나라에서 노동운동에 대한 고전적인 공격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너무 자주 사용되어 ‘양치기 소년’처럼 취급됨으로써 급박하고 가시적인 위기의 상황을 제외하고는 노동운동에 대한 결정적인 공격을 가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 보였다. 이런 점에서 두 담론이 여전히 노동운동을 공격하는 주요 수단이지만 현재의 노동운동에 대해 기존과 같은 정도를 효과적인 지배담론으로서의 무기로 기능하지 못하는 듯이 보이는 반면, 노동운동을 ‘이기주의 집단’ 또는 ‘귀족노조’로 규정하고 있는 지배집단의 담론의 정치는 현재 신자유주의적 정치경제 상황을 배경으로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노동운동의 공격의 선봉에서 효과적인 헤게모니 프로젝트로 기능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특히 이 담론은 경제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의 전변화와 보수화된 정치구도를 배경으로 경제위기의 주범이라는 지배담론의 호위를 받으면서 시민사회에 대한 더욱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중이다.

4 한국 노동운동 리더십의 위기

가? 이것은 첫째, 노동운동이 노동자계급 일반의 이익 또는 국민을 위한 운동이라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부정함으로써 노동운동의 위상과 기능을 노동자들 중에 특정 부분을 위한 하나의 이익집단으로 협소화시킨다:

결국 민주노총은 양적으로는 전체 노동자의 4%에 불과하고 질적으로는 대기업 정규직에 너무 많이 치중된 귀족노조이기 때문에 민노총이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1,500만 노동자의 희망’은 그야말로 민노총의 희망사항에 불과하다(이재교·김혜준, 2007: 23).

더 나아가 둘째, 이것은 특정 노동자들 이외의 다른 노동자들의 이익 또는 국민 일반의 이익을 침해함으로써 자신의 목적을 취하는 집단으로 묘사함으로써 노동운동이 윤리적 또는 도덕적으로 큰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설파한다.

이처럼 이기주의 담론은 노동운동이 특정 그룹만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익집단이며 도덕적으로 결함있는 집단이라는 의미의 해석틀을 제공하는데 이것은 두 가지 차원에서 담론 효과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노동운동을 정치적 영역에서 거세하는 효과를 갖는다. 정치가 공공성을 지향하는 행위 영역이라고 했을 때, 노동운동의 정치는 연대성을 기반으로 평등과 진보를 지향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측면이 존재하여 왔다. 예를 들어 서구에서 노동운동은 복지국가 형성과 유지의 핵심적인 지지 세력이자 주요 정치적 행위자로 기능해 왔다. 그런데 이기주의 집단이라는 낙인은 노동운동보고 더 이상 공공성의 정치 영역에서 활동하는 것을 그만두라는 것으로서 한 마디로 이제 공공성을 지향하는 정치의 장, 다시 말해 ‘링 밖으로’ 나가라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 담론은 현재의 노동운동 지도부가 특정 이익의 한 분파라는 점을 은연중에 설파함으로써 노동운동의 대표성을 문제삼는 정치적 효과를 갖고 있다. 즉 이 담론에서는 한국의 노동운동이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에 불과하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대표성은 물론 노동자들 일반의 지분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묘사된다. 이런 점에서 이 담론은 노동운동을 정치적 존재로 또는 정치적 파트너로 더 이상 인식 또는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는, 이 담론은 노동운동을 사회로부터 고립시킬 뿐만 아니라 노동

운동 리더들을 조합원들로부터 고립시킨다. 즉, 이기주의자라는 담론은 노동운동을 국민경제나 노동자 일반의 이익 대신에 특수 이익만을 추구하는 협애한 이익집단으로 규정함으로써 노동운동이 시민사회에서만뿐만 아니라 조합원 일반으로부터 지지와 동의를 받지 못함으로써 노동운동 리더십의 상실로 귀결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³⁾

결론적으로, 노동운동이 이기주의 집단이라는 낙인은 원래 노동운동에 부여된 정치적 역할 또는 기능인, 계급 또는 노동자 일반이라는 존재와 변혁이라는 실천과 연결된 정체성에 대한 의심을 내포하고 있고 결국 그들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총체적으로 문제삼는 정치적 효과를 갖고 있다. 이것은 노동운동을 정치의 영역에서 추방하려는 즉, 노동운동을 이익 집단 수준의 정치로 한정하려는 전략일 뿐만 아니라 존재성 자체를 문제삼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상에서 보듯이 이 논문은 노동운동에 덧씌워진 ‘이기주의’ 또는 ‘귀족노조’라는 담론 또는 담론정치(politics of discourse)에서 노동운동 리더십의 위기를 규명하려는 시도이다. 이러한 시도는 몇 가지 점에서 특징적일 수 있다. 첫째, 담론이 하늘로부터 떨어져서 존재하지 않고 세력들간의 정치경제적 관계, 즉 물질성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담론 분석은 노동운동이 서 있는 위기의 정치경제적 구조 분석을 전제한다. 더 나아가 이 논문이 담론 분석인 한, 이러한 시도는 일상적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미시적인 수준의 정치를 간과하지 않는다. 즉 담론정치에 대한 분석은 거시적인 수준의 물질성에 기반해서 일상적인 차원의 담론 구조, 의미, 그리고 효과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담론정치에 대한 분석은 기존의 한국 노동운동 논의를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논의는 주로 권력자원설 또는 노동운동

3) 이 논지에서 유의할 점은 노동운동 지도부 일반이 노동조합 조합원 일반, 더 나아가 노동자들 일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있다. 하지만 개별 사업장 단위에서 보면 정규직 조합원들은 자기 사업장 노조(혹은 산별노조 기업별지부)가 되레 자신들의 이익(실리)을 더욱 보장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이런 점에서는, 즉 조합원들이 자기의 특수 이익을 추구하는 리더를 더욱 지지한다는 점에서는, 특정 노조의 조합원들은 자신의 지도부가 오히려 더 ‘이기적인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6 한국 노동운동 리더십의 위기

의 내부민주주의의 차원에서 노동운동 위기를 분석해 왔다. 즉 권력자원 설에 근거한 입장의 경우 노동조합 조직률이나 기업별노조나 산별노조와 같은 노동조합의 조직구조에 초점을 맞추어 노동운동 위기를 분석해 왔다면 민주주의 분석의 경우, 한국 노동운동의 민주주의의 위기에서 노동운동의 위기를 설명해 왔다. 하지만 기존 연구는 담론정치의 차원, 즉 정당성이나 동의의 개념을 통해 노동운동을 분석하는 데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담론정치는 노동운동의 위기를 정당성이나 해게모니 차원에서 설명함으로써 기존 논의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요약하면, 본 논문은 노동운동에 대한 하나의 사회적 낙인, 즉 귀족노조 또는 이기주의 집단이라는 담론에 주목하여 노동운동 리더십의 위기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것은 노동운동 리더십에 대한 결정적인 도전이 노동운동을 윤리적으로 타락한 이기주의자로 규정하는 데 있고 이 규정이 조합원과 시민사회에 ‘그렇듯한’ 증거와 함께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이 노동운동의 정당성을 훼손함으로써 정치적 존재로서의 위상을 거세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담론은 정치경제적 상황과 권력관계와 같은 물질성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논문은 담론정치를 매개로 한 노동운동 리더십의 위기에 대한 정치경제적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2. 연구 물음

이상에서 언급했듯이 현재 노동운동에 붙여진 이기주의자라는 낙인은 노동운동 리더십의 위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키워드 중의 하나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노동운동은 진실로 이기주의 집단인가? 이것에 대해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가?

현재의 노동운동이 이기적이라는 평가받을 만한 개연성 있는 근거가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예를 들어, 첫째, 현재 노동운동 조직이 대기업 정규직 기업별노조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노동운동의 활동이 이같은 조직구조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실제 최근의 일련의 과정에서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

다. 이런 맥락에서 둘째, 현재 정규직 노동조합이 비정규직에 관한 문제에 무관심하거나 심지어 그들의 조직화를 방해하는 사례까지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노동운동의 조직 근거인 연대성과 계급성에 대한 심각한 훼손으로 비쳐지고 특히 노동운동이 이기주의자라는 평가에 핵심적인 논거로 활용되고 있다. 셋째, 노동운동 리더들이 계급이익과 공적 이익을 위해 헌신한다기보다는 자신들의 조직이익과 개인적인 이익, 예를 들어 직위를 얻기 위한 싸움에 몰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각급 조합원 선거와 연맹, 산별, 중앙조직 선거에서 다양한 정파들은 선거 경쟁을 지속해 왔는데, 이러한 경쟁이 조합원과 계급이익보다는 분파와 개인들의 이익에 치중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아 왔다. 마지막으로, 노동운동 리더들이 부패와 비리에 광범위하게 노출되어 왔음이 드러나고 있다. 이것은 노동운동 리더들이 노동운동의 대의를 저버리고 관료화되었거나 사욕의 추구에 자신들의 직위를 동원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운동 지도부를 이기주의 집단으로 비판하는 것에 선뜻 동의하기 힘든 입지점은 그 확신의 정도가 점차 낮아지고 그 효과가 점차 줄어들고 있을지라도 노동운동 리더들이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노동운동을 민중운동 또는 변혁운동이라고 생각하고 헌신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점에 있다. 즉 1970년대 민주노조운동 이후 1980년대 노동운동 지도부는 전태일과 민주노조에서 그 정신을 찾았고 이것의 실천을 공유해 왔으며, 1980년대 이후 새로운 세대에 속한 지도부들 또한 다양한 현장조직과 학습을 통해 이념이나 의식을 계승해 왔으며, 이로 인해 노동운동 리더들의 실천 방식이나 태도는 1990년대를 경유하면서도 크게 바뀌지 않았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노동운동 지도부는 산별노조 건설을 중심으로 한 조직개편, 이념에 기반한 정파의 형성, 정당 건설을 통한 정치세력화의 모색, 삼자협의기구를 중심으로 한 사회정책의 개입, 노동자 일반과 국민을 위한 총파업 등 정치적·사회적 실천을 지속해 왔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이상에서 보듯이, 노동운동이 노동자 일반의 이익을 반영하기보다는 일부 조직의 이익만을 반영한다는 주장의 객관적 논거가 존재함에도 불

8 한국 노동운동 리더십의 위기

구하고 노동운동 리더들의 의지, 이념 그리고 실천의 측면에서 볼 때 귀족노조 또는 이기주의 집단으로 매도될 수 있는 조건과 증거를 충족시켰다고 볼 수만은 없다. 따라서 노동운동을 소수를 위해 헌신하는 ‘탐욕스러운 자’로 규정하는 데는 보다 많은 논쟁과 토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노동운동 그리고 그 리더들은 확실히 이기주의 집단 또는 귀족노조라는 평가를 시민사회로부터 광범위하게 받고 있다. 하지만, 노동운동은 항상 이기주의 집단, 귀족노조, 국민경제의 훼방꾼이라는 평가를 받아 온 것이 아니다. 1997년 경제위기 이전 노동운동은 분명히 다른 평가를 받고 있었다. 경제위기 이전, 노동운동은 약자, 노동자와 국민의 ‘의인’으로 환호를 받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경제위기 이후로는, 이러한 평가가 180도 바뀌어 노동운동은 귀족노조, 이기주의자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광범위하게 유포되었다. 사실, 한국의 자본과 권위주의 국가는 어느 시기를 막론하고 노동운동을 이기주의자, 빨갱이, 국민경제의 훼방꾼 등의 담론을 통해 순응시키고자 해왔는데 전자의 시기에 이들 담론이 시민사회와 노동자들에게 크게 동의를 얻지 못했다면, 후자의 시기에 특히 이기주의자라는 담론이 시민사회와 노동자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면, 노동운동 지도부들이 일관된 자신들의 진정성과 헌신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진정성과 헌신성이 의심받고 급기야 이기주의자로 매도되고, 실제 그들의 행위가 조합원 일부의 이익에만 기여함으로써 리더십을 상실하게 되는 이같은 현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우선 이 질문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대답은 노동조합 조직구조에서 해답을 찾으려는 시도이다. 이것은 한국노동조합의 조직구조, 즉 산별노조 체제가 아닌 기업별노조로부터 기인한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이 설명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이것이 다음의 질문, 즉 “1997년 이전에 비슷한 조직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는 왜 이기주의자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는가”에 답하지 못한다. 다음으로, 경제위기와 노동시장 유연화와 같은 경제적인 변화 등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경제위기설은 국가와 자본으로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비정규직 노동자도 경제위기 이전에 이미 상당한 수준에 육박해 있었다

는 점에서 이러한 요인들이 객관적인 요인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노동운동이 이기주의자로 불리게 되는 직접적인 설명 요인은 되지 않는다고 본다. 이 밖에도 노동운동 내부 문제, 즉 부패와 비리 또는 내부민주주의의 취약성 등에서 위기의 답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다. 노동조합에 대한 이러한 사실들 또한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놓는 데 기여했을지는 몰라도 이기주의자라는 담론에 대한 결정적인 대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본 논문의 입장이다.

본 논문의 이상의 논리와 문제 의식에 기반하여 다음의 연구 물음과 전제를 가지고 있다. 노동운동에 대한 지배세력의 담론(지배담론)은 ‘빨갱이’, ‘경제위기 주범’ 그리고 ‘이기주의 집단’ 또는 ‘귀족노조’였고 이 담론들에 기반한 공격은 항상적으로 행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운동은 민주화 이후 1997년 경제위기 이전에 ‘사회적 약자와 국민을 위한 의로운 자’, 즉 의인, 순교자, 박해자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노동운동의 이러한 평가가 크게 달라져 ‘강자의 이익을 위한 집단, 즉 이기주의 집단, 경제성장의 천덕꾸러기,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집단 등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즉 노동운동은 ‘약자를 위한 투쟁’으로부터 ‘강자의 이익을 위한 투쟁’의 집단으로 평가가 바뀌었다. 본 논문의 전제는 이것이 노동운동 지도부와 조합원들의 성격에 급격한 변화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양 시기를 통틀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노동운동 리더들은 자신들의 이념에 헌신성을 갖고 있는 반면에 조합원들은 실리적 경향을 보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이것이 본 논문의 주제이자 연구 물음이다. 즉 본 논문은 노동운동이 이기주의자인가 아닌가를 규명하기보다는 노동운동을 이기주의자로 규정해 온 지배담론이 시민사회에서 헤게모니를 갖게 됨으로써 노동운동 리더십이 위기에 처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들이 무엇인지를 찾는 데 그 목적이 있다.

3. 주제와 내용

본 논문은 노동운동 리더십의 위기가 정당성의 상실, 즉 이기주의 집

단과 귀족노조로 규정된 담론정치의 패배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이것의 원인과 그 효과를 분석해 보려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에서 보듯이 이 논문은 첫째, 노동운동을 둘러싼 담론들을 분석할 것이다. 이들 담론은 영역과 관련하여 국가 차원과 노동정치의 두 가지 차원에서 존재하고, 담론 주체와 관련하여 지배담론과 저항담론의 두 차원으로 존재한다. 본 논문은 국가 영역의 지배담론으로 반공주의, 발전주의, 세계화담론, 노동정치영역의 지배담론으로 빨갱이, 경제위기 주범, 이기주의 집단을 상정하여 논의한다. 한편 국가 영역의 저항담론으로 민주주의, 사회공공성, 노동정치 영역의 저항담론으로 민주노조, 노동해방, 연대성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이 논문은 노동운동의 리더십 분석이므로, 노동운동의 리더와 추종자, 즉 지도부와 조합원의 특성과 관계를 언급할 것이다. 본 논문은 이것이 대체적으로 ‘이념적인 리더와 실리적 조합원’으로 특징지워질 수 있다고 본다. 즉 노동운동 지도부들은 특정 이념과 관련된 입장을 견지하면서 실천해 왔다면 조합원들은 임금인상, 기업복지 등의 경제적 실리와 관련된 것을 주요하게 요구해 왔다고 본다.

셋째, 담론정치가 일정한 정치경제적 토대와 내부정치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본 논문은 구체적인 담론이 서 있었던 정치경제적 구조, 권력관계, 그리고 노동운동 내 내부정치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것은 1997년 말 경제위기가 결정적인 국면이었다고 보고 그 이전과 그 이후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상의 주제들은 본 논문에서 5개 장으로 나뉘어져 고찰될 것이다. 제1장은 이 논문의 목적과 의도 그리고 주제를 명확히 하는 데 할애하였다. 즉 여기에서는 이기주의자라는 노동운동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연구 주제라는 점과 이 낙인이 헤게모니 담론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서술되어 있다.

제2장은 우선 본 논문의 연구 주제와 관련된 기존 연구 검토를 하고 있다. 즉 노동운동 위기에 대한 설명으로서 권력자원설, 내부민주주의, 운동노선 등이 검토되었을 뿐만 아니라 노동운동 리더십에 대한 연구 및 노동운동에 대한 담론 연구가 서술되었다. 이 논의를 통해 담론정치 분

석이 노동운동 연구에 행해져야 하는 이유를 논의하였다. 다음으로, 본 논문에서 핵심적인 연구 관점을 제공해 주는 개념과 이론들이 소개되었는데, 그것은 리더십, 헤게모니, 담론이론 등이다. 여기에서 담론은 헤게모니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리더십의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서술되었다. 나머지 마지막 두 절들은 한국의 노동운동이 이념적 리더와 실리적 조합원으로 특징지워진다는 사실과 한국 노동운동에 대한 지배담론이 빨갱이, 경제위기 주범, 이기주의 집단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제3장과 제4장은 서로 비슷한 범주에서 대비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3장은 노동운동이 민주화 시기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투쟁’이라는 사회적 승인과 함께 리더십을 형성했다면, 제4장은 세계화 시대에 ‘강자를 위한 투쟁’이라는 사회적 승인과 함께 리더십을 상실하게 된 장면을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설명은 정치경제, 노동운동의 국가정치활동, 내부정치, 담론정치 수준에서 설명하고 있다. 제5장은 이상의 논의들을 재정리하고 노동운동이 담론정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필요성과 방법에 대해 토론한다.

제 2 장

개념과 관점

1. 선행 연구 : 노동운동의 위기, 리더십, 담론

가. 노동운동의 위기 : 권력자원, 민주주의, 운동노선

노동운동의 위기에 대한 논의는 크게 노동운동 권력자원의 취약성과 그 원인, 노동운동 내부민주주의의 부재, 그리고 잘못된 노동운동 조직노선에서 찾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권력자원설보다 더 나아가서는 구조적 제약의 관점에서 노동운동 위기를 보는 견해는 신자유주의라는 정치경제적 환경변화와 노동운동의 권력자원의 취약성에서 노동운동의 위기를 찾고 있다. 즉 이 논의들은 주로 조직률, 대중동원력, 기업별노조 중심의 조직형태, 정부의 노동통제, 신자유주의와 자본의 세계화 등의 권력자원과 권력관계의 변화에서 노동운동 위기를 설명하는 경향이 있다. 이 입장은 거의 대부분의 논자들이 언급하고 있는데, 이들은 공통적으로 기업별노조의 한계에서 노동운동의 위기를 찾는 경향이 있다(조효래, 2005).

본 글은 권력자원설이 노동운동 위기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제공하지만, 1987년 이후 권력자원의 취약성과 불균형적인 권력관계에도 불구하고 노동운동이 조합원들과 시민사회로부터 지지를 받고 시민권을 획득했다는 점과, 이후 정치세력화와 내부민주주의 등의 제도화와 산별노조 건설의 진전, 정당정치와의 진출 등 오히려 강화된 권력자원에도 불구하고

하고 위기에 빠져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권력자원으로만 현재 노동운동의 위기를 설명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본 글은 “최고의 권력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그들이 원하는 결과를 항상 갖지 못한다는 역설”(Nye, 2004: 29)을 자주 목격하듯이 노동운동의 위기를 권력자원을 중심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연성권력, 해계모니, 사회적 동의, 정당성 등과 연결되어 있는 리더십 개념을 통해 노동운동 위기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도 의미있는 시도라고 생각한다.

권력자원설이 주로 노동운동 외부에서 노동운동 위기를 설명하려는 시도라면, 민주주의의 취약성을 통해 노동운동을 설명하려는 시도는 노동운동 내부로부터 노동운동 위기를 설명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논의들은 “학계나 노조진영 특히 민주노조진영에서도 제기되지 않아 오다가” 최근에 제기되었는데(신진교·윤영삼, 2001; 김재훈·조효래, 2005; 박태주, 2001), 그 이유는 ‘민주노총의 지도력 위기 발생’과 ‘향후 산별노조 건설’ 일정에서 관료제 문제 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신진교·윤영삼, 2001: 217~218). 이처럼 내부민주주의 논의는 그동안 ‘민주’노조 또는 ‘민주’노총의 명칭에서 보듯이 1970년대 이후 기존 노동운동에 대항해 등장한 새로운 노동운동이 당연히 민주적일 것으로 보고 민주주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는데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것을 노동운동의 위기로 지목하고 있다(황기돈, 1997; 조효래, 2004). 이처럼 이 연구들은 민주주의 문제로부터 민주노조진영도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지적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한국 노동운동이 국가의 ‘정치적’·경제적인 외부 환경에 크게 종속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노동운동 위기를 설명하는 데 이 연구들도 일정한 제약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동운동 위기는 운동노선으로부터 설명되기도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운동노선이 노동운동 위기를 초래했다는 것으로서 크게 노동운동 내 좌파와 우파, 즉 한편으로는 PD계열의 현장파와 이와 유사한 노선에 있는 좌파, 다른 한편으로는 NL계열의 국민파와 이와 유사한 노선에 있는 노동운동 내 우파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좌파 쪽의 주장은 우파의 합법주의적, 개량주의적, 기회주의적, 정치적 경제주의적 노동운동 노

선이 노동운동의 현재의 위기를 불러왔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김창우(2007)는 그의 전노협에 대한 연구에서 전노협 정신으로 대표되는 ‘자주성, 민주성, 투쟁성, 연대성, 변혁지향성’이 청산됨으로써 한국의 민주노조운동이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 중심의 조합주의, 경제주의 운동으로 후퇴하게 되었다고 보고 있다(동일한 입장으로는 김세균, 1997; 김승호, 2004; 선지현, 2005). 이와는 달리 현재 노동운동 다수를 점하고 있는 국민과와 이에 동조하는 계열의 활동가들은 노동운동 위기의 원인이 그간의 노동운동의 전투성에 있다면서 사회개혁투쟁 강화 또는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 노선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천으로서 유연한 투쟁전술과 노사정위원회의 참여노선을 제시한다(김유선, 1998; 이병훈, 2004; 박승욱, 1992, 2004).

운동노선과 연관된 것으로서 이념에 초점을 두고 노동운동 위기를 지적하는 연구들이 또한 존재하는데, 이종훈(2004)은 “현재 민주노조운동의 위기는 ‘기존 노동자운동의 통합성을 상실한 정당성의 위기’와 ‘노동자 내부의 정규직·비정규직, 여성·남성, 이주·내국인의 분할, 위계화로 인한 대표성의 위기’로 압축될 수 있고 더욱 근본적으로 민주노조운동의 좌표(이념적 상실)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pp.55~56). 유범상(2005)은 노동운동이념을 통시적으로 서술하면서 한국의 노동운동에서 상당히 많은 이념과 정파가 존재했지만, 이들은 이념들간의 논쟁의 빈곤, 이념과 연관된 구체적인 정책의 불충분한 생산, 그리고 각 이념 집단이 조합원들간의 커다란 간극으로 인해 결국 위기에 처해졌다고 진단하고 있다.

운동노선과 관련한 연구들이 노동운동 내 정파들간의 내부정치, 이념 및 정체성과 관련된 노동운동의 위상 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해 주지만 이러한 논의 역시 구조적인 문제와 노동 주체들간의 권력관계의 문제가 또한 노동운동을 강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운동 위기 분석을 위해 다른 영역 연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노동운동 위기는 권력자원, 내부민주주의, 운동노선 및 이념 등에서 설명되어 왔다. 하지만 이들 원인들은 상호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원인으로 치환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많은 논자

들은 이들 원인들을 상호 연관시켜 논의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임영일(2003)은 이념적·정책적 정체성, 계급대표성, 권력자원의 약화, 노동운동 리더십의 차원에서 노동운동 위기를 설명한다. 이처럼 노동운동 위기의 원인이 다양한 차원에서 제기되어 왔고 제기되고 있다. 위기가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기의 현상, 원인, 진단 그리고 대안들은 이들 논리에 기반해서 찾아야 할 것이다.

나. 노동운동 리더십에 대한 연구들

리더십 일반 이론들을 노동운동 리더십에 적용하는 데 일정한 어려움이 따른다. 이것은 일반 이론이 최고경영자나 관리자에 초점을 맞추어 발전했다는 데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학에서 주로 사용된 변형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을 노동운동에 적용한 연구들이 존재하는데, 장종원(2003)은 노조지도자의 리더십 차원으로서 조직이론의 리더십 논의에서 변형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을 설정하고⁵⁾ 노조가치, 노조몰입 및 노조탈퇴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

4) 리더십 이론은 여전히 경영학 분야, 특히 인사조직 분야에서 중요한 연구 대상의 하나로 이루어져 왔다(신구범, 2007: 98). 이 연구들에서 리더십을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조직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조직에서의 리더십 연구는 주로 리더십과 조직성과 간의 관계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어떻게 하면 구성원들의 노력을 조직화하여 바람직한 조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여인길·김성수, 2005: 600). 국내 연구의 경우에도 변형적 또는 거래적 리더십 이론을 적용한 연구들이 있는데 이 경우 대부분 주로 행정조직, 기업조직에서 리더십이 갖는 효과성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홍상태, 2000; 장태윤·박찬식, 2001; 김호정, 2001).

5) Burns(1978)에 의해 제기되고, Bass(1985)에 의해 발전된 변형적 리더십은 현재 리더십 이론에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데, 변형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 이론은 기존의 리더십 연구를 거래적 리더십(transactional leadership)으로 규정하고 기대 이상의 성과를 창출하는 새로운 리더십을 추구하였다(신구범, 2007: 101). Burns에 의하면 변형적 리더십은 리더와 부하가 점점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동기 수준으로 서로를 이끌어가는 상호관계를 포함하는 과정이다. 변형적 리더십은 인본주의, 평화, 평등, 정의, 자유와 같은 높은 수준의 도덕적 가치와 이상에 호소하여 추종자들의 의식을 더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려 한다(홍광식, 1997, 257; 김정원, 2006: 23). 그리고 변형적 리더십은 리더와 부하가 상호간에 동기를 부여하고 목적의식을 높여주는 과정을 수반한다(홍광식, 1997: 258). 한편, 거래적 리

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노조몰입의 경우 변형적 리더십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거래적 리더십은 그렇지 않았으며, 노조탈퇴 의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결과가 나왔다(심용보, 1995; 윤영삼, 2005: 271 재인용).

하지만, 이것들은 여전히 노동운동이 갖고 있는 속성, 즉 자본주의에서 자본과 대립되는 위치에 서 있는 정치적·경제적·이데올로기적 위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고 있는 듯이 보인다. 따라서 노동조합 리더십을 이러한 상황에 적용하려는 노력이 지속되어 왔는데, 이것은 주로 “노동조합 리더십의 역할과 유형, 이를 규정하는 요인들과 관련된 것”이었다(조효래, 2004: 187). 이와 관련하여 여기에서는 노동조합 리더들의 리더십 유형에 대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노동운동 리더십에 대한 국내 연구들은 1990년대 이후 많이 제출되었으며 주로 이념과 연관지워 한국의 노동운동 리더들의 유형화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이와 관련하여 김동춘(1995)은 기업별노조의 리더십을 실리적 성향의 지도자와 연대 지향적 지도자로 구분한다. 실리적 간부들은 제도화된 조직으로서 노조의 역할과 일정한 성과를 중시하기 때문에 사용자와의 협력을 선택하는 반면, 연대 지향의 간부들은 자주적 조직으로서 노조의 임무를 중요시하며 방어적 동원의 행동을 선택한다(조효래, 2004: 189 재인용).

이병훈 외(2001: 25~26)는 베버적인(Weberian) 이념형의 분류에 기대어 노조 간부층을 실천적 활동 경향성을 중심으로 활동가(activist), 대표자(representative) 혹은 지도자(leader), 실무전문가, 그리고 관리자(managerialist) 등의 네 가지 이념형으로 유형화했다. 여기에서 활동가 유형이 선명한 정치이념성에 근거하여 선도적인 운동 성향을 보인다면, 대표자 또는 지도자 유형은 노조활동을 대중적으로 이끌어 가는 것을 특징

더십은 지지자의 공헌과 리더의 유인이라는 리더와 지지자의 거래관계에서 리더십을 분석하는 것이다. 즉 리더는 일정 수준의 성과를 요구하고 성과가 달성되었을 경우 일정 수준의 보상을 제공한다. 한편, 지지자는 리더가 제안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요구되는 수준의 성과 수행에 동의함으로써 둘간의 리더십이 형성된다. 이처럼 리더는 보상적 권력을 최대한 이용하는 반면에 지지자는 계산된 추종을 하게 된다.

으로 한다. 한편, 실무전문가 유형은 노조 조직 내의 특정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반면에, 관리자 유형은 조합원들의 이익대변보다는 노조 조직 내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조활동을 운영해 나가는 유형을 말한다.

조효래(2004)는 노동조합의 목표를 “첫째, 산업조직으로서의 단체교섭과 공동규제, 둘째, 사회정치적 조직으로서 사회개혁 및 사회변혁”으로 구분한다(p.191). 구체적으로 “산업조직으로서의 역할을 단체교섭을 통한 노동조건 개선과 작업장 의사결정에의 참여와 같은 산업민주주의 실현”으로, “사회정치적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시민권적 권리의 획득으로서의 사회개혁과 노동계급을 중심으로 한 계급적, 정치적 운동으로 구분”한다(p.190). 이런 맥락하에서 노동조합이 추구해야 할 일차적인 목표 지향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리더십은 첫째, ‘임금인상 등 조합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노동조합의 가장 주요한 목표로 설정하는 ‘경제적 실리’ 지향, 둘째, ‘경영참가 등 산업민주주의의 실현’을 가장 주요한 목표로 설정하는 ‘산업민주주의’ 지향, 셋째, ‘전체 노동자들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을 가장 주요한 목표로 설정하는 ‘사회적 연대’ 지향, 넷째, ‘노동자계급의 단결과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가장 주요한 목표로 설정하는 ‘정치적 계급’ 지향으로 구분하고 있다.

한편, 리더십 연구들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간의 차이에 대해 주목해 왔는데, 예를 들면, 이재열과 권현지(1995: 162~169, 205)는 1995년 9월 한 달 동안 노동조합 간부를 대상으로 『노동조합 활동과 노사관계 실태조사』에 기반하여 노조 리더십의 안정성과 재생산의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즉 이들은 노조 리더십이 노조위원장의 선출, 선출된 위원장의 인적 특성, 그리고 리더십의 지속 기간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고 각각의 범주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비교하여 검토하고 있다. 이들은 그 결과, 양 노총 간에 상당히 차별적인 요소들이 발견되었는데, 예를 들면, 한국노총 산하 노조는 간선에 의한 위원장 선출과 전임 위원장의 지속가능성이 높고 주로 고졸의 40대가 위원장으로 되는 반면에, 민주노총 산하 노조는 직선에 의해 평균 고학력의 30대가 위원장이 되며 잦은 위원장 교체로 특징지워진다. 또한 한국노총 산하 노조가 인적인 네트워크에

의한 동원이 특징이라면 민주노총 산하 노조는 이데올로기가 선거의 쟁점이 된다. 임영일·이성철(1997)은 단위노조 위원장급 간부들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1996년 8월부터 10월까지 전국의 300인 이상의 사업장을 설문조사하였다. 이들의 설문조사 결과 중 특이한 사항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간의 차이가 좁혀지고 있고, 실리적이고 경제적인 활동경향이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념과 연관지워 리더십의 유형을 구분하거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간의 차이를 통해 양 노총 간의 리더십을 구분하려는 시도가 거시적인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한 것이라면 이후의 연구는 보다 세부적인 주제를 통해 노조 리더십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일부 연구들은 조합원의 노조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배경 요인, 관리특성 요인, 노조특성 요인, 상황 요인을 제시했다(윤영삼, 2005: 262 재인용). 또한 노조 리더의 리더십이 조합원의 노조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경험적 연구가 있는데 이 연구자들은 박희준(1991), 심용보(1995) 및 장종원(2002) 등⁶⁾이다(윤영삼, 2005: 262). 이 연구와 관련하여 윤영삼(2005)은 노조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노조 지도자의 리더십의 특성 차원들을 규명하고, 이 요인들이 노조몰입과 노조관련 행동지향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했다. 연구 결과 노조몰입에는 혁신성, 접근용이성, 민주성이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며, 연대성과 투쟁성이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과 노조관련 행동지향성에는 이익증진성이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며 접근용이성, 투쟁성, 혁신성이 부분적으로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 연구를 통해 접근용이성, 민주성, 이익증진성이 여전히 중요한 리더십의 특성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이상에서 보듯이 초기 연구들은 노조간부들을 실리지향과 연대지향, 체제순응성과 체제변혁성,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온건협상지향과 투쟁적 성향 등 이분법적인 범주에 따라 유형화하는 경향이 있었다면 1990년대

6) 박희준, 「노조간부의 리더십 스타일과 조합원들의 노조몰입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1; 심용보, 「노동조합 지도자의 지도성에 대한 조합원의 인지가 노조 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5; 장종원, 「노동조합 지도자의 리더십이 노조가치, 노조원의 노조몰입 및 노조 탈퇴의도에 미치는 영향」, 동의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3.

중반 이후는 변화하는 노동환경이나 노조조직의 변화(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차이 약화, 산별조직으로의 변화)를 반영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주제와 관련된 연구를 해 온 것으로 보인다(조효래, 2004: 190). 하지만 다른 영역, 예를 들면 경영학과 정치학에서의 리더십 연구와 비교해 볼 때, 여전히 노동운동에 대한 리더십 연구는 매우 적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본 연구의 기본 관점인 담론과 관련된 리더십 연구는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다. 노동운동 담론 연구와 그 의미

노동정치 영역은 정당성과 헤게모니를 둘러싼 투쟁이 응집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담론정치가 매우 활발하게 나타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특히 노동운동을 둘러싼 담론 연구는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필수불가결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한국에서 담론 분석은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전개되지 않았다. 인문학 분야에서 논의되다가 최근에 들어 정치학, 사회학, 신문학 등의 사회과학에서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과학에서 담론 연구의 예를 들어 본다면, 발전주의, 반공주의, 민족주의, 지역주의, 권위주의, 세계화 등을 둘러싼 담론 분석들이 폭넓게 진행되어 오고 있다(김정훈, 2000; 박상훈, 2003; 김동춘, 1994; 강경성, 1999; 권혁범 1999; 임현진·송호근, 1994; 홍성태, 2005). 특히 성공회대 사회문화연구소가 “해방 이후 한국사회의 정치경제적 변동과 다층적인 계급적·사회적 투쟁에 상응하여, 정치사회적 담론 구도가 각 시기별로 왜 그리고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밝혀보려는”(조희연 편, 2003: 14) 목표로 진행한 『한국 현대사의 담론적 분석』 프로젝트와 그 성과물(조희연 편, 2003, 2004)은 한국사회의 담론 분석 연구에 있어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 관련 연구자들이 공동작업으로 진행한 이 연구는 ‘한국 현대사에 대한 담론사적 재해석’을 목표로 한국 민주주의를 둘러싼 지배담론과 저항담론 전반을 아울러 연구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담론에 대한 논의들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정치 영역에서 담론 분석은 여전히 미개척 분야로 남아 있

다. 이런 와중에서도 경제위기설에 대한 연구들(안중민, 1990; 정건화, 1989, 1998; 정건화·김상조, 1996)이 몇 편 있는데, 이 글들은 대체로 한국 경제위기론이 노동자 책임론을 확산함으로써 지배담론으로 기능해 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경제위기론에는 항상 경제상황의 곤란과 그러한 곤란을 초래한 경제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구조 개편에 따른 부담을 계층·계급별로 배분하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현 상황에 대한 실증적 분석 차원을 넘어 이데올로기적 담론의 성격을 갖는다”(정건화·김상조, 1996: 100~101); “경제위기란 개념 자체가 언제나 이데올로기적 성격이 배어 있는 ‘개념’이고, ‘경제위기설’은 바로 이러한 점에서 ‘자본의 이데올로기라는 계급적 본질’을 갖게 되는 것이며, 이때 ‘경제위기 이데올로기’는 근본적으로 민중의 생존 조건의 위기를 초래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정건화, 1989: 186).

구해근(2001)의 연구도 담론 분석이 시도되고 있다. 그의 글 <한국노동계급의 형성>은 톰프슨(Thompson)의 <영국노동계급의 형성>에 영향을 받아 1960년대부터 1990년대 말까지 진행된 한국 노동운동의 발전 과정을 문화, 정치권력의 관점에서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 전반에서 본격적인 담론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한 장과 절에서 담론 분석이 행해지고 있다. 즉 이 글은 ‘공순이와 공돌이’라는 표현은 천한 노동자의 상징어이며 이 부정적인 사회적 담론이 어떻게 노동자들 일반에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고, 이것의 기원이 “전통적인 유교적 신분 질서의 유산과 육체노동을 통해 버는 낮은 소득 때문”이라는 것을 지적한다. 또한 ‘메이 데이(May Day)’가 ‘노동자의 날’ 대신 ‘근로자의 날’로 지칭된 것이 “민족주의적 이데올로기를 이용하여 수출 증진을 위해 노동자들을 동원”하려는 것이었다는 그의 분석은 담론 분석의 시도로 읽혀진다(pp.187~193, pp.205~210).

보다 본격적인 연구는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연구로 우선 김원(2006)을 들 수 있다. 그는 푸코의 개념, 즉 계보학과 ‘의명의 지식’ 등의 논의에 기반하여 여공을 둘러싼 지배담론과 그 담론의 변화를 추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그는 “여공을 규정하던 지배적 담론이 숨기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 폭로하는 작업”, 즉 “여공이라는 담론을 둘러싼

힘의 관계를 추적”하고자 했다(김원 인터뷰, <매일노동뉴스> 2006. 2. 20). 이것을 통해 그는 남성 중심주의 지배적 노동담론과 당시의 여공이라는 보통사람들의 익명의 지식을 대립시키고 결국 이를 통해 지배담론을 해체하고자 했다. 한편, 신병현(2006)은 1970년대 노동자들이 직접 쓴 수기, 일기 등 자전적 텍스트들을 담론 분석을 통해 지배 이데올로기를 분석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비판적 지식인들에 영향을 받은 노동자들은 노동자로서 자기정체성을 형성하려는 시도가 엿보인 반면, 일반 노동자들은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근대화 담론과 가부장적인 가족주의 이데올로기에 영향받고 있었다.

앞의 논문들이 1970년대의 여공들을 대상으로 한 담론 연구였다면, 은수미(2004) 논문은 노동운동 위기에도 불구하고 한국 노동운동의 정치적 진입이 성공한 이유를 상징과 조직구조의 차원에서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시기를 대상으로 살펴보고 있다. 여기에서 상징이 “기존의 이데올로기 개념을 포괄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의제들, 목표, 가치관, 이데올로기 등으로 표현되는 노동운동의 언어적 형식”으로 정의된다는 점에서 담론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그녀의 연구 물음에 대한 결론은 노동운동이 1996년 이후 사회적 연대와 정치적 연대 모두에서 상징 통합에 도달했다는 점에서 상징 연합의 연합전략을 구사할 수 있었고 이러한 상징정치의 효과가 노동운동이 사회적 연대에서 구조 분리에도 불구하고 정치세력화를 성공할 수 있었던 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 담론 차원의 분석에서 볼 때, 이 연구는 노동운동과 시민운동 간의 관계를 상징 차원에서 분석했을 뿐만 아니라 노동정치를 사회적 연대와 정치적 연대의 차원에서 상징정치로 통시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담론의 정치경제적 분석의 통찰을 제공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이상에서 보듯이 한국의 노동운동 연구는 최근 들어 담론 분석을 막 시작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그런데, 은수미(2004)를 제외한 앞서 소개한 연구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첫째, 대부분의 연구들이 1970년대 여공들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시공간의 제약을 갖고 있다. 그리고 둘째, 미시적·문화적·사회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경제적 차원의 분석에 취약성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노동운동에서 이같은 담론연구의 의의는 무엇인가? 첫째, 기존 연구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기존 연구가 권력자원론과 민주주의론, 이념연구 등에 기반해서 발전해 왔다면 이들 연구는 노동운동 연구의 공백으로 남아 있는 담론 분석을 통해 노동운동의 특징, 의미, 위기를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노동운동에서 담론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동안 노동정치는 정당성과 동의와 연관된 정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운동은 이 측면을 소홀히 해온 경향이 있다. 하지만, 민주화 이후 시민사회의 성장과 지배담론의 세련화는 더 이상 노동운동진영으로 하여금 담론정치와 담론연구를 방치된 영역으로 둘 수 없게 만들었다. 더 나아가 셋째, 담론 분석은 노동자들의 일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유용한 분석틀을 제공한다. 즉 담론은 미시 영역 또는 미시사와 연관시켜 노동을 들여다볼 수 있는 틀을 제공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신병현(2003)은 19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직접 쓴 수기, 일기 등 자전적 텍스트들의 담론 분석을 통해 노동자들의 일상생활과 의식에 보다 접근해 가려고 했다. 김원(2006)은 자신의 작업이 “수다, 잡담, 수기, 노래, 낙서 등 익명적 지식을 드러냄”으로써 “지배적 역사를 해체하는 ‘반(반)역사’를 지향”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김원 인터뷰, <매일노동뉴스>, 2006. 2. 20).

2. 리더십, 헤게모니 프로젝트, 담론정치

가. 리더십과 권력

리더십은 사회과학자들의 오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쟁적인 영역으로 남아 있다. Stogdill(1974: 7, 16)은 “리더십 개념을 정의하려는 사람 수만큼 리더십의 정의가 존재”하며 “다양한 정의들은 각각의 목적에 부합하여 만들어질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논의들을 검토해 보면, 리더십 개념에 대한 일정한 합의가 존재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리더십이 어떤 리더 또는 어떤 집단이 자신의 목표 또는 이익을 관철하는 데 있어 동의를 통해 타인(여기에는 어떤

개인 또는 집단의 회원, 더 나가 그 개인 또는 집단의 경쟁 상대자 등을 포함함)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목표를 관철하는 과정 또는 능력이라는 것이다.

권력 개념과 비교해 볼 때 리더십의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발견할 수 있다. 왜냐하면 권력 개념, 즉 “어떤 사람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이 리더십 개념과 매우 흡사하면서도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Nye, 2004: 28). 이런 점에서 “리더십을 권력의 한 측면”이라고 보는 Burns의 주장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들간의 유사성은 두 가지 점에서 논의될 수 있는데 첫째, 양 개념은 관계성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Nye는 “리더십의 다양한 유형과 타입이 있지만, 공통적으로 추종자(Followers)와의 관계성을 전제한다”고 언급하고 있다(2004: 28). Jessop(1990) 또한 권력은 사물(thing)이 아니라 관계라는 폴란차스(Poulantzas)의 말을 수용하여 국가이론을 전개하고 있다.⁷⁾ Foucault(1993: 107)는 이러한 논의를 더 밀고 나가서 권력이 “제도도 아니고, 구조도 아니며, 일부 사람들에게 부여되어 있다고 하는 특정한 권세도 아니다. 그것은 주어진 한 사회에서 복잡한 전략적 상황에 부여된 이름”이라고 규정한다. 둘째, 양자는 자신의 이익과 목표를 달성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또한 유사하다. 즉 권력과 리더십은 모두 자신의 활동과 자원을 타인에 대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사한다.

이러한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두 개념 간에는 두 개의 중요한 차이점이 발견되는데, 이러한 차이점은 리더십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양자는 기본적으로 추종자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차이가 존재하는데, 권력은 추종자를 통치의 대상으로 다루고 이들을 통제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면 리더십은 공통의 동기, 목표, 그리고 이익을 가지고 있는 동료로 이해하는 경향이 보다 강하다(Burns, 1978: 18).

7) 권력을 바라보는 전통적인 입장 중에는 권력을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과 자원들의 소유 가능한 물건 또는 사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국제정치에서 강대국을 상대적으로 많은 인구, 영토, 자연자원, 경제력, 군사력, 사회적 안정성 등으로 판단한다”(Nye, 2004).

이러한 차이는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 낸다. 첫째, 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리더십은 상대방(그는 정치적 파트너일 수도 있고 추종자 또는 지지자일 수도 있음)과 욕구와 목표를 일치시키는 경향이 있다. 즉 리더십에서 리더들은 “지도한다는 것”을 “한 그룹이 어떤 공통의 목표를 정의하고 획득하도록 돕는 것”(Nye, 2004: 28)으로 이해한다. 이런 점에서 리더들의 목표는 “추종자들의 욕구 및 목표와 분리될 수 없다. 이처럼 리더십이 상정하는 리더와 추종자의 관계의 본질은 공통의 또는 최소한 합동의 목적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상호작용에 있다”(Burns, 1978: 19).⁸⁾ 반면에, 권력에서 권력 소유자는 상대방의 목표를 그다지 중요한 변수로 취급하지 않는다. 목표가 일치하거나 경향적으로 같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들의 입장을 밀고 나가려는 경향이 있다. 즉 권력은 “대상(respondents)의 목표와 상관없이 자신의 목표를 실현”하려고 한다(Burns, 1978: 18).

둘째, 이상의 주체와 대상 간의 차이는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도 차이를 발생시킨다. 즉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타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하는데, 상대를 위협의 수단을 통해서 하거나, 보상을 통해서 움직이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Nye, 2004: 28). 이 중에서 권력은 “상대방에 대한 정복 전쟁이나 가혹한 약탈과 같은 직접적인 물리적 통제를 확립하는 방법에서 그들 자신의 권력 기반을 동원함으로써 영향력을 행사”한다. 반면, 리더십은 자신과 추종자들 양자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추종자들의 동기를 유발하는 데 권력 기반을 사용한다(Burns, 1978: 18). 다시 말해 리더십은 가치와 목표를 실현함에 있어 조정을 통해 또는 설득을 통해 동의와 합의에 도달함으로써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런 점에서 권력의 맥락에서 리더(power wielder)와

8) Nye(2004)는 연성권력이 리더십의 핵심적인 요소로서, 비전을 창조하고 이 비전을 소통하고 유능한 사람을 끌어들이고 선출하고, 연대를 형성는 리더십 기술들이 연성권력에 좌우된다고 보았다. 그에 의하면, 정당성, 신뢰, 책임 등의 연성권력은 군사력, 경제력 등의 경성권력(hard power)과 대비되는 것으로서 경성권력이 유인과 위협(당근과 채찍)에 의존한다면, 연성권력은 타인의 선호를 형성하는 능력에 좌우된다.

리더십의 맥락에서 리더(leader)는 다를 수 있다.⁹⁾ 즉, “모든 리더들은 실질적이고 잠재적인 권력 소유자들(power holders)이지만, 모든 권력소유자들은 모두 리더라고 할 수 없다”(Burns, 1978: 18).

이상에서 볼 때, 리더십은 권력과 마찬가지로 리더와 추종자, 더 나아가 리더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리더들과 같이 상호 관계를 전제로 하는 관계적인 개념이다. 그런데, 이들 관계는 권력에 비해 동의와 자발성을 전제로 해서 성립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리더십을 효과적으로 작동시키는 핵심 자원은 상대방부터의 동의이며, 이런 점에서 리더십은 동의를 기반으로 해서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거나 어떤 목적을 위해 집합적 행동을 동원하는 ‘행위’ 또는 ‘활동’로 정의된다. 본 논문은 리더십의 핵심적인 권력자원을 정당성 또는 동의로 본다. 여기에서 정당성은 리더십의 주체가 상대방, 즉 정치파트너와 자신의 조직원, 더 나아가 국민들로부터 존재, 목표, 활동 등을 인정받았는가 하는 점이다. 다른 한편, 동의란, 리더십의 주체가 자신의 목적을 설득과 대화의 수단을 통해서 상대방이나 내부로부터 승인 또는 인정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나. 헤게모니와 유기적 지식인

본 논문은 리더십 이론이 노동운동에 적용될 때 일정한 한계를 갖는다고 본다. 그것은 노동운동의 목표와 지향이 기존 리더십 이론들의 가치 중립적인 경향과 다르고 그 주체인 노동운동 지도부가 또한 최고경영자 또는 관료와 다르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리더십 이론을 노동운동에 적합하도록 변형시키고자 하는데, 헤게모니 이론은 노동운동의 특성이 반영된 리더십 이론이라고 본다. 이것은 헤게모니 개념 안에 이미 특정한 주체를 호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계급간 관계 또는 지배와 피지배 관련 집단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헤게모니는 “지배계급이 지적·도덕적·정치적 리더십의 행사를 통해 피지배 집단들의 ‘능동적 동

9) Burns(1978)는 권력의 주체를 power wielder로, 리더십의 주체를 leader로 표현하고, 이들의 대상자를 각각 things와 followers로 표현하고 있다.

의'를 이끌어내고 재생산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Jessop, 1990 : 103).

이상의 정의에서 보듯이 첫째, 헤게모니는 계급관련 특정 세력을 리더십의 주체로 설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정 세력은 자본주의 사회내 주도적 계급 분파 또는 역사적 블록으로서 지배세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노동운동이 주도가 된 '대항헤게모니'의 개념이 노동운동 리더십 논리에 보다 적합하다고 본다.¹⁰⁾ 둘째, 헤게모니 개념 안에는 이미 리더십의 주요 수단이자 목표인 동의가 내재되어 있다. 즉 헤게모니는 리더십을 통해 적극적인 동의를 이끌어내는 정치적 행위 개념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헤게모니는 이들이 자신의 특정 이익을 유지하거나 극대화하기 위한 리더십에 관한 논의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노동조합을 노동자계급이라는 자본주의의 특정한 세력의 조직으로 볼 때, 노동조합 또는 노동운동의 리더십은 리더십 일반이론보다는 헤게모니로 표현된 '리더십의 특수이론'¹¹⁾을 통해 이해되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는 것이 본 논문의 입장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노동운동 리더십을 특정화한 헤게모니 개념에 기반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한편 본 논문은 유기적 지식인이 본 논문의 노동운동 리더십 논의와 관련하여 중요

10) 대항헤게모니는 지배계급의 헤게모니에 대항하는 피지배계급의 이념, 세계관, 이데올로기 등을 의미한다. 그람시는 노동계급이 자본주의 사회 구성체 내에서 정치적으로 지배계급이 되기 전에 문화적으로 이데올로기적으로 헤게모니를 획득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다른 한편에서 노동계급은 그들이 부르주아지와 투쟁에 들어가기 전에 부르주아지의 세계관에 대항하는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생활양식, 사고방식, 가치관, 규범체계, 도덕,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이데올로기적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뜻한다(최장집, 1984 : 31~32). 이런 점에서 대항헤게모니 또는 대항헤게모니 프로젝트가 혁명전략에서 중요하다. 즉 그람시의 혁명전략이 궁극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만약 대항헤게모니에 의해서 시민사회가 먼저 장악되면, 강제력의 집결체로서의 정치사회는 이미 그 가장 중요한 힘의 기반을 잃은 것이므로 곧 붕괴하고 말 것이며, 또 권력을 장악한 헤게모니 집단은 불필요한 강제력(예컨대, 프롤레타리아 독재)을 동원할 필요없이 시민사회에서의 헤게모니를 존속시켜 낼 수 있다는 것이다(김성국, 1991 : 215).

11) 여기에서 '특수이론'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리더십 이론이 리더와 추종자 간의 관계 개념이라면 헤게모니는 이 관계를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리더십 이론이 어떤 주어진 목표를 향해 추종자의 동의를 이끌어 내는 행위라면 헤게모니는 자본주의의 또는 자본주의적 계급관계의 유지를 목표로 하는 피지배계급의 동의를 이끌어 내는 행위로 그 의미를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다고 보는데, 유기적 지식인은 특정한 세력의 이익을 지적·도덕적·정치적으로 옹호하고 정당화한다는 점에서 노동조합의 지도부, 즉 노동운동의 핵심 세력과 일치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우선 헤게모니와 유기적 지식인의 개념을 살펴보고 헤게모니 개념을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것으로 발전시키고자 했던 제슈의 헤게모니 프로젝트 개념을 논의하고자 한다. 그런 다음 담론정치를 헤게모니 프로젝트의 한 일환으로 놓고 그 개념과 내용을 살펴보면, 담론정치의 한 사례를 ‘이기주의’ 담론을 둘러싼 노동운동 리더십과 노동정치를 논의하고자 한다.

그람시에게 헤게모니란 “지배(domination)의 대체 개념 또는 반대 개념이라기보다는 주로 영향력, 리더십, 동의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그것은 한 사회 집단이 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구하기 위해 타협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회 집단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과 관계된다”(사쥔, 1984: 26).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헤게모니는 피지배계급 또는 일반국민에 대한 특정계급(주로 지배계급)의 지적·도덕적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지적·도덕적 리더십이란 사람들이 지배계급의 규범에 포괄되어 자신의 개인적 신념을 형성하고 그것을 기초로 하여 행동하고 선택하게 하는 것으로 사람들의 내면 깊숙이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들의 합의 형식으로 나타나며, 따라서 사람들의 내면적인 합의를 획득하는 지적·도덕적·정치적 리더십을 헤게모니라고 볼 수 있다. 즉 헤게모니란 현실에 관한 지배적인 개념이며, 사고와 행동의 모든 양식이 그 개념에 의해서 충족되는 질서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헤게모니란 좁은 의미에서는 지배계급의 세계관의 확산과 대중화를 통해 확보되는 피지배층의 동의에 기반을 둔 정치적 지도력, 즉 강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합의에 의해서 획득되는 우월성을 가리키며, 더 넓은 의미에서는 강제와 합의, 즉 국가와 시민사회의 계기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인 것이다(박동진, 1992: 185~186).

이상의 헤게모니에 대한 정의는 첫째, 강제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이와 관련하여 그람시는 “능동적이며 직접적인 동의의 개념에서 동의의 팽창성(expansiveness of consent)”이라는 개념으로 정리했다.¹²⁾ 이 개념

12) 국가는 지배행위(강제력 행사)뿐만 아니라 지도력의 행사(콘센서스의 구축)도 포

은 치자(治者)와 피치자(被治者) 사이의 어떠한 관료적·억압적 관계, 피치자들의 조합주의적인 통합, 그리고 법적 측면만으로는 민주주의의 환원을 배제하는 것이다”(크리스틴 부시-글룩스만, 1984: 164). 하지만, 헤게모니와 강제와 대비되는 개념이긴 하나, 헤게모니가 강제력이라는 보호벽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즉 국가는 적극적으로든 수동적이든 동의를 하지 않는 개인 또는 그룹에 대해 국가 기구를 통하여 법적인 강권력을 행사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또는 자연 발생적인 동의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리더십이 위기에 빠질 때 사회질서의 수호자로서 국가의 강제력이 표면에 드러난다(최장집, p.27). 이런 맥락에서 그람시는 정상적인 형태의 헤게모니는 물리적 힘과 합의가 결합될 경우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다. 다만 분석적으로 이들은 분리되는데, 즉 강제와 힘이 지배의 핵심적 한 차원이라면 헤게모니에는 지적·도덕적 리더십에 의한 자발적 합의로서 또다른 지배의 차원으로 거론된다(김성국, 1991: 217).¹³⁾

둘째, 헤게모니는 “특수하고도 분파적인 이익을 일반이익으로 변형”(사쑤, 1984: 26)하여 제시하려는 경향이 있다. 즉 헤게모니 계급은 “자신의 이익을 ‘보편화시켜’, 자신의 이익이 다른 종속 집단들의 이익이 될 수 있으며 되어야 한다고 확신한다. ‘지적·도덕적 통합’과 함께 경제적이며 정치적인 목표의 통합은 헤게모니 계급을 특징”짓는다(크리스틴 부시-글룩스만, 1984: 166). 즉 그람시는 헤게모니 계급의 출현이 어떤 단일 계급의 독자적 세계관을 통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대중성에 기반을 두는 ‘집합적 의지(collective will)’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즉 다양한 계급적 이해관계의 집합을 통해서만 발생하는 ‘국민적-대중적 의지(national-popular will)’와 연관되어 있다(Jessop, 1990; 김성국, 1991: 224).

합하는 것이다. 그람시의 독창성은 국가가 더 이상 집단적 삶과 동떨어진 실체도 아니며, 사회 상부에 존재하면서 사회를 지배하고 통제하는 특수한 조직체도 아니라고 한 점에 있다. 국가는 대의 제도에 의해 치자와 피치자의 관계를 설정하고 궁극적으로는 대중을 국가 자체에 포함시킴으로써 대중을 동질적으로 만들어 조직해 내는 행위의 복합체로 모습을 드러낸다(사쑤, 1984: 128).

- 13) 물리적 지배는 지배집단과 종속집단 간의 타협과 동의를 추구하는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합리화되는 가운데서 지적·도덕적 리더십으로 변모하는 것이다(김성국, 1991: 228).

이상의 헤게모니 논의와 관련하여 헤게모니의 형성에 대한 논의가 덧붙여질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지배계급의 특수이익이 피지배계급에게 국민적-대중적 보편이익으로 착시 현상을 일으키게 하는 헤게모니 구성에 핵심적으로 기여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글에서는 이데올로기적 기구의 복합적 체계¹⁴⁾ 외에 유기적 지식인들의 역할에 주목하고자 한다.

헤게모니적 실천은 지식인들에 의해 현실화된다. 지식인들은 이데올로기를 정교화하고, 대중을 교육하고 사회 세력을 조직하고 통합하며 지배 집단의 헤게모니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Jessop, 1990: 104). 이들은 그람시에 의해 전통적 지식인과 대비되는 것으로서 유기적 지식인(organic intellectual)으로 특징화되었다. 이에 대해 폴란차스(Poulantzas)는 “부르주아지가 다양한 직업과 정신노동에 특유한 전문화를 전제로 한 지형에 기초하는 한, 부르주아지는 그 자신이 지배계급으로 형성되기 위해서 유기적 지식인 집단을 필요로 하는 역사적 최초의 계급”이라고 주장했다(1978: 61). 한편, 그람시는 시민사회가 외곽호로서 존재하는 서구 사회를 변혁하기 위해서는 진지전이라는 장기적인 혁명전략을 구사해야 하고 여기에서 대항헤게모니가 필수적인 것으로 보았다. 대항헤게모니는 지배계급의 유기적 지식인과 같은 지식인, 즉 피지배계급을 위해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로서 헤게모니를 해체하고 새로운 이데올로기(대항헤게모니)를 창출하는 일정의 이데올로그를 필요로 한다.

구체적으로, 그람시는 모든 사회계급이 경제적·정치적·사회적 영역에서 자신들의 동질성과 인식을 주는 지식인층을 창조한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자본주의적 기업가는 산업기술자, 정치경제 전문가, 새로운 문화의 조직가, 새로운 법률체계의 조직가 등을 자신들의 옆에 창출하는데 이들 중의 일부는 사회일반과 국가기관의 조직가로서 자신들 계급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창출하는 능력을 가진다(Gramsci, 1971: 5). 이처럼 헤게모니를 확립하는 데 있어 지식인, 즉 ‘정당성을 만들어 내는 전문가’

14) 헤게모니는 사회 구성체 전체에 걸쳐 발견되는 이데올로기적 기구의 복합적 체계를 통해 구체화되고 매개된다. 이런 맥락에서 그람시는 헤게모니적 실천이 시민사회, 즉 교회, 노동조합, 학교, 대중매체, 대중정당 등과 같은 소위 ‘사적’ 단체의 영역에서 일어난다고 보고 있다(Jessop, 1990: 104).

의 역할은 결정적이다. 지식인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유하나 다양하게 산재하는 사회 집단들에게 동질적 성격을 부여하고 이를 하나의 역사적 블록(historic bloc) 내로 융합시키는 기능을 한다(최장집, 1984: 23). 여기에서 자본주의의 지배계급인 부르주아의 유기적 지식인들이 담당하는 주요 기능은 시민사회에서 그들의 헤게모니를 형성하고 유지하며, 확장시키는 일에 있다.

한편, 앞서 언급했듯이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그인 유기적 지식인(혹은 전통적 지식인¹⁵⁾)에 대항해서 피지배계급의 이데올로그도 상정될 수 있는데 이들은 헤게모니에 대한 대항헤게모니를 형성, 유지, 확장시키는 임무를 맡은 일군의 유기적 지식인들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이들은 두 차원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대외적으로는 부르주아 계급의 (유기적) 지식인과 이데올로기 투쟁을 전개해야 하고 내부적으로는 대항헤게모니 집단의 성원들과 그 동맹 세력들에게 끊임없이 이데올로기 교육과 정치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김성국, 1991: 232).

그람시는 혁명정당의 노동계급에 대한 주요 임무가 바로 유기적 지식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았다(김성국, 1991: 232). 그람시는 정당을 노동자 그룹 전체에 연결시켰다. 부르주아지가 그렇듯이 노동자계급 역시 일반 구성원 내에서 그 자신의 ‘유기적 지식인(organic intellectual)’을 길러낼 수 있으며¹⁶⁾ 정당의 기능은 그것이 대중이든 전위이든 간에 이들 유기적 지식인들의 행위를 매개하여 전달하고 노동계급과 ‘전통적 지식인’의 어떤 부분 간에 연계를 마련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것이다(최장집, 1984: 33).

이상에서 보듯이 헤게모니는 지배계급이 자신들의 이익과 이념을 사회적·정치적으로 보편적인 것으로 만들어 사회구성원들로부터 자발적 동의를 만드는 지도력이며, 이 지도력을 만드는 임무는 유기적 지식인들

15) 유기적 지식인은 전통적 지식인과는 개념적으로 구별되나 모든 계급은 그 자체의 유기적 지식인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지식인 또한 지배계급의 유기적 지식인인 셈이다(김성국, 1991: 231~232).

16) 모든 사람들은 지식인들이다. 모든 형태의 지적인 참여가 배제된 인간활동은 존재하지 않으며 특수한 지적 활동의 다양성이 존재한다. 개별 인간들은 그들의 전문적인 활동 이외에 지적인 활동을 수행한다(Gramsci, 1971: 9).

에게 있다. 즉 유기적 지식인은 자신이 서 있는 지형의 계급, 주장이 사회적으로 보편성과 진리성을 갖도록 정당화하는 그룹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대항헤게모니를 만드는 유기적 지식인은 지배담론의 진리성과 보편성을 허위의 이데올로기로 폭로할 임무를 갖게 되는데, 그것은 푸코식으로 표현하면 피지배계급의 유기적 지식인들은 자신만이 진리이고 나머지는 허위라는 지배집단의 ‘진리의 정치’¹⁷⁾를 비판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 왕의 머리[진리]를 잘라버려야 하는 것입니다”(Foucault, 1980: 55).

이처럼 헤게모니와 대항헤게모니 영역은 서로를 진리라고 주장하는 상이한 그룹들 간의 정치투쟁이 일어나는 영역이다. 즉 이 영역에서 지배계급은 자신의 철학과 가치, 그리고 이익을 국민적-대중적 이익인 것처럼 설득하는 동시에 피지배계급의 그것들은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것, 즉 허위로 억누르고 배제한다면, 피지배계급은 이러한 지배계급의 정치학을 진리와 허위가 뒤바뀐 것으로 비판하면서 지적·도덕적·정치적 리더십을 형성하려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진리의 정치학’ 또는 ‘진리의 정치학 비판’은 기본적으로 ‘진리/허위의 대당’ 속에 위치해 있으며 상대방의 ‘진리 그 자체’(Foucault, 1980: 133)를 체계화된 지식에 기반하여 비판한다는 점에서 유기적인 지식인의 절대적인 도움을 필요로 한다.

다. 헤게모니 프로젝트로서의 담론정치

제습은 그람시의 헤게모니 개념이 “다소 정적인 함의 또는 넓은 의미로 정의된 상식으로 환원”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것을 “특수한 국면에서 명확한 목표를 지향하는 리더십의 역동적 운동”으로 보다 발전시키고자 했다(Jessop, 1990: 313). 헤게모니 프로젝트는 그의 이런 의도에서 나온 개념이다. 즉, 헤게모니는 어떤 특정 계급(혹은 계급 분파), 또는 더 엄밀하게는 그 계급의 정치적·지적·도덕적 대변자들의 정치적·지적·도덕적

17) 푸코는 근대국가의 ‘진리의 정치학’은 국가 또는 주권자를 심판관으로 상징하고 이데올로기적 제도적 처벌권을 가지고 타자를 허위라고 규정하고 억압하고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리더십하에서 다양한 계급관련 세력들을 호명하고 조직하는 것을 의미한다. 헤게모니 프로젝트는 이런 리더십을 행사하는 데 있어 특수이익과 일반이익 간의 갈등이라는 추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특수한 정치적·지적·도덕적 실천이다. 이처럼 헤게모니 프로젝트는 구체적인 국민적·대중적 행동 프로그램의 배후에서 지지를 동원하려는 것으로서 헤게모니 계급(분파)의 장기적 이익을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증진시킨다는 목표를 추진하면서 일반이익을 주장하고, 그 프로그램과 양립할 수 있는 특정한 경제적·조합적 이익에 특권을 부여한다(Jessop, 1990: 300~301).

노동운동 리더십 연구에 있어 참조가 될 만한 헤게모니 프로젝트는 논의는 다음과 같다. 우선, 제습은 헤게모니 프로젝트를 축적과정 또는 축적전략과 비교하여 논의하고 있다. 즉 헤게모니 프로젝트가 축적과정에 의해서 조건지어지고 제한된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즉 제습은 헤게모니 프로젝트가 주도적인 헤게모니 계급(분파)이 갖고 있는 일정한 단기적 이익의 희생과 헤게모니 프로젝트의 배후에서 동원된 여타 사회세력에 대한 물질적 양보 위에 성립한다고 주장한다.¹⁸⁾ 주로 경제적 팽창과 관련된 축적전략과 비교하여 볼 때, 헤게모니 프로젝트는 다양한 비경제적 목표, 즉 군사적 성공, 사회개혁, 정치적 안정, 도덕적 쇄신 등과 연관될 수 있다(Jessop, 1990: 301).

둘째, 헤게모니 프로젝트와 양립할 수 없는 특수이익은 비도덕적 혹은 비합리적인 것으로 간주되며 합의를 벗어나 있는 집단에 의해 여전히 추진되는 한, 특수이익은 또한 제재를 면할 수 없다는 점이다(Jessop, 1990: 301). 이처럼 헤게모니(프로젝트)는 지배계급과 배치되는 세력 또는 이익들에 대해서는 도덕과 윤리라는 근본적인 잣대를 통해 무력화시키는 전략을 구사하고자 한다.

셋째, 제습은 두 국민 헤게모니 프로젝트를 제시하여 헤게모니가 반드시 국민적·대중적 지지를 지향하지만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18) 이런 점에서 Jessop(1990: 312~313)은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설명되는 ‘축적’과 ‘정당성’이라는 개념쌍이 일정한 한계를 갖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런 점에서 그는 ‘축적전략’과 ‘헤게모니 프로젝트’라는 쌍이 보다 현실적인 전략적 차원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제습은 ‘한 국민(one-nation)’ 헤게모니 프로젝트와 ‘두 국민(two-nations) 헤게모니 프로젝트 개념¹⁹⁾을 제시하여 국가 또는 지배블록의 헤게모니 프로젝트를 보다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제습은 두 국민 헤게모니 프로젝트 개념을 통해 헤게모니 전략이 항상 보편적 지지를 획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선택적으로 국민의 일부를 지지할 수 있음을 보여주려고 했다. 즉, 경제적 위기의 시기 또는 물질적 양보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시기에 한 국민 전략이 성공할 가능성이 제한되며, 두 국민 전략이 추진될 가능성이 보다 높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서조차도 두 국민 전략이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으며 경제성장이 결국 보편적인 분배와 귀결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본 논문은 담론 또는 담론정치가 헤게모니 또는 대항헤게모니 프로젝트의 주요한 전략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본다. 즉 지배계급 또는 피지배계급은 자신들의 주장과 실천이 보편성과 진리성을 갖는 대신에 상대방은 허위라는 주장을 말, 언어, 담론을 통해 표현한다. 따라서 담론은 행위자들의 구체적인 정치적 행위로서 헤게모니 프로젝트의 주요한 내용을 형성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담론은 무엇인가? “그것은 ‘조직화된 말’ 혹은 체계화된 언술이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사회적 행위자들이 사회적 행위의 일부로서 만들어내는 체계화된 언술, 넓은 의미에서의 지식”이기 때문에 “현실에서 전개되는 각종 사건 및 행위들을 해석하는 ‘해석적 틀’ 혹은 ‘인지적 틀’을 제공한다”(조희연 편, 2003: 15~16).²⁰⁾

-
- 19) 한 국민 전략은 물질적 양보와 상징적 보상을 통해 전체 인구의 지지를 동원하는 팽창적 헤게모니를 목표로 한다. 이에 비해, 두 국민 전략은 좀더 제한된 헤게모니를 목표로 하는데, 이는 전체 인구 중 전략적으로 중요한 부분의 지지만을 동원하고 이 프로젝트의 비용을 여타 부분에 전가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 즉 두 국민 전략은 자신이 좀더 좋아하는 ‘국민’에 선택적으로 접근하고 양보하는 동시에, ‘여타 국민’을 견제하고 심지어는 억압한다는 것이다(Jessop, 1990: 305~306).
- 20) 담론의 의미를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 이데올로기 개념과 비교하여 보자. 우선 이데올로기 개념이 상당히 다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그것은 대체로 첫째, 지배계급이 현실을 전도·은폐시켜서 대중을 기만하려는 의도를 가진 ‘허위 의식’, 둘째, 각 사회 계급과 사회 집단의 현실해석의 체계, 정치·사회 현실에 대한 담론, 셋째, 특정한 정치적 신조, 정치적 이념, 넷째, 상부구조일반, 문화일반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김동춘, 1994: 212). 이데올로기 개념

이 정의에서 보듯이 첫째, 담론은 일정한 지식을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언술로써 특정한 해석틀을 제공한다. 이것은 담론이 지식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담론이 목표로 하는 것은 자신이 보편성과 진리성을 담고 있다는 점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에 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동의와 정당성을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담론이 작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합하면 담론은 지식의 도움을 받아 자신을 진리로 표상하며, 반대로 지식 또는 담론을 지원 속에서 자신의 진리라는 것을 확증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지식과 담론이 상호 영향하에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지식과 담론은 모두 권력과 연관해서 또는 권력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진리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다. 반대로 권력은 지식을 통해 자신의 권력을 신성시하거나 정당화한다. 이런 점을 들어 푸코는 지식/권력론을 주장한다:

“진리는 하나의 진리가 만들어지고 분배되고 통용되고 작용하도록 만드는 질서화된 절차의 체계라고 이해해야 한다. 진리는 권력관계와 순환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권력이 진실을 생산하고 떠받쳐 주고 있으며 역으로 진리는 권력의 효과를 유도하고 확산시키는 것이다”(Foucault, 1980 : 57).

이처럼 지식은 권력이 배제된 근원적인 진리의 이데아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찬 장이 아니라, 권력과 동일한 영역에서 권력/지식으로 존재한다. 푸코에 의해 권력과 지식의 관계는 보다 극단적으로 표현되는데, “지

을 사용할 때 주로 첫 번째 의미로 사용하는데, 이에 대해 푸코는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나는 이데올로기 개념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본다. 첫째는 이데올로기는 마치 진실이라는 것이 틀림없이 존재한다는 전제 아래에 그 진실에 반대되는 지식은 모두 이데올로기라고 몰아붙이는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둘째, 이데올로기가 갖는 용어상의 난점은 그것이 주체 또는 주관이라는 차원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로, 이데올로기는 하부구조나 물질성 또는 경제적 결정요인에 비하면 부차적인 위치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Foucault, 1980 : 118). 푸코의 언급에서 보듯이 이데올로기 개념은 가치관만이 내재된 것이라면 담론은 가치중립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데올로기는 특정한 가치·이념을 전제하고 있는 개념인 것에 반해 담론은 어떤 의도를 가질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데올로기에 비해 체계화된 가치와 이념을 전제하고 있지는 않다.

식의 장이 상관적으로 구성되지 않는다면 권력관계는 존재하지 않으며 동시에 권력관계를 전제하지 않고서도 이것을 구성하는 지식은 존재하지 않는다”(Foucault, 1979: 32). 이런 의미에서 “권력이 달라지면, 지식이 변한다”(홍성민, 1988: 126).

이상의 지식/권력론은 지식의 일형태인 담론이 권력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식과 담론의 작동에서 권력의 물질적 토대, 즉 일정한 법적·이데올로기적·강제적 기구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폴란차스(Poulantzas, 1978)는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의 분할이라는 사회적 분업에서 지식권력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데, 이 분할 영역의 집중점은 국가이다. 즉 국가는 이 분리에 결정적인 의미를 가지며 이것은 국가의 물질성으로 표현된다. 폴란차스는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의 분할은 “자본주의하에서 특수한 형태로 존재한다. 이 특수성은 자본주의에서 직접 노동자가 그의 노동수단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었다는 점”(p.55)과 관련이 있는데, 즉 생산관계와 사회적 노동분업의 결과이다. 이러한 분할은 국가의 경우에는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국가장치 전체, 즉 이데올로기적 장치뿐 아니라 억압적 및 경제적 장치에 있어서, 국가는 육체노동으로부터 분리된 정신노동을 구현하며, 정신노동과 정치적 지배 사이의 따라서 지식과 권력 사이의 유기적 관계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가장 완벽한 방식으로 실현”(pp.55~56)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국가는 “정신노동의 중추에서 재생산되는 권력과 지식관계의 모사”라고 표현될 수 있다(p.58). 이처럼 폴란차스는 이러한 법, 제도, 문화 등의 물질 기반으로 국가를 상정하고 있고 국가 또는 국가장치야말로 생산과정으로 분리된, 기본적으로 정신노동이 결정화된 곳이며, “국가에 응축된 지식이 정치적 및 이데올로기적 계급지배의 재생산을 돕는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국가는 과학/지식을 독점하여 자본주의 국가의 특수한 담론을 형성하고 지배를 확장한다”(유범상, 1996: 36).

이처럼 지식/담론은 권력관계 또는 물질 기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담론의 개념은 보다 확장되는데, 즉 담론은 “사회구조를 이루는 개별 행위자들 또는 집단들의 말과 행동, 텍스트가 다양한 권력기제나 장치들과 결합되어 나타나는 사회적 실재의 인지적 반영물이

다”(홍성태, 2005: 201).

한편, 앞서 언급했듯이, 푸코의 동일자와 타자 또는 풀란차스의 자본주의 계급관계에서 보듯이 지식/담론을 논의할 때 상이한 의도와 이해관계를 갖는 적대 또는 대립적 행위 주체들이 논의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지배블록과 지배담론의 관계는 곧 저항블록과 저항담론의 관계와 대등”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조희연, 2003: 36). 이런 점에서 헤게모니 또는 담론과 관련하여 볼 때, 지배집단은 지적·물리적 수단에 기반해서 현실의 물적·권력적 관계와 자신들의 철학과 논리가 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정의롭다는 담론을 생산하고 유포하고 학습시킨다. 이러한 담론은 “자신의 블록 성원들을 통합하고 동시에 타 블록 성원들의 종속을 유도하는 기능을 하는 방식으로 현실정치투쟁의 유기적 일부로 재생산·변화한다”(조희연, 2003: 38). 반면 대항 집단은 대항담론과 대항헤게모니를 통해 진리와 허위의 구분을 역전시키려고 노력한다. 즉 지배집단이 국민적·대중적 프로그램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지배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폭로함으로써 자신들의 논리와 실천이 진정한 진리를 향하고 있음을 인정받으려는 담론을 조직한다.

이상에서 보듯이 기본적으로 담론은 권력, 국가, 지배/피지배관계, 정당성 등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정치에 종속되어 있다. 즉 상이한 이해관계와 이념과 목표 및 의도를 가진 행위자들이 자신의 언어가 보편성과 진리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자신의 구성원과 다른 구성원으로부터 승인받는 일종의 인정을 위한 투쟁전략에 담론이 위치되어 있다. 따라서 담론은 이미 그 자체로 정치적 행위와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고 동의의 정치, 또는 헤게모니의 정치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구체적으로 첫째, 담론 또는 담론을 둘러싼 정치는 기본적으로 동의의 정치인데 동의의 정치는 자신을 진리로 규정하여 상대방을 따르게 하는 일종의 ‘진리의 정치’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진리의 정치학은 “과학적 진술의 정치학(politics of the scientific statement)”(Foucault, 1980: 112)으로 칭해지는데, 이것은 담론의 주체를 상정한다. 진리(과학)의 소유자로 표상되는 이런 점에서 지식으로 무장한 권력은 “배제한다, 처벌한다, 억누른다, 검열한다, 고립시킨다, 숨긴다, 가린다 등의 부정적인

것”으로 표현되기보다(Foucault, 1990:194) 지식을 채용함으로써 새로운 통치 테크닉인 ‘생체권력’으로 이해해야 한다. 여기에서 생체권력이란 “계산되고 조직화되어 기술적으로 행사되며, 물리력을 사용하지도 않고 공포도 주지 않는 교묘한 방법으로 신체를 통제”하는 권력을 의미한다(Foucault, 1979).

플란차스는 푸코의 이상의 권력의 속성을 국가에 적용하는데, 그는 “생산관계의 구성에서 그리고 사회계급들의 경계 설정과 재생산에서 국가가 수행하는 역할은 국가가 자신을 조직된 물리적 억압의 행사로만 한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며 …… 국가의 가장 적극적인 역할은 억압+이데올로기라는 쌍으로 한정되지 않는다”(1978:28)는 점을 지적한다. 반면 국가는 “적극적인 방식으로 현실을 창조하고 변형하고 만든다”(1978:30).

이런 점에서 담론정치는 사회구성원들을 자신의 해석틀로 끌어들이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고 결국 의도대로 된다면 담론은 동의와 순응에 의한 지적·도덕적·정치적 지도력을 갖게 될 것이다.

둘째, 이것은 다른 한편으로 진리의 정치에 대한 비판의 정치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주장이 진리인 대신에 상대방의 주장이 허위라는 것을 주장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즉 “지배담론은 저항담론의 특정 내용을 반국가적이고 반체제적이고 불온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비합법화한다. 이때 금단의 내용들은 민중블록의 성원들이 그러한 금단화에 대한 일정한 동의적 태도를 보이는 것들이 된다”(조희연, 2003:40). 이처럼 지배담론은 저항담론을 허위라고 비판하는 연장선상에서 자신의 담론이 서 있다. 이것의 반대도 또한 성립한다. 즉 저항담론은 진리라고 규정된 지배담론을 거꾸로 세워야만, 즉 지배담론이 허위라는 것을 입증하고 인정받아야만 하는 것을 지향해야 할 운명에 있다.

이상에서 볼 때 결국 담론 효과는 포섭과 배제를 동시에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타자의 존재 또는 그의 담론을 허위로 만들면서, 즉 배제하면서 자신의 담론 속으로 통합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지배담론의 경우 이것은 지배의 재생산과 관련하여 양면적인 효과를 갖는데, 한편으로는 지배블록 내의 다양한 분파를 통합시키는 방식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지배에 대한 민중블록을 통합시키는 방식으로 전개된다”(조희연, 2003 : 37~38). 더 나아가 이러한 포섭/통합은 억압/배제와 같은 쌍을 이루고 있다. 이것은 첫째, 지배담론에 순응 또는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억압과 배제의 대상이 된다는 공포를 조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빨갱이와 레드 콤플렉스는 이러한 배제담론의 효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진리/허위 대당(對當)을 통해 진리를 부각시킬 뿐만 아니라 진리를 권력화한다. 둘째, 이러한 대당은 단순히 공포의 전략 수준을 넘어서서 실제로 배제를 실천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예를 들어 ‘두 국민’ 전략은 이런 헤게모니 프로젝트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담론은 정치적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우선 동의의 정치, 헤게모니 정치, 진리의 정치 또는 진리 비판의 정치 등과 같이 담론정치는 기본적으로 정당성의 정치 영역에 속한다. 더 나아가 담론은 기본적으로 물적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성립한다는 점에서 또한 권력정치, 계급정치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핵심을 반본주의적 국가 및 그것의 권력 장치와 이데올로기적 장치이다. 이처럼 담론 또는 담론 정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담론은 비대칭적 권력관계와 물적 관계에 있고 이러한 정치경제적 관계 속에서 투쟁을 통해 ‘구성된 것’이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3. 변혁적 리더와 실리적 조합원

가. 노동운동 이념과 변혁적 리더

리더십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것은 리더십이 특정한 리더들의 목표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무엇을 위한 리더십인가’ 하는 점이다. 이것은 보다 근본적으로 리더들의 이념적 지향은 무엇인가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전통적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양 극단적인 두 관점은 혁명적 행위자의 급진적 관점과 조합원들의 경제적 이익 보호를 위한 기업 조직의 신고전주의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²¹⁾ 조합원의 경제적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노동조합주의는 기업노동조합주의(business unionism), 다원주의적

노동조합주의(Ramasway, 1981), 실리적 노동조합주의, 경제적 노동조합주의 등으로 불리어진다. 이것은 이념적으로 다원주의 또는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관점은 노동조합의 사회적 역할이 작업장 주변의 극히 좁은 영역에 한정되어 있다고 본다(Ramasway, 1981: 16). 이 관점에 서 있는 코먼스(Communs)가 마르크스에게 동의하는 유일한 지점은 노동운동이 노동계급의 등장으로부터 발전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노동조합주의의 발전과 성장을 이끈 것은 시장의 확장에 있으며 노동의 적(敵)은 고용주가 아니라 시장과 시장의 공격이라고 보면서, 노동운동은 자본주의에 대항하는 계급투쟁이 아니라 기술의 보호, 임금의 보존, 새로운 비숙련 노동자들로부터 자신의 보호 등이 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계급 적대는 자본주의와 노동자가 아니라, 노동과 시장 또는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있다고 주장하였다(Larson and Nissen, 1987: 131~132)

같은 맥락에서 플랜더즈(Flanders)는 단체교섭이 노동조합의 가장 주된 활동이며 단체교섭은 경영자 측으로부터 보다 많은 양보를 얻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플랜더즈는 경영자의 자의적인 권력행사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직업상의 규칙을 제정하고 준수하는 것이 노동조합의 또다른 중요한 기능이라고 주장한다

-
- 21) Larson & Nissen(1987)에 의하면, 노동운동의 사회적 역할은 크게 7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혁명의 행위자, 조합원들의 경제적 보호를 위한 기업 조직, 산업민주주의를 위한 행위자, 노동자들 그룹화의 심리적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 도덕적·정신적 개혁을 위한 행위자, 반사회적·파괴적 독점자, 다원주의적 산업사회에서 ‘특별한 이익’ 기능을 가진 종속된 메커니즘. Godard(1994)는 노동조합의 기능을 다섯 가지로 나누면서 이것들이 노사관계의 시각들에 상응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경제적 기능(신고전주의 관점), 민주화의 기능(정통 다원주의적 시각), 통합적 기능(경영적 관점), 사회민주적 관점(자유주의적 개혁적 관점), 계급투쟁/혁명적 기능(급진적 관점). 조효래(2004: 190)는 이상의 노동조합의 목적을 보다 단순하게 정리하여 노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즉 그는 노동조합의 목표를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하는데, 첫째, 산업 조직으로서의 단체교섭과 공동 규제, 둘째, 사회정치적 조직으로서 사회개혁 및 사회변혁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다시 산업조직으로서의 역할을 단체교섭을 통한 노동조건 개선과 작업장의 의사결정에의 참여와 같은 산업민주주의 실현으로 구분하고, 사회정치적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시민권적 권리의 획득으로서의 사회개혁과, 노동계급을 중심으로 한 계급적·정치적 운동으로 구분한다.

(Ramasway, 1981 : 22~25).

이상에서 보듯이, 이 시각에서 보면 노동조합의 기본 기능은 단체교섭이며, 단체교섭 기능은 다시 첫째, 순수하게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경제적 기능과 둘째, 작업장에서의 공동 규제, 산업시민권의 확보를 위한 기능으로 구분해 볼 수 있고, 이 경우 노동조합 간부들의 주요한 역할은 협상자로서의 역할이다(조효래, 2004 : 190).

한편,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노동조합을 ‘계급의식의 산물’(Larson and Nissen, 1987 : 4)로서 ‘혁명의 학교’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서 학교라는 의미는 정치적 투쟁에서 정당에 비해 부차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즉 노동조합은 혁명적 계급 의식을 발전시키고 보다 확장된 계급투쟁에서 노동자를 조직하는 기초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Godard, 1994 : 220).

마르크스(Marx)는 이처럼 노동조합이 ‘노동계급을 조직하는 구심체’로서 노동계급이 자신을 착취하는 정치권력에 대항하여 투쟁함에 있어서 노동자에게 맡겨진 지렛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았다(Dridso, 1935). 하지만, 그는 당시 편협한 경제적 이익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영국 노동조합주의의 경제주의에 대해 불만과 우려를 보였다. 이런 맥락에서 레닌과 앤더슨이 경제주의에 몰입하여 자본주의에 끌려다니는 존재로 노동조합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면, 하이맨(Hyman)은 작업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공인파업(wildcat strike)은 자본 측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노동자들의 저항은 노동자들의 권력을 신장시킨다고 보면서 노동조합의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평가했다(Ramasway, 1981 : 22~25). 이처럼 마르크스주의자들의 노동조합에 대한 다른 관점은 노조가 자본주의 체제의 산물인 동시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계급운동의 단초를 포함하고 있는 모순적인 조직이라는 이중적인 성격 때문이다.

이상의 관점들이 노동조합에 대한 대립되는 상이한 관점이라고 한다면, 이 둘 사이에 다양한 관점이 존재할 수 있다. 이 중에 또 하나 다소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는 관점이 사회민주주의에 기반한 관점으로서 사회적 노동조합주의(social unionism)라고 통칭될 수 있다. 사회적 노동조합주의는 경제와 사회의 양자에서 사회민주적 개혁을 추구한다. 노동자

들의 보상시스템의 증진, 임금 불평등의 축소, 작업장 내의 권리의 보호 등뿐만 아니라 사회적 이슈, 예를 들어 민주주의, 제3세계의 인권 문제 등을 제기하는 등 이들의 목표와 활동은 매우 폭넓다. 웹(Webb)은 “노동조합이란 임금노동자들의 그들의 노동생활 모든 조건을 유지 또는 개선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시적 단체(1920)”로 보았는데 여기에서 핵심은 “단체교섭이며, 단체교섭이라는 용어는 조합원을 위한 경제적 기능을 노동조합의 핵심적 기능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보인다(조효래, 2004). 하지만, 그는 노동운동을 노동조건을 인간화하고 모든 노동자들에게 생활 임금을 제공하는 것에 의해 자본주의 체제를 개혁하는 폭넓은 운동이라고 보았다(Larson and Nissen, 1987: 5).

이상에서 보듯이 다원주의나 마르크스주의 또는 사회민주주의 모두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이 자본과 상이한 이해관계에 서 있는 노동자들의 조직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코먼스(Commons)와 웹(Webb) 부부는 산업화에 의해 발생한 계급 분할이 노동조합의 발전에 주요 요인이라는 마르크스의 견해에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양자는 마르크스와는 달리 이러한 사실로부터 혁명적인 결론으로 나아가지는 않는다. 코먼스의 경우 자본주의가 아니라 시장이 적이라고 본다면, 웹 부부는 노동조합이 단지 경제적 보호를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본다(Larson and Nissen, 1987: 4). 이처럼 이들에게 있어 노동조합은 하나의 이익집단으로서 역할을 한다면, 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 있어 노동조합은 계급조직으로서 자본주의의 전복과 깊은 연관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 관점은 자본주의 체제를 인정하고 그 체제 내에서 개혁과 개량적인 활동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마르크스주의 노동운동과 차별적이고 공장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사회개혁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다원주의적 노동운동과 차별적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것처럼 노동운동 이념은 대체적으로 혁명적·사회운동적·실리주의적 노동조합주의의 세 가지로 대별될 수 있다. 한국의 노동운동 이념을 논할 때도 이러한 이념형을 대체적으로 따르는 경향이 있고 본 논문도 이 구분에 근거하여 노동운동 이념과 이에 따른 노동운동 리더들의 이념형을 구분하고자 한다. 즉 노동운동의 목표 자체가 이념이라는 창을 통해 이해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노동운동의 역사 자

체가 이념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본 논문은 한국 노동운동 리더들²²⁾의 가치 지향을 이념에 기반한 그들의 노동조합주의에 따라 실리형, 사회개혁형, 변혁형으로 구분하고자 한다(표 2-1 참조).

구체적으로, 한국의 노동운동 내에는 자유주의에 기반하고 있는 실리 지향의 그룹, 사민주의에 기반하고 있는 사회개혁적 그룹, 그리고 사회주의에 기반하는 변혁적 그룹이 존재한다. 한국노총은 현재 실리형이 주요 세력인 가운데 사회개혁형이 소수의 흐름으로 존재하고 있다면, 민주노총은 사회개혁형이 일정한 세력을 점하고 있는 가운데 변혁형이 이진 그룹으로서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노총 내 구체적인 현장 그룹으로 이것을 나누어 본다면, 현장파는 사회주의 그룹에 있다면 국민파는 사민주의에 있다. 그리고 중앙파는 양쪽의 입장을 사안에 따라 공유하고 있다(유범상, 2005 참조).

〈표 2-1〉 노동운동 리더의 이념형

리더의 이념형	노동조합주의	이데올로기	노동조합
실리형	실리적 노조주의	자유주의	한국노총
사회개혁형	사회적 노조주의	사회민주주의	
변혁형	변혁적 노조주의	사회주의	민주노총

출처: 유범상(2005) 참조.

22) 본 논문은 노동조합 리더들을 노동조합 간부들, 즉 “조합원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노동조합의 다양한 활동 및 일상적인 조직 운영에 전문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로 제한하고자 한다. 이들은 전국적인 중앙조직인 양 노총에서부터 단위 사업장의 현장조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의 노조 조직 체계에 복무하고 있으며, 근무방식에 있어서도 상근·반상근·비상근의 활동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다. 또한, 이들 노조 간부층은 선발 경로에 있어 선출직·채용직·자발적 참여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한국 노동운동의 고유한 발전 경로에서 비롯된 특징적 측면으로서 그 출신 배경에 있어 노동자 출신뿐 아니라 학생운동 출신자 및 전문기능 보유자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겠다. 우리 노조 간부들은 노동조합의 채용 또는 특정 기업의 고용관계 여부에 따라 이들에 대한 급여가 해당 노조 또는 소속 기업으로부터 주되게 지급되고 있으며, 일부 대기업의 현장소위원들과 상급단체의 자원봉사자 등과 같이 비상근 무보수로 노조활동에 참여하는 일부의 간부 유형도 존재하고 있다(이병훈 외, 2001: 23~24).

한편, 한국 노동운동은 민주화 이후 주로 민주노조운동, 즉 민주노총 지도부에 의해 이끌어져 왔는데, 민주노총 리더들²³⁾은 주로 사회주의와 마르크스주의에 기반해서 자신들의 이론과 실천을 발전시켜 왔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들은 현재에도 노동운동의 주요한 흐름으로 존재하면서 여전히 사회변혁적 정서와 이념을 공유한 것으로 보인다. 2003년 8월에서 10월 사이,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금융노조 간부들에 대한 조사(조효래, 2004)는 노조간부들이 노동조합의 목표에 대해 “임금인상 등 조합원들의 노동조건 개선”이나 “경영참가 등 산업민주주의의 실현”보다는 “전체 노동자들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32.8%), “노동자계급의 단결과 노동자 정치세력화”(43.4%)로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전체 조합간부의 53.8%가 간부 활동의 성격을 ‘사회변혁운동의 일환’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이들 중 65.6%는 노동조합의 목표로 노동계급의 단결과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선택하여 변혁적 지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노동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한 사회발전 방향”에 대해, 전임간부들의 절반 이상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결합한 민주적 사회주의”를 선택하였으며, 여기에 ‘완전한 사회주의’를 포함하면, 전체 조합간부들의 73.5%가 어떠한 형태로든 바람직한

23) 2000년 7월 현재, 민주노총 중앙본부에 근무하고 있는 상근간부(full time officer)는 총 50명으로 그 구성은 선출직, 조직파견직, 일반상근직, 자원봉사자로 구성되어 있다. 구성 현황을 구체적으로 보면, 선출직이 8명, 조직파견직이 3명, 일반상근직이 34명, 자원봉사자가 5명으로 되어 있다. 지역별로 조직되어 있는 민주노총 지역본부에서 일하는 상근간부는 약 110명 정도이다. 지역본부 상근자에 대한 임금은 원래 민주노총에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노총 규정에는 예산상의 이유로 60명 정도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그것의 2배 가까이 되는 상근간부들이 일하고 있다. 즉 지역본부에서는 정원보다 상근간부 인원이 많은 형편이라 지역본부 상근자들은 중앙본부에서 할당된 임금을 나누어 사용하고 있는 형편이다. 중장기적으로 이들 지역본부 상근간부에 대해 민주노총의 재정과 인원 규정이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이병훈 외, 2001: 72). 한편, 한국노총 중앙본부에서 일하는 상근간부는 총 112명으로, 구체적으로는 선출직, 조직파견직, 일반상근직, 계약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노총에서는 일반상근직을 보통 ‘전문직’이라고 부른다. 민주노총의 조직파견직은 임기가 지나면 매년 선거 결과에 따라 변하는데, 한국노총의 조직파견직의 경우는 일반상근직화하는 사례도 있었다. 2000년 7월 현재 선출직 6명, 조직파견직 15명, 일반상근직 63명, 계약직 2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이병훈 외, 2001: 78).

사회발전 방향으로 사회주의적 지향을 보이고 있다.²⁴⁾

나. 조직률의 감소와 실리적 조합원

2005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한국에는 5,971개의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고, 조합원수는 1,506,172명으로 이 중 남성이 78.5%인 1,182,535명, 여성이 21.5%인 323,637명을 차지하고 있다. 총연맹별로 보면 한국노총의 노동조합수와 조합원수는 각각 3,589개소, 770,572명으로 2004년 말 수치인 3,714개소, 780,183명과 비교해 보면, 조합수와 조합원수가 각각 125개소, 9,611명 감소했다. 한편 민주노총의 노동조합수와 조합원수는 각각 1,205개소, 642,053명으로 2004년 말 수치인 1,256개소, 668,136명과 비교해 보면 조합수와 조합원수가 각각 51개소, 26,083명 줄어들었다. 한편 2005년 말 기준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국가 부문 등 조직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문을 빼고 계산하는 노동부 집계방식에 따르면 10.3%이고(표 2-2의 조직률 B), 임금근로자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일반적인 방법에 따르면 9.9%로 나타났다(표 2-2의 조직률 A). 이는 노동조합 조직률을 공식적으로 조사·발표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김정우, 2006: 40~41).

이상의 통계자료는 조직노동자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989년 노조조직률은 18.6%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이제 한 자릿수 조직률이 되는 데는 단지 시간만이 문제인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노동조합의 힘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대표성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런 낮은 조직률은 조직노동자의 구성을 볼 때 한국의 조직노동은 또다른 심각한 문제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24) 이것은 다른 조사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연맹별 노조간부들이 설정하는 노조 목표, 계급 정체성, 노조와 회사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 등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현재 노조간부들의 노동조합 운동에 대한 의식은 대체로 건강하다. 노조간부들은 다수가 노조 목표로 개혁적 조합주의를 지향하고 있으며 절반 정도가 분명한 노동계급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회사에 대한 귀속감은 낮은 반면, 노조에 대한 귀속감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노조에 대한 만족도보다 신뢰도가 더 높다”(정진상, 2006: 60).

조직노동자가 대부분 대기업 정규직과 공공부문의 정규직이라는 사실이다. 구체적으로 “2005년 12월 말 기준노동조합 조직 현황을 조합원 규모 별로 살펴보면 조합원수가 5,000명 이상인 대규모 노동조합에 속하는 노동조합수는 34개로 전체 노동조합수 5,917개의 0.6%에 불과하나, 이들 대규모 노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수는 650,148명으로 전체 조합원수 1,506,172명의 43.2%에 달하고 있다. 조합원수 기준을 1,000명으로 잡으면, 조합원수가 1,000명 이상인 노동조합의 수는 186개로 전체 노조수의

〈표 2-2〉 노동조합 조직률 추이

	조직률 A			조직률 B
	전체	남자	여자	
1987.6. 30.	11.7	13.0	9.5	15.7
1987.12.31.	13.8	15.3	11.1	18.5
1988	17.8	20.1	13.7	19.5
1989	18.6	21.8	13.4	19.8
1990	17.2	20.5	12.0	18.4
1991	15.4	18.5	10.4	17.2
1992	14.6	17.9	9.1	16.4
1993	14.0	17.2	8.7	15.6
1994	13.3	16.6	7.9	14.5
1995	12.5	15.7	7.3	13.8
1996	12.1	15.5	6.6	13.3
1997	11.1	14.7	5.5	12.2
1998	11.4	15.2	5.3	12.6
1999	11.7	15.4	6.1	11.9
2000	11.4	15.3	5.7	12.0
2001	11.5	15.7	5.4	12.0
2002	10.8	14.9	5.1	11.0
2003	10.8	14.5	5.5	11.0
2004	10.3	14.0	5.2	10.6
2005	9.9	13.4	5.1	10.3

주: 조직률 A=조합원수÷임금근로자×100.

조직률 B=1987년 이전은 조합원수÷(상시고-공무원-사립학교 교원)×100.

1988년 이후는 조합원수÷(임금근로자-공무원-사립학교 교원)×100.

1999년 이후는 조합원수÷(임금근로자-공무원(철도, 체신 등 기능직 공무원과 국공립교원은 제외)×100.

조직률 B는 노동부 집계방식.

1991년 이후 경제활동인구의 시계열 조정에 따라 수치를 보정함.

출처: 김정우(2006), p.41.

2.9%이나 조합원수가 1,000명 이상인 노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수는 955,092명으로 전체 조합원수의 62.5%를 차지하고 있어, 현재 노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의 다수는 대규모 기업에 소속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김정우, 2006: 42).

이념과 관련하여 볼 때, 본 논문은 한국의 노동자들이 계급의식, 자본주의 체제의 변혁, 단위기업 내에서의 실리 지향 등의 특징을 들어 ‘계급의식적’이라기보다는 사용주와 스스로를 구별하면서 동반자적인 생각을 한다는 점에서 ‘임금 의식적’이라고 본다(Ramasway, 1981: 17). 이것은 1987년 이전은 물론이고 1987년 노동자대투쟁과 1997년 경제위기의 역사적 사건들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경향적으로 관철되는 흐름이라고 본다. 즉 1987년 이후 노동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은 임금인상과 관련된 것이었다면, 1997년 말의 경제위기 이후에는 고용안정으로 바뀌었다. 한 조사에 의하면, 1997년 이후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존재와 노동조합이 역점을 두어야 할 사항에 대한 1순위 응답에서 53.4%라는 대다수가 고용안정을 노동조합의 핵심 과제로 꼽았다. 다음으로는 임금인상, 조합원 복지향상이 각각 23.4%, 7.8%이다. 2순위 응답에서는 조합원 복지향상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하였고, 역시 고용안정에 대해서 상당수가 답했다. 3순위 응답에서는 조합원 복지향상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다음은 경영합리화에 대한 대응, 고충처리, 고용안정, 경영참가, 사회개혁 등의 순이다. 결국 조합원들의 핵심 요구는 고용안정이고, 그 외에는 임금인상, 복지향상, 경영합리화에 대한 대응, 경영참가, 노동시간 단축, 사회개혁 등이다(이민영, 1998: 46~47).

물론 1987년 이후 한국의 노동자들의 의식은 크게 성장한 것은 사실이다. 사회 상황에 대해 지배이데올로기의 일방적 해석으로부터 크게 ‘자유로워졌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 아닐 수 없다. 나아가, 경제·사회·정치적 상황에 대한 비판의식의 정도가 매우 높고, 많은 경우에 있어서 ‘노동자적’ 관점에서의 건강한 비판의식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점들이 노동자들의 인식이 높은 수준의 ‘계급의식’ 획득, 혹은 획득 가능성을 시사해 주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관찰이 필요할 것이다. 예컨대 위의 비교분석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노동자들은 국가의

정책 행위와 기업의 이윤추구 행위의 사회적 정당성, 제도적 정치의 현실 등에 대해 매우 높은 비판의식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것을 곧 한국 노동자층의 ‘계급적 진보성’ 혹은 진보적 ‘계급의식’의 표현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인 것처럼 보인다. ’87년 이후 그러한 비판적 사회의식 혹은 나아가 노동 문제에 대한 긍정적 인식 등은 일종의 ‘비판적 시민의식’의 형태로 계급과 계층의 구분선을 넘어 널리 확산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자 의식의 성장은 ’87년 이전의 한국 노동자층의 전반적인 의식의 저열성, 즉 초보적인 계급적인 혹은 시민적 권리의식조차 억압되어 있었던 상황과의 첨예한 대조 속에서 그 의의를 크게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아직 명료한 ‘계급의식’의 취득(가능성)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임영일·임호, 1993: 47~48).

그렇다면 왜 이렇게 임금의식적인 조합원으로 존재해 왔는가? 그것은 대략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다. 우선, 조합원이기 이전에 이들이 국민으로 존재해 온 정치·경제지형으로부터 조합원들의 의식적 성장이 제약되어 왔다고 본다. 한국의 노동자들은 해방과 전쟁 그리고 분단을 겪으면서, 특히 반공주의 정권의 등장과 지배로부터 기형적 이념지형 속에서 ‘레드 콤플렉스’를 가진 국민으로 존재해 왔다. 특히 기존의 역사와 정권은 노동운동을 반공주의에 기반해서 억압해 왔고 따라서 노동자가 아니라 근로자와 종업원으로 남을 것을 강요해 왔다.

둘째, 한국의 노동자들은 ’87년 이후 기업별노조에 갇힌 채 존재해 왔다. ’87년 이후 기업별노조는 기업내 민주주의에 일정한 성공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었지만, 연대성과 계급성의 성장을 가로막아 온 것으로 평가된다. 예를 들어, 노동자들은 상급단체나 노동단체가 주최하는 조합 밖의 외부 교육에는 참여 의사가 낮으며 상급단체 주최의 지역집회의 참석에도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직노동자들은 조합 내부민주주의에 대해서는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기업별노조 체제를 벗어난 외부 활동에는 여전히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들은 노조활동을 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기업별노조 체제의 틀 안에서 조합 내부민주주의를 이해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조합들이 조합 내부민주주

의를 기업이라는 경계로 이해해 왔다(이종래, 2003: 353~356). 노동자들은 집단주의적인 의식을 강하게 갖고 있지만, 정치의식은 낮고 종업원의식을 일정하게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노동조합운동이 충력을 기울이고 있는 임금인상 투쟁은 노동자들의 정치의식 발전에 별로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이민영, 1998: 59).

한편, 조합원들이 실리주의적 경향으로 남을 수 있는 또다른 이유는 노동운동이 노동자 교육에 큰 성과를 내지 못한 것에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동교육 활동의 목적은 조합원들의 의식을 높이고 조합활동에의 적극적인 참가를 유도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조직역량을 확대·강화하는 데 있는데(이원보, 1998: 179~180), 한국 노동조합의 교육활동은 여러 가지 약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교육체계가 거의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점이다. 이는 주로 교육활동이 기업별노조에 의해 분산적으로 실천되고 있는 데 기인한다. 둘째, 교육 내용이 단편적이다. 이것도 역시 기업별노조의 한정된 자원에 기인하는 바 크며, 또한 사람을 체계적으로 키울 수 없는 노조 조직체계와 조직의 불안정성도 여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셋째, 몇몇 조합에서 슬라이드, 영상물 등 보다 다양한 교육 매체를 활용하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일부 대규모 노조에 그치고 있으며, 대규모 노조들조차도 체계적인 교재 개발 등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넷째, 현장교육가의 양성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장에서 일하는 조합원들을 노조 내 교육기관을 통해서 대량으로 교육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현장조합원들에 대한 공식 교육은 잘 만들어진 영상 교육자료 등을 잘 활용하는 한편, 대의원·소위원들이나 현장활동가들을 교육활동가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도 이들이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많은 조사자료에 의하면 이들 스스로가 현장교육가로서의 체계적인 훈련을 받지 못한 관계로 천편일률적이 선전·선동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다섯째, 노동교육은 공식 교육에만 의존할 수 없고 의식 있는 활동가층의 자발적 학습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각종 조사보고에 의하면 몇몇 노조를 제외하고는 노조의 상집간부나 대의원 등이 각종 업무에 치인 나머지 학습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이들의 학습을 위한 체계적인 학습프로그램도

개발되어 있지 않아, 학습활동을 하고 있는 노조에서도 임시변동으로 학습을 조직하고 있는 형편이다(김준, 1998: 120).

이상에서 보듯이 한국의 조합원들은 실리주의적인 경향을 띄고 있다는 것은 거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것은 노조간부들의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조합간부들은 “임금인상이 조합원들의 최대 관심사”라는 것과, “임금협상의 결과로 집행부를 평가하는 경향”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직선제를 통해 등장한 이들은 이러한 조합원들의 요구와 반응에 대해 둔감할 수는 없다. 고용불안이 표출되기 시작한 1997년 이래 고용안정이 조합원들의 최대 관심사의 하나로 떠올랐지만, 이것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물론 임금노동자인 조합원들에게 임금이나 고용문제가 최대의 관심사라는 것만으로 조합원의식이 실리지향적이라고 잘라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조합원들의 관심사가 기업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²⁵⁾은 한국의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상태와 의식을 짐작하는 데 도움을 준다. 실리지향적 성격을 보여주는 요소들은 일반적으로는 대기업일수록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막강한 조직적 자원, 자본의 높은 지불능력으로 인하여 소기의 실리 획득이 기업단위에서 가능하다는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조조직은 임금인상이나 노동조건 개선 혹은 전체 노동자들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에 노조조직의 일차적 목표가 놓인다고 응답한 노동자가 약 80%에 달하고 있다. 이에 반해 노조가 노동자계급의 단결과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경영참가와 같은 산업민주주의의 구현에 앞장서야 한다고 답변한 노동자들은 약 19%에 불과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노동자들이 일차적으로 기대하는 노조조직의 목적은 권익보호적인 성격이 짙다. 결과적으로 보면 노조가 사회적 대항 조

25) 노조 지도부나 조합원들 모두 하청기업 노동자들에 대해 무관심하다. 일반조합원들의 경우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이나 복지수준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노조간부나 조합원 모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하청으로 돌리는 것을 사실상 묵인해 온 것이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고용불안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사용자 측이 사내하청을 줄이는 방식으로 고용조정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에 대해서 거의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면 어떤 경우에는 그에 동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김준, 1998: 108).

직으로서 정치적 조직의 성격을 가진다고 여기는 조합원은 약 5분의 1에도 못 미쳐서 조합원 다수는 실리적 혹은 경제적 조합주의에 치우쳐 있다(이종래, 2003: 348~349).

더 나아가, 사회개혁 요구에 대해 상대적으로 무관심하다. 앞의 설문 조사 결과에서도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많은 조합간부들도 말하듯이 조합원들이 가장 잘 동원되고 참여도가 높은 이슈는 임단투이며, 사회개혁 요구에 대한 참여도나 참여의식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대규모 노동조합일수록 두드러진다(김준, 1998: 108~109).

다. 이념적 리더와 실리적 조합원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볼 때, 한국의 노동운동은 ‘실리적인 조합원과 이념적인 리더’로 특징지워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근의 한 조사에 의하면, 한국의 대표적인 산별노조들인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금융노조의 간부들은 노동조건 개선이나 경영참가를 위한 개별 사용자와의 단체교섭 혹은 공동 규제를 노동조합의 일차적 목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들은 전체 노동자들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 노동자계급의 단결과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같이 전체 사회 속에서 노동자들의 정치적·사회적 이익을 보호하고 실현하는 사회정치적 기능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계급운동으로서의 노동운동에 대한 강한 지향을 보여주고 있다. 간부로서의 자기정체성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의 전임간부들이 간부 활동을 사회변혁운동의 일환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변혁적 지향을 가진 간부들의 비중도 상당히 높다. 노동조합 간부 활동을 전문적인 직업 활동의 하나라고 생각하는 간부들이 대단히 적은 반면, 규범적 헌신과 자기희생적 동기에 기초한 간부 유형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다. 정치적 이념에서 산별노조의 간부들 다수는 어떠한 형태로든 사회주의적 지향을 보이고 있으며, 조합의 시급한 요구에서도 사회개혁을 강조하고 있어, 이들에게 산별노조로의 조직 전환은 사회 체제의 수준에서 변화에 대한 열망을 표현하는 것이다(조효래, 2004: 211~212).

한편, 한 조사에 의하면, 조합원들은 “기업은 노동자의 희생으로 부를

축적했다”(1.302점)는 데 동의하면서도 “기업이 어려울 경우 협력해야 한다”(1.395점), “기업주와 노동자는 한 가족”(0.427점)이라는 것도 일정하게 지지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흥망이 곧 노동자들의 삶을 좌우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어떤 면에서는 당연하게 여길 수 있지만 종업원의 식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도 있다(이민영, 1998: 54). 조합원 참여의 측면에서 '87년 이후의 조합원의 적극적인 참여는 점차 단체교섭을 위한 압력수단으로서의 도구적 참여로 의례화되고 있으며, 공동체적 참여나 이데올로기적 헌신에 기초한 참여는 약화되었다. 전체적으로 조합원들 중에서 수동적 지지층의 비중이 다수를 차지하며, 위원장들이나 평조합원 모두 조합원들의 참여 부족을 노조활동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나 개선해야 할 점으로 꼽고 있다. 이처럼 조합원들의 참여는 주로 사업장 단위에서 경제적 이익을 위한 단체교섭 과정에의 참여가 대부분이며, 조합의 일상활동이나 공동체적 참여, 조합의 상급단체 수준에서의 참여는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조효래, 2003: 226).

이상의 상황을 반영하듯 노조간부들의 조합원들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부정적이다. 즉 “조합원들 사이에 무관심과 개인주의가 팽배해 있고”, “노조활동에 열성적인 조합원들이 줄어들고 있다”고 인식하는 노조간부들이 다수이다(정진상, 2006: 60). 노조 지도부는 조합원들의 이같은 의식과 요구의 상태에서 한편으로는 조합원들을 비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노조 조합원들만의 경제적 이익을 반영하는 데 골몰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조합원들은 노동운동 지도부를 어떻게 평가해 왔는가? 그것은 이중적인데 한편으로는 과반수 이상의 노동자들은 노조간부란 조합원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이라고 평가하는 한편, 평조합원들은 간부활동을 개인적인 출세 수단이라고 보는 경향성도 존재한다. 이처럼 노조 간부활동을 개인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긍정적인 의미와 함께 출세의 수단이라는 부정적인 의미 부여가 동시에 상존하고 있다(이종래, 2003: 358~359). 더 나아가 평조합원들은 노동운동 지도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해 왔다. 예를 들어, 평조합원들은 조직 내부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수 조합원들의 의사가 그렇게 민주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본

다. 조합원들은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38.1%만 그렇다고 답변하고 있다. 게다가 평조합원들의 과반수 이상은 몇몇 조합간부들이나 일부 조합원들의 의사에 따라 노조가 결정하거나 상급단체의 지침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 노조의 결정 과정의 투명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종래, 2003: 351).

이상에서 보듯이 조합원들에 비해 노동운동 지도부가 이념적이라면 노동운동 지도부에 비해 조합원들은 경제적 차원의 실리적인 성격이 강하다.

이러한 조건에서 특히 경제위기 이후 고용위기와 노동시장 유연화의 경제조건과 조합원의 중산층화, 고령화, 보수화 및 시민사회의 전반적인 보수화와 자본과 정부의 공세 앞에서 노동조합 리더들의 선택은 자기 사업장의 문제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구하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다시 말해, 조합 활동이 주로 일상적이고 관례적인 단체교섭으로 반복되면서, 점차 노동조합 활동도 잠재적으로 폭발적인 투쟁이라기보다는 보다 많은 성과를 위한 줄다리기와 이를 위한 압력 행사로 변화되었다. 조합 활동이 사업장 중심으로 한정되면서 조합간부들의 시각도 사업장 단위로 제한되고, 이 과정은 기업을 넘어서는 연대의 필요성과 의의에 대한 무감각, 이념적 퇴색으로 이어졌다(배규식 외, 2008: 314)

4. 한국의 노동운동에 대한 지배담론 : 빨갱이, 경제위기 주범, 이기주의 집단

가. 지배담론과 저항담론

여기에서는 한국의 정치와 노동정치에 등장했던 지배담론과 저항담론을 개관하고자 한다. 지배담론과 저항담론을 논의하기에 앞서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한데, 그것은 담론의 주체, 영역, 범주, 시기 구분과 관련되어 있다.

우선 본 논문은 국가정치 영역과 구분하여 노동정치 영역을 규정하

고²⁶⁾, 국가정치에서 저항담론을 생산하고 실천하는 주요 주체를 시민운동과 노동운동으로 규정한다. 이것은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이 핵심적인 조직화된 세력이기 때문이다. 한편, 노동정치 영역에서 저항담론은 자본과 국가의 지배담론에 저항해서 주로 조직노동에 의하여 생산된다고 본다.²⁷⁾

국가정치와 노동정치 영역을 구분한다면, 국가정치와 노동정치에서의 담론도 차별적일 수 있다. 국가정치에서 담론은 주로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면, 노동정치에서 담론은 노동자 또는 계급과 관련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것도 선형적으로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노동자는 국민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며 어떤 담론이든 그것이 국민적·대중적 이해라는 보편적 이익과 관련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담론은 정치 과정에서 구성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상의 관점에 기대어 본 논문은 국가정치와 관련된 저항담론의 주체를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으로 본다. 하지만, 이들 운동이 생산한 담론 중에 국가정치와 관련된 것과 영역정치(노동정치)와 관련된 것을 구분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시기 구분과 관련하여 지배담론과 저항담론은 1980년대 민주화 이전, 민주화부터 경제위기 이전, 그리고 경제위기 이후의 세 단계를 거쳐서

26) Burawoy(1985)에 따르면 정치는 구조화된 지배관계들에 대한 또는 그것들 내부에서의 투쟁이며 이 관계를 변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은 특정 관계와 특정 영역 내 투쟁으로 나타난다. 여기에서 국가는 총체적 특성, 전체 사회구성(체)에 대한 결합의 요소로서 기능하는데, 즉 국가는 특정 관계의 재생산을 보증할 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장치들을 보증하는 장치이다. 따라서 국가를 둘러싼 정치, 즉 국가정치는 ‘총체적인 정치’이며 ‘정치의 정치’라고 할 수 있는 반면에 특정한 관계를 배경으로 한 특정한 영역 내에서의 정치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가족정치, 생산정치, 노동정치 등으로 표상될 수 있다.

27) 하지만 이것은 물론 시민운동이나 기타 세력이 노동정치에서 방관적이라거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시민운동의 활동이 노동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노동운동과 연대하여 노동정치 영역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개입하여 저항담론을 생산하거나 지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감안한다면, 노동정치가 국가정치로 향하지 않고 작업장 내에 한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노동운동이 반드시 국가정치의 주요한 행위자로 보는 것도 또한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변화되어 왔다는 것이 본 논문의 시각이다. 하지만 이것은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조희연(2003)은 지배담론과 관련하여 반공주의의 1950년대 시기, 근대화 담론으로 특징되는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의 시기, 세계화의 1990년대 이후의 시기 등 세 시기로 구분하는 한편, 저항담론은 1990년대 이전의 민주화와 이후의 반신자유주의 또는 반세계화로 구분하고 있다. 본 논문의 시기 구분을 조희연의 시기 구분과 관련하여 볼 때 쟁점 사항은 세계화 담론을 언제부터 볼 것인가에 있다. 조희연은 '87년 이후 민주화와 세계화가 동시적으로 진행되었고 특히 김영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세계화가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1990년대를 세계화 담론의 시기로 보고 있다. 본 논문은 세계화 정책이 1980년대부터 추진되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 담론이 본격적으로 정치세계에서 자기 규정력을 갖기 시작한 시점이 경제위기 이후라는 점에서 그리고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가 정부 주도적 성격이 강한 반면, 김대중 정부의 세계화가 세계자본에 의해 강제적으로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관철되었다는 점에서 세계화를 김대중 정부 이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한편, 담론 분석과 관련하여 볼 때, 본 논문은 담론이 발화자, 즉 주체를 필요로 하고 있고, 이들 담론은 주체들이 서 있는 정치경제적 기반과 권력관계를 전제하고 있으며, 어떤 의도에 따른 효과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담론의 주체, 권력관계와 정치경제적 구조, 그리고 담론의 효과를 구분하여 서술할 것이다.

이상의 관점에서 국가정치 영역에서 담론을 살펴보면, '87년 민주화 운동 이전 시기, 즉 산업화로 특징지워지는 시기에는 지배담론으로 반공주의, 발전주의가, 저항담론으로는 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가 존재했다. 지배담론의 주체가 개발국가와 재벌의 개발연대였다면, 저항담론의 주체는 군부독재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들이 망라되었는데, 예를 들면 야당, 비판적 지식인, 농민, 노동운동가, 시민운동가 등을 포괄하고 있었고 이들이 민주주의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민주연대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민족주의 담론은 이 시기에 지배세력과 저항세력 공히 채택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용도는 매우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지배담론으로서의 민족주의가 발전주의 반공주의와 내적으로 연관되어 체제 우위와 경제발전을

통해 민족의 우수성과 연관되어 있다면, 저항담론의 민족주의는 반외세와 연관되어 민족자주, 민족통일을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한편 민주주의도 담론이 갖고 있는 보편성 때문에 개발연대에 의해 지배담론으로 차용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저항담론의 민주주의가 반독재 민주주의 또는 민중민주주의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었다면, 지배담론의 민주주의는 반공주의와 발전주의 또는 근대화담론과 연관된 것으로 박정희 정권에 의해 ‘한국적 민주주의’로서 경제발전과 정치안정을 도모하는 한국적 특성을 갖는, 서구의 자유민주주의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으로 묘사되었다.

두 번째 시기는 1987년 민주화 이후 1997년 말의 경제위기 이전까지의 시기로서 민주화 담론이 지배하던 시기이다. 이 시기 시대정신과 시대담론은 민주주의였다. 따라서 민주주의 담론은 지배담론과 대항담론이 공유되어 있었다. 다만 이것이 지배담론인 한에 있어서 절차적 민주주의, 즉 정치적 민주주의의 내용을 갖는 것이었고, 그 주요 세력은 지배계급 내 자유주의 세력이었다. 한편, 대항담론은 참여민주주의 또는 경제정의 담론으로 표출되었는데, 경실련이라는 자유주의적 성향의 시민단체와 진보적 시민단체를 표방한 참여연대가 주요 담론 생산자였으며 이들은 민주주의를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 내용적·경제적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었다. 한편, 국가는 1980년대부터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었고 특히 김영삼 정부는 세계화를 국정 지표로 표방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론을 유포했다는 점에서 이 시기에 세계화 담론이나 발전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들 담론은 민주주의 담론을 지배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표 2-3〉 지배담론과 대항담론

시 기	지배담론	대항담론
산업화 시기 (1987년 이전)	조국 근대화, 반공주의	반독재 민주화, 민중민주주의
민주화 시기	국가경쟁력 강화, (절차적) 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경제정의
경제위기 이후	노동시장 유연화, 세계화	공익·공공선, 반신자유주의 사회공공성

세계화 담론은 세 번째 시기, 즉 경제위기 이후에 지배담론으로 자리 매김하는데, 이 시기에 본격적으로 세계화를 둘러싼 정치와 담론투쟁이 전개되었다. 지배담론의 세계화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담론으로 특징지어 지는데, 이것은 노동시장 유연화와 국가경쟁력 강화, 일류국가 등의 담론과 연관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저항담론은 경제적 민주주의를 강조 하던 기존의 연장선상에서 주로 노동운동과 진보세력에 의해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의 반대를 중심으로 한 반신자유주의, 사회공공성 강화 담론이 제시되었고 다른 한편, 시민운동에 의해 공익·공공선 또는 사회공공성 담론이 제시되었다. 이처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진전 앞에서 시민운동과 노동운동 진영 간에 담론의 수렴 현상이 발생하는데, 노동운동이 계급정치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공공성을 주장한다면, 시민운동은 합리적 시장의 형성이라는 점에서 공익·공동선 또는 사회공공성을 제시하는 경향이 있다.

나. 노동운동과 지배담론 : 빨갱이, 경제위기 주범, 이기주의 집단

이상의 지배담론과 대항담론은 다양한 하위담론을 만들어냈는데, 노동 정치 영역도 이러한 맥락에서 고찰될 수 있다. 우선 민주화 이전에 지배담론은 발전주의 상위담론과 연관되어 일반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산업 전사, 산업 역군 등의 포섭담론과 민주노조운동을 대상으로 한 반공주의와 연관된 빨갱이라는 배제의 담론이 동시에 차용되었다. 반면 이 시기 저항담론은 민중민주주의의 연장선상에서 민중이라는 담론이 제시되었는데, 민중의 핵심적인 주체는 노동자계급이었다. 또한 노동기본권 담론도 저항담론으로 제시되었다.

민주화 시기에 노동정치 영역에서도 담론정치의 활성화를 가져다 주었다. 먼저 지배담론은 경제위기설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중심으로 하여 노동운동을 경계하였는데, 핵심적인 담론은 경제위기 주범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상위담론으로서 발전주의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한편 대항담론은 ‘어용/민주노조’, ‘노동시민권’, ‘노동해방’ 등으로 표현되었다.

경제위기 이후에 지배담론은 노동운동을 ‘이기주의 집단’, ‘귀족노조’,

‘노동시장 유연화’ 등의 담론을 주요하게 앞세워 노동운동의 정당성을 공격하였다. 한편 이에 대해 저항담론은 사회공공성, 연대성 등의 담론을 통해 노동시장 유연화 등의 담론에 대응하고자 했다. 한편, 민주화 이후 지배담론은 포섭의 담론으로서 사회적 파트너라는 담론을 포섭의 담론으로 채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보듯이 한국에서 노동정치 또한 지배담론과 대항담론의 각축으로 나타났는데, 지배담론의 경우 크게는 ‘빨갱이’, ‘경제위기 주범’, ‘이기주의 집단’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이들 담론의 특징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빨갱이’ 담론은 반공주의의 하위담론으로서 ‘노동운동의 리더=빨갱이’라는 내용을 갖고 있다. 이것은 분단 체제와 전쟁이라는 역사적 경험을 배경으로 내면화된 국민들의 ‘레드 콤플렉스’²⁸⁾에 기대어 노동운동을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세력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반공주의 규율장치, 즉 경찰기구 내 공안팀, 국가보안법 등이 동원되어 노동운동은 엄격하게 제한되었다. 이 담론은 공산주의와 북한에 대한 거부와 철저한 탄압의 공포에 기대어 노동운동을 일반국민과 노동자들로부터 분리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노동운동이 ‘경제위기 주범’이라는 담론은 상위담론인 발전주의 또는 경제위기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경제위기설은 자본주의의 항상적인 구조적 위기 또는 경기하강 국면을 배경으로 항상 국민경제의 위기를 앞세워 자신의 축적 조건상의 애로를 선전하면서 국민들의 경각심을 촉구하는 한편, 노동운동의 저항을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것은 국가 연구소나 자본의 주요 연구기관을 동원하여 통계를 제시하거나 대중매체를 통해 파업의 손실을 선전함으로써 실현된다. 그 결과 이 담론은 노동운동이 국민경제를 외면하는 존재로 낙인찍히는 효과를 갖게 한다.

28) ‘레드 콤플렉스’는 적색, 즉 북한에 대한 공포증을 의미한다. 이것은 공산주의의 위협에 대한 과장되고 왜곡된 공포심과 그 공포심을 근거로 하여 무자비한 인권 탄압을 정당화하거나 용인하는 사회적 심리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다(강준만, 1997: 7).

〈표 2-4〉 노동운동 배제의 지배담론

	빨갱이	경제위기 주범	이기주의 집단
핵심내용	민주노조=공산주의	경제위기는 노조의 과도한 파업 때문	노조운동은 노동귀족들의 이익활동
상위담론	반공주의	발전주의(경제위기설)	경제위기설, 경쟁력 강화, 세계화
정치경제	남북분단, 냉전	산업화와 발전국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담론효과	노동운동 무력화	노동운동 순화	노동운동의 고립화
주요시기	산업화	민주화 이후	외환위기 이후

이기주의 담론은 노동운동이 귀족집단 또는 집단이테올로기의 전형이라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 담론은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 하나는 노동운동이 국민경제에 반하는 집단이고 다른 하나는 동료 노동자들의 어려움에 아랑곳하지 않는 연대성을 잃어버린 정의롭지 못한 집단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이기주의자라는 지배담론은 노동운동을 도덕적·윤리적 차원에서 낙인찍음으로써 공공성의 정치 영역에서 정당한 사회정치 주체라는 것을 부인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듯이 보인다. 이것은 경제위기설, 경쟁력 강화, 세계화 등의 상위담론과 연관되어 있다. 즉 경제위기의 원인, 경쟁력 약화의 원인, 노동시장 경직성의 원인이 노동운동의 집단이기주의에 있다고 본다. 이 담론은 노동시장 내부의 분절화와 경제위기를 배경으로 특히 보수언론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경향이 있다. 이기주의 담론은 노동통제에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고 있는 중이다. 왜냐하면 이 담론은 국민이라는 보편적 이테올로기와 대비시키고 윤리와 도덕에 기대어 노동운동의 존재론적 본성 그 자체를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기주의’ 담론은 노동운동의 존재 그 자체를 근본적으로 비판하는 효과를 갖는데, 노동운동이 계급 균열의 가장 핵심적인 자리에 위치해 있고 노동의 권력이 주로 정당성과 도덕성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즉 이 담론은 노동이 기본적으로 정당성을 갖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비도덕적인 존재라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를 갖는다. 이 담론이 효과적으로 작동

할 때, 노동운동은 사회적 고립으로 귀결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Wright(2000)가 노동자들의 교섭력의 한 축이 연합적인 힘에 있다고 갈파했듯이 노동운동은 집합적인 힘에서 권력의 기반이 있는데 사회적 고립은 노동을 약화시킨다. 보다 근본적으로 정당성의 상실은 노동운동이 존재해야 할 존재론적인 이유를 부정한다. 한 가지 더 언급되어야 하는 것은 이기주의의 발화자는 정치적·계급적 반대 진영일 가능성이 많다는 점이다. 이 말은 이기주의론이 헤게모니와 담론정치에 필연적으로 종속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의 세 가지 담론은 외형상 상이한 의도와 목적을 갖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서로 같은 목적을 공유하고 있다. 즉 이 담론들은 피지배세력에 대항해서 지배세력이 헤게모니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구체적으로 이 담론들은 첫째, 지배세력의 정당성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동의를 추구하는 대신 피지배세력을 국민들로부터 분리시키고 고립시킨다. 여기에서 지배블록은 국민들에게 빨갱이 담론을 내면화시키는데 가장 성공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화와 데탕트 이후 그리고 북한정권과 경쟁에서 승리가 거의 확실해진 상황에서 빨갱이 담론은 일정하게 자기 영향력을 갖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새롭게 등장한 것이 발전주의에 연장선상에 있는 국가경쟁력 담론, 또는 이것의 또다른 표현으로서의 경제위기설에 지원을 받고 있는 경제위기 주범으로서의 민주노조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특정한 경제적 상황에 따라 일정한 위력을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1989년과 1996년의 경제위기설에 기반한 노동운동 탄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기주의의 담론은 발전주의 담론의 연장선상에서 노동운동의 근본적인 존재론적 본성을 공격함으로써 노동운동을 고립시키는, 최근에 지배적으로 된 담론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이들 담론은 모두 자본주의를 지속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이들 담론들 간에는 근대화 프로젝트 또는 자본주의 경제발전과 저항세력에 대한 지배라는 점에서 일정하게 서로 '내통'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발견된다. 예를 들면 반공주의는 근대화 프로젝트와 연결되어 있었다. 즉 반공주의는 반복을 경쟁이라는 점에서 강조함으

로써 근대화 프로젝트, 즉 경제성장 우선주의와 연결되었다. 경제위기설은 이러한 근대화 프로젝트가 심각한 도전에 처해 있음을 의미하며 그 원인으로 배후에 있는 공산주의 세력, 즉 야당이나 노동운동 리더들을 지목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이기주의 담론은 노동운동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헤게모니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다. 즉 노동운동을 지목하여 그들의 이기심이 경제위기를 가져왔으며, 이러한 그들의 행위는 그들이 자본주의를 전복하고 북한에 동조하는 데 있다고 선전했다.

이상에서 보듯이 반공주의는 근대화 담론의 지지자였고 근대화 담론은 경제위기설에 의해 그리고 노동운동의 이기주의 담론에 의해 또다시 지지 받았다. 이 모든 담론들은 지배블록의 반대세력, 특히 노동운동을 겨냥하고 있었다. 특히 여기에서 다시 한번 강조되어야 할 것은 이들 담론이 근본적으로 노동자계급을 겨냥함으로써 이들이 계급적 정체성을 갖거나 이것을 실천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피지배계급이 하나의 저항적인 역사적 블록의 중심이 되는 것을 견제함으로써 자본주의의 안정적인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지배블록의 헤게모니 프로젝트였다는 점이다.

한편, 권력이 있는 곳에 저항이 있다는 푸코의 통찰처럼 지배담론이 있는 곳에 항상 저항담론이 존재해 왔다. 즉 대항담론 역시 지배담론의 변화에 따라 또는 새롭게 형성된 세력에 따라 끊임없이 변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빨갱이’ 담론에 대항해서 권위주의 정권의 노동탄압과 발전모델하에서의 노동자들의 실상을 폭로하는 어용노조, 민주노조, 노동자 인권, 노동시민권, 노동해방, 평등세상 등의 담론을 제시해 왔다. 또한 경제위기설에 대항해서 경제위기의 책임론에 대한 담론을 개발해 왔는데 경제위기 주범은 재벌과 발전국가 간의 공모에 있다는 담론을 제시해 오려고 노력했다. 한편 현재 가장 네거티브하고 효과적인 지배담론인 이기주의에 대해서는 내부 반성과 함께 노동과 시민의 연대에 기초한 사회공공성 담론을 제시해 왔다.

제 3 장

의인의 등장과 리더십의 형성 : 사회적 약자를 위한 투쟁

1. 민주주의의 연대와 담론

가. 개발연대, 민주연대, 민주연대의 분열

한국의 민주주의와 노동운동이 질적으로 다른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계기는 '87년 민주화투쟁과 노동자대투쟁이었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87년은 한국의 정치와 노동운동의 역사에서 역사적 계기(historical momentum)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역사적인 계기로 보는 이유는 군부독재의 퇴진과 민주주의의 이행이 시작되었다는 점과 권력관계가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전자의 경우 절차적 수준에서 민주주의의 이행이 급격하게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도화되었다면, 후자의 경우 지배계급 내의 자유주의 분파가 권력의 핵심으로 진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주노조운동이 시민권의 획득을 위해 조직화를 시작했다. 이처럼 산업화 시기와 민주화 시기에 권력관계가 내용적으로 상이한데, 먼저 민주화 이전에는 개발연대와 민주연대가 대립했다면, 민주화 시기에는 민주연대 내의 분열이 존재하여 권력관계가 재편되었다는 점이다. 여기에서는 두 개의 차별적인 권력관계를 중심으로 두 시기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민주화 이전, 즉 발전국가에 의해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던 시기에 지배세력은 재벌과 군부독재였다. 이 시기 “권위주의 정권은 성장 및

수출 목표와 그에 따른 투자계획을 포함하는 경제개발계획을 입안·집행하면서 자원배분을 거시경제정책에 맞게 유도하는 시장창출적 개발국가”였다. 한편, 권위주의 산업화 과정에서 형성된 시장은 첫째, 국가가 경제성장 목표를 설정하고 여기에 민간 기업을 동원하여 자원의 할당과 분배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는 강한 국가 주도성, 둘째, 이 과정에서 국가에 의해 육성된 소수의 거대 기업이 국가의 거시경제정책의 성장 목표를 대리 추진하면서 국민경제를 지배하는 재벌경제체제로 특징지워진다(최장집, 2002: 160~161). 한편, 노동은 개발연대에 종속되었고 발전국가의 이념과 목표에 동원되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노동이 철저하게 포섭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철저하게 배제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반공주의와 발전주의에 순응한 노동조합은 산업전사로서 경제발전에 동원되었다면, 이것에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일체의 세력, 예를 들어 민주노조운동의 경우 폭력적 경찰기구와 국가보안법의 법적 기구에 의해 억압되었다. 재벌 중심의 경제성장과 노동배제를 특징으로 한 “커다란 불균등을 수반하는 성장제일주의 정책은 정치의 권위주의화, 사회 기득권층의 강화, 노동의 소외 등 사회적 균열을 낳는 심각한 소외와 사회적 분열이라는 대가를 치르면서 수행되었다”(최장집, 2002: 162~163).

지배세력이 발전국가와 재벌의 개발연대라면 저항세력은 군부독재에 대항한 야당, 중산층, 지식인 그리고 대중적인 민중운동을 포괄한 민주연대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른바 ‘재야’ 연합운동은 정당정치운동, 계급적 대중운동, 시민운동이라는 성격이 복합되어 있었다”(조희연, 1998: 412). 이것이 민주연대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이 시기 주요 화두가 독재정권이라는 정치적 민주화였고, 이들이 민주주의를 위해 세력들 간의 연대체를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민주연대 속에 다양한 이념적 조류들이 결합해 있다는 점이다. 먼저 자유주의 세력 내 한 부분, 즉 극우보수주의 세력에 대항해서 ‘저항적인 자유주의’²⁹⁾ 세력이 민주연대에 결합했다는 점이다.

29) 조희연(2003)은 자유주의 세력을 어용적 자유주의 세력과 저항적 자유주의 세력으로 나누고 있다. “어용적” 자유주의는 1950년대와 같이 극우보수주의에 포섭

이들은 야당 이외에 지식인, 종교 조직, 신중간계급의 일부 등을 포괄하고 있었다. 한편 민중운동세력이 민주연대에 주요 세력으로 참여하고 있었는데, “민중운동은 1970년대 중반에 시작되어 1980년대 전반부에는 지배적인 지적 경향이 되었다. 이 광범위한 민중주의운동은 재야 지식인과 학생들에 의해서 주도되었으며, 권위주의 정권과 경제적 불의에 반대하는 노동자·농민·도시빈민·진보적인 지식인 사이의 계급동맹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Koo, 2001 : 43). 여기에서 ‘민중’의 개념이 “민족주의적 감정을 포함했고 마르크스주의적 용어가 아니었으며(빨갱이라고 불리는 것을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으므로) 모든 대중적 부분들을 포괄할 수 있을 정도로 모호하고 광범위해 정치적 운동과 문화적 운동 모두에 적합했다. 민중은 정치적으로 억압받는 사람,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 그리고 경제성장의 혜택에서 배제된 모든 사람을 포함했다”(Koo, 2001 : 211). 이러한 민중 개념은 1980년대를 경유하면서 보다 계급적인 내용을 갖는 개념으로 재규정되었지만, 기본적으로 ‘군부독재 타도’라는 시대적인 기본 명제 앞에서 실천적으로 독자적인 정체성을 드러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보듯이 개발연대와 민주연대는 ‘독재 대 민주’ 또는 ‘반민주 대 민주’의 대당으로 표현될 수 있고, 여기에서 민주연대는 군부독재와 재벌 간의 연대에 대해 모든 세력을 포괄하고 있었다. 즉 “1970·80년대 반독재 민주화운동은 저항적 자유주의(세력)와 (새롭게 출현한) 저항적인 진보주의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다(조희연, 2003 : 23~24).

하지만, ‘군부독재 타도’와 대통령 간선제를 철폐하는 목표를 상징화했던 ‘호헌 철폐’의 구호 속에 다양한 세력이 모였던 민주연대는 '87년 민주항쟁 이후 분열되었고 이러한 분열은 이념적 차원에서 볼 때, 자유주의 세력과 진보주의 세력(사회주의 또는 사회민주주의) 간 분열이었고 정치사회 세력으로 본다면 자유주의의 제도권 정치세력, 시민운동, 그리

된 형태로 존재하나, 이제 자유주의의 일정 분과 - 1970년대 교회 및 반독재 지식인들의 대부분은 자유주의적 지향을 가지고 있었다 - 가 저항적 성격을 드러내면서 반독재 민주화 운동에 합류하게 된다는 것이다”(pp.23~24). 한편 손호철(2003)은 ‘파쇼적·반동적 부르주아(민정당)’와 ‘자유주의적 부르주아(민주계)’로 구분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고 노동운동 등으로 분화되었다.

이상의 분열은 권력관계를 새롭게 재편했는데, 지배블록 내부로 본다면, 개혁 대 수구의 대립으로 특징화할 수 있다. 개혁의 경우는 “과거의 민주화 세력으로서 지배블록 내의 헤게모니적 분파를 형성한 민주계 등 개혁세력과 과거의 반민주세력으로서 개혁과 민주화에 저항하는 수구 세력 간의 대립이라는 지배블록 내부의 대치선으로 변형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손호철, 2003: 450). 한편 민주화 이후 지배블록이 제한적 민주주의를 추구했을 뿐만 아니라 구지배세력과의 연합에 기초하여 형성되었기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는 보다 철저한 민주화를 추구하는 진보세력과 제한적 민주주의로 한정하려는 지배블록 간의 진보 대 보수의 구도로 나아갔다.

이처럼 민주 대 반민주는 개혁 대 수구의 대립 또는 진보 대 보수의 대립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전선의 변형은 민주연대가 균열되면서 저항적 자유주의 세력이 3당 합당을 통해 지배세력의 핵심이 되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민주화라는 목표와 담론이 더 이상 저항세력의 전유물이 아니라 지배세력에 의해 지배담론의 일부로 포섭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자체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내용을 둘러싼 논쟁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즉 절차적 수준의 민주주의를 한편으로 하고 경제적 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또는 실질적 민주주의 등으로 불리는 마샬의 시민권 차원의 민주주의를 다른 한편으로 하는 재편이 이루어졌다. 이것은 민주화 이후 등장한 정권들이 민주주의를 불철저하게 이행한 데 그 원인이 있었다.³⁰⁾

30) 최장집(2002)은 ‘재벌개혁에 취약한 민주화’와 ‘노동 없는 민주주의’로 민주화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김영삼 정부의 경우를 보면 초기의 개혁 의지가 퇴색된 이후 경제정책은 대체적으로 친재벌적인 내용이 지배적이 되었다. 여신관리규제,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규제, 업종 전문화 등 그 이전 권위주의 정권의 재벌규제 정책은 오히려 완화되었다. 뿐만 아니라 공기업 민영화, 사회간접자본의 민간자본 유치, 이동통신 등 대규모 국가사업은 재벌기업들에게 특혜를 나눠주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전두환 정부에서부터 진행된 재벌기업의 업종 전문화 정책을 과기하고 삼성으로 하여금 승용차 시장에 진입하게 한 것도 김영삼 정부 때였다.” “정치참여, 정책결정 과정, 노사관계 모두에서 노동의 배제는 지속되었다”(p.171).

한편 민주연대의 균열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노동운동과 시민운동 간의 분열이 1990년대를 경유하면서 나타났다는 점이다. 민주화 이전의 시기에 민주화와 민중이라는 틀 속에서 사고되었던 시민운동은 그 이후 조직노동에 기반한 노동운동의 계급 지향적인 운동과 차별적인 노선의 사회운동을 전개하였다. 즉 이들은 민중 특히 노동계급이 아니라 중산층에 기반한 운동을 전개했다는 점, 운동의 목표가 자본주의 변혁이 아니라 ‘경제정의’와 ‘참여민주주의’ 등의 실질적 민주주의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노동운동과 차별적인 사회운동이었다. 그 결과 “민중운동=계급적 문제 영역, 시민운동=시민적 문제 영역”이라는 도식이 성립되었다(조희연, 1998: 260).³¹⁾ 이처럼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분열이 이념적·계급적·정책적 내용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곧 양자 간의 경쟁체제로 돌입하였고 이것은 상호간의 연대를 저해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나. 담론정치

1997년 경제위기 이전의 시기를 담론정치의 측면에서 나누어 본다면 크게 두 시기로 구분될 수 있다. 첫 번째는 1987년 민주화 이전의 시기

31)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을 대체로 운동주체, 운동목표와 입장 그리고 운동방식, 운동쟁점이라는 네 가지 기준에 의해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민중운동의 주체는 이해관계의 당사자인 노동자, 농민, 빈민, 지역주민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시민운동의 주체는 화이트칼라나 자영업자 등의 중간층이나 지식인, 학생, 종교인, 주부 등의 주변층이 중심이 되고 있다. 둘째로, 민중운동의 목표는 경제적 불평등과 정치적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한 구조개혁이며 좀 더 근본적이고 사회 전체적인 민주화를 추구한다. 이에 비해 시민운동은 정치적 목표보다는 시민사회 내적인 목표, 부정부패 추방, 촌지 없애기, 의식개혁, 생활환경운동, 생활공동체운동 등을 지향하거나 자율적·합리적 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점진적인 제도개선을 추구한다. 셋째로, 민중운동은 주체와 목표의 특성으로 인해 파업, 시위, 농성 등 급진적인 운동방식을 많이 사용한다. 이에 비해 시민운동은 주로 캠페인, 국민홍보, 강연회 등 온건하고 합법적인 운동방식을 사용한다. 마지막으로 운동쟁점을 본다면 민중운동은 경제적·계급적 불평등과 권력의 불평등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이해관계를 쟁점으로 삼고 있다. 이에 비해 시민운동은 경제적 정의, 부정부패 추방, 환경, 여성 등 시민사회의 공공선이라는 광범위한 쟁점을 포괄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쟁점의 차이가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을 확연하게 구분해 주는 것은 아니다(정태석 외, 1993; 은수미, 2001: 14 재인용).

로서 군부독재, 권위주의 정권이 지배하던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반공주의와 발전주의를 핵심담론 축으로 해서 가족주의, 근대화, 국민총화론 등이 지배담론으로 존재했다면, 민중민주주의와 반독재민주주의가 대항담론으로 존재했다.

두 번째는 민주화 시대로서 이 시기에는 민주주의 담론이 모든 정치세력에 공통된 화두였다. 따라서 ‘민주 대 반민주 구도’가 기본적인 이념의 축이었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내용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는데, 전자가 절차적 민주주의 수준에 머물면서 국가경쟁력 등의 발전주의의 사고에 머물렀다면, 후자는 협의민주주의, 실질적 민주주의, 경제적 민주주의 등을 내용으로 경제정의 담론을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시기에는 반공주의와 발전주의가 지배담론으로 존재했다. 우선 반공주의 담론이 지배적인 헤게모니로서 등장하게 되는 과정은 역사적인 고찰을 필요로 한다. 즉, 반공주의의 단초는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전략에서 발견된다. 일제는 노동자와 농민의 사회운동이 사상운동의 성격을 띠지 않도록 그리고 이들 운동이 민족해방운동으로 발전하지 못하도록 공산주의 운동을 폭력적으로 탄압하는 한편, 사회운동을 온건한 경제주의의 틀에 가두려 했다. 일제는 공산주의가 유기체적 가족질서라는 동양의 미풍양속을 해치며 ‘소요’, ‘파괴’, ‘불화’를 일으키는 사악한 것이라고 선전했다. 폭력적 탄압을 수반하는 일제의 반공주의는 민족해방운동을 완전히 막지는 못했을지라도 그것의 사상적 기반과 사회적 기반을 대단히 협소하게 만들었다(강경성, 1999: 281).

이러한 반공주의는 냉전과 분단 체제에서 지속적으로 재생산되었다. 남한에서는 미군정과 우익 세력이 연합을 하여 진보세력을 제거함으로써 해방정국 초기에 주도적이었던 좌파 헤게모니가 사라졌다. 그리고 반공·반북의 탄압정국 속에서 잔존해 있던 대부분의 좌익세력들은 북으로 흡수·통합되었고, 이는 결국 북한의 좌익정권에 정당성의 무게와 정치적 힘을 실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미군정 이후 한반도의 이데올로기 지형은 남한의 극우경화로, 북한의 극좌경화로 재편되면서, 서로 다른 체제를 지향하는 분단국가의 건설을 가속화시켰다(홍성태, 2005: 208). 미군정 반공주의가 공산주의에 대해 ‘소요’, ‘파괴’, ‘괴’ 등 자극적

인 언어로 비난했다는 점에서 일제의 공산주의에 대한 억압을 재생한 것이었다(강경성, 1999: 284).

반공주의가 하나의 스티그마로 고착하게 된 중요한 계기는 한국전쟁이었다. 즉 전쟁은 “지배이데올로기를 성공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게 한 결정적인 역사적 사건”이었는데(홍성태, 2005: 207~208), 전쟁을 체험하면서 일반사람들은 반공주의를 단순한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곧 생사를 좌우하는 물리적 폭력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강경성, 1999: 285). 박정희 군사독재정권 또한 저항을 효과적으로 억압하고 자신의 정당성을 반공주의, 보다 정확하게는 반북주의에서 찾았다.

이상에서 보듯이 반공주의는 일제로부터 시작되어 군사독재정권을 거치는 과정에서 “한국전쟁의 생생한 체험과 공포감을 배경으로 대다수 민중들에게 확산되었다. 과거 외세에 의한 주입이 반공주의의 수동적 수용을 강조하는 것이었다면, 한국전쟁의 체험은 반공주의를 내면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경제적 발전주의와 접목된 반공주의는 일반대중들의 민족주의 정서를 동원하는 데 성공하여 사회적 생존논리로 변신하였다”(강경성, 1999: 289). 한편, '87년 민주항쟁은 반공주의에 대한 강력한 문제를 제기했던 역사적 계기였다. 즉 “87년 6월항쟁에 의해 확장된 시민사회의 담론지형과 2000년 김대중 정부가 시도한 남북관계에 대한 화해와 평화의 분위기 조성은 이전에 절대적이었던 반공 효과를 상당부분 침식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반공주의는 남한사회에서 더 이상 과거의 담론정치가 보여주었던 왜곡된 편향성으로는 그 설득력을 갖지 못했다”(홍성태, 2005: 216). 하지만 반공주의는 국가안보, 반북이데올로기, 반노동주의(anti-labourism) 등의 하위담론을 통해 여전히 한국사회를 규율하는 데 일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임현진·송호근, 1994).

이상에서 보듯이 반공주의는 한국의 현대사와 같이했고 시대정신이자 국시로서 최고의 이데올로기적 지위에 있었으며, 이것은 국가보안법과 억압적 국가장치를 동원해서 국민들과 노동자들을 위협했고 결국 그 자신을 시민사회에 내면화시켜 왔다. 이처럼 남한 사회는 반공주의가 지적·도덕적 리더십, 즉 헤게모니를 갖고 작동해 왔다.

반공주의의 효과는 반북주의를 양산하는 것은 물론, 일체의 “이성적 토론을 완전히 ‘압도하는 감각(the sense of overriding)’을 가지고 있었고 “일체의 사회적 가치들을 초월하는 것”으로서 “가치 판단에 일체의 사실 판단을 종속시키는 상태”를 만들었고, “분단 의식의 과잉 사회화”(Oversocialization)를 조장했다(권혁범, 1999: 49).³²⁾ 이처럼, 남한 사회에서 반공주의는 억압적이고 불평등한 질서를 정당화하고 보호하고 그것을 재생산하는 효과적인 언술적 도구였다. 그것은 ‘애국’, ‘국가 안보’, ‘친북 좌익세력 척결’ 등 국가주의적 동원의 정치적 상징으로서뿐만이 아니고 일상적으로 가동되는 ‘감시와 처벌’의 회로판의 재료로서 성적·계층적·지역적 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저항 및 갈등을 은폐·봉쇄하며 지배 엘리트의 이익 보장 구조를 재생산하는 생활양식적 신념 체계의 일부로 기능해 왔다(권혁범, 1999: 74~75).

한편, 발전주의 담론은 박정희의 5·16쿠데타 이후 개발독재체제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된 것으로서 ‘조국 근대화’, ‘선성장 후분배’, ‘수출체제 구축’ 등의 하위담론을 통해 자신을 드러냈는데, 이는 “개발이라는 적극적인 국가 목표를 지배담론에 포섭함으로써 지배담론을 재정당화하고 혁신하는 성격을 갖는다”(조희연, 2003: 113~114). 발전주의 담론은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데 있어 국민을 동원하는 효과를 가지는 한편, 민주주의에 대한 경제발전의 우선성, 사회복지에 대한 경제성장의 우선성, 그리고 노동의 배제를 은연 중에 유포하는 데 효과적인 담론으로 기능해 왔다. 특히 이것은 취약한 군부독재의 정당성을 ‘밥’의 문제 해결을 통해 해소함으로써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었다는 점에서 일종의 헤게모니 프로젝트로서 기능했었던 것으로 보인다.³³⁾

32) 한국의 반공주의가 제3세계의 반공주의나 미국의 반공주의와 다른 점은 전자에 게 모든 형태의 좌파적 사유는 금기이고 그것의 표출이 법적·사회적 탄압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이런 성격은 공산당 및 사회주의 정당이 합법적으로 존재하고 좌파적 세계관이 적어도 법적으로 허용되는 대다수 국가의 반공주의와 구분된다(권혁범, 1999: 49~50).

33) 이 밖에 민주화 이전에 지배블록은 민족주의와 민주주의를 지배담론으로 채용하려고 시도했는데, 민족주의 담론은 “박정희 정권하에서 공식적으로 허용되었으나 반미 또는 반일로 나아갈 개연성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반미=용공이라는 도식 속에서 실질적으로는 대단히 제한적으로만 사용되었다”(김동춘, 1994: 217).

이상의 지배담론은 다양한 담론의 접합을 통해 내적 연관성을 갖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 “국민적 지지를 동원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였던 ‘조국 근대화’라는 기치는 바로 반공주의와 성장주의의 결합체였다(임현진·송호근, 1994: 182): 우리가 지향하는 조국 근대화가말로 남북통일을 위한 대전제요 중간 목표인 것이다. 통일의 길이 조국 근대화에 있고 근대화의 길이 경제 자립에 있는 것이라면 자립은 통일의 첫 단계가 되는 것이다”(대통령비서실, <박정희대통령 연설문집> 제3집, 김동춘, 1994: 229 재인용).

한편 이 시기 대항담론은 민주주의와 민중라고 할 수 있다. 즉 80년대 남한에서 폭발했던 민주화운동과 민중의 언어는 잠재되어 있던 저항블록과 대항담론의 질서를 운동정치의 한복판으로 끌어올리는 기증기 역할을 했다(홍성태, 2005: 222). 여기에서 저항 집단의 민주주의는 군부독재에 대항한 일반적인 차원의 민주주의와 보다 계급적 내용을 갖는 민중민주주의로 나뉠 수 있다.

우선 반독재민주주의 담론의 경우, 1960년대에는 ‘민주주의가 밥 먹여 주냐’는 식의 담론이 1970년대 후반이 되면서 ‘사람이 밥만 먹고 사냐’는 식으로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담론 상황으로 바뀌었다(조희연, 2003: 17). 이것은 폭력적인 집권 연장과 이에 따른 정치적 정당성이 약화되었고 재벌 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화의 폐해, 경제성장으로 인한 중산층의 등장 등의 토대 변화, 민주연대와 같은 저항블록의 형성 등의 요인에 의한 것으로서 민주화 담론은 “1970년대 말 이후 1980년대를 거치면서 국민적 담론이 되면서 ‘반공주의-개발주의적 지배담론’을 압도하게 되었다. 여기서 민주화는 ‘피할 수 없는’ 목표가 되었고, 이것의 현실적 표출이 ’87년 6월 민주항쟁이라고 할 수 있다. ’87년 6월 민주항쟁은 민주주의 담론이 이제 단순히 저항담론일 뿐만 아니라, 지배담론으로서도 그것을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조희연, 2003: 113~114).

한편, 민주주의는 “권위주의적-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민족적 민주주의’라는 반민주주의적 담론으로 민주주의 담론을 상대화시키고 부차화’시키는 경향이 있었다(조희연, 2003: 19).

한편, 민중담론의 경우, 사회운동과의 밀접한 관련 속에서 전개되었다. 1970년대에는 반독재 민주화의 실현이라는 실천적 고민 속에서 시작되어 수동적이고 소시민적 존재라는 인식을 벗어나지 못했지만, 1980년대에 접어들자 광주항쟁의 경험과 노동계급의 급격한 성장을 배경으로 운동 주체로서의 민중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특히 마르크스주의 이론 및 사회구성체론을 바탕으로 한 논의가 가세하면서 변혁운동의 주체라는 관점에서 민중 논의가 이루어졌다. 1980년대 후반에는 6월항쟁을 통해 급격하게 성장한 신중간층을 변혁운동의 동력으로서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추가되었다. 이러한 민중론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시민사회 및 시민운동의 성격과 위상을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지면서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허영란, 2005: 303~304). 이처럼 민중 인식은 초기의 ‘소외론적 민중관’에서 점차 ‘과학적·변혁론적 민중관’으로 이동했다고 할 수 있다. 후자의 견지에서 볼 때, 민중은 민족 모순과 계급 모순을 집중적으로 체현한 자이기 때문에 적절한 계기(주로 올바른 지도)가 주어진다면 필연적으로 투쟁·저항·변혁에 뛰어들 존재로 파악되며, 모순의 과학적 분석을 통해서 추출할 수 있는 분석적 범주로서 노동계급의 해게모니화에 결집된 계급연합으로 실체화되었다(이용기, 2007: 202~203). 이처럼 민중론이 1980년대 이후 계급론 및 사회구성체론과 결합되면서, 자본주의의 모순과 분단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민중은 민중해방과 민족해방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통일전선적 존재이며, 그러한 민중적 통일전선은 선진적인 노동계급의 지도를 바탕으로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허영란, 2005: 305~306).

이상에서 보듯이 ‘민중담론은 민중 의미틀(frames)을 형성했고, 교회와 학내에서 시작된 시위를 도화선으로 권위적 지배에 항거하는 6월 민주항쟁으로 이어졌다. 이때 의미틀(frames)은 권위적 정체에 항거하는 반정부 시위를 전국적으로 촉진시켰다. 또한 민중담론은 상징적 세계에서 다른 상징들과 경쟁하고 결합된 새로운 상징들을 낳았다. 이는 상징들의 조합으로서 6월 민주항쟁을 완전하게 했다(정철희, 2005: 169).

이상에서 보듯이 민주화 이전에 반공주의와 발전주의를 지배담론으로 하고 반독재 민주화와 민중담론을 다른 한편으로 하는 담론정치가 전개

되었다. 초기에 반공주의와 발전주의 담론은 분단과 저발전이라는 정치경제적 상황과 강력한 억압적 통치기구로 인해 지배적인 담론이 될 수 있었다. 즉 박정희 정권 기간에 국가안보와 경제성장은 정당화 담론으로서 민주화 담론에서 우위를 보일 수 있었다. 하지만, 1980년 광주 민주화쟁을 기점으로 해서 전두환 정권의 폭력성에 대한 비판과 시민사회 내부에서의 계급 구성의 변화, 정치적 수준에서 민주화의 요구 등은 ‘민주 대 독재’ 담론을 ‘진리 대 허위’의 대당(對當)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던 것으로 보인다.

민주화 시기에 담론은 민주연대가 분화되고 민주연대의 자유주의적 분파가 지배블록이 되면서 상당한 변화를 겪게 된다. 이 시기에 우선 민주주의가 시대적인 담론으로 부상하였다. 다음으로 어떤 민주주의인가를 둘러싼 갈등이 시작되었다.

구체적으로 우선 이 시기에 민주주의가 사회적 합의로 정착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것은 “‘87년 이후의 지배담론이 그 이전의 권위주의 시기의 저항담론의 핵심적 내용이었던 민주주의를 포섭’함으로써(조희연, 2003: 50) 가속화되었다. 이처럼 이 시기는 민주주의라는 담론의 합의가 일정하게 사회적으로 존재했는데, 그 해석들은 매우 상이했다. 즉 지배계급은 절차적 수준에 머물렀다면 피지배계급은 사회적 수준의 민주화, 즉 더 급진적인 민주화를 제시했다. 예를 들어, “‘87년 이후 민주화와 관련한 지배담론의 구체적 내용은 민주화의 불가피성을 수용하면서, 때로는 ‘제한된 민주화’ 혹은 ‘과잉민주화론’(민주화가 과잉이어서 혼란이 초래된다는 논리), 시장이나 시민사회에 대한 공적 규제의 철회와 완전한 자율화론 등으로 표출되었다. 반면에 민주화와 관련된 저항담론은 ‘철저한 민주화’ 혹은 ‘과소 민주화론’, ‘민주주의의 생활세계로의 급진적 확장’ — 양심적 병영거부, 동성애, 장애인에 대한 억압적 문화의 개혁 등 — 등으로 표출되었다”(조희연, 2003: 87).³⁴⁾

34) 한편 지배블록은 ‘국가경쟁력’이라는 새로운 지배담론을 제시했다. 김영삼 정권은 1996년 말에 노사관계 개혁을 구상하면서 그 이유로 국제경쟁의 격화와 생산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유로 대외경쟁력을 갖추고 국제경쟁에 살아남기 위해서 모든 경제체제가 국제경쟁이라는 틀에 따라 재정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배블록의 민주주의에 대해 저항담론은 참여민주주의 또는 민중민주주의를 제기하였는데, 전자가 경실련 등의 시민단체가 제기했다면 후자는 노동운동이 제기했다고 할 수 있다. 민중민주주의가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1980년대 말에 소멸되었다는 점에서 여기에서는 경실련과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시민단체가 제기한 민주주의 담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1989년 창립된 경실련의 목표는 조직의 이름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경제정의 실현’이다. 경실련이 이 같은 조직 목표를 설정하고 시민운동을 시작한 것은 1980년 중반 이후 한국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한다. 당시 한국 사회에서는 경제적 차원에서 사회적 비판이 점차 공론화되고 있었다. 당시의 상황에서 경실련은 특히 부동산 투기 문제를 가장 긴급히 해결하여야 할 문제로 보았다. 이렇듯 출범 초기 부동산 문제의 해결을 포함한 경제정의의 실현에 초점을 맞추었던 경실련은 점차 정경유착과 관치금융의 청산, 토지공개념의 도입,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 금융소득종합과세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이의 개혁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한편, 전근대적이고 비효율적인 재벌구조가 한국경제를 정의롭지 못하게 하는 한 축이라고 판단하여 재벌에의 경제력 집중방지를 위한 활동을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의 공개 등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도 하였다(참여연대와 경실련, 2000: 40~41).

또 다른 영향력 있는 시민운동 단체인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참여연대)는 1994년 각계의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여하여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꾼다”라는 기치를 내세우며 창립되었다(참여연대와 경실련, 2000: 50). 참여연대는 참여민주주의를 핵심적인 모토로 내걸었고, 문민정부 출범 이후 개혁이 실종되면서 오히려 많은 부정과 비리가 발생한 것에 대해 비판하고,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시민의 참여를 조직하여 왔다.

이상에서 보듯이 시민운동은 그 목표가 경제정의 실현과 시민참여라는 실질적 민주주의의 진전에 있었다. 이것은 지배담론의 형식적 민주주의, 즉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립되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변혁 세력의 민중민주주의 또는 사회변혁과도 대립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것은 사회의

혁명적 변화가 아니라 ‘체제 내적인’ 온건노선으로 특징화될 수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경제위기 이전까지 한국의 담론정치는 발전주의와 반공주의 담론과 민주화와 민중담론이 지배하다가 민주화 담론의 승리로 귀결되면서 민중담론이 부차화되고 사라졌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민주화 담론이 시대적인 담론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민중운동 또는 계급이 시민운동 또는 시민으로 대체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1990년대에 시민적 담론의 급부상을 가능하게 했던 중요 요인은 첫째, 1980년대 민중적 담론의 핵심 내용을 구성하고 있던 사회주의의 현실 형태인 현존사회주의의 붕괴가 낳은 효과를 들 수 있다. 둘째로는 민중적 담론의 또 다른 핵심 내용을 구성하고 있던 민중적 변혁의 ‘현실성’이 약화되고 지배진영이 주도하는 위로부터의 ‘개량적’ 경로가 지배적인 것으로 되는 현실이 출현하였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셋째, 한국 자본주의의 축적 구조의 정착에 따라 계급구조화가 진전되고 그것의 정치적 반영으로서 ‘체제 내적인’ 온건노선을 수용할 수 있는 계급적 조건이 형성되었다는 것, 넷째, 우리 자신에 대한 반성적 측면으로서 민중적 담론 자체의 적극적인 심화와 개방화가 부족하였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조희연, 1998: 224).

2. 노동의 시민권 획득과 리더십의 제도화

가. 자본주의의 야만성과 비도덕성에 대한 경종 : 전태일과 민주노조운동

노동운동의 리더십은 한국의 ‘천민자본주의’의 야만성과 비도덕성에 대한 목숨을 내건 저항으로부터 형성되었다. 대표적인 두 개의 사건은 전태일의 분신 사건과 민주노조운동의 등장이었는데, 이것들은 군사독재에 의한 발전모델과 병영적 노동통제에 대한 저항의 상징이었고, 이들에 대한 박해는 약자와 민주주의를 위한 순교와 헌신으로 인식되었다. 여기에서는 전태일 분신과 민주노조운동을 중심으로 노동운동 리더십 형성을 서술하고자 한다(이하 유범상, 2001 참조).

민주노조운동은 1970년대 한국노총의 어용적 성격, 즉 친정부·친기업

적 노선에 반기를 들고 정권과 자본의 억압적 노동통제에 저항했던 노동운동세력을 의미한다. 민주노조운동의 탄생에 있어 결정적인 계기는 1970년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는 구호와 함께 분신한 전태일의 사건이다. 이 역사적 사건은 첫 번째로 천민자본주의의 실상을 일반사회에 알린 것으로 평가받는다. “1960년대 경제개발로 인한 화려한 고도성장이 노동자들에게는 저임금, 장시간노동, 무권리 상태를 강요했을 뿐이라는 노동현실을 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유경순, 2005: 100).

두 번째로 전태일 분신은 민주노조운동 조직화의 출발이 되었다. 1960년대 후반부터 민주노조를 조직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본격적인 시작은 전태일 분신 직후에 결성된 청계피복 결성이었다(1970. 11. 27). “청계피복 노동자들의 ‘전태일 정신 계승’을 위한 활동은 청계노조를 ‘1970년대 민주노조운동의 상징’으로 인식하게 했다”(유경순, 2005: 101).

셋째, 전태일 분신 사건은 민주노조운동의 정신적·물적 토대가 되었다. 우선 지식인들이 노동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후 노학연대 또는 현장투신의 계기로 작용했다. 그리고 현재 노동운동은 정파들의 분화에도 불구하고 전태일 분신에서 노동운동 정신을 찾는 데는 이견이 없는 듯이 보인다. 그의 정신은 도덕적인 차원의 희생정신으로부터 마르크스주의의 계급의식까지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으며, 1988년 이후 매년 노동자 전국대회에서 재생되고 있다.

한편, 민주노조운동은 1970년대에 청계피복 노동자들의 청계천변 투쟁, 한국화이자 노동자들의 투쟁, 반도상사, 한국모방, 동일방직 투쟁, 그리고 YH무역 노동자들의 신민당사 농성투쟁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980년대 초반부터 전두환 독재정권의 국가보안법의 무차별적인 적용과 체계적인 노동운동 탄압으로 인해 1983년 무렵 거의 와해되었다. 하지만 민주노조운동은, 1985년 총선을 의식한 전두환 정권의 유화조치 상황에서 블랙리스트 철폐운동(1983년 말), 1984년에는 부산 태화고무공장 노동자들의 직장폐쇄 항의농성, 대구 택시기사들의 집단적인 파업투쟁과 부산 등 여타 지역으로 확산, 청계피복노동조합 합법성 쟁취대회, 노동법 개정운동 등으로 재점화되었다.

민주노조운동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대우자동차 파업농성(4월 16일~4월 25일)과 구로지역 동맹파업은 1985년에 일어났다. 전자가 대기업 사업장 남성노동자들이 주도했고 상당한 투쟁력과 파급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국적인 관심의 대상이었다. 왜냐하면 “기존의 노동조합들이 대부분 여성 근로자 중심의 노동집약적 산업 분야로, 외자에 의한 경제개발과 수출에 의존하는, 극도로 낮은 저임금 업체”였기 때문이다(박민성, 1989: 167). 한편, 후자는 정치적 성격을 띤 연대투쟁이었다는 점에서 한국 노동운동사에서 의미있는 사건이었다. 구로지역 동맹파업은 민주노조들이 연대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특히 정치적 요구를 내걸었다는 점에서 한국 노동운동사의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다. 구로지역 연대투쟁은 투쟁 대상을 정부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정치투쟁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었고(구로연투에서 “노동부 장관 물러나라”, “노동악법 철폐하라” 등의 구호가 제시되었음), 현장에 기반을 둔 동맹파업과 농성·시위를 통한 연대투쟁이었다는 점에서 기존의 사건과 차별적이었다(유범상, 2005: 238).

한편 이 과정에서 의미있는 노동운동조직들이 만들어졌는데, 예를 들어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1984. 3), 한국기독교노동자총연맹(1985. 2), 노동운동탄압저지 투쟁위원회(1985. 4), 구로지역 노조민주화추진위원회연합, 서울노동운동연합, 인천지역 노동자연맹 등의 결성이 언급될 수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1970년대 전태일 분신 사건으로부터 기원하였고 1995년 민주노총이 창립의 모태가 된 민주노조운동과 그 활동가들은 노동자들에게 ‘정의로운 자’, 즉 의인(義人)으로 인식되었다. 그렇다면, 어떤 점에서 이들은 정의로운 사회적 주체로 인식되었는가?

첫째, 민주노조운동이 박해와 억압받는 자 또는 약자에 위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선 당시의 노동자들은 ‘산업역군’으로 호명되어 개발독재가 계획한 경제성장을 위해 모든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었다. 노동자들의 상태는 경제생활뿐만 아니라 문화생활 등에서 비인간적인 상태에 있었다. 1960년대 고도성장 속에서 노동자의 생활 상태는 “과거의 열악한 생활 상태와 다를 바 없었다. 제조업 분야 노동자의 평균임금은 1960년대 전반에 걸쳐 도시근로자의 생계비에는 물론 생계비에서 주거비, 광열비,

피복비, 잡비 등을 제외한 순음식물비에도 못미쳤다. 장시간 저임금노동에 ‘시키는 대로 일하고, 주는 대로 받는’ 인간 이하의 비참한 현실이었다”(한국노총 서울특별시 지역본부, 1998: 42). 1970년대 노동자들의 생활 실태는 도시노동자들의 임금 수입과 가계지출을 비교해 보면 분명하게 나타난다. 꾸준한 임금인상에도 가계적자는 오히려 누적되었다. 가계적자의 폭도 점차 늘어나 1979년에는 제조업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이 11만 9천 원이었음에 비해 가계지출은 15만 2천 원으로 월 33,000원의 가계적자가 발생하고 있었다. 노동자들은 이러한 가계적자를 충당하기 위해 잔업과 철야 등 장시간노동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전노협백서 1, 1997: 5). 1980년대 들어 경제성장은 지속되었고 국제경상수지는 호전되었지만 노동자의 생활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노동시간은 1986년의 경우 월평균 54.7시간으로 일본(41.1)과 대만(48.1)에 비교해서 현저하게 길었다. 그리고 1966~84년에 전체 제조업의 노동강도는 평균 2.7배 증가했으며 산업재해 또한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1970년 산업재해자수가 37,752명이었으나 1986년에는 142,100명이었다. 이 중 광업과 건설업의 사망재해도수율이 국제 평균치의 7.4배와 5.7배에 이르러 노동시간과 함께 세계 최고 기록을 세우고 있었다(김형기, 1989: 32~34; 전노협백서 1, 1997: 144~149 참조). 한편, 학출 노동자들의 경우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노동자들을 위해 자신을 투신하고 이로 인해 정권으로부터 탄압을 받는다는 점에서 순교자나 박해자와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둘째, 민주노조운동은 어용노조에 반대하여 노동자들의 진정한 권리를 위한 활동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민주노조는 정의로운 자로 인식되었다. 1970년대 민주노조는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해 당시 권력을 비판했다는 점에서 ‘민주’노조라 불릴 만했다. 즉 이들은 기존의 노사, 노정, 그리고 노노관계(노동조합과 한국노총)를 부정했다. 이런 점에서 당시의 민주노조는 국가, 어용노조, 기업으로부터 자율적이었다. 민주노조의 요구와 활동은 당시의 독재정권과 어용노조, 그리고 기업주와 타협 불가능한 것이었는데, 민주노조는 이들의 탄압과 회유에도 노사협조주의를 거부하고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투쟁을 벌였다(유범상, 2005: 118).

셋째, 이들이 내건 노동해방과 인간해방 또한 노동자들의 욕구와 열망을 담아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87년 노동자대투쟁 당시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외친 구호는 ‘인간답게 살고 싶다’였다. 그리고 1988년 11월 전국노동자대회 이후 가장 많이 외친 구호는 ‘노동해방’이었다.” 하지만, “민주노조진영 내에서 ‘노동해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다. 또한 대다수 노동자들이 노동해방을 사회주의로 생각했다고 보기도 곤란하다. 오히려 ’87년 노동자대투쟁 당시 구호인 ‘인간답게 살고 싶다’의 연장선에서, 저임금과 장시간노동, 비인간적 대우 등 스스로를 둘러싸고 있는 억압과 굴레에서 벗어나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욕구를 ‘노동해방’이라는 구호로 표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김유선, 1998 : 34~35). 따라서 노동해방은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한 마디로 ‘노동해방’을 표현하면, ‘착취와 억압이 없는 사회’를 의미합니다. 임금을 받기 위해, 더 이상 저임금 장시간노동에 시달리며 자본을 위해 조출철야에 땀뺀이 돌지 않아도 되는 사회, 노동자와 그 가족이 누구나 인간의 발전과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의식주는 물론이고 교육, 의료, 고용, 노후 문제 등 모든 사회보장이 충분히 갖추어진 사회, 남녀의 성차별로 인한 모든 사회적 차별이 철폐된 사회, 그래서 남녀를 불문하고 노동자가 자신의 개성과 창의성을 자유롭게 발전시킬 수 있는 사회, 이런 사회를 의미합니다. ... 그것은 바로 노동자를 비롯한 농민, 도시영세민 등이 땅의 민중이 억압과 착취에서 해방된 사회, 곧 민중이 주인되는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의 건설입니다(우리노동문제연구원, 1990 : 48).

마지막으로, 이들이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의인으로 인식될 수 있었던 것은 스스로 자신들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대학졸업 후 사회적으로 일정한 신분이 보장될 가능성이 많은 대학생들은 유신독재와 광주 학살 앞에서 스스로 모든 기득권과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자본주의와 독재에 맞서서 지적·도덕적·실천적 저항을 조직하는 유기적 지식인이 될 것을 자처했다. 즉 그들은 정의를 위해 순교의 길을 선택함으로써 박해받는 자,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다.

이상에서 보듯이 민주노조운동은 당시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당시의 지배세력에 대해 모든 자신들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반기를 들었다. 이것이 노동자들과 시민사회에 평가를 받았고 결국 노동운동의 리더십이 지배블록의 비도덕성과, 야만성과 비교되는 도덕성과 정의에 기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요인이었다.

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투쟁 : 임단협

1990년대 이후 노동조합은 상반기에는 임단투, 하반기에는 노동법 개정투쟁이라고 할 정도로 임단투는 노동조합에 있어서 비중 있는 활동이었다. 즉 임단투로 불리는 단체교섭 활동은 “단체교섭에 노동조합의 모든 역량이 집중 투입되고 일상활동도 단체교섭을 잘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1년 가운데 절반 이상, 심지어는 2/3 기간을 차지”했다는 점에서 단위노조의 활동에서 큰 비중을 차지해 왔다(이원보, 1998 : 156).

그렇다면 왜 임단협이 노동조합의 핵심적인 쟁점 사항이었는가?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임금과 노동조건을 둘러싼 노사간의 견해 차이가 매우 크고, 여전히 굽직한 쟁점 사항들이 미해결인 상태로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매년 지리한 협상이 길게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데 일차적인 원인이 있겠지만, 조합원들이 최대 관심사가 임단투이고 임단투를 통해 집행부의 능력을 평가받으며 임단투야말로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내는 최대의 이벤트라는 점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김준, 1998 : 115).

임단협은 “임금과 수당의 인상, 노동시간 단축, 고용안정, 기업내 복지 향상, 해고자 복직, 노동조합의 권리보장, 사회개혁 추진 등 다양한 노동조합의 요구 조건”을 둘러싸고 전개되었지만(이원보, 1998 : 156~157) 실제 핵심 의제는 임금인상률이었다. 그 결과 “3저 호황의 첫해에 해당하는 1986년 8.2%에 불과하던 임금상승률은 1987년 10.0%, 1988년 15.5%로 급상승하였고 1989년에 이르러서는 21.1%까지 치솟았다(최영기, 2001 : 13). 이처럼 임단협에서 임금이 주요 의제가 된 이유는 작업장

내 노사관계 차원에서도 설명될 수 있다. 한국의 작업장정치는 기업주들, 특히 재벌총수 1인이 족벌 소유를 통해 기업을 황제처럼 지배하는 비민주성과 봉건적인 노동통제를 전개해 왔다. 하지만,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강력한 전투성을 가진 노동자들의 등장은 이러한 기업주들에게 적응하기 힘든 구조였고 결국 기업주들은 임금 양보를 통해 작업장에서의 권력 분점을 피해 가고자 했다.³⁵⁾ “이상과 같은 기업주들의 입장과 작업장정치의 구조는 노동자들의 강력한 전투성을 통해 임금인상과 같은 단기 이익을 극대화하게 만들었다. 즉 개별 기업 수준에서 노동의 순응을 이끌어낼 제도적 장치가 부재한 가운데 조직노동자들은 강력한 전투성을 통해 임금인상과 같은 단기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했다”(박동, 2000 : 229).

임단협은 노동조합이 조직화와 조합원 교육을 위한 주요한 공간이 되었는데, “각 노동조합의 활동 일지를 분석해 본 결과에 의하면 회의, 교육, 소모임, 집회 등 노동조합의 각종 활동의 임투 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며, 그 내용은 물론 임투와 관련된 교육·선전·선동이다”(김준, 1998 : 115). 이처럼 노동조합들은 조합원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바탕으로 다양한 전술을 구사하면서 치열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은 자본측의 이해를 대변하는 지배권력과 대항관계를 형성하기도 하였다(이원보, 1998 : 156~157).

한편 상급단체들과 국가도 임단협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왔는데, 양 총 및 소속 연맹노조 단체들은 매년 임금인상률을 포함하는 단체교섭 지침을 제시하였을 뿐 아니라 산하 조합원들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사용자 단체 또는 정부와의 협상을 전개함과 동시에 단위노조들의 투쟁을 집중시키는 총과업을 주도해 왔다(이병훈 외, 2001 : 10). 정부 또한 민주화 이후 임단협에 개입해 왔다. 예를 들어, 1990년부터 3년간 임금가이드라인 정책을 실시했지만 임금상승은 지속되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노사합의에 의한 임금가이드라인 정책, 즉 사회협약에 의한 임금안정화 정

35) “현대그룹 사례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한국의 재벌 기업주들은 노동자들의 경영·인사권의 문제 제기를 경영 특권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박동, 2000 : 212).

책을 추진했는데, 이것은 1993년과 1994년 노-경총과 임금합의 시도로 나타났다. 하지만 민주노조진영은 이를 비판하였고 한국노총 탈퇴운동을 전개하면서 정당성과 조직화의 측면에서 성장의 계기로 삼았다. 이러한 저항 앞에서 결국 한국노총은 임금합의를 지속할 수 없었다.

결론적으로 민주화 이후 제도화된 임단협은 노동조건 개선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노동자들의 삶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더 나아가 임단협 활동은 노동운동의 결속을 다지고 노조활동을 활성화시키는 접착제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다. 높은 임금인상은 이 당시 사회적으로 용인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우선 민주화라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기존의 임금억제와 노동착취에 대한 제몫 찾기로 이해하는 측면이 컸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 대기업의 임금인상이 대다수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으로 귀결되는 일종의 확산 효과가 있었다. 이처럼 민주화 이후 임금인상을 중심으로 한 임단협은 일반노동자들의 이익 증진으로 받아들여졌으며, 노동운동 리더들은 임금인상을 지렛대로 노조의 조직화와 계급정치로의 전환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다. 약자와 국민을 위한 투쟁 : 노동자대투쟁과 총파업³⁶⁾

1987년 이후 10년 동안 노동자들은 두 번의 인상적인 투쟁을 감행했다. '87년 7~9월의 노동자대투쟁이 '공돌이' '공순이'로 지칭되고 있었던 사회적 약자들인 노동자들을 위한 투쟁이었다면, 1996년 말의 총파업은 정부의 노동법과 안기부법의 변칙처리에 대한 일반 민주주의의 수호와 정리해고제의 도입에 대한 국민들을 위한 투쟁이었다. 이 투쟁을 통해 민주노조운동은 비로소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리더십을 보다 공고화할 수 있었다. 여기에서는 두 투쟁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것이 리더십에서 차지하는 의미를 논의하고자 한다.

'87년 노동자대투쟁은 약자들에 '의한' 약자들을 '위한' 정의로운 투쟁으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시민사회는 불법파업³⁷⁾임에도 불구하고 파업으

36) 이 부분은 유범상(2000, 2001)을 주로 참조하였다.

37) 노동자대투쟁은 현행법에서 볼 때 불법투쟁이었다. 단체행동을 제약하던 여러

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상의 불편이나 불안을 크게 문제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최소한 암묵적인 지지를 보냈다. 왜 국민들은 이 투쟁이 약자들의 당연한 권리를 위한 투쟁으로 인식했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우선 '87년 노동자대투쟁이 왜 '대'투쟁으로 호명되는지부터 서술해 보고자 한다. 노동자대투쟁은 '87년 6월의 민주항쟁이라는 정치적으로 열린공간에서 7월부터 9월까지 전국적으로 전개된 노동자들의 파업을 의미한다. 이것이 거대한 투쟁이었던 이유는 기존의 노동운동과 비교하여 비교적 장시간 동안 작업장 곳곳에서 광범위하게 터져나온 노동자들의 저항운동이었기 때문이다.

노동자대투쟁을 지역별로 볼 때, 울산의 현대그룹에서부터 터져나오기 시작해서 남부 중공업 지역으로부터 확산되었다. 이것은 다시 7월 하순 경부터 부산 지역에서 대한조선공사(7. 25), 세신정밀(7. 27), 국제상사(7. 28) 등 대기업으로 이어졌으며, 8월 초순부터는 창원으로 비화되어 현대정공, 대우중공업, 한국중공업, 기아정공, 통일, 삼성중공업 등 창원기계

가지 법 조항들은 노동자들의 격렬한 저항을 제어하지 못했다. 거의 모든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은 쟁의발생 신고나 냉각기간 등의 법적 규제를 아예 무시하고 우선 현장을 점거하고 파업, 농성을 하면서 협상을 해나갔다. 즉 1987년 대투쟁은 그간의 노동법의 굴레를 전면적으로 거부한 것으로서 합법적인 절차를 밟은 쟁의가 5.9%에 불과하고 불법쟁의는 94.1%에 이르렀다(전노협백서 1, 1997 : 164). 노동자들이 쟁의 수단으로 삼은 것은 작업거부, 농성 및 시위였다. 작업거부는 1986년 138건이었던 데 비해 1987년에는 1,226건이나 되어 거의 10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집단 농성투쟁도 122건에서 2,428건으로 무려 20배가 넘게 늘어났다. 이처럼 항의농성·시위 등으로 그 이전 시기에 비해 과격한 형태, 선투쟁 후협상의 방법이 동원되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불법투쟁이 성행되었는가? 그것은 현행 노동법이 노동자대투쟁 앞에서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노조간부들의 43.6%가 노동관계법이 사실상 합법투쟁의 길을 가로막기 때문이라고 답했다(노동부, 1988a : 103). 당시의 노동법상으로는 노동위원회가 적법성을 심사한 뒤 일반사업은 30일, 공익사업은 40일의 냉각기간이 지나야 합법적 파업이 가능했다. 따라서 당시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는 노동법을 무시하고 파업을 전개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3,255건 모두 법 테두리를 벗어난 불법파업이었다. 결국 1987년 11월 정기국회는 '민간 사업장의 합법파업 보장, 노조설립 요건완화'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노동법을 개정했다(김유선, 1998 : 3). 그리고 노동자 대표의 27.8%와 사용자의 46.1%, 그리고 노조가 없는 노동자들의 40.9%가 합법적인 절차를 몰라서 불법투쟁을 했다는 응답으로 미루어 볼 때 불법투쟁의 원인은 노동법에 대한 지식의 부족에서도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노동부, 1988a : 103).

공단 내 대부분의 사업장으로 번져나갔다. 그리고 경인 지역의 대우중공업, 대우자동차 등의 대기업과 삼익악기, 영창악기, 경동산업으로 발전하였으며(한국노총, 1988: 5, 22) 이어 강원도 광산 지역, 마산, 대구, 구미, 광주, 전주 등 전국 각지의 공단으로 확산되어 갔다. 종합하여 볼 때 창원, 울산 등 경남 지역에서 먼저 제조업, 특히 중공업 분야를 중심으로 노동쟁의가 일어나 전국으로 파급되었고, 경인 지역에서는 제조공업 분야에서, 호남·충남 지역에서는 주로 버스·택시 등 운수업 분야에서, 강원 지역에서는 탄광업 분야에서 노동쟁의가 발생했다(강순희, 1998: 61).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740건으로 전체 투쟁의 53%를 차지했고, 운수업이 1,247건, 광업이 127건이며, 서비스·사무직 부문의 노동자들이 새로이 투쟁의 대열에 합류함으로써 전산업·전업종에 걸친 투쟁으로 발전했다(이영민, 1988: 43). 제조업 부문은 시간이 지날수록 전체 쟁의횟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었으나, 운수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전체 쟁의횟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났다.

규모별 노사분규 발생건수를 보면 1,000인 이상의 사업체의 경우는 342개 중 61.1%인 209개 사업장에서 분규가 발생했으며 500~999인 규모의 사업장에서는 943개 중 32.1%인 303개 사업장, 100~299인 규모의 사업장에서는 5,534개 중 23.5%인 1,301개 사업장 그리고 99인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는 99,995개 중 1.3%인 1,255개 사업장에서 분규가 발생하였다. 이상에서 보듯이 노사분규는 사업장 규모 300인 미만인 중소기업에서 발생하였고, 규모가 클수록 발생건수가 적었으나 규모별 사업체수와 비교하여 보면 대기업에서의 분규 발생률이 높았다(노동부, 1988a: 21). 종업원 1,0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은 초기 단계에 주로 발생하고 있으나, 소규모 사업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활발해졌다. 즉 주로 공장이 밀집한 공단 지역에서 쟁의가 먼저 시작되었고, 특정 지역 내부에서 보면 대기업체에서 먼저 시작되어 인근의 중소기업으로 전파된 것이 특징이다. 이처럼 제조업 사업장과 대규모 사업장이 쟁의발생의 선도자 역할을 했는데, 이러한 현상은 1988년 이후에도 지속된다(김동춘, 1995: 112~113).

투쟁의 형태로 보면, 노동자대투쟁은 기본적으로는 공장단위, 기업단

위 등과 같이 연대투쟁이 시도되기도 했으며 공단이나 공업 지대를 기반으로 전국적 규모의 동시다발 투쟁이 전개되었다. 즉 지역별·재벌그룹별·산업별 연대투쟁이 주요한 투쟁 형태로 나타났다. 지역별 동맹파업의 형태는 울산, 광주, 부산, 전주, 서울, 군산, 포항, 안양 등지의 운수노동자 동맹파업에서 가장 잘 나타났고, 재벌계열 동맹파업은 대우중공업의 창원(8.4), 인천(8.6), 영등포와 안양(8.7) 등 4개 사업장 동맹파업과 현대그룹계열 내 울산 지역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동맹파업, 울산 현대정공과 창원 현대정공의 동맹파업 등에서 나타났다. 특히 ‘현대그룹노동조합협의회’를 통한 연대투쟁은 한국 노동운동 사상 새로운 투쟁 형태를 정립한 것이었다. 이상의 지역별·그룹별 연대투쟁은 지역노조협의회, 그룹노조협의회 등으로 조직화되어 이후 민주노조운동을 이끌어 가는 핵심적 조직체제로 성장하였다(전노협백서 1, 1997: 166).

따라서 대부분의 논자들은 “참으로 ‘십년을 하루에 뛰어넘은’ 거대한 대중운동의 비약”(엄주웅, 1994: 164), “질풍노도의 시기”(김유선, 1998), “근현대사상의 최대의 민중저항 운동”, 노동자들의 “거대한 인권선언”(김동춘, 1995)처럼 이 투쟁을 노동자들의 대투쟁으로 표현하는 데 인색하지 않았다.

이상에서 보듯이 이 투쟁은 규모와 범위, 지속기간에서 대투쟁이라 불릴만 했고 노동운동에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었다. 그렇다면 '87년 노동자대투쟁이 국민들에게 동의를 얻을 수 있었던 원인은 어디에 있었는가? 첫째, 이것은 부당한 권력에 맞선 약자들의 투쟁이라는 인식 때문이었다. 여기에서 부당한 권력이란, 자본과 정권은 물론 한국노총을 향하고 있었다. 이미 국민들은 6월 민주화투쟁 과정에서 광주에서 민간인의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정권을 찬탈하고 간선제를 담고 있는 헌법을 수호하려는 현 정권이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경험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은 군사독재 정권과 호흡을 같이 해오고 심지어 정권의 ‘호헌’을 지지한 한국노총을 부당한 권력의 하수인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다. 특히 노동자들은 이미 작업장에서 비인간적인 노무관리와 억압을 경험했기 때문에 회사, 정부, 한국노총은 삼자연합으로 부당한 권력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저항은 타당한, 그리고 정의로운 행동

으로 여기고 있었다.

여기에서 투쟁의 주체들은 약자들이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존재했는데, 이들이 삶의 조건, 즉 작업장에서의 저임금 장시간노동, 빈번한 산업재해 등에 처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공돌이’ 또는 ‘공순이’로 낮은 사회적 지위로 인식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들은 노동자들의 분노와 그 분노의 표출을 동정할 뿐만 아니라 공감하고 있었다.

실제로 노동자대투쟁 시기에 노동자의 요구 사항은 총 14,957개 사항이었는데 이는 1개 사업장당 약 4.5개 사항에 해당된다. 이 중 임금 및 수당 관련 사항이 7,518개로 전체의 50.3%이며, 임금 이외에는 근로조건이 전체의 24.9%, 경영 및 인사에 관한 요구 사항과 노조활동 및 단체협약과 관련된 요구 사항이 각각 8.2%를 차지했다. 이는 '87년 노동자대투쟁이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 대한 반발로 발생했음을 보여준다. 즉 민주화라는 정치적 조건이 노동자대투쟁을 촉발시켰을지라도 노동자대폭발의 직접적인 원인은 3저호황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에게 저임금 및 비인간적인 처우를 지속한 기업의 권위주의적 노무관리에 있었다.

둘째, 이러한 인식이 가능할 수 있었던 시대적 상황 또한 국민들이 노동자대투쟁을 지지할 수 있는 버팀목이었다. 그것은 정치적으로는 민주화가 시대적 요구였고, 경제적으로는 3저호황이 지속되고 있었다는 데 있다. 이와 같은 경제적·정치적 배경은 노동자대투쟁을 이데올로기적 공세로부터 지켜주는 든든한 바람막이 역할을 했다. 먼저, 시대적 화두로서 민주화는 반공이데올로기로부터 노동자대투쟁을 지켜주었다. 기존 정권은 국민들의 레드 콤플렉스와 반북이데올로기에 의거하여 노동자들의 저항을 억압해 왔다. 하지만, 1980년대의 민주화 분위기는 부당한 정권에 의한 이러한 이데올로기를 의심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투쟁은 광주민중항쟁과 달리 반공이데올로기로부터 일정하게 자유로울 수 있었다. 한편, 1986년부터 지속된 경제적 호황은 노동자대투쟁이 경제적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전통적인 자본과 정부의 이데올로기인, 경제위기 이데올로기로부터 지켜주었다.

노동운동 리더십의 측면에서 볼 때, '87년 대투쟁은 지도부 없이 자연 발생적으로 전개된 투쟁이라고 할 수 있다. 상급 조직이었던 한국노총은

대중 조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조로부터 시작된 노동자대투쟁을 지도할 실질적인 조직 장악력과 리더십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장 조직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었다. 특히 50% 이상의 파업이 미조직 사업장에서 일어난 것에서 보듯이³⁸⁾ 노동자대투쟁은 조직된 투쟁이었다기보다는 노동자들의 불만이 정치적으로 열린공간에서 분출된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노동자대투쟁은 그동안의 노무관리와 저임금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노동자들의 자연발생적인 저항이었고, 조직화되어 투쟁에 나선 것이 아니라 투쟁 과정에서 조직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87년 노동자대투쟁은 노동운동 리더십의 형성을 위한 투쟁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자대투쟁을 리더십 형성을 위한 투쟁으로 보는 이유는 새로운 정치적 주체와 정치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노동운동사에서 노동자대투쟁이 점하는 위치는 새로운 주체, 즉 새로운 노동자인 남성 대기업 노동자와 새로운 조직인 민주노조의 발견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자대투쟁의 시발점이 현대그룹의 남성 노동자들이다. 노동조합 조직률 변화를 1987년 10월을 기점으로 각 연맹별로 비교해 보면 자동차, 금속산업을 중심으로 한 중화학공업에서 가장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는데, 이 부문의 노동자들이 노동자대투쟁을 실질적으로 이끌었다. 특히, 금속노련의 경우 신규 노조가 기존 노조수의 48%를 넘어섰고 조합원수 역시 기존 조합원수의 32%에 육박하는 등 획기적인 조직 발전을 이룩했다. 이것은 1987년 이후 노동조합운동의 주도 세력이 바로 이들이었으며, 그 후에 이들이 중심이 되어 지노협, 업종협을 건설하고 나아가 전노협을 조직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즉 노동자대투쟁은 대규모 사업장, 그리고 중화학 및 기간산업의 남성 노동자들과 주요 재벌그룹에 속한 조선, 자동차, 기계, 방위산업체 노동자들이 투쟁을 선도하는 양상을 띠었다. 이러한 사실은 정부의 전략적인 산업 부문에 노동운동의 핵심이 자리잡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1987년 이전

38) 1987년 6·9 이후부터 10월까지 발생한 3,311건 중 노조가 조직된 사업장에서 54.7%인 1,770건이 발생하였고 노조 미조직 사업장에서 45.3%인 1,465건이 발생하였다(노동부, 1988a: 15).

의 민주노조운동이 여성 노동자가 주력인 섬유, 전자노조가 주축이었던 것과 대비된다. 한편 이들은 투쟁의 과정에서 어용노조의 퇴진을 주장했는데, 이처럼 기존 제도권 노조는 노동자들 사이에서 부정되었다. 3개월 만에 엄청난 수의 신규 노조가 설립되고, 노동쟁의가 발생한 70% 이상의 사업장에서 어용노조 퇴진과 노조민주화 투쟁이 제기되었다. 이처럼 노동자대투쟁은 노동자 조직의 확대라는 측면, 특히 기존 노조와 다른 민주노조의 형성과 역량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고 결국 민주노조운동을 대중적인 흐름으로 만들었다. 이런 점에서 노동자대투쟁은 단순한 폭발적 투쟁이 갖는 비조직성을 어느 정도 극복하고 있었다. 한 사업장에서 여러번의 투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투쟁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결성 또는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노동자들의 자주적·민주적 조직으로서의 노동조합이 보편화되기 시작했다. 노동자대투쟁을 거치면서 노동조합은 노동자 누구에게나 낯설지 않은 것이 되었다. 더구나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그냥 노조라고 부르지 않았고 이를 이른바 ‘민주노조’라고 선언하고, 그때까지의 비자주적인 노동조합운동과 스스로를 분명히 구별했다(엄주웅, 1994: 165~166).

새로운 주체의 탄생을 다른 측면에서 볼 때, 노동정치의 새로운 발견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노사관계는 자본과 정부의 노동에 대한 순응을 통해 유지되었다. 여기에서 진정한 의미의 생산과 가치분배를 둘러싼 계급갈등이나 투쟁이 존재했다고 보기 힘들다. 하지만, 새로운 민주노조운동의 등장은 이러한 권력관계를 바꾸었고 그 결과 이제 투쟁과 협상의 노동정치가 탄생했다. 이제 민주노조운동이 노동운동의 리더십을 가지게 되었고 이들의 리더십이 노동정치의 성격과 내용을 규정하게 되었다.

이상에서 보듯이, '87년 노동자대투쟁이 약자들의 또는 약자들을 위한 투쟁이었다면, 1996년 말의 총파업은 ‘한국의 민주주의’와 ‘국민’의 고용안정을 위한 투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요소를 갖추고 있었다.

1996년 12월 26일 ‘새벽 4시’ 집권당인 신한국당은 야당 의원들 몰래 안기부법을 포함한 11개의 법안과 함께 노동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변칙으로 처리된 노동법에서 핵심 사항은 상급단체 3년 유예조항을 담은 복수노조와 해고시 노동위원회 승인 절차를 담은 정리해고제 관련 조항

이었다. 전자의 경우는 민주노총을 향후 3년 동안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했고, 후자의 경우는 정부안에 비해 정리해고 절차를 까다롭게 함으로써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것을 내용을 담고 있었다.

두 개의 항목에서 정부와 여당의 깊은 고민과 전략이 담겨 있다. 복수노조의 경우 민주노총의 합법화를 3년 유예함으로써 노동정치에서 민주노조운동을 배제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냈을 뿐 아니라, 또다른 전국조직인 한국노총의 노동법 개정에 따른 반발을 완화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었다. “신한국당이 정리해고제의 추가적인 절차 요건을 포함시킨 것은 당시 계속되는 경기침체의 상황 속에 일반노동자들 사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던 고용불안 심리를 일정하게 진정시킴과 동시에 복수노조 조항의 개악에 대한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무마하려는 전략적인 의도에서 비롯되어진 것이었다”(이병훈·유범상, 1999). 이처럼 두 조항은 모두 기본적으로 정부와 신한국당의 노동법 개정에 따른 반발과 저항을 완화하기 위한 전략의 산물이었다. 하지만, 민주노조진영은 시민권 유예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노동자들은 정리해고제 내용³⁹⁾과 상관없이 도입 자체를 인정할 수 없었다. 이런 흐름을 한국노총은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역사성과 정체성, 그리고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총파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다.

정부여당의 노동법 개정에 대한 변칙처리는 또한 시민사회의 광범위한 분노와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노동법 개정은 두 가지 점에서 시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는데, 첫째는 정리해고 조항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었고, 두 번째는 ‘날치기 처리’라는 법개정 과정의 비민주성 때문이었다.

정리해고제의 경우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들에게 고용불안이라는

39) 정리해고제는 해고 사유와 절차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는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사유는 계속되는 경영의 악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조정과 기술혁신 또는 업종의 전환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로 한정하고, 정부안과 비교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절차를 신설했다. 여기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 해고 때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노동계에게 유리한 것이었지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로 경영악화, 기술혁신, 업종 전환 등이 제계의 희망대로 인정됐다. 하지만 수정공약안에서 거론되지도 않았던 기업양도·합병·인수를 해고의 사유로 추가함으로써 노동계를 자극했다.

상징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도입 자체가 정치적 쟁점이었다. 우선, 노동자들과 국민들은 정리해고제 도입에 대한 공포를 갖고 있었다. 이미 199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노동자들은 노동시장 유연화 조치로 실시된 명예퇴직 등을 통해 해고에 대한 불안이 존재해 왔다. 정리해고가 이미 판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1997년 말 경제위기 이전부터 명예퇴직 등의 변칙적인 수단에 의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리해고제의 법제화는 단순히 고용조정의 제도적 근거 또는 해고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한다는 의미보다는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것이었다. 보다 근본적으로, 노동운동진영과 재계 또는 정부는 정리해고제 도입을 노동시장 유연화의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바로미터로 이해하는 측면이 있었다. 정리해고제는 고용불안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발생한 노동자들의 과도한 공포와 수량적 유연화를 급격하고 효과적인 구조조정의 필수적인 수단으로 간주하는 재계의 경영전략이 맞부딪치는 지점에 존재했다. 따라서 정리해고제 도입 여부는 기업과 노동자들의 생존의 문제로 다가왔고 여기에서 밀리면 안 된다는 의식이 양쪽에 팽배해 있었다. 이런 이유로 정리해고제를 쟁점으로 하는 노동정치는 과잉정치화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노동법 개정에 대항하는 노동계의 총파업은 신자유주의의 노동시장 유연성에 대한 투쟁임과 동시에 노동자들은 물론 중산층 일반을 아우르는 국민들의 고용불안을 대변하는 ‘정의로운’ 행동으로 간주되었다.

한편, 변칙처리법은 야당은 물론 일반국민들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강력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졌다. 노동법의 변칙처리는 여당을 배제한 채 여당 단독으로 새벽 시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서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정당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법 절차조차 무시되었다고 비판받았다. 야당은 신한국당의 새벽 날치기 처리는 국회법 제72조의 조항에 의하여 “국회 본회의는 오후 2시(토요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야 하며, 의장은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개의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을 어겼으므로 날치기 통과는 법률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국회의장이 야당 의원들에게는 회의 일정을 통지하지 않고 여당 의원들에게만 통지한 사실도 국회법에 어긋나는 위법

행위라고 지적하였다(한국노총, 1998: 40).

그 결과 노동운동은 시민단체는 물론 야당, 심지어 보수언론들과 함께 연합전선을 구축할 수 있었다. 민주노총은 초기부터 시민단체의 연합조직인 ‘민주적 노사관계와 사회개혁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이후 명칭을 ‘노동법·안기부법 개악 철회와 민주 수호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로 명칭을 변경, 1996. 12. 30)에 가입하고 시민단체와 연대했다. 이후 범대위에 한국노총(1. 12)과 야당이 동참함으로써 투쟁본부로서의 상징성을 갖게 되었고 이것은 종교계, 학계, 사회단체에서도 성명서 및 집회에 적극 동참하는 등 노동계의 총파업은 국민적 저항으로 발전하는데 역할을 했다.

1996~97년의 총파업은 노동운동이 법적·제도적 문제와 관련된 정치적 문제를 의제로 총파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⁴⁰⁾ 그리고 총파업 과정에서 민주노조운동의 성장이 확인되었고 한국노총의 개혁이 일정한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도 보여주었다. 이 결과 노동운동이 노동자들의 공통의 이해를 집합적으로 대변하고 표출할 수 있는 조직적 능력이 있으며 그 결과 법제도 변경을 포함한 정치적 파업을 감행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구체적으로, 총파업은 민주노조운동 진영이 짧은 기간 놀랄 정도로 성장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민주노조진영의 노동운동은 '87년 노동자대투쟁을 조직적으로나 이념적으로 꾸준히, 그리고 빠르게 성장해 왔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 조직률이 하락하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기업과 정부의 노동정책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총파업은 노동계의 역량을 총결집하는 계기를 만들어 줌으로써 자신들의 힘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민주노총의 경우 총파업 기간, 즉

40) 1996년 말의 총파업이 정치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즉 1996년 말 총파업은 “건국 이후 최초의 또한 최대 규모의 정치적 총파업”으로 “1996~97년의 총파업은 전산업·전지역을 포괄하는 전국적 규모의 총파업이었고, 참여한 노동자수나 파업 기간에 있어서도 최대 규모였다. 자동차, 현충리, 화학 등의 제조업 부문과 사무, 전문, 언론, 건설 등의 사무·전문직 부문, 병원, 지하철, 의료보험, 화물 등의 공공 부문이 총망라되었다”(조효래, 2001: 506~507).

“96년 12월 26일부터 97년 1월 18일까지 24일 동안 3단계에 걸친 총파업투쟁” 기간 동안 “모두 528개 노동조합 40만 3,179명이 한 번 이상 파업에 참가하였다. 이는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인 49만 6,908명의 81.1%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이다. 또한 이 기간 동안 하루 평균 168개 노동조합 18만 9,119명이 파업에 참가하여 이 기간 동안 파업참가 누적 규모는 모두 3,206개 노동조합 359만 7,011명에 이르렀다”(민주노총, 1997a: 1). 특히 총파업으로 인해 상급단체 복수노조 인정은 민주노총이 이제 합법적인 조직이 될 수 있는 길을 만들었다. 그리고 총파업을 경유하면서 “민주노총의 인지도는 79.9%, 호감도는 49.9%에 이르렀으며 53.3%의 국민들이 노조의 정치활동에 찬성하였다. 또 국민들은 우리 사회의 개혁 주체세력이 노동시민사회단체라는 의견이 49.7%였으며 기존 정당은 6.9%에 불과했다”(민주노총, 1997b). 이처럼 총파업을 통해 “민주노총의 조직적 토대와 사회적 위상이 강화”될 수 있었고, “출범한 지 1년밖에 안 된 민주노총의 지도집행력과 조직의 결속도” 또한 강화되었다(조효래, 2001: 508).

한편, 한국노총도 총파업을 통해 거듭남을 경험했다. 1996년 말의 총파업은 한국노총의 준비에 기반한 것이었는데, 한국노총은 여당이 1996년 11월 7일 노개위 협상이 마무리되고 신한국당이 노동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 방침을 밝히자, 즉각적인 투쟁체계를 구성하고 총력대응 태세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한국노총 역사상 전례없는 총파업을 전개했다. '87년 노동자대투쟁 앞에서 개혁을 시도해 온 한국노총은 총파업을 통해 그동안의 개혁의 효과를 대내외적으로 과시했다. 즉 한국노총은 이제 정부의 후견에 순응으로 보답하는 존재가 더 이상 아닐 수 있다는 것과 민주노조진영과 비교하여 절대 열세에 있었던 현장조직력과 정당성을 만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총파업 과정에서 보여주었다. 다시 말해, 한국노총은 현장의 조직화를 통해 파업이라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내부의 결속은 물론 대정부와 대자본의 협상에서 보다 많은 자신감과 자율성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양 노총의 총파업은 양대 노총의 연대투쟁으로 발전했는데, 1월 25일에는 양 노총이 공동으로 전국에서 조합원 및 가족 50만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날치기 노동법·안기부법 무효화와 민주적 노동법 개정을 위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양 노총이 공동 개최하는 이날 집회는 수도권과 중부권이 참여하는 중앙대회와 10여 개의 각 지역별 대회로 나누어 동시에 열리며 중앙대회 20만 명 등 전국에서 50만 명이 참여하는 노동계 최초의 연대집회였다(한국노총, 1997: 212~217).

이상에서 보듯이 “총파업의 가장 큰 성과는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힘을 확인함으로써 연대와 자신감을 회복하였고, 여타 사회운동과의 관계에서 1990년대 들어 위축된 노동운동의 지위와 역할을 재확인하였다는 점이다”(조호래, 2001: 509).

총파업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은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고 있었다는 점이다. 즉 양대 노총에 의해 준비된⁴¹⁾ 1996~97년 노동운동진영의 총파업은 <표 3-1>에서 볼 수 있듯이 변칙처리 이전에 파업에 대한 지지는 약 22%에 불과하던 것이 그 이후에는 60% 이상의 지지를 나타냈다.

이상에서 보듯이 노동운동은 국민들의 분노와 민주주의를 대변하는 조직으로 인정받았다. 이것은 '87년 노동자대투쟁과 비교하여 볼 때 보다

〈표 3-1〉 총파업 지지도

(단위: 명, %)

전화설문 조사기관	조사 기간	조사 대상	지지	반대	잘 모름
한겨레 21	'96. 12. 7	성인 500	22.3	73.9	3.8
국민회의-인텔리서치	'96. 12. 29	성인 501	54.7	36.1	9.4
한겨레 21	'97. 1. 10~11	직장인 600	75.0	22.5	2.5
국민회의-인텔리서치	'97. 1. 12	성인 700	67.6	27.6	4.9
민주노총-한길리서치	'97. 1. 14~15	성인 1,000	65.6	27.9	6.6

41) 총파업은 노개위 협상이 사실상 결렬되고 정부측의 노동법 개정안이 발표된 이 후부터 노동조합의 투쟁은 본격적인 준비 단계에 돌입해 있었다. 12월 26일 노동법 날치기 통과 이전까지 진행된 양대 노총의 투쟁 과정은 날치기 통과 직후 즉각적인 총파업투쟁을 가능하게 했고, 총파업투쟁이 조직적인 준비와 체계를 갖고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토대가 되었다(조호래, 2001: 495~498 참조).

확연하게 나타난다. 즉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들의 생존권을 위한 투쟁이 '87년 노동자대투쟁이었다면, 1996년 말에 시작된 총파업은 일정한 조직을 갖춘 노동계급이 국민들의 생존권과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한 투쟁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이제 노동운동이 사회적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주체가 되었음을 확인한 투쟁이었음을 보여주었다. 다시 말해, “87년의 노동자대투쟁이 학생과 야당 주도의 민주화투쟁과 분리되어 임금인상과 노조결성, 작업장 민주화를 요구하는 자연발생적 대중투쟁이었다면, 1996~97년의 총파업은 민주화의 후퇴를 의미하는 노동법과 안기부법의 개악에 저항하는 정치파업이자 노동시장 유연화 시도에 대응하는 국민적 저항을 주도하는 파업이었다”(조효래, 2001:507).

라. 인정을 위한 협상 : 노사관계개혁위원회

노사관계개혁위원회(이하 노개위)는 김영삼 정부의 ‘신노사관계 구상’을 실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1996. 4. 24). 대통령 자문기구인 노개위는 제1기(1996. 5~11)는 노동법 개정을 논의했고, 제2기(1997. 4~1998. 4)는 ‘신노사문화 정착’의 주제를 놓고 논의를 진행했다(이하 유범상, 2000 참조).

노개위는 민주노총이 현실적으로 노동정치的主체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왜 노개위는 민주노총이 실질적인 차원에서 노동의 시민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은 정부가 노개위를 구상할 때부터 민주노총 참여를 전제로 했다는 점과 노동법 개정 논의 테이블에 그동안 민주노총을 법적인 주체가 될 수 없도록 했던 복수노조금지 조항이 올려져 있었다는 점 때문이다.

사실 정부는 그동안 외형적으로는 민주노총을 배제했지만 실제로는 민주노총을 파트너로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존재하여 왔다. 특히 정부는 1990년대 초반의 노사대회 때부터 민주노총의 참가를 공식적으로 요청하였다. 그렇다면, 왜 정부는 민주노총에 대해 기존과 다른 입장을 취했는가? 정부가 1987년 이후 전노협, 전노대, 그리고 민주노총으로 꾸준히 성장해 온 민주노조운동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ILO 등의 국제적인 압력 앞에서 민주노조운동을 인정하는 것이 시대적 흐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학습해 왔기 때문이다. 특히 1996년 이전까지 민주노조진영을 배제한 노동정치 과정에서 정부는 사회적 비용이 많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정당성도 갖추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처럼, 역사적 학습 과정을 거쳐 정부는 민주노조운동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법개정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개정의 실효성도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노개위에 민주노총의 참여를 허용한 보다 직접적인 계기는 정부 내에 개혁팀이 노사관계를 주도하였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당시 진념 노동부 장관이나 박세일 사회복지수석은 정부 내 개혁파를 대변하고 있었고 이들은 노동법 개정을 사회적 합의에 의해 처리하고자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합법 단체가 아닌 민주노총을 노개위의 주요 파트너로 당연시될 수 있었던 것은 여전히 개혁팀의 시혜나 철학에 있었다기보다는 이 당시까지 형성되었던 민주노총의 정치적 성공 또는 정치적 위상을 반영한 것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렇게 정치적·사회적으로 민주노총이 실제 세력으로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법적으로도 민주노총이 인정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처럼 보였다. 실제 노개위와 노개추의 법개정 논의 과정에서 상급단체 복수노조 허용, 즉 민주노총의 법적 인정은 대세인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민주노총 인정이 정부 내 강경파(주로 경제부처와公安부처)의 동의를 얻는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민주노총 합법화를 담고 있는 노개위안 또는 공익안은 정부와 여당의 논의를 거치면서 변질되었고 결국 통과업을 거친 이후야 민주노조운동이 법적으로 승인될 수 있는 1997년 노동법이 통과되었다(표 3-2 참조).

이처럼 민주노총을 노개위의 초대로 인해 노동단체로 인정받은 것이 명확해졌고 이를 명분화하기 위한 협상에 참여했으며 결국 실질적·법적 노동의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었다.⁴²⁾ 법적·실질적 노동정치의 주체

42) 임영일은 1996년 말 통과업이 ‘노동운동의 시민권 회복’의 계기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첫째, 이번 통과업이 단순히 노동자나 노동운동계의 이슈와 관련된 계기에 의해서만 촉발된 것이 아니라 ‘안기부법 개악’ 혹은 ‘날치기’ 등 한국의 민주주의

〈표 3-2〉 복수노조 조항 논의 과정

시기별 구분	복수노조		
구법	- 제3조 단서 제5호: 기업·산업 단위 등에서 기존 노조와 조직 대상이 중복되는 복수노조 금지		
노개위 단계	공익안	- 교섭창구 단일화 전제로 복수노조를 전면 허용. - 하지만, 일정 기간 동안 상급단체만 허용.	
	재계	경 총	- 노조전임자 급여에 대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명문화, 무노동 무임금의 법제화 등과 연계해 상급단체만 조건부 수용
		전경련	- 무조건 거부
	노동계	한국노총	- 복수노조를 전면 허용하되 교섭창구를 단일화 함.
		민주노총	- 상급단체 즉시 허용. 기업 단위는 논의후 시행령으로 규정.
노개추 단계	-정부안: 상급단체 즉시 허용, 기업 단위는 5년 유예		
변칙처리법	-변칙처리법: 상급단체 3년 유예, 단위노조 5년 유예		
여야합의 단계	-여당수정안: 복수노조 즉시 허용, 기업 단위는 5년 유예		
	-야당합의안: 복수노조 즉시 허용, 기업 단위는 5년 유예		
제정법	-상급단체 즉시 허용, 단위노조 5년 유예		

출처: 유범상(2000), p.346 참조.

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은, 민주노총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박해자라는 프레임임을 누릴 가능성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민주노총은 이제 ‘변화를 위한 투쟁’ 조직에서 ‘협상을 위한 투쟁’ 조직으로(임영일,

그 자체를 위협하는 집권세력의 반민주적·반동적 행위에 대한 전국민적 항의투쟁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었다는 점, 둘째, 이 투쟁에서 노동운동세력이 주도적 저항세력으로 등장함으로써 그동안 사회운동에서 소위 ‘시민운동’ 부분에 의해 상대적으로 그 지위가 하락해 온 것으로 평가되던 노동운동의 중심성을 대중적으로 확인시켰다는 점, 셋째, 실제로 최근 수년간 ‘국민적 지지’를 거의 받지 못하고 있었던 노동운동계가 이 투쟁 속에서 광범위한 여론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나아가 한국의 노동운동이 이 파업을 계기로 국제적으로도 폭넓은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냄으로써 한국 노동운동의 국제적 지위 혹은 ‘국제 시민권’의 회복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임영일, 1997: 52).

1998) 변모해야 하고 따라서 민주노총은 새로운 리더십을 창출하고 실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으로 보인다.

3. 의인들의 등장⁴³⁾

가. 유기적 지식인의 등장과 분화

저항 집단의 유기적 지식인들은 1970년대에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들은 민주화 이후에도 학술운동 형태로, 현장의 활동가로 지속적으로 저항담론을 생산해 내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데 민중운동과 관련된 담론을 생산한 지식인들과 기독교 출신의 지식인 그리고 학생운동으로부터 등장한 지식인 그룹이 그것이다.

우선 민중운동과 관련하여 유기적 지식인들은 민중이라는 개념을 ‘발명’했는데, 민중은 “역사의 주체이자 부당한 지배에 저항하는 사회운동의 주체”를 의미했다(장상철, 2007 : 136). 이것은 대체적으로 1970년대 역압받고 소외받는 자에서부터 1980년대 계급적 민중론으로 전환되었다. 예를 들어, 민중사학에서 “민중의 역사는 변혁운동에 뛰어난 민중의 의식과 행위를 해명하는 민중운동사에 집중되었다”(이용기, 2007 : 201).

이러한 유기적 지식인들은 1970년대 이후 민중문학, 민중신학, 그리고 사회과학 분야에서의 민중담론을 전개하였다. 예를 들어 민중신학에서는 예수 자신이 민중임을 강조하며, 한국의 역사적 경험과 민중의 삶에 기반을 두어 성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한다. 민중 지향의 비판적 사회과학자들은 민중 개념을 과학적으로 정립하고자 했다(장상철, 2007 : 136). 1980년대에 민중문학은 하나의 독자적인 장르로 성장했다. 그리고 ‘민중 지향적’ 문학에서 ‘민중 주도’ 문학으로 전환했다. 이러한 변화는 서너명의 전문적인 노동자 작가들과 문학적 재능이 있는 많은 노동자들 덕분에 가능했다. 그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사람은 노동자 시인 박노해

43) 이하 유범상(2005) 참조.

이다. 박노해의 존재는 ‘유기적 지식인’의 등장을 의미했다. 그러나 유기적 지식인의 대부분은 학생 출신 노동자들이었고 노동자들의 글쓰기 활동은 비교적 접근이 쉬운 단편소설, 논픽션 기록물, 시 같은 장르에 제한되어 있었다. 민중문학에서 지식인의 지배력은 당시까지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Koo, 2001 : 215~218 참조). 한편, 민중사학의 경우 이론과 방법론, 연구 영역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정하지는 않았지만, 대체로 민중을 역사 주체로 설정하고 역사를 민중의 자기해방을 향한 과정으로 인식하는 실천적인 역사 연구 경향을 가지고 있었다(이용기, 2007 : 201).

이상에서 보듯이 이들 민중론자들은 1970년대까지는 민중을 아직 스스로를 역사적 주체로서 자각하지 못한 ‘잠들어 있는’ 존재로 간주하고, 지식인들은 이들을 깨우치는 사명을 부여받은 것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강하다. 즉, 지식인은 ‘민중 자각’의 보조적 역할을 해야 하는 존재들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에는 민중과 지식인의 관계에 대해 이러한 수준을 넘어서는 논의가 진전되었다. 그리고 이는 지식인들이 스스로를 민중의 일부분으로 인식하는 방향으로의 변화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장상철, 2007 : 135~136).

한편, 기독교로부터 온 유기적 지식인들은 초기 민주노조운동의 형성과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1950년대 말에 조직된 도시산업선교회(1957)와 JOC(1958)는 처음에는 교회 전도의 연장선상에서 노동자들과 만나기 시작했으나 1970년대부터는 노동운동과 밀접한 연관을 맺기 시작했다. 즉, JOC와 도시산업선교회는 1970년대를 경유하면서 노동자를 의식화하고 노조 결성과 근로조건 개선투쟁을 지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노동 문제를 사회 문제화하는 데 앞장섰다. 유신정권의 온갖 탄압에도 불구하고 원풍모방, 반도상사, 동일방직, 콘트롤데이타노조 등 1970년대 민주노조들 중 이들의 도움을 받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큰 영향을 미쳤다. 1970년대 기독교단체들은 산업사회의 부조리에 대한 비판과 이러한 상황에 처해진 노동자들의 생활상태에 대한 기독교 소명의 관점, 즉 윤리적·도덕적·인권적 차원에서 접근했다. 이들은 반공주의자들로서 자본주의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에 대해 비판적이긴 했으나 자본주의 자

체를 부정하지 않았다.

지식인 그룹의 경우, 크리스찬아카데미 등의 기독교 교육단체, 고려대학교와 서강대학교 등의 대학 산하 노동문제연구단체,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야학단체와 민간단체 등이었다. 서강대학교 산업문제연구소는 1966년에,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는 1967년에 개설되어 학술조사, 연구활동, 출판과 더불어 노동교육을 실시하였다. 1970년대 노동야학의 경우, 검정고시 야학에 대한 반성과 함께 대학생들이 지식인으로서 노동운동에 참여하는 방법을 모색하면서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크리스찬아카데미의 경우 사회개혁 참여의 방식으로 ‘대화운동’을 선택하였고, 노동가부르기, 연극, 촛불의식 등을 통해 실천적 의식을 불어넣으려고 하였다. 하지만, 이들의 활동은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지적 욕구와 노조 운영의 기술적인 도움을 주는 데 기여했으나 노동운동 흐름을 바꾸는 데 기여하지 못했고 특히 정부의 탄압으로 1970년대 들어 해체되었다. 1970년대 초반 노동자들에게 봉사하겠다는 대학생들의 활동으로 야학은 급증하였다. 그러나 초기에 이들이 실시했던 야학에서의 교육은 제도교육을 보완하는 역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유범상, 2001, 2005 참조).

한편, 학생운동 출신 활동가(학출)의 경우, 1980년 광주민중항쟁을 계기로 노동현장에 투신하기 시작한 운동가들을 의미하는데, 학출 활동가들 중 대부분은 학력을 낮추거나 입사서류를 변조하는 방법으로 제조업 사업장에 취업하였기 때문에 ‘위장취업자’로 불리기도 하였다. 이들은 1980년 광주민중항쟁의 영향을 크게 받아 집단적이고 조직적으로 노동현장에 투신하였는데,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지향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은 1970년 전태일의 분신 이후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차원에서의 개인적 결단에 의해 노동현장에 투신한 ‘제1세대 학출 활동가’와 구분되는 ‘제2세대 학출 활동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계급의식으로 무장하고 노동자들의 의식화를 목적으로 1980년대 중반 이후 활동가들은 노동시장에의 진입장벽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던 수도권의 중소기업장에 대거 취업하였다. 활동가들은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권력자원의 취약성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했다(박동, 2000: 60). 1986년 10월 말 위장취업자는 전국적으로 373개 업체에서 699명이

적발되었을 정도로 사업장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었다(부천상공회의소 편, 1987: 41).

이들은 기독교 지식인들과 활동가와는 달리 1980년대 광주민주항쟁을 거치면서 의식적·이념적으로 무장함으로써 마르크스주의에 확실하게 기반해 있었고 노동현장에 대한 접근도 변혁적인 관점에서 시도되었다. 따라서 이들에 의해 조직되거나 영향을 받은 1980년대 민주노조의 노동운동 지도부는 마르크스주의에 기반해서 자본주의 사회의 변혁을 추구한 변혁적 노동조합주의를 자기 이념으로 채택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기적 지식인들과 그 관련 단체들은 담론의 생산뿐만 아니라 담론의 유통도 직접적으로 간여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노동자신문들이 그 전형적인 사례이다. “〈민주노동〉, 〈노동자신문〉, 〈원풍회보〉, 〈청계노조신문〉, 〈서노련신문〉, 〈일꾼자료〉, 〈노동주보〉 등이 1980년대에 등장했다. 이 신문들은 노동지향적 기독교단체들 뿐만 아니라 전국적·지역적 노조조직에 의해 격주간 혹은 월간으로 간행되었다. 이러한 노동자신문들은 일반 신문들이 다루지 않는 노동자들의 투쟁소식, 노동법과 노동자 권리에 관한 교육적 칼럼,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다루었으며, 노동자서신, 수기, 시 등에 지면을 충분히 할애했다. 이런 정기적인 신문뿐 아니라 많은 노조 소식지와 팸플릿이 단위노조와 운동단체들에 의해 출간되었고, 이들은 모두 기성 보도매체에 대항하여 대안적인 정보채널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였다”(Koo, 2001: 220).

나. 민주노총 지도부 조직화와 리더십의 형성

1987년 이후 민주노조진영은 정부와 재계로부터 심각한 탄압에 직면했다. 정부는 1987년 노동법에서 민주노조진영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민주노조진영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했다. 따라서 민주노조진영은 한편으로는 국가의 노동통제에 저항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조직화를 통한 ‘시민권’ 확립의 투쟁을 전개했다. 민주노조진영의 조직화 과정은 1988~89년의 ‘전국회의’, 1990년 전노협 결성, 1990~91년의 ‘대기업 연대회의’, 1992~93년의 ‘ILO 공대위’, 1993년의 ‘전노대’, 그리고 최종적으

로는 1995년의 ‘민주노총’에 이르기까지 숨가쁘게 진행되었다. 1995년 말 민주노총의 출범은 1987년 이후의 이 ‘신노조운동’이 대중조직의 수준에서 일단 그 조직적 틀을 잠정적으로 확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임영일, 1997: 54). 여기에서는 민주노조진영의 조직화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봄으로써 그들의 리더십 형성 과정을 이해해 보고자 한다.

먼저 민주노조진영은 지역별·그룹별·업종별 노조와 같은 형태들로 결집했다. 제조업 노동자들은 기업규모에 따라 주로 단위노동조합의 연합인 지역별노조와 대기업 노동조합의 총연합인 그룹별노조로 분화되었고 사무직 노동자들은 업종별로 연대하였다. 지역별노조는 1987년 12월의 마산·창원지역 노동조합연합(마창노련)의 출범을 필두로 서울, 인천, 경기남부, 부산 등의 순으로 1989년 말까지 전국 13개 지역에서 결성되었다(전노협 백서 1, 1997: 347~386). 현대, LG, 대우 등 재벌그룹의 대기업 노동자들은 1987년 8월 ‘현대그룹노동조합협의회’ 등의 재벌그룹별 노조로 결집했다. 한편, 사무전문직을 비롯한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은 업종별 조직을 통해 결집을 시도했다. 업종별노조는 1987년 11월의 ‘전국 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이 조직화되면서 본격화되어 병원, 출판, 연구전문 기술 등의 업종으로 연대조직이 결성되었다. 이같은 지역별·그룹별·업종별노조들은 1987년에서 1989년까지 조직력에 기반한 파업을 통해 임금인상 및 근로조건의 개선과 조직력을 확대해 나갔다. 이 결과 1987년 이전 제조업 노동자의 실질임금인상률은 7% 전후에 머물렀으나, 1987년 8.3%, 1988년 11.6%, 1989년 18.3%로 인상되었다. 한편 제조업 노동자의 노조조직률도 1987년 이전 15%에 머물렀던 것이 1987년 17.3%, 1988년 22%, 1989년 23%로 이 시기에 급격하게 증가했다.

하지만, 한국의 노조들은 정치적·이념적으로뿐만 아니라 기업규모, 업종의 차이에 따라 분산되어 있었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민주노조들은 1988년 하반기의 노동법 개정투쟁을 전환점으로 삼아 전국적인 조직화를 시도했다. 1988년 12월 지역별노조와 업종별노조가 연대하여 지역·업종별노조전국회의(전국회의)가 결성되었고 이것은 1990년 1월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로 발전했다. 하지만, 전노협이 전투적인 노선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대다수 업종별노조들은 전노협과 분리하여 1990년 5월

전국업종노조회의(업종회의)를 결성했다. 업종회의는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을 주축으로 하는 14개 연맹의 20여만 명의 조합원을 포괄하고 있었다. 한편 현대중공업, 대우자동차, 포항제철, 서울지하철 등 16개 대기업 노조들은 1990년 11월 ‘연대를 위한 대기업노동조합회의’(연대회의)를 결성하여 독자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이상에서 보듯이 전노협은 노동자를 대표하는 조직으로서 일정한 한계를 갖고 있었다. 민주노조진영 중에서 신노조운동의 흐름에 다소 뒤늦게 동참하기 시작했던 비제조업(사무직) 노조들이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고, 제조업 노조 중에서도 다수의 재벌 대기업 노조들 역시 참여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전노협은 전체 노조운동에서는 물론, 민주노조진영 내에서도 소수와 노조조직으로 출범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노조진영의 대표성이나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전노협은 소수와 노조조직이라는 객관적인 위상과는 상관없이 국가-자본의 강압적인 통제와 탄압에 대하여 전투적인 대중동원 투쟁으로 맞서는 가운데, 이 시기 민주노조운동의 신노조운동 노선을 사실상 정치적으로 대표하는 구심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이런 점에서 전노협은 민주노조운동의 상징으로 떠올랐고 따라서 자본에 대항하는 노동계급의 조직으로서 대표성을 갖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임영일, 1997:54 참조).

한편, 1990년에 전노협, 업종회의, 연대회의로 분열되어 있던 연대조직들은 1991년 노동법 개정투쟁을 통해 통합의 길을 모색했다. 우선, 1991년 10월 전노협과 업종회의를 주축으로 ‘ILO 기본조약 비준 및 노동법개정을 위한 전국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ILO 공대위)가 결성되었다. ILO 공대위는 11월 전국노동자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하는 등 노동법 개정투쟁에서의 조직적 연대를 모색했다. ILO 공대위를 계기로 전국 단일조직을 건설하기 위한 노동조직의 연대는 1993년 6월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전노대)’로 나타났다. 전노대는 전노협과 업종회의뿐만 아니라 ‘현대그룹노동조합총연합(현총련)’, ‘대우그룹노동조합협의회(대노협)’ 등 재벌노조까지 포괄하는 1,145개 노조에 약 41만여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했다. 전노대는 임금인상 등 노동자들의 생존권 및 기본권 확보를 위한 공동투

쟁, 정부와 기업의 노동통제정책 및 노동탄압에 대한 정치적·경제적 공동대응, 민주노조진영의 조직적 단결 강화, 사회·정치·경제의 민주화, 국제적 연대활동 강화 등 5대 사업 방향을 제시하고 전국적인 공동전선을 구축하고자 했다. 전노대는 1994년 11월 민주노총준비위원회(민노준)로 발전했고, 민노준은 제2노총을 1년 동안 준비하여 1995년 11월 11일 제2의 정상 조직으로서 민주노총을 출범시켰다. 민주노총은 16개 산업업종 및 16개 지역조직, 그리고 현충련과 대노협 등 2개의 그룹별노조 등에 소속한 총 861개 노조 42만여 조합원을 망라하였다(민주노총, 1996: 38~43). 그리고 민주노총은 산업별·업종별 조직을 주축으로 하고 지역별·그룹별 조직을 보조축으로 하는 조직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제조업과 사무직을 모두 망라한 명실상부한 산업·업종별 조직으로서 면모를 갖추었다. 이처럼 민주노총은 실질적인 의미의 민주노조운동을 대표하는 노동운동의 전국조직으로서의 위상을 갖게 되었다.

이상에서 보듯이 1987년 이전은 물론이고 1995년까지도 한국의 조직노동(organized labour)은 정치적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제2의 노조 불인정, 공무원과 교사의 단결권 부정, 제3자 개입금지 등 때문에 기본적인 시민적 권리조차 부여받지 못했다. 노조의 파업권은 공공안정을 해치는 행위로 간주되어 정치공작과 공권력 투입 등을 통해 극도로 제한되었다. 노조의 참정권은 정치활동금지 등을 통해 원천봉쇄되었다. 복지권은 문제시조차 되지 못했다(박동, 2000). 또한 기업별노조 체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취약성이 있었다. 더 나아가 기업별노조 체제라는 조직구조하에서 여전히 대기업 노조들을 지도할 역량을 갖추고 있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7년부터 1995년까지의 노동정치는 최소한의 권력을 가진 주체, 즉 민주노조진영의 등장과 민주노총으로의 조직화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다.

다. 한국노총 내부 개혁과 리더십의 형성

한국노총은 노동자대투쟁 이후 한국노총 내 개혁적 세력이 집권하면서 ‘어용노조’ 또는 ‘황색노조’라는 그간의 오명을 벗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박인상 체제는 한국노총의 개혁과 노선 전환을 위해 일차적으로 자주적 노동운동을 강화하고 투쟁전략을 개발하며, 조직적으로 미조직 분야의 조직화, 산별체제의 강화, 노학연대의 강화, 노동계 통합을 위한 지속적 노력을 시도하고자 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자주적 노동운동의 강화’라는 항목이며, 여기에는 정부의 보조금을 거부하고 정치권과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새로운 대정부 관계의 수립, 사회개혁의 주도적 역할을 통한 대국민 속에서 민주노총과의 차별화 등이 포함된다. 투쟁전략에 있어서도 임단협 교섭지침을 하달하는 방식에서 탈피해 중앙단위 차원의 전국적인 집중적 투쟁을 전개하며, 노동법 개악 저지에 있어 한국노총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투쟁 현장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동시에 정부의 노동계 분할지배 전략을 극복하고 노동운동전선의 대통합을 위해, 민주노총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한 상호신뢰 회복, 사안에 따른 공동사업 추진, 구체적 통합 추진이라는 3단계 점진적 통합 노력을 계속한다는 것이다(한국노총, 『사업보고』, 1998: 735~736; 조효래, 2001 재인용).

1996년 총파업 참여는 이러한 박인상 집행부의 개혁과 방침 속에서 나왔다. 더 나아가 한국노총은 변칙처리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거부할 명분이 없었다. 저항하는 국민 속에는 한국노총 조합원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에서도 한국노총의 총파업에 대한 동참은 불가피하였다. 총파업이 성공하는 데 한국노총이 기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의 총파업 참여는 정부여당에게 큰 타격을 주었고 이것은 정부여당이 전략을 수정하는 데 기여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노총이 총파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과 공동투쟁까지 성사시키려는 계획은 정부여당을 크게 당혹스럽게 했다.

더 나아가 이러한 한국노총의 총파업은 정부여당이 구상해 왔던 노동운동 분리전략을 실패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는 측면도 있었다. 정부는 1987년 민주노조운동 등장 이후 한국노총을 노동정치 체제 속으로 보다 강하게 편입하는 반면, 민주노조진영을 배제하는 분리를 통한 통제전략을 구사해 왔고 노동법 개정에서 상급단체 수준의 복수노조금지 조항도 이러한 전략의 일환이었다. 하지만 한국노총의 노동법 개정에 대한 저항

은 이러한 정부의 노동통제 전략에 대한 저항으로 받아들여졌고 총파업 과정에서 보여준 양대 노총의 만남과 공동투쟁은 오히려 정부가 노동운동을 연대하게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한국노총이 총파업을 감행한 것은 노동운동의 힘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두 노총 위원장의 만남(1996. 1. 14)을 통하여 연대투쟁 방안 5대 원칙의 합의와 15만 명이 참여하는 양대 노총의 공동집회(1996. 1. 25)는 노동운동이 연대성과 자신들의 힘을 경험하는 한국 노동운동사에서 귀중한 체험이었다.

총파업을 통해 한국노총은 많은 전리품을 챙길 수가 있었다. 우선, 한국노총은 총파업을 통해 기존의 이미지, 즉 ‘어용노총’이라는 비난을 넘어서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고, 둘째, 스스로 평가하고 있듯이 “노총의 취약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조직력, 투쟁력, 실천력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⁴⁴⁾ 즉 한국노총은 “50년 한국노총 역사상 처음으로 정치성 총파업을 단행하고 최대 규모의 집회를 개최”했으며 “신한국당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는 등 민주적으로 성장하고 정치의식화”되었으며 “속보 발행, 대중집회, 총파업투쟁 등 다양한 투쟁 경험을 하고 조직적으로 훈련”되었다는 것을 총파업의 중요한 성과라고 자평했다(한국노총, 『한국노총중간평가서』, 1997. 2 : 13). 이처럼 파업투쟁을 통해 한국노총은 많은 투쟁 경험을 얻게 되었고, 한국노총과 거리가 먼 것으로 인식되었던 대중집회가 일상화되었으며, 신속한 속보 제작과 투쟁 지침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의 통일성도 꾀할 수 있었다(조효래, 2001 : 508~509).

더 나아가, 총파업은 개혁파의 입지를 가능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노총의 개혁세력이 이제 확실한 주류를 점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1988년부터 1995년까지 집권한 박종근 위원장은 한국노총의 조직을 확고히 장악하지 못했다. 박종근 위원장은 1988년 겨우 14표 차이로 당선되었으며, 1990년 선거에서도 이시우 자동차노련 위원

44) 한국노총의 한계는 여전히 조직력과 투쟁력 그리고 실천력에 있었다. 우선 총파업 자체가 “산하 조직의 요구에 밀려 추진되는 경향”이 있었고, “일부 산별이 총파업에 돌입하지 않는 등 전 조직과 함께하는 투쟁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한국노총, 『한국노총중간평가서』, 1997. 2 : 13).

장의 재도전을 20표 차로 간신히 뿌리치고 당선되었다. 또한 제2기 집권기 한국노총 산하 산별연맹 위원장 20인 가운데 12인이 반대파였을 정도로 한국노총 내에는 반박종근 세력이 만만치 않게 존재하고 있었다.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한 것은 이들 반박종근 세력이 대부분 개혁에 반대하는 세력들이었다는 점이었다. 따라서 박종근 집행부는 내부적인 반발을 의식하여 개혁적인 정책을 힘있게 전개하기 어려웠다(김준, 2001: 335~336). 이것은 박인상 위원장 선거에서도 크게 나이지지 않았는데, 박인상 위원장도 2차 결선투표에서 투표 참가 507명 중 313표를 얻어 당선되었을 정도로 확고한 우위를 점하고 있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총파업이 성공함에 따라, 한국노총 개혁파의 노선과 방침은 대내외적으로 검증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이들의 입지가 보다 안정적인 위치를 점할 수 있게 되었다.

이상에서 볼 때 한국노총은 총파업을 통해 노동운동조직으로서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여기에서의 자신감은 두 가지 측면에서 거론될 수 있는데, 첫째는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자신감이고, 둘째는 대정부 협상에 있어서의 자신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한국노총은 내부개혁과 이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로부터 리더십을 형성하고자 했다.

라. 정파의 형성과 경쟁

1987년 이후 새로운 노동운동 내 정파는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첫 번째 차원은 민주노조와 어용노조라는 틀을 통해 형성되었는데, 이것은 민주노조진영과 기존 노조, 즉 한국노총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 즉, “1987년 이후 각 단위노조들에서는 노조 권력의 장악, 곧 위원장직의 획득을 둘러싼 경쟁이 활성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민주파로 분류되는 세력이 집행부를 장악하게 되면 그 노조는 곧 ‘민주화된’ 노동조합(민주노조)으로 분류되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어용적인 비민주적 노조로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임영일·이성철, 1997: 222). 하지만, 앞서 보았듯이 한국노총이 점차 내부개혁을 통해 민주화되면서 양자 간의 뚜렷했던 구분은 점차 모호해지는 경우까지 생겨나기 시

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한국노총은 실리형에 기반하면서 사회개혁형을 추구하는 세력이 존재한다면, 민주노총은 변혁형을 기본으로 하면서 사회개혁형이 점차 대세를 형성하는 형국으로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과 형성과 관련하여 주목할 것은 “90년대 초반을 지나면서 민주/비민주(어용)의 단순화된 권력경쟁 구조는 점차 약화되고 노동조합의 활동 방향을 둘러싼 보다 구체적인 정책적 쟁점들이 중요시되는 구조로 바뀌어 갔다. 예컨대 민주노조로 분류되는 노조들의 경우에 있어서 민주적 집행부와 어용적 집행부 간의 권력 교체가 쟁점이 되기보다는 같은 민주적 성향의 세력들이 보다 실리주의적인 활동 노선을 취할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 같은 민주노조진영 내에서도 주된 연대활동의 대상을 어느 조직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 산별노조 조직화의 경로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의 문제들이 실제 쟁점이 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다”(임영일 · 이성철, 1997: 222~223).

보다 구체적으로 민주노총 내의 정파는 국민파, 현장파, 그리고 중앙파라는 세 그룹으로 대별된다. 국민파라는 정파명은 민주노총 제1기 집행부가 표방한 ‘국민파 함께하는 노동운동’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통설이다. 그리고 중앙파는 그동안 중앙지도부를 구성해 왔고 스스로가 자칭 개량주의와 맹동주의의 중간적 노선이라고 주장해 왔다는 점에서 그 명칭이 유래되었다. 한편, 현장파는 ‘현장의 힘! 혁신의 깃발! 투쟁하는 금속산업노조!’의 제2기 금속산업연맹 선거의 캐치프레이즈에서 보듯이 현장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그 명칭의 기원이 있다. 이 구분선은 전통적인 운동노선, 즉 NL과 PD와 일정 정도 연관이 있는데, 국민파가 NL노선을 따르는 노선이 있다면 좌파블록, 즉 중앙파와 현장파는 PD노선과 맞닿아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다.

국민파는 대중노선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노동운동 내에서 온건그룹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민파의 정책 기조는 민주노총 제1기 집행부의 사업 기조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즉 제1기 집행부는 사회개혁 투쟁노선, 1996~97년 노동법 총파업 시기에 보여준 유연한 투쟁전술 기조, 단위 현장조직의 실정에 근거한 사업 방침, 대정부 협의·협상에 적극적인 태도, 통

일운동의 중요성 강조, 한국노총과 연대 등을 강조한다. 한편, 국민파는 정치적으로는 민주노동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민주노동당 내 온건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이들은 정치적 지형에 있어서 시민운동과 의 회주의로의 이동이라는 특징을 지닌 ‘사회적 조합주의’(박영균, 2003: 100)의 경향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민파와 이념적·실천적 측면에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좌파블록(현장파와 중앙파)은 대체로 PD의 노선에 있으며 마르크스-레닌주의에 기반하여 노동자계급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제1기 민주노총 집행부에 반발하여 제2~3기 민주노총 집행부에서 ‘개량주의적이고 타협적인’ 국민파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좌파연합(중앙파-현장파 연합)’을 형성하였고, 이러한 입장은 민주노총 집행부 구성 및 사업 기조에 관철되었다.

현장파의 경우 스스로를 “노동계급의 중심성과 반의회주의적 경향”을 가지고 있고 “노동자계급 정당 건설과 노동자계급 정치”의 주창세력”으로 규정한다. 즉 현장파는 “대중적인 현장 투쟁에 근거한 반신자유주의 투쟁과 생존권의 확보 투쟁, 민주주의의 확대·심화 및 사회화를 위한 투쟁의 결합을 강조하면서 사회 변혁과 변혁적인 노동자계급의 정치조직 건설을 통한 ‘노동운동의 계급적·정치적 발전’을 주장”한다(박영균, 2003: 100~101). 이러한 관점에서 현장파는 이념적으로 구좌파(공산주의노선), 신좌파, 무정부주의 등의 복합적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적 조합주의의 외형을 담고 있는 노사정위원회에 대해 ‘신자유주의 관철을 위한 자본-권력의 도구’라는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들은 현장으로부터 권력이 나와야 한다는 의미에서 현장권력을 강조한다. 이들 중의 일부가 민주노동당에 참여해서 좌파블록을 형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민주노동당을 개량화된 정당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좌파블록의 주요한 또 다른 정파인 중앙파는 자신들을 국민파의 개량주의와 현장파의 맹동주의를 극복하려는 중도노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교섭과 투쟁의 병행을 강조한다. 중앙파는 전노협 시기부터 오랫동안 민주노동운동의 중앙집행부를 담당해 왔다. 그리고 금속, 공공, 전

교조 등 민주노총 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3연맹의 현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다. 중앙파는 1990년대 초부터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가장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고 민주노동당의 강화를 통한 적극적인 노동자 정치세력화 방침을 추구해 왔다. 그 결과 2004년 총선을 전후해서 국민파가 가장 영향력을 갖게 했을지라도 여전히 중앙파는 민주노동당 내에 주요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파는 이념적인 실체가 의심받고 있으며 투쟁과 교섭의 원칙에 입각한 민주노총 사업 집행도 의심받고 있다.

4. 리더십의 확보 : 시민권의 제도화와 대항담론의 사회적 승인

가. 리더십의 제도화 : 내부민주주의, 단체협상, 노동정치 파트너

1990년대 초반 이후 노동조합은 노사관계의 틀과 의제 설정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능동적 행위자로 변화되었고, 비제도적인 사회운동으로부터 일정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 제도로 정착되어 갔다. 그에 따라 노동조합들은 조직의 공식적 자원들, 위계적 관료제, 의사결정의 체계적 절차, 선거 경쟁, 지도부와 일반조합원의 관계 등 공식 조직의 특성들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조효래, 2004: 186). 여기에서는 내부민주주의, 단체협상, 노동정치의 차원에서 노동운동이 리더십이 확보되었고 제도화되었음을 살펴보고자 한다(이하 최영기 외, 2000; 유범상, 2005 참조).

우선 노동조합 내부민주주의의 제도화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노동조합의 내부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자주적 노력에 의해 실현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를 위해서는 노동조합 스스로 민주적인 조합임원 선거 제도를 마련하고 민주적인 토론과 조합 기관의 민주적인 운영, 자주적인 조합활동의 보장과 체제 절차의 민주화를 실천하며 일반 조합원의 단결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임승범, 2003: 7).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노동조합은 조합민주주의를 위한 법적·제도적 절차를 짧은 시간 내에 갖출 수 있었다. 총회, 대의원제도, 중앙위원회 또는 집행위원회 등의 결의기관과 집행기관 그리고 회계감사 기관 등은 물론이

고 임원선거 제도도 제도화했다.

즉 1990년대를 경유하면서 대부분의 노동조합이 민주적 운영의 외양을 갖추어 왔다. 절차적 수준, 특히 위원장의 선출과 관련해서 조합원 직선제이든 간선제이든, 비교적 공정한 선거 경쟁이 보장되고 있다. 조합운명을 투명하게 하기 위한 각종 제도들도 비교적 잘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회계감사도 비교적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형식적 측면의 노조 내부민주주의는 대규모 노동조합일수록 보다 잘 제도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규모 노조일수록 조합 내 리더십 경쟁이 치열하고, 그만큼 조합 내부에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이 발달되어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김준, 1998: 110). 이처럼 1987년 이후 노동조합의 내부민주주의가 대폭 신장되어 집행부의 의사결정과 일상활동은 아래로부터의 견제에 대부분 노출되어 있지만, 민주적 성향의 집행부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내부민주주의의 확장이 오히려 활동의 장애 요인이기보다는 권력 강화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임영일·이성철, 1997: 222).

다음으로 노동운동은 “작업장 민주화와 분배개선을 지속적으로 성취해 갈 수 있는 안정된 틀”을 만든 임단협을 제도화했다(최영기, 2001: 16). 1990년대 초반을 경유하면서 노사관계가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제도화되고 있다는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가장 일차적인 지표는 노사분규가 감소했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노사관계 발생건수가 1989년 1,616건에서 1990년 322건으로 줄어들더니 1991년에는 234건으로 급감하여 '87년 노동자대투쟁 이전으로 돌아갔다”(최영기, 2001: 24). 이러한 추세가 수년간 지속되자 정부는 이를 노사관계가 안정화되는 지표라고 주장했다. 확실히 이러한 변화는 노사간의 의견불일치가 파업에까지 이르기보다는 임금협상이나 단체교섭을 통해서 해결되는 경향이 많아지고, 노동쟁의가 초래하는 높은 부담으로 인하여 노사 양측이 모두 쟁의를 회피하는 경향이 높아진 데서 비롯된 것으로 기업내 노사관계의 제도화와 상대적 안정화를 반영하는 것이었다.⁴⁵⁾ 물론 “1989년 이후 국가 개입에 의한 직접적인 규율도 일정한 기여를 했을 것으로 보인다”(최

45) 단체교섭 제도화와 관련하여는 조호래(2001), pp.354~357 참조.

영기, 2001: 24).

이처럼 임단협의 제도화와 함께 노동자측의 불법쟁의나 사용자측의 부당노동행위나 구사대 동원 등 직접적 물리력예의 의존이나 불법·탈법적인 행위들이 현저하게 감소한 반면, 임금교섭과 단체교섭을 중심으로 한 노사간의 줄다리기는 훨씬 더 복잡해졌다. 쟁의발생 신고 이후의 노사간의 임금교섭 회합 횟수나 교섭 소요 기간은 1988~89년이나 1990~93년 사이에 이렇다 할 차이가 없지만, 쟁의발생 신고 이전의 평균 회합 횟수는 5~6회에서 8~9회로 늘어나고 교섭에 소요되는 기간도 평균 17~27일에서 30~48일로 각각 2배 가까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노사 모두가 쟁의를 피하기 위해 쟁의발생 신고가 있기 이전에 임금교섭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가며 치열한 줄다리를 벌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노사의 줄다리가 이렇게 치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노사간의 임금 문제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현격했다는 것을 반영한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전국의 표본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1990~96년 사이의 임금교섭 실태조사의 결과를 통해 볼 때, 노조측의 최초 요구안과 사용자측의 최초 제시안은 그 격차가 점점 줄어들어가기는 했지만 1990년대 전반기 내내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한편 단체교섭과 관련해서 이 시기에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른 문제는 이른바 ‘인사·경영권’의 문제였다. 노동조합은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 동수 참여, 또는 해고, 징계, 배치전환시 노조와의 협의 또는 동의권 등과 경영예의 참가 또는 경영정보에 대한 요구권 등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한 반면, 사용자측은 정부의 힘을 빌려 이를 ‘경영전권’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맞섰다.

이러한 현저한 차이가 노사의 교섭을 어렵게 하고, 교섭을 장기화시키며, 갈등을 치열하게 했다. 재벌 계열사의 경우 그룹 단위로 정해지는 임금정책 등으로 인한 사용자측 교섭대표의 교섭권한의 한계, 그리고 노동자들의 높은 임금인상에 대한 기대수준에 떠밀린 노조대표의 교섭권한의 한계 등, 갈등을 강화하고 노사관계의 제도화에 장애가 된 요인이었다. 특히 권위주의적 노동정책에 기반해서 임금통제를 시도한 정부는 오히려 갈등을 심화시키고 자율적인 제도화의 장애요인이 되기도 했다.

노사관계 제도화의 진행은 노동조합에게도 새로운 도전이었다. 단순히 말하면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까지는 조합원들의 요구에 충실히 호응하는 민주성, 선명하게 자본과 정부에 맞서 싸우는 투쟁성만으로 충분했던 노조 집행부는 이제 치밀한 임금교섭 전략을 마련하고, 사용자 측과의 협상테이블에서 내놓을 논리를 개발하고, 노동자들의 복지·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세세한 사항들(예를 들면 주택 문제, 산업안전 문제, 신기술 도입 및 작업강도 문제) 등과 씨름해야 했다. 따라서 3~4개월이 걸리는 임·단협 과정을 포함하여 1년의 6~7개월 이상을 임단협 준비에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또한 노동조합의 일상 활동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법적인 측면에서 노동운동의 제도화는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뉘어진다. 첫 번째는, 한국노총이 청원을 하는 가운데 정부 주도의 법개정이 이루어졌던 1987년 법개정 이전의 시기, 한국노총이 보다 적극적으로 법개정에 참여했지만 정치권이 주도했던 1987년 법개정 시기, 그리고 민주노조운동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1997년 노동법 개정의 시기이다. 이 세 단계의 법개정 과정을 거쳐 노동운동은 점차 자신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법에 명시했으며, 특히 세 번째 법개정은 민주노조운동을 법적인 주체를 승인함으로써 결정적으로 법적 투쟁이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1987년부터 그 간략한 역사를 민주노조운동의 시민권 획득, 즉 복수노조 조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1987년의 민주화라는 새로운 정치환경과 변형된 권력관계를 담아내기 위해 각 행위자들은 법개정 작업에 착수하였다. 즉 1987년 노동법 개정의 핵심적인 원인은 ‘6·10 민주항쟁’과 ‘7·8·9 노동자대투쟁’이라는 정치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4·13 호헌(대통령 간선제의 유지)을 계기로 시작된 민주화의 요구(직선제 쟁취, 독재 타도)는 직선제 개헌을 관철시켰는데, 이것은 헌법 개정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헌법 개정에 따른 하위 관련법, 즉 노동법의 개정이 불가피했다.

노동법 개정은 당시의 민주화의 요구와 내용을 담아내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집단적 노사관계법과 연관되어 있었다. 1980년에 만들어진 당시의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었으며, 특히 민주노조진영의 활동을 저지하는 내용을 상당 부분 함유하고 있었다. 우선, 노동조합법에서 보면, 복수노조 제한, 노조설립 요건 규제, 노조해산 명령권, 규약취소 명령권, 결의취소 명령권, 노조임원 자격 제한 등이 그 당시 노조의 활동을 규제할 수 있는 조항들이었다. 노동쟁의조정법도 쟁의행위의 과도한 규제, 지나치게 긴 냉각 기간, 복잡한 조정절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집단적 노사관계법에서 핵심은 복수노조금지 조항에 있었는데, 이것은 기존에 상급단체 수준에서 단일 노총인 한국노총을 지지하게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단위사업장 수준에서 사용자들이 자주적인 노동조합 설립을 방해하는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즉 복수노조는 민주노조진영의 등장을 억압하는 핵심적인 기제로 작동해 왔다.

법개정 논의 결과 대부분의 법안이 민주화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즉 “유신체제와 신군부에 의해 도입되었던 문제 조항의 대부분을 폐지”하였다. 하지만 “1963년 국가재건최고회의에 의해 도입되었던 대표적인 문제 조항들(복수노조금지, 정치활동금지, 공무원의 단결권 제한) 등은 존치”되었다. “이런 점에서 1987년 노동법 개정은 1963년 노동법으로의 회귀”이다. 즉 1987년 노동법은 “노동운동을 ‘제한적으로 자유화’하는 법률”이며 “자본측에 유리한 것”이고 “권위주의적 성격”을 가진 것이었다(김준, 1989). 따라서 1987년 노동법은 “여당이었던 민정당의 입장을 기본적으로 수용한 바탕 위에서 야당의 요구를 부분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서 “자본측과 민주노조측 모두에게 불만스러운 절충적인 것”이었다(노중기, 1995: 154). 결국 1987년 ‘민주화 선언’ 이후의 전국적인 노사분규는 현실의 노사관계와 괴리된 노동법제 사이의 모순이 심화되면서 발생한 것이었지만, 1987년 노동법은 이 모순을 해소하지는 못했다.

여기에서 복수노조 조항에 대해서는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 이 조항은 민주노조진영의 세력화를 막는 방식으로 오히려 개악되었다는 점이다. 즉 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존 노조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노조 설립을 금지한다는 조항은 제2노조를 금지하는 조항이었다. 이 조항은 한국노총 유일체제를 제도적으로 담보하기 위해 1961년도 법개정시 도입되었다. 이 규정을 근거로 노동부에서는 제2

노조에 대하여 신고증을 교부하지 않았지만, 이론적으로는 제2노조의 출현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그런데 개정법에서 ‘기존 노조와의 조직 대상을 같이하는 경우’에 제2노조를 설립할 수 없게 함으로써 한국노총의 유일체제를 더욱 굳혀주었다(제3조 제5호).

이것은 경총과 한국노총, 정부 및 정치권이 민주노조운동진영을 인정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반대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노조의 설립신고서와 관련된 개정안에도 나타나는데, 1987년 노동법 개정에서 설립신고서 접수와 관련하여 개정법에서는 첨부 서류를 간소화하였지만, 설립신고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에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을 추가하였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노동부는 이에 대하여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함으로써 무소속 노동조합의 탄생을 방지하고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의 조직질서를 유지케 하기 위한 것”(민경식·조정찬·노동부 공보실, 1987: 19 참조)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무소속 노동조합이 탄생되지 않으면 안 되는 법리적인 근거가 전무하거니와 이 규정 역시 한국노총을 비호하고자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낳게 한다. 왜냐하면 노동부 업무지침에 따르면 연합단체의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 ‘노조 연합단체의 가입 인준증 사본 첨부’를 요구하고 있고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설립신고서를 반려 처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노동부, 1988. 2: 12~13) 기존의 한국노총에 소속되지 않으면 설립에 지대한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이다. 흥미롭게도 한국노총의 개정요구안을 보면 구법상의 구비 서류를 대폭 간소화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도 연합단체의 인준서를 첨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노총개정안 제13조 제3항).

1987년 노동법 개정 과정에서 조직적 개입을 하지 못했고 개정법에서 실체를 인정받지 못했던 민주노조운동진영은 1988년 4월 총선에서 여소야대 국회의 등장으로 인해 시작된 1989년 노동법 개정 과정에서 적극적이고 의식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다. 민주노조진영은 복수노조 금지와 행정관청에 의한 임시총회 소집권자의 지명, 제3자개입 금지 및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방위산업체의 쟁의제한 등의 폐지를 요구했다(엄주웅, 1994: 174). 이러한 법개정 조항 중에서도 복수노조 금지 조항(노동조합법 제3조 제5호)은 심각한 민주노조 내부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이 문제에 대한 견해는 크게 세 가지였는데, ‘복수노조-내부 분열-단결 약화-한국노총 민주화’라는 복수노조 ‘존속론’과 ‘복수노조 철폐-자주적 단결권 보장-자주적 산별노조 건설-제2노총론’이라는 ‘폐지론’이 대립했다. 하지만 당시의 정세에서는 ‘폐지론’의 입장이 대세였다. 왜냐하면 민주노조들이 자주적·민주적 노조로 결집되고 있었고, 노동자들의 투쟁력이 여전히 위력적이었으며, 한국노총이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유효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시기에 지노협 등은 자신의 한계를 느끼면서 독자적인 구심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 당시의 상황에서 제2노총 건설은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이런 배경 하에서 민주노조운동의 주류는 일단 ‘전노협’으로 표현되는 ‘민주노조운동의 전국적 구심’을 만든다는 데 합의함으로써 논쟁을 일단락지었다(엄주웅, 1994 : 189~191 참조).

민주노조진영의 노동법 개정 노력은 해마다 반복되었고 그 과정에서 노동법 개정 전국노조특별위원회, 노동법 개정 특별위원회, ‘노동법 개정 전국대표자회의’, 전국 노동법 개정 투쟁본부, ‘국제노동기구 기본조약 비준 및 노동법 개정을 위한 전국노동자공동대책위’ 등의 다양한 기구로 나타났고, 결국 정부는 노동관계법연구위원회를 만들어 노동법 개정 논의를 시도했다. 연구위는 노사공익 등의 토론을 통해서 법안을 작성하고자 했지만, 민주노조진영을 토론과 협상의 장에서 배제했다는 점에서 당시의 노동정치에서 여전히 민주노조진영은 시민권을 갖고 있지 못했음을 보여주었다.

결국 1996년 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 초대를 받은 민주노총은 변칙 처리와 총파업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상급단체 복수노조 금지조항 철폐를 관철시켰다. 이것은 오랜 투쟁을 거쳐 최종적으로 민주노총이 법적인 주체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세력화의 경우, 노동운동은 1996년 총파업 이전까지 정당 건설을 통한 정치세력화를 선호하지 않았다. 이들은 민중운동을 통한 사회적 영향력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거나 기존 정당에 대한 영향력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는 방법을 추구해 왔다. 하지만, 1996년 총파업은 기존의 이러한 정치세력화의 방법에 대해 심각한 문제 제기를 제공

해 주었다. 우선 여기에서는 민주노조진영의 정당운동과 민주노총 및 한국노총의 정당정치 참여를 살펴보고자 한다.

민주노총이 본격적인 진보정당을 통한 정치세력화를 모색하기 이전까지 진보진영의 정당운동은 두 가지 단계를 거쳤다. 첫 번째 단계는 1987년 이전의 시기로서 비합법적인 전위정당 운동이 서클적 수준에서 모색되었다. 두 번째 시기는 1987년 이후부터 ‘국민승리 21’이 등장하기 이전까지의 시기이다. 즉 진보진영은 노동자대투쟁 이후 정당 건설도 활발하게 전개했다. 이 시기 활동가들의 정치활동의 특징은 1987년 이전과는 달리 합법정당 건설을 시도했다는 점이다. 활동가들이 이 당시 비합법정당에서 합법정당 건설로 전략을 변경한 이유는 첫째, 1987년 대통령 선거를 거치면서 활동가들은 대중정당이 필요하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학습했기 때문이다. 즉 투쟁의 성과가 선거 공간을 맞으면서 정당들의 전리품으로 귀속되는 것을 목도한 활동가들은 대중정당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둘째, 활동가들은 노동자대투쟁 이후 합법정당의 성공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이들은 열린공간에서는 비합법정당보다 합법정당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진보진영에 의해 1987년 이후 등장한 합법적 대중정당은 민중의 당과 한겨레민주당이었다. 민중의 당은 1987년 대선에서 ‘독자적 후보파’ 계열에 있던 사람들이 13대 총선에 대비하여 창당한 것으로서(1988. 3. 6) 이후 민중당으로 계승되었다. 한편, 야권 통합에 적극적이었던 사람들이 모여 13대 총선에서 한겨레민주당을 창당하여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추구하였다. 13대 총선 결과 참패하면서 해체되고 진보정당운동은 민중당으로, 그리고 한국노동당 창당준비위원회를 흡수하여 통합민중당으로 발전했다. 이들은 14대 총선(1992)에서 52명의 후보를 출마시켰지만 의석을 얻는 데 실패했다. 그 결과 민중당 지도부가 당 해체를 선언했다. 그러나 당 유지를 주장한 구한국노동당 세력은 진보정당추진위원회(진정추)를 결성했다. 14대 대선(1992)에서 ‘진정추’, ‘사회당추진위원회’, ‘민중회의(준)’, ‘전국노련’ 등은 백기완 민중후보가 대통령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진보정당의 맥을 이어 나갔다.

그런데, 이 시기까지의 정당운동은 대중조직들의 지원을 거의 받지 못

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노동조합이 정치정당을 통한 세력화에 적극적인 관심이 없었음을 반영한다. 실제 14대 총선(1992)과 관련해서 볼 때 전노협과 민중당 사이에는 아무런 공식적인 관계도 없었다. 뿐만 아니라 전노협 간부들이 민중당 활동과 선거 활동에 집중하는 현상에 대해 오히려 전노협의 조직력을 약화시키는 행위라고 보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박병상, 1997: 46). 하지만, 민주노조진영은 1987년 이래 전노협과 민노준을 거치면서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표명했다.

민주노조진영이 적극적인 정당 결성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민주노총의 등장 이후로서, 그 직접적인 계기는 1996년 말 총파업 경험을 통해서 주어졌다. 총파업은 한편으로 “1987년 이래 거의 처음으로 절대 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노회찬, 2000) 국회에서 자신들이 무기력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즉, 투쟁의 정치적 성과를 여야 정당의 담합에 빼앗겼다는 정치적 각성을 가져다 주었다. 노동운동은 구체적인 법개정 성과를 획득하는 데 필요한 정치력과 교섭력이 매우 취약했기 때문에, 여야 정당들간에 진행되는 노동법 재개정 협상에 실제로 개입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지 못하는 정치적 한계를 느꼈다. 이는 결국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라는 과제와 직접 연결되는 문제였고, 단기적으로 정부와 국회에 대한 정치적 교섭력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한 과제로 제기되었다(조효래, 2001: 509~510).

민주노총은 1997년 2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우리 사회의 민주적 개혁을 실현하고 노동자의 이익과 요구를 철저히 대변하는 새로운 정당 건설의 토대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서 “1998년 지방선거 참가, 1998~99년 정당 건설, 2000년 국회의원선거 참가”라는 정치 일정을 확정하였다. 그리고 곧 이어 개최된 임시대의원대회(1997. 3. 27)에서 ‘1997년 대선에서 독자적 영역 구축’, ‘1998년 지자체 선거에 대거 진출’, ‘1998~99년 정당 건설’, ‘2000년 총선에서 원내진출 달성’을 목표로 하는 정치세력화 방침이 재확인되었다. 민주노총 정치위원회(1997. 5. 21)는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와 1997년 대선(초안)”을 만들었고, 민주노총 제8차 중앙위원회(6. 19)는 이것을 “민주노총 정치위원회 사업계획(안)”으로 제출했다. 이 안

들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정당 건설을 주도해야 하고, 새롭게 건설되는 정당은 이념정당이나 계급정당이 아니라 ‘개혁적 국민정당’이 되어야 하고, 1997년 대선에서는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국민후보운동’을 전개해야 하고, 국민후보운동을 지지하는 개인으로 구성된 새로운 정치조직(가칭 ‘민주개혁연합’)을 각계각층에 제안하여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었다(김세균, 1998: 637~639 참조).

이러한 사업계획에 따라 민주노총은 제6차 임시대의원대회(1997. 7. 24)에서 모든 민주세력과 함께 1997년 대선에 권영길 위원장을 국민후보로 추대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선거대책기구를 구성하기로 결의했다. 그리고 민주노총 대의원대회(1997. 9. 5)와 국민승리 21 준비위원회(9. 7)에서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을 대선후보로 확정했다.

선거대책기구로서의 국승 21은 민주노총과 “다양한 진보적 정파들을 하나의 정치조직으로 묶어주는 첫 매듭”이었는데(안철진, 2002: 8), 과거의 진보정당과는 달리 대중조직, 즉 민주노총과 전국연합, 진보정치연합, 정치연대 등 재야 정치조직들을 포괄하고 있었다: “’97년 마포에서 시작한 국민승리 21(민주노동당의 전신, 진보정당)은 이전의 ‘진보정당사’와는 큰 차이점이 있었다. 과거의 진보정당이 기층민중과 괴리된 지식인 중심의 ‘진보정당’이었다면 ’97년 당시는 노동자운동의 성과로부터 출발했다. 당시 주축이 된 단체도 ‘전국연합’, ‘진보정치연합’, ‘정치연대’, ‘민주노총’ 등 다양한 부문과 현장의 대중운동조직이었다”(송태경 민노당 정책국장 인터뷰, <진보누리>, 2004. 11. 16). 이처럼 진보정당운동은 이제 최대의 재야 조직이면서 그동안 김대중에 대한 지지 입장을 견지해 온 전국연합이 합류함으로써 진보진영 내의 분열이 해소되었다.

한편, 1987년 민주화 이전까지 한국노총의 활동은 주로 임금 및 정책 건의 활동과 임금 및 노동조건 개선활동에 국한되었고 이것들의 대부분은 “주어진 법적인 틀” 속에서, 그리고 보다 중요하게는 국가 정보기관의 직접적인 개입과 중재를 통해서 임금과 같은 대단히 초보적인 경제요구의 관철에 신경을 쓰고 있었을 뿐이었다”(임영일, 1998: 76~80). 한편, 이 시기 한국노총의 정치활동은 상층 중심의 소극적 정책 건의 및 청원 활동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으며 각종 선거에서 민주적인 공론화 과정

을 거치지 않고 집권당 지지로 일관했다(장대익, 2006:38).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자신들의 이익을 정치권으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었는데, 이것은 정부·여당을 전폭적으로 지지함으로써 그 대가를 보상받거나, 한국노총 출신의 국회의원을 매개로 자신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런 전통적인 정치활동전략은 민주화운동 이후 한국노총이 자주성과 민주성을 천명하면서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다(유범상, 2005:482).

이러한 상황에서 독자적인 정치활동에 눈을 뜨는 것은 민주화 이후 변화된 한국노총의 위상이 흔들리면서부터였다. 한국노총은 1988년 2월 27일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정치활동 강화를 위한 결의문’ 채택을 통해 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노동조합법 제12조 철폐 요구, 정치활동을 적극 추진할 정치위원회 신설 등과 함께 총선을 비롯한 각급 선거에서 한국노총 출신자의 진출 및 당선을 위해 가능한 모든 조직적 노력을 경주하기로 하고 여야 각 정당에 대해 노동운동 출신자의 정계 진출 및 공천을 적극 보장할 것을 요구하였다(장대익, 2006:38). 이러한 일련의 변화는 1988년 박종근 체제의 등장과 내부민주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구체적으로 박종근 체제는 정치활동을 한국노총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고자 했으며 그 결과 노총 내에 정치활동 전담기구인 정치위원회를 설치했다(1989. 4). 정치위원회는 중앙정치위원회뿐만 아니라 각급 산하 조직에도 설치되었다. 이 시기 한국노총 정치활동은 주로 정치활동의 방향에 대한 조사연구, 노동법 개정 등을 위한 대책활동, 정당과의 교류 및 자신들의 정책을 정당정치에 반영시키기 위한 활동, 각급 선거에 출마한 노동계 출신 후보자를 지원하는 활동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이것은 한국노총이 정부로부터 정치적 독립을 선언하고 정치세력화를 지향했다는 점에서 성과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 의미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것은 더 이상 정부가 한국노총의 전적인 후견자가 될 수 없는 정치적 상황과 정부 후견을 받는 노동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외면당하는 내부 정치상황에 따른 것이었다. 이러한 정치활동 방침은 이후 더욱 구체화되었는데, 한국노총은 1991년 2월에 열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1990년대 한국노총의 운동기조와 활동방침’과 1995년 2월 정기 전국대의원대회에

서 2000년대를 대비한 ‘노총의 운동기조와 활동방침’을 통해 더욱 세련된다. 한국노총의 정치활동은 1997년 대선 이전까지 이러한 기조에 따라 이루어져 왔고, 특히 각급 선거에서 노동계 출신 후보에 대한 지지, 지원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노동법 개정 이전인 1996년 15대 총선에 대한 지침에서, 한국노총은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통한 독자정당의 건설을 장기적인 목표로 삼되, 현재의 보수정당 위주의 정치현실에서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가로막고 있는 노동조합법 제12조를 비롯한 노동악법의 철폐 및 과도기적으로 정치적 진출을 위한 교두보 마련”을 정치활동의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15대 총선에서는 노조 출신 후보 및 친노동계 후보의 의회 진출 지원 활동,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전 조직의 감시·감독 활동 전개, 경제사회의 민주적 개혁을 위한 정책요구 활동 및 정책토론회 개최, 노동자 투표참여 활동의 전개 등을 중점사업으로 설정하였다(한국노총, 1997: 833~835). 그 결과 1992년과 1996년 총선에서는 각 정당에 소속된 노동계 후보를 각각 4명씩 당선시켰으나, 모두 기존 정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들이었다는 점에서 한국노총 정치활동의 직접적인 결과물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정영태, 1999: 253; 조효래, 2001 재인용).

가령 1988년 13대 총선과 1992년 14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한국노총 출신자들은 모두 당시 여당이었던 신한국당 소속이었다. 또한 1992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여당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았으나 사실상의 지지운동을 하였으며 1996년 총선에서 박종근 당시 위원장은— 전국구 공천이 아니라는 점에서 의미는 부여할 수 있겠지만—당시 여당이었던 신한국당 공천을 받아 지역구에 출마하기도 했다. 이러한 점은 한국노총이 대중적인 어용 이미지를 극복하고 노동자 대중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한국노총의 지난 역사를 되돌아볼 때 일차적인 관건은 권력과 자본에 대한 자주성 회복이었고 이를 정치활동의 측면에서 보면 집권여당 중심의 편향에서 벗어나는 것이었다(장대익, 2006: 39).

이상에서 보듯이 한국노총이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 독자적이고 적극적인 정치활동에 대한 의사를 표명했고 각종 정치활동 방침을 통해 그

내용이 진일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한국노총의 정치활동 입장과 크게 다르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우선 이것은 계획에 따른 구체적 실천과 가시적 성과가 미흡했고, 조합원들로부터 동의 및 지지와 무관한, 즉 무관심 속에서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한국노총 상층부의 ‘선언’적 수준의 구호에 불과했다. 또한 의회에 진출한 노동계 출신 정부여당 의원들의 어떤 독자적인 정치활동도 가시화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87년 6월 민주항쟁과 6·29선언으로 민주주의로의 이행이 본격화하면서 한국노총의 정치활동이 활성화하기 시작했다. 1988년 13대 총선에서는 6명의 노총 출신 후보가 의회에 진출하였고, 1992년과 1996년 총선에서는 각각 5명이 당선되었다. 이러한 활발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입장에서 볼 때 노총의 정치활동은 주로 개인적인 의회 진출과 정책건의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했다”(박동, 2002).

한국노총은 노동법 재개정 과정에서 민주노총과 마찬가지로 노동운동의 정치적 역량의 강화가 경제투쟁의 성과물을 지키고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한국노총, 1998: 255).

199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국노총은 스스로 ‘정치세력화의 원년’으로 표현할 정도로 새로운 시도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한국노총이 1996년 말 여당의 변칙 처리된 노동법 개정에 대해 총파업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생긴 자신감, 1980년대 후반 이후 내부 민주화와 그에 따른 일정한 변화, 그리고 민주노총과의 경쟁관계가 그 이면에 자리잡고 있었다.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이러한 계획은 보다 구체화되었는데, 이것은 새로운 문건으로 나타났는데, 즉 한국노총은 1997년 6월에 ‘지역할거주의 정치 타파와 노동자 정치세력화 원년’을 목표로 내건 문건, 즉 ‘희망의 21세기를 한국노총과 더불어’라는 정치활동 계획과 대통령 선거 전략을 확정,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1997년 대선에서는 친노동자적 후보와의 정책연합을 실현하고, 2000년 총선에서 노동계 및 친노동계 의원을 원내 교섭단체 규모인 20명 정도 확보하며, 2002년 대선에서는 친노동자 정당과의 제휴를 통해 정권에 참여하고, 2004년 총선에서는 그때까지 축적된 노동계 정치인과 국가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노동자와 국민대중의

독자정당'을 공식적으로 출범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그런 점에서 박인상 위원장 시절이었던 1996년 말 정부여당의 노동법 날치기 파동에 항의해 한국노총 역사상 최초로 총파업을 전개했고 그 연장선상의 일환으로 1997년 대선에서 야당과의 정책연합을 추진했던 것은 (최종적으로는 박인상 위원장 개인 명의의 지지 선언 형태를 취하긴 했지만) 다른 모든 것을 떠나 권력과의 관계에서 한국노총의 자주성을 분명하게 확보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데 중대한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장대익, 2006: 39).

나. 지배담론에 대한 대항담론의 우위

여기에서는 민주노조진영의 대항해게모니의 일환으로 상정된 민주노조, 노동해방, 평등세상의 담론을 지배블록의 담론, 즉 빨갱이와 경제위기 주범과 대비시켜 살펴보고 결국 대항담론이 지배담론에 승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민주노조가 의인으로 등장하게 된 과정을 서술하고자 한다.

빨갱이나, 경제위기 주범, 그리고 이기주의 집단 등의 담론은 노동을 배제하고 억압하고 검열하기 위한 담론들이다. 하지만, 지배블록은 노동을 배제하는 담론을 통해 시민사회를 억압하거나 시민사회에서 정당성을 획득하기도 하지만 포섭함으로써 시민들과 노동자들의 설득과 동의의 얻기도 한다. 후자의 대표적인 담론은 민족주의, 가족주의, 국가주의, 가부장제 등이며, 지배블록은 이 담론들에 기대어 다양한 담론을 산출하여 노동자들을 생산성 향상으로 나서도록 독려했다. 구체적으로 1960~70년대의 지배세력은 당시의 여성 노동자들의 저임금과 과도한 노동으로 인한 고통과 희생을 냉전적이고 체제 경쟁적인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와 그것에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유교적 가족주의 그리고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로 정당화하였다. 예를 들어, 근대화 담론 구성체는 '민족주의' 담론과 '산업전사', '산업역군', '수출역군' 등의 구호로 대표되는 '국가주의' 및 '군사주의' 담론과 접합되어 표현되거나 국가와 민족과 가족의 공동체적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한 '충효윤리' 담론과 접합되어 표현되었다(신병현, 2006: 200). 가부장적인 가족주의의 경우 산업에서 '가족공동체' 또는

‘공장가족주의’ 담론으로 표출되었다. 이 담론들은 공장내 질서를 유교적인 ‘충효윤리’, ‘군사주의’ 및 ‘국가주의’ 담론과 접합된 가부장적 가족주의의 표현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 담론들은 기업을 가족공동체로서 은유화하여 표현함으로써 한편으로는 가족처럼 자발적으로 기업의 가치와 목표를 내면화하고, 회사의 경영관리 및 감독층의 가부장적인 온정과 배려를 부각시키고, 이에 대한 보은의 논리를 강조함으로써 가부장적인 위계질서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게 하는 전형적인 통합과 차별화의 담론들이라고 할 수 있다(신병헌, 2006: 204~205). 이처럼 이 담론들은 민족주의를 발전주의 및 군대식 수사와 결합했고, 산업노동자를 국방을 위해서 싸우는 군인들과 동일시했다. 수출축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는 것은 노동자들만이 할 수 있는 애국적인 행위라고 칭송했다(Koo, 2001: 207).

한편, 지배블록은 공포를 조장함으로써 저항을 억제하는데, 여기에 동원된 담론은 ‘빨갱이’ 담론이 대표적이다. 빨갱이의 상위 개념은 반공주의인데, 이 담론은 민주화 이전부터 현재까지 국가와 자본의 전형적인 노동운동의 공격을 위한 담론이었다. 예를 들어, 1987년 노동자대투쟁의 물결 앞에서 당시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은 “내 눈에 흠이 들어가기 전에는 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 몇몇 젊은 놈들이 날뛰다, 외부 불순세력과 연계된 난동분자들과는 대화하지 않겠다, 외부세력만 단절되면 울산의 노사분규는 곧 해결될 것이다”(1987. 8. 7. 기자회견)라고 언급하고 있다. 전노협 창립의 경우에도 정부와 자본은 이를 빨갱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등이 전노협 창립에 즈음하여 전노협을 옹호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다: “전노협 준비위가 밝힌 11개 항의 강령을 살펴보면 조직의 목표를 민주화와 복지의 증진, 평화와 통일에 두고 있어 정부나 경제단체가 우려하고 있는 체제전복적 요소나 좌경급진적 요소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 정부와 기업은 전노협을 좌익 급진세력으로 미리부터 매도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전노협의 강령은 지극히 온건하고 체제내적일 뿐만 아니라 대부분 노동자들의 일반적인 요구를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이다”고 주장하였다(한겨레, 1990. 1. 19).

한편, 1996년 노동법의 변칙처리에 대한 노동운동의 총파업에 대한 제

도언론들의 비판을 보면 여전히 반공주의는 지배블록의 유효한 담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파업에 임하는 노동운동에 대해 제도언론은 ‘머리에 붉은 띠를 두른 혁명투사형 노동운동’, ‘머리를 쥐고 분신을 기도하는 결사항전식 노동운동’으로 규정했다(중앙일보, 1996. 7. 4. 사설).

이상에서 보듯이 빨갱이 담론은 해방 직후 전평을 소멸시키는 핵심 담론이 된 이래로 현재까지 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노동운동을 억압하고 검열하는 언어가 되어 왔다. 이것은 노동운동을 체제 전복세력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합원들로부터 분리시킬 뿐만 아니라 반역과 반란에 대한 형벌의 공포를 조장해 왔다.

한편, 경제위기설은 자본이나 국가의 고전적인 헤게모니 프로젝트에 속한다. 1987년 이후 지배블록은 항상적으로 경제위기설을 제기해 온 경향이 있는데⁴⁶⁾, 대표적인 것이 1989년 경제위기설과 1996년 경제위기설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개의 경제위기설은 비슷한 논리와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경제위기설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경제위기설은 경제의 이상 징후를 포착하여 곧바로 과장하여 선전하는 경향이 있고 이것은 예외없이 개혁세력 또는 노동운동을 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기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즉 1989년판 경제위기설의 경우 1989년 초반부터 수출 부진을 이유로 제기되었고 4월 들어 임금투쟁이 본격화되고 5월 1일 노동절 행사를 전후하여 본격적으로 선전되었다. 또한 1990년의 경제위기설은 이승윤 경제팀을 출범시켜 경제정책기조를 확실하게 금융실명제, 토지공개념 등 경제정의의 실현을 위한 제도 개혁에 대한 요구를 잠재우고 노동운동에 대한 강경 대응과 성장을 위한 경

46) 경제위기론은 결코 최근의 경제상황에서만 제기된 것은 아니며 1980년대 말 이후 주기적으로 유포되어 왔다. 1987년 온 나라가 민주화 열기에 휩싸여 있고 수많은 노동조합들이 결성되었던 당시, 우리 사회는 ‘남미냐, 일본이냐’의 갈림길이라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선택’에서 남미식의 경로에 발을 들여놓은 위기적 상황으로 선전되었고,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은 우리 사회를 남미의 전철을 밟게 만드는 주범으로 몰렸다. 또 1989년에 들어 수출 부진이 심화되자 1990년 전후로는 ‘한국경제 중대한 전환점에, 노사분규 증공업 등 중심산업 위기’라는 식의 ‘총체적 난국’설이 대대적으로 유포되었다(정건화·김상조, 1996: 104).

기부양에 나서게 하였다. 이후 ‘3당 합당’을 통한 여소야대 국면이 이어져 급속한 보수·수구적 분위기가 지배적으로 되었다.

1996년판 경제위기설 또한 “경제가 뚜렷한 하강세를 보이고 있고 주변 정세도 불안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매일노동뉴스〉, 1996. 4. 13)을 들어 경제위기설을 제기했다. 이것은 또한 노동법 개정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서 노동계의 노동기본권 보장 법개정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정부 내 온건세력, 즉 박세일 사회경제수석이나 진념 노동부 장관에 대한 견제를 위해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경제위기설은 위기의 원인을 노동자들에게서 찾는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예를 들어, 1989년판 경제위기설과 관련하여, 민정당 간부인 이승윤 당정책위의장은 “우리 경제는 발목이 늪에 빠졌으면서도 입으로는 화창한 봄날을 노래하는 격”이라고 하면서 위기론을 주장하고 나섰다(3월 3일 당정회의). 경제부처도 곧이어 “지나친 임금인상 요구와 농민들의 무리한 요구를 다 들어줄 경우 조정 국면에 있는 현 상황에서 경기침체와 물가 인플레이를 유발할 우려가 크다”고 하여 노동 문제와 경기침체, 물가상승의 문제를 연결시키기 시작하였다(정건화, 1989: 173~174).

세 번째로 경제위기설은 국가 차원의 헤게모니 프로젝트로 기획되어 이것은 지적·도덕적 지식체계에 기반해서 모든 국가 기관과 자본이 체계적이고 무차별적으로 유포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정부와 민정당, KDI(한국개발연구원), 한국은행, 산업은행, 경총, 전경련 부설 한국경제연구소 등 각종 연구기관, 그리고 이들의 발표문을 확대 포장해서 보도하거나 해설·분석 기사를 통해 장단을 맞추는 관제언론에 의해 경제위기설이 대대적으로 선전”된다(정건화, 1989: 174). 한편 자본도 이에 적극적으로 호응함으로써 경제위기설이 전방위적으로 선전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재계에서도 이에 발맞추어 ‘위기상황’을 선포하고 ‘경제계의 단합된 힘으로 급진 폭력세력을 축출하고 산업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1989년 12월 23일 경제6단체의 주도로 경제단체협의회를 창립했다. 이는 민주노조의 전국적 결집체로 알려진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의

결성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발표되었다는 점에서 정부의 최근 발표와 그 맥을 같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안중민, 1990: 72).

특히 KDI는 이러한 위기설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해 왔다. 이 기관은 ‘해마다 임투 시기 때마다’ 한국경제의 전망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담론 창조자로서 역할을 했다. 예를 들어 ’87년 7~8월 노동자대투쟁 기간 중에는 ‘노사분규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반안’(1987. 9)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고, 1989년에는 최근 ‘분기별 경제전망’(1989. 3)과 ‘임금과 국민경제’라는 보고서(1989. 5. 6)를 통해 국가임금위원회를 구성하여 임금인상 폭을 규제해야 하며, 기업의 과도한 임금인상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전개했다(정건화, 1989: 174).

마지막으로 이 경제위기설 담론은 노동자들의 자기희생과 노동운동의 무력화 또는 사회적 고립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예를 들어, 1989년판 경제위기설에서 정부는 최근 들어 국민들을 상대로 ‘제몫찾기 자제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이는 한편, 노동자들에게는 지난 6월 19일의 ‘하반기 경제종합대책’에 이어 다시금 ‘한 자릿수 임금인상’ 및 ‘생산성 범위 내의 임금인상’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임금협상의 조기타결 유도, 소위 ‘과격 노동쟁의’를 진정시킴으로써 생산 및 수출의 향상과 산업평화 및 정치·사회 안정을 기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고수, 불법·폭력 노동쟁의에 즉각적인 공권력 투입, 경영·인사권 관련 쟁의신고의 불용 등 노동쟁의의 억제를 위한 제반 방침을 잇따라 발표했다(안중민, 1990: 72).

이에 대해 노동은 노동위기설이 제기하는 위기의 원인이 노동이 아니라 자본의 본질적인 속성과 국가의 정책적 실패에 있다고 비판한다: “이른바 ‘경제위기’를 초래한 직접적인 요인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제국주의적인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의 압력과 그에 의존적이고 굴욕적으로 대하는 정부 당국에 있음이 명백하다고 하겠다(안중민, 1990: 76).⁴⁷⁾ 둘째 요인으로는 특히 재벌을 위시한 일부 기업주의 직

47) 여기에서 주목되어야 할 문제가 다름 아닌 실업 및 고용불안정화의 문제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자동화 투자·생력화 투자가 본격적을 추진되고 있으며 새로운 투자는 주로 석유화학 등의 장치산업이나 첨단기술산업으로 집중되면서 고용

무태만 내지 무사안일한 탐욕을 들 수 있다. 그동안 스스로의 창의적 노력이라기보다는 정권의 억압적 노동통제와 저임금정책에 편승, 이윤을 축적해 왔던 한국의 재벌이 3저 호황을 맞이하여 벌어들인 돈을 기술개발·설비투자 등 생산적으로 쓰지 않고 비생산적 투기 등에 쏟아부음으로써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비를 게을리한 데 경기침체의 자본내재적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안중민, 1990: 76).

이처럼 경제위기설은 그 중요한 공격 방향이 노동자계급을 향하고 있으며 시기적으로 ‘임금인상 투쟁기’에 즈음하여 광범하게 유포되고 있다는 점에 그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드러낸다. 여기에서 ‘무노동 무임금’ 이데올로기가 주로 민주적 노동운동을 내부로부터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경제위기 이데올로기는 특히 소시민층·중간층을 대상으로 이들의 의식을 노동자에 대해서 적대적인 것으로 만들면서 결정적으로는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의 명분을 얻고자 하는 의도를 지닌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이 시기 중산층의 위기감을 자극하여 보수야당을 침묵시키면서 민족민주운동권에 대한 탄압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정건화, 1989: 174~175). 다시 말해, 경제위기설은 노동자들에게 위기의 책임을 묻고 그들을 순응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 지배블록의 헤게모니 프로젝트로 제기된 것이다. 실제로, 1996년판 경제위기설은 분명 “경제가 어려운 형편에 재벌기업 총수들을 구속하는 것은 기업의 투자 마인드가 위축되어서 경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니 곤란한 일이며, 더욱이 이들 재벌기업들을 규제하려는 정책은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라는 여론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제도개혁과 관련해서 “경제가 어려운 판에 제3자개입이나 복수노조

증대의 규모가 투자규모에 비해서 현저하게 감소함으로써 실업 및 고용불안정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흔히 경제위기론이 말하듯 임금인상이 만들어낸 ‘결과’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한국 자본주의의 향후의 축적방향에 의해서 예정되어 있는 경로이며, 새로운 국제 분업구조에의 조응과정에 의해 틀지어져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경기침체는 단지 그것을 더욱 전면적으로 드러나게 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며, 또 한편으로는 자본으로 하여금 고용감축에 대한 반발을 보다 철저히 제압·무마할 구실과 명분을 제공할 뿐이다(정건화, 1989: 185~186).

를 허용하는 일 역시 생산 현장을 정치투쟁의 장소로 만들어 경제위기를 오히려 가중시킬 위험이 크다”는 기업 쪽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했다(정건화·김상조, 1996: 105).⁴⁸⁾

이상의 지배담론에 대해 노동운동은 대항담론으로 민주노조, 노동해방, 평등세상 등을 발견해 왔다. 즉 이러한 국가 수준의 담론 변화의 영향을 받아 노동운동에 나타난 하위 담론, 즉 민중민주주의와 민주화 담론으로부터 온 민주노조, 노동해방, 평등세상 등은 이러한 지배담론을 일정하게 제어함으로써 자신의 조합원과 시민사회에 헤게모니를 가질 수가 있었다. 우선 1970년대 저항담론은 민주노조였고 이것은 1980년대 노동자대투쟁 이후 어용노조와 대비하면서 본격적인 저항담론이 되었다. 민주노조는 노동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받아들여졌다. 첫 번째는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독립적인 노조로서 기존의 어용노조와 차별적인 노동자들의 노조였고, 두 번째는 노조 내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자기 형상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민주노조가 휴머니즘 또는 노동자들의 억압적 상황에 대한 지지라는 이미지와 노동자들을 위한 박해자 또는 순교자라는 이미지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었다. 한편 이 담론은 어용노조와 대비시킴으로써 보다 자신의 모습을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었다. 예를 들어, 1990년에 창립된 전노협은 창립 선언문에서 스스로를 “한국노총으로 대표되는 노사협조주의와 어용적·비민주적인 노동조합운동을 극복하고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운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조직적 주체”라고 자임했다(김준, 2001: 295).

한편, 민주노조 지도부는 자신들의 목표를 ‘노동해방’과 ‘평등세상’으로 상징화했는데, 이것은 사회주의와 마르크스주의의 계급론에 기반해서 자본주의의 전복과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이념으로 제시된 것이었다.

48) 재계나 정부·여당·언론 등에서 경제위기론을 강하게 부각시켜 구조조정에 필요한 조치를 뒤로 미루거나 백지화하고 기득권자들의 단기적 이익의 추구에만 몰두하고 있는 듯하여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임금동결, 지급준비율 인하, 공정거래제도 개혁의 후퇴, 신재벌정책의 무산 등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경제위기론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기득권자의 이데올로기로 된 경제위기론은 기왕에 추진되던 개혁까지도 보수로 회귀시키는 데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강철규, 1996: 336).

하지만, 당시 노동자들은 정치적 노동운동그룹의 급진적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뭔가 이런 사회가 아닌, 다른 사회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열망도 가득했다. 즉, ‘노동해방’이라고 하는 구호는 그 실체가 불분명하게 인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한 호응을 얻었고, 무엇인가 대안적인 문화, 대안적인 것들에 대한 갈망이 가득했었다고 볼 수 있다(김준 언급, 최영기 외, 2001 : 760). 이 당시 민주노조는 단체교섭을 통한 지위향상이라는 노동자들의 구체적 목표와 성과로 나타났고⁴⁹⁾ 따라서 투쟁에 나섰던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바라본 노동해방은 병영적 통제로부터의 해방이고, 이들이 원했던 평등세상은 공정하게 분배가 보장되고 노동자로서 차별받지 않는 작업장 내의 평등대우였다(최영기, 2001 : 15).

결론적으로 민주노조의 ‘민주/어용’, ‘노동해방’, ‘평등세상’은 ‘인간적인 대우에 대한 그 무엇’⁵⁰⁾을 표현하는 것으로 노동자들에게 이해되었다. 따라서 이것은 노동운동 리더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계급성’과 ‘변혁성’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었다.

이상에서 보듯이 '87년 민주화 이후 노동정치 영역에서 담론 지형은 반공주의와 경제위기설 대 민주노조와 노동해방으로 나타났다. 이 시기에 대체적으로 후자, 즉 대항담론이, 전자 즉 지배담론의 우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정치적 수준의 민주화와 깊은 연관이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87년 민주화 대투쟁을 거치면서 시대적 과제와 화두는

49) 전노협의 기층 조합원들의 의식이 전노협의 위와 같은 창립 선언문과 강령에 나타난 운동이념을 충분히 수용할 수준이었는지도 의문이다. 당시 파업현장 등에서 ‘노동해방’ 등의 구호가 일상적으로 외쳐졌고, ‘자주·민주·통일’이라는 운동이념에 대한 선전·선동이 다반사이기는 하였지만, 오히려 지도부와 일부 선진 노동자들을 제외한 기층 조합원들에게는 전노협이란 ‘어용·비민주적 노동조합’으로 표상되는 과거의 노동조합과 당시에 그것을 대표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한국노총에 대한 반전립(anti-these)으로서의 의미가 더 강했기 때문이다(김준, 2001 : 294~295).

50) 1970년 그리고 1980년대까지의 시기에 발생한 자연발생적이고 격렬한 많은 저항들은 인간적인 대우를 요구했고, 노동자들은 인간적인 대우를 찾아 자주 일 자리를 옮겨다녔다. 이것은 첫째, 최소한의 노동조건에 대한 요구와 둘째, 작업장 내에서 노사관계 개선에 관한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Koo, 2001 : 187~188 참조)

민주주의였고, 이런 맥락에서 민주노조와 노동해방이라는 담론은 노동정치, 작업장정치에서 우위를 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들 담론이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것은 민주노조의 조직화와 이것에 기반한 임금인상의 정치가 조합원들에게 광범위한 지지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즉 이 시기에 민주노조의 주장인 ‘노동해방과 평등세상’은 임금인상과 기업복지의 증가로 이해되었다면, 반공주의와 경제위기설은 노동통제의 담론으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반공주의는 민주주의 담론에 의해, 경제위기설은 임금인상의 민주노조의 활동에 의해 제압당했고, 이것은 지배담론에 비해 저항담론이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는 것을 설명해 준다.

다. 의인의 등장 : 대항해게모니와 리더십의 확보

1987년과 1996년 사이에 한국의 노동정치를 규정하는 핵심적인 사건은 민주노조진영이 정치사회에 진입했다는 데 있다. 당시 민주노조진영은 노동자의 편과 국민의 편에 서 있었다는 점에서 의인으로 인식되었다. 노동자의 편에 서 있었다는 것은 기존의 병영적 노동통제와 임금통제에 대해 노동자들을 대변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약자의 편에 선 의인이라고 인식되었다. 한편, 작업장 수준에서 노동통제에 저항하는 행위가 바로 군부독재의 정치권력에 대한 저항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그들의 행위는 국민들에게 정당성 없는 정권에 대항 저항이었고 이런 점에서 민주노조운동을 일반민주주의를 향한 의인으로 인식되었다.

이들은 비록 전체 노동자 중에 자신들의 조직에 속한 노동자 비율이 10%를 넘겨 본 적이 없지만, 대표성의 위기라든지 권력관계의 불균형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왜냐하면, 첫째, 민주화 시기라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이들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한국의 노동운동은 1987년 이후 기업별노조 체제하에서도 ‘위임받지 않은 위임자’로서 행동하였기 때문이다. 즉 “한국의 민주노조운동은 낮은 조직률과 그에 따른 낮은 조직 대표성을 조직노동 부분이 전체 노동계급의 위임받지 않은 위임자의 역할을 자임함으로써 극복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조직부문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강력한 조직력과 투

쟁력, 사회적 과급력을 가진 대기업노조들이 조율되지 않은 선도교섭자(pattern-setter)의 역할을 함으로써 매 시기 전체 조직의 교섭과 투쟁의 상황을 이끌어나가고, 조직 부문 전체로서는 다시 그것이 미조직 부문 주변노동자층의 자기조직화와 운동화를 가능하게 하는 선도교섭자의 역할을 해나가는 방식이 그것이다”(임영일, 2003: 69).

이처럼 민주노조진영은 1987년 이후 1996년까지 노동정치 영역에 ‘극적으로’ 진입해 들어와서 노동자들을 대표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극적’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것은 일단 짧은 기간에 노동운동이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민주노조운동의 진입으로 인해 한국의 노동정치가 크게 그 성격이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즉 의인으로서 민주노조운동이 극적으로 노동정치에 등장했다는 것은 세 가지 측면에서 매우 의미있는 역사적 사건이었는데, 첫째, 노동정치에서 권력관계가 변형되었다는 것, 둘째, 노동이 자신의 시민권을 갖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셋째, 비로소 노동운동의 리더십을 얘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그것이다.

구체적으로 권력 및 전략 관계의 측면에서 볼 때, 민주노조진영의 등장은 국가정치 수준에서의 국가조합주의를 해체시켰다. 1987년 이전 권위주의적 국가는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는 물론이고 존폐를 결정하는 주체였고 개발 모델을 진두지휘하면서 모든 자원을 배분하는 절대자로 군림했다. 이것은 과대 성장된 억압적 국가가 정치의 핵심 영역에 위치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1987년 이후 국가조합주의는 적어도 민주노조진영과 국가의 관계를 볼 때 더 이상 한국의 노동체제를 설명하는 틀로서 효용성을 상실했다. 국가는 새로운 진입자 앞에서도 처음에는 구체제를 버리려 하지 않았으나 점차 민주노조운동을 포섭하는 방식의 전략적 변경을 꾀하였다. 한편, 작업장 수준에서 볼 때, 민주노조운동은 병영적 노동통제를 또한 해체시켰다. 1987년 이후 작업장 곳곳에서 터져 나온 민주노조운동은 더 이상 전근대적 노동통제가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효율적이지도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따라서 새로운 노동관리가 모색되었다.

이상에서 보듯이 권력관계의 변화로 인한 새로운 모색은 노동정치 수

준에서는 이 시기에 최종적으로 노사관계개혁위원회의 형성으로 나타났고 작업장정치 수준에서는 임단협의 제도화로 나타났다.

민주노조운동의 새로운 진입은, 또한 노동의 시민권을 신장시켰다. 1987년 이전의 노동운동은 정부의 이데올로기와 시책을 따라갈 자유밖에 없었다. 따라서 근대화와 반공주의가 노동조합을 관통하는 이념이었고 경제성장제일주의 또한 노동조합이 추구해야 할 가치였다. 반면, 1987년 이후 노동운동은 적어도 시민사회에서 환호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국가와 자본이 고려해야 할 정치적 행위자였다. 결국, 1996년에 이르러 국가는 민주노총을 파트너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

민주노조운동의 등장으로 인해 노동운동은 자신의 리더십을 가질 수 있었는데, 시민사회와 노동자들에 대해서 민주노조운동은 민주주의와 노동해방, 그리고 어용노조 타도 등을 통해, 그리고 임금인상과 기업복지 획득을 통해 노동자들을 묶어낼 수 있었다. 그리고 노동정치 영역에서는 노동법 개정 운동을 매개로 민주노조운동의 리더십을 확보하고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에서 보듯이 노동운동이 정치사회적 리더십을 확보하게 된 이유는 첫째, 노동운동이 억압받는 자였다는 이미지 때문이다. 억압적 노무관리와 열악한 노동조건에 대한 투쟁은 노동운동이 정치사회적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는 주요한 계기였다. 둘째, 이들이 사회적 보편적 가치인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이라는 이미지 때문이다. '87년의 노동자대투쟁은 민주항쟁과 같은 맥락에서 읽혀졌다면, 1996년의 총파업은 정리해고제 폐지 이외에 절차적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투쟁으로 읽혀졌다.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노동계가 자신의 대항담론을 형성하고 이것이 조합원과 시민사회에서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기존의 지배담론인 반공주의와 경제위기 이데올로기를 무력화시킬 수 있었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1997년 말 경제위기 직전까지 한국의 노동운동은 시민사회에 자신의 대항해계모니를 관철시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지적·도덕적·정치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에 일정한 동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5. 내재된 문제들과 어설픈 봉합 : '전투적 경제주의'

가. 내재된 문제들

1997년 경제위기 이전까지 노동운동은 임단협을 통한 작업장 내 경제민주주의의 진전, 각종 내부민주주의 제도를 정치민주주의의 실현, 노동조합의 조직화, 정파 조직의 형성, 더 나아가 노동자와 국민을 위한 투쟁이라는 정당성의 담론정치에서의 우위 등 시민사회와 정치사회에서 자신의 존재 의미를 각인시켜 왔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는 상당히 불안정한 모습을 띄고 있었고 취약한 기반 위에 성립되었던 것으로 평가받았다. 여기에서는 이들의 영역에서 내재된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내부민주주의와 관련해서 볼 때, 각 노동조합의 최고의결기구인 총회는 의결을 위한 조합원의 활기찬 의견 개진과 토론의 장이 되지 못하고 점차 집행부의 방침을 설명하는 기회로 변질되었고 조합원이 의사결정의 주체가 아니라 집회에 동원되는 대상으로 취급되어 조합원의 참여도가 저조해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이원보, 1998 : 159~160). 이것은 노동조합의 직접민주주의가 일정한 위기에 빠져 있음을 반증한다. 대의원대회 또한 대의원들의 역할과 활동이 현저히 약화되었다. 즉 전반적으로 조합간부 맡기를 기피하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대의원에 대한 기피도가 가장 심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많은 노동조합에서 조합 업무가 위원장과 상근집행부 중심으로 처리되었고, 대의원들은 1년에 몇 차례 회의에 참석하는 것에 그치고 있었다(김준, 1998 : 128).

이처럼 총회와 대의원대회가 활성화되지 않는 사이 실제 노동조합 운영은 간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노동조합 내부민주주의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할 우려를 내포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 조사에 따르면 “조합원들의 절반 가까이가 조합비 사용 내역을 아예 모른다가거나 잘못 사용되고 있다고 답했다”(이원보, 1998 : 151~152)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재정의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을 수도 있었다. 이처럼 총회

와 대의원대회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사이에 간부 중심으로 노조가 운영되는 것은 노동조합 내부민주주의가 시간이 갈수록 관료화되거나 비판에 약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노동조합 내부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직접선거 제도는 확실히 조합원들의 관심을 노동조합으로 끌게 만들었고 조직력의 강화와 민주주의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다양한 정파들이 출현했다는 점과 노동조합 선거 주기가 대개 2~3년으로 짧다는 점은 노동조합이 과잉의 선거정치 속으로 빠질 잠재성을 갖고 있고 사업의 연속성이 담보되지 않을 개연성을 갖고 있었다.

임단투의 경우도 잠재적인 문제점들을 그 안에 갖고 있는데, 우선 기업별노조하에서 노조 역량이 너무 많이 투입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 있다. 노동조합은 1년 내내 임단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노동조합의 모든 힘이 여기에 집중적으로 투자되었는데, 그 결과 노조는 “임단투가 끝나면 탈진 상태”(이원보, 1998: 156)에 빠지는 경향이 있었다. 그렇다면 왜 노동조합은 임단투에 과도하게 몰입할까? 그것은 “집행부의 능력이 임단협 성과에 의해 판단되는 경향이 폭넓게 존재하고, 조합 내부의 반대파가 임단협 성과를 놓고 집행부를 혼드는 사례가 많은 상황” 때문이다. 따라서 “집행부의 임기가 대개 2년인 상황 속에서 집행부가 임단협에 매몰되다시피 매달리는 것은 어찌면 불가피한 일이라고도 할 수 있다”(김준, 1998: 116~117). 다시 말해 임단투의 성과는 짧은 주기로 실시되는 노조 선거에서 현 집행부의 평가 기준이 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임단투에 몰입한 결과 “조합원들은 노동조합을 임금인상만 하는 곳으로 인식하고 임금인상 결과를 노동조합운동의 평가 기준으로 삼는 경제주의 경향까지 띠게 되었다”(이원보, 1998: 156). 한편 밖에서는 이러한 노조 활동을 빗대어 ‘자판기노조’ 또는 ‘동사무소’라고 비판하는 경향까지도 있었다.⁵¹⁾ 이것은 노동조합 리더십에 있어 잠재적 위협으로

51) 동사무소론은 노조 간부들이 무슨 동사무소 직원들 같이 사무실에서 빈둥빈둥 놀다가 조합원들이 현안(임금인상, 물량 문제, 산재, 수당지급 등) 문제를 제기하면 그걸 해결해 주느라 바쁜 상황임을 빗댄 것으로서 이것은 노조 간부로서 연

간주되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점은 관성적인 투쟁으로 조합원들의 참여가 낮아지고 있다는 점에 있었다. 원래 임단투는 조합원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전제로 조합원 조직화와 의식화의 장으로 노동운동 리더들에게 이해되었으나, “준비에서 교섭, 행동, 타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활동을 해왔으나 점차 조합원을 주체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동원의 대상으로 삼는 경향이 강해졌으며 프로그램 내용도 매년 비슷하게 수행되었다. 이 때문에 조합원의 참여도는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마침내는 간부 중심의 투쟁으로 전락하는 경향까지 나타나게 되었다”(이원보, 1998: 156~157).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들은 임단협이 기업별로 진행되고 그 과실 또한 기업별로 불균등하게 배분된다는 점에서 기업규모별 노동조건의 격차가 임단협이 진행될수록 더욱 커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즉, 노동조합의 단체교섭력에서 ‘기업규모’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는데, 조직노동은 대기업에 집중되었고 그 결과 기업복지와 임금인상의 혜택은 강력한 교섭력을 가지고 있었던 대기업 노동자들에게 돌아갔다. 반면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인상에 머물렀다. 이것은 노동자들의 조직력에 기인하기도 했지만 기업의 지불능력에 기인하기도 했다. “매년 기업규모별 임금격차가 심화·확대되어 왔다.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금속산업의 선도 부문을 중심으로 새롭게 출현한 노조들은 강력한 전투성에 입각해 경쟁적으로 임금인상을 추구했다. 노동조합운동이 활성화되면서 기업주들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한 저임금 체제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었다. 임금결정 과정에서 노조의 조직력이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되면서 기업규모별 임금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새로운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박동, 2000: 226).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들은 아직 전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조직노동자들이 임단협의 결과에 대해 만족해 왔을 뿐만 아니라 적어도 이때까지 대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이 확산효과에 따라 전체 노동자들에게도 일정하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즉 임단투에

대성 확보, 정치활동 등을 위한 활동에 나서기보다는 밀려드는 민원 해결에만 분주한 상황을 비판한 것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잠재적 문제가 내재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 발생 이전까지는 이것이 실제로 커다란 문제로 부각되지는 않았다. 그것은 조직노동자 중심의 강력한 대중동원 투쟁으로 얻어낸 경제적 성과들이 시차를 두고 취약 부문의 노동자나 미조직 노동자들에게도 상당한 정도의 하방효과 혹은 침투효과(trickling-down effect)로 이어지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다(임영일, 2003: 47~48).

한편, 기업별노조에 기반하고 있는 노동운동은 연대라는 측면에서 일정한 잠재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다. 기업별노조는 ‘공장 안의 자기 조직’에 있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공장 안에 있지만 조직 밖’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나 ‘공장 밖’에 있는 하청노동자나 민중들의 문제에는 무관심할 가능성이 컸다. 즉 “임금인상을 선도할 재정과 인력의 모든 측면에서 독자적인 활동 능력은 물론 조합원들의 지지까지 보유한 대사업장 단위노조”는 “해당 사업장의 고용안정과 임금인상 그리고 복지 문제”에만 관심을 가질 개연성이 높은 반면, “자기 조합원이 아닌 실업자나 비정규직 문제 등 노동계급 전체의 장기적 이익을 위하여 전 사회적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할 동기를 갖지 못한다”(양재진, 2005: 402~403).

그리고 리더십의 측면에서도 기업별노조에 기반한 노동운동은 문제가 될 소지를 안고 있었다: “대체로 조직의 민주성과 대중성은 상대적으로 강하게 유지되고 있는 반면, 집중성과 지도성은 매우 약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국 노조운동의 이와 같은 일반적 특징은 기업별 조직체계라는 조직 구조적 특성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노중기, 1998: 64). 이것은 상급단체의 활동이 기업별노조의 이익과 논리에 종속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더 나아가, 기업별노조는 기업의 정규직 노동자를 조직 대상으로 하므로 ‘종업원 의식’이 일차적으로 조합원들의 의식을 규정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더욱이 1990년대에 나타난 신경영전략은 조합원들의 종업원 의식을 강화하기도 하였다(노중기, 1998: 92). 이러한 기업별노조하에서 이념적인 리더와 실리적인 조합원의 간극은 향후 기업별노조의 단점, 즉 연대성의 문제를 부각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파벌 문제 또한 한국 노동운동에 잠재되어 있었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1996년 조사에 의하면, 단위노조 리더십은 내부에 상당한 정도의 리더십 경쟁의 압박을 받고 있었으며, 다수의 단위노조들에서 이 경쟁은 구조화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리더십 경쟁의 구조는 내용에 있어서 노동운동이나 노조활동의 문제를 둘러싼 노선 문제를 중심으로 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인맥과 파벌 등의 속인적 속성에 의한 경쟁구조도 강하게 존재했다(임영일·이성철, 1997: 244).

이상의 모순적 구조 또는 잠재된 문제들에 대해 그동안 “87년 체제”로 개념화하려는 시도가 존재해 왔다. “87년 노동체제”는 ① 작업장 수준에서의 노사관계만 비교적 안정적으로 제도화되고 있을 뿐 사회적·정치적 수준에서의 노사관계 제도화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② 매우 높은 수준의 정치적 산업 갈등을 수반하고 있으며, ③ 기업별노조와 기업별 교섭구조 속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제도화 수준을 보이고 있었던 작업장 노사관계 역시 매우 높은 수준의 산업 갈등을 보이고 있으며, ④ 기업별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매우 분산적인 노동조합 조직체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특징을 표현한 것이었다. 이러한 “87년 노동체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특히 1997년을 고비로 해서 커다란 변화의 압력에 직면했다(김석준, 2003: 232).

담론과 관련하여 볼 때도 노동운동은 잠재적인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었다. 우선, 노동운동의 담론들 중에 어용노조 대 민주노조 담론은 담론이 계급이든 민중이든 자기의 고유성을 갖고 진행된 것이 아니라 어용대 민주 수준의 자유주의적 내용을 갖고 전개된 것이었다. 즉 “노동자들은 담론을 형성할 수 있었으나 그것은 ‘국가 내의 국가’인 기업과 어용노조와의 투쟁에 국한된 것”이었다(김동춘, 1994: 224).

더 나아가, 노동자들이 담론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전노협은 ‘노동해방’과 ‘평등세상’이라는 구호를 내걸었는데, 적어도 1987년, 1988년 시점의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에 대해 대단히 크게 생각했던 것 같다. 그 이전 노조가 없던 시절에 노동자들이 느꼈던 비인간적인 억압과 권위주의적인 통제, 저임금, 또한 관리자에 대한 분노 등 자신이 작업장에서 느끼고 있던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노동조

합’이라 생각했던 것이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노조에 대해서 상당히 막연한 기대와 강한 신념, 애착을 보였던 것이다. 사실 초기 ‘노동해방’이라는 구호는 그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것이었고, 일반 노동자 대중에게 노동해방이란 비인간적 억압과 통제, 저임금 등 현재 그들이 느끼고 있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고, 노동조합은 바로 ‘노동해방’의 주체로 여겨졌다. 적어도 1989년 초까지는 그러한 인식이 지속되었다”(조효래 언급, 최영기 외, 2001:734).

마지막으로 노동운동은 담론 생산의 능력뿐만 아니라 담론을 조직화할 수 있는 자기 조직이 취약하게 존재했다는 점도 잠재적인 문제점으로 거론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노동자들은 국가적 수준의 담론을 생산하고 유포할 수 있는 연구기관과 정치기구를 거의 갖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존재하는 몇몇 기구도 국가와 자본의 그것들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노동운동 위기론 : 전투성에 대한 비판과 리더십의 변화

한국의 노동운동은 1990년대 초반부터 위기에 처했다는 불안감에 시달렸다. 1992년 위기 논쟁으로 구체화된 이러한 위기의식은 바로 노동운동 리더십에 대한 문제 제기였는데, 그 핵심은 전투적 노동조합주의에 대한 평가를 둘러싸고 전개되었다(이하 유범상, 2005 참조).

1990년대 초에 노동운동 위기론은 전노협을 이념과 실천방식을 위기의 주범으로 지목했다. 따라서 논쟁은 ‘전노협적인 것’, 즉 전투적 노동조합주의에 대한 평가를 둘러싸고 전개되었다. 그렇다면 ‘전노협적인 것’은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로 범주화될 수 있는데, 전노협의 변혁지향성, 즉 사회주의 이념과 전노협의 비타협적 실천방식, 즉 전투성이었다. 대부분의 논쟁들은 후자, 즉 전노협의 전투성을 문제 삼았는데 사실 이것은 변혁성, 즉 이념 논쟁과 밀접히 연관된 것이었다. 논쟁은 우선 전투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서부터 출발했다: “전투성은 노동운동의 위기의 주범인가 아니면 민주노조를 이만큼이나마 지속시킨 일등 공신인가?” 그리고 다음의 질문이 이어졌다: “전투성은 단순히 행동방식을 나타내는 전술적

형태에 불과한 것인가 아니면 변혁성을 내포하고 있는가?”

노동운동 위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하 ‘위기론자’)은 노동운동을 “악성종양”을 갖고 있는 암환자로 진단하고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기의 핵심적인 주범은 무엇인가? 위기론자들에게 대답은 명쾌했다. 그것은 전투적 노동조합주의이다: “노동조합운동은 위기인가? 물론 그렇다. 그러나 이 위기는 기본적으로 변화된 노자관계의 지형이나 경제적 토대의 구조를 제대로 읽지 못한 잘못된 노동조합운동의 노선 때문이다”(박승욱, 1992a : 245).

위기론자들은 임단투 중심의 전노협과 전국노운협의 전투성이 변화하는 노동운동 침체와 사회적 고립의 주요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현실적 조건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87년 및 88년과는 현저하게 다른 경제적·정치적·이데올로기적 지형”이라는 “변화된 조건에 기초하여” 전투적 노동조합주의를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정승국, 1992 : 291, 293). 그렇다면 위기론자들에게 전투적 노동조합주의의 골간을 이루고 있는 전투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말 그대로 ‘전투적’ 태도, 기질을 의미했다: “오늘날 노동조합의 단체행동, 특히 파업에서 화염병과 쇠파이프와 복면으로 상징되는 군사적인 전투성은 오히려 노동조합운동의 진전에 크나큰 해악만을 끼칠 뿐이다. ... 노동운동은 인간관계를 변화시키는 운동이지 결코 공장을 때려부수거나 또는 새로운 기계를 만들어 내거나 하는 운동이 아니다”(박승욱, 1992a : 236).

이에 대해 전투적 노동조합주의는 전투성이 불가피했을 뿐만 아니라 매우 유효한 전술이었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리고 ‘전투적 노동운동론’은 전투성이 단순히 “화염병을 들고 싸우는” 호전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협조주의에 대한 거부이고 과소적 탄압에 대한 굴복의 거부”이다. 더 나아가 “‘공돌이, 공순이’를 거부하는 노동자의 자부심이고 노자대립관계에 대한 과학적 인식”에 기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박승호, 1992 : 90). 따라서 이들은 “그동안의 엄청난 총체적 탄압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조운동이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전투적 기풍 때문”이라고 주장했다(박승호, 1992 : 91). 임투를 중심으로 한 전투적 경제주의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이들은 강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국가가 경제

의 결정적 주체로 등장한 이후 노동자들의 임금투쟁은 사실 대정부 투쟁적·제도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정치권력이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임금투쟁은 대단히 제도적이고 정치적인 성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최규업, 1992:86). 따라서 “전투적 기풍”은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되어야 할 민주노조운동의 소중한 기풍이고 전통이다”고 반박하고 나섰다(도천수, 1994:233~234).

그렇다면, 어떤 점에서 전투적 노동조합주의에 대한 비판이 이념투쟁이라고 할 수 있는가? 우선 위기론자들은 전투적 노동조합주의가 이념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고 있다. 박승욱(1992a:238)은 전투적 노동조합주의를 “이념 없는 전투성”이며 경제주의의 변종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하지만, 이러한 언급과는 달리 논쟁의 주체 측면에서 볼 때 이 논쟁은 이념 논쟁이 자명했는데, 노동운동 위기론을 가장 먼저 제기한 진영은 사회적 조합주의를 선호하는 진보적인 학자 진영과 민중당 건설에 합류한 구(舊)노동운동가들이었다(김준, 2001:366~367). 이것은 “노동자정치운동(정당운동)을 지향하고 있었던 조직에서 그 걸림돌이 되고 있었던 세력들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마지막 공세였던 측면이 있었다”고 평가받았다. 한편 ‘전노협’ 노선의 폐기를 통해 ‘전노대’로의 전환해 가는 과정에서 노조운동의 총노선을 하향평준화시키고, 그럼으로써 참여의 폭을 확대하되 노조운동의 주도권을 상대적으로 온건한 비생산직 노조 쪽으로 이전시키고자 하는 시도가 그 배경에 있었다(임영일, 1998:183).

더 나아가 전투적 노동조합주의에 대한 대안 또한 이 논의가 이념 논쟁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노동운동 위기론자들은 “한국의 민주노조운동이 취해야 할 총노선으로 우선 전노협 노선과 같은 최대 강령주의적-전투적 노선을 폐기할 것을, 그리고 변화하는 정세에 맞는 유연한 계급타협적 노선을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임영일, 1998:182). 더 나아가 위기론자들은 계급연대에 대해서도 “다양한 이해관계와 조직화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중간계층과의 결합이 노동운동의 발전에 갖는 적극적인 의의가 인정되어야”한다고 충고했다(정승국, 1992:293).

결국 위기론자들은 “사회발전적 노동운동”을 통해 노동운동의 위기

극복을 제시하고 있다: “필자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이제 더 이상 저 임금·장시간노동, 곧 노동계급의 변혁성이란 경제주의적 허구에 매달리지 말자는 의견이었다. 노동조합의 소극적·방어적 측면에만 매달리지 말고 적극적·변혁적 측면을 생산적으로 개발해 나가자는 견해였다”(박승욱, 1992b: 179). 그런데 여기에서 이들이 말하는 적극적·변혁적 노동조합은 사회정책에 개입하는 노동조합, 즉 사회적 조합주의를 의미했다.

이에 대해 전노협 설계자들은 전투성이 “노동자계급의 존재조건에서 나오는 생명 같은 계급성”(최규엽, 1992: 86)이라고 주장하면서 노동위기의 저의가 이념 투쟁에 있다고 보고 있다: “전투성을 비판한 사람들은 운동 내 우파, 개량주의자들이었다. 그 가운데도 주된 흐름은 민중당, 진정추 등의 합법적인 정치를 표방하는 이들이었다. 변혁의 전망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김승호, 2004). 그러면서 전투적 민주노조운동의 이념성을 “전태일 정신”과 “노동해방”에서 찾고 그것을 자주·민주·통일이라는 운동이념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전투적 민주노조운동은 변혁지향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박승호, 1992: 92).

이상의 인식에 기반하여 이제 전투적 노동조합주의론자들은 노동운동 위기론자들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비판으로 나아간다. 우선 이들은 노동운동 위기가 계급 역관계의 불균형에 따른 것이며 “노동운동 위기 이전에 ‘노동운동론의 위기’가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한다(강수돌·황기돈, 1992: 70). 그리고 이들은 위기론자들이 조합주의에 근거하고 있다고 보고 조합주의가 상호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상 자본에 의한 사회적 노동의 착취를 눈감아 주며, 나아가 이러한 공범 관계의 대가로 자본으로부터 일정한 빵 부스러기를 얻어 먹으면서 자본주의, 제국주의적 ‘사회적 관계’를 철폐하기는커녕, 온존·유지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이라면서 비판의 칼을 세웠다(강수돌·황기돈, 1992: 79).

다. 어설픈 봉합 - ‘전투적 경제주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1997년 이전의 노동운동은 상당히 발전되고 짧

은 시간에 제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는 많은 문제들이 내재되어 있었다. 이 문제들의 중심에는 기업별노조가 자리잡고 있었다.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는 노동자들의 연대성과 계급성을 저해할 개연성을 갖는 조직구조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조직형태와 내재된 문제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노동운동 리더들이 자신들의 조합원과 시민사회에 일정한 헤게모니를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특히 노동조합 리더들이 자신들의 가치지향, 즉 변혁성을 이러한 조직구조와 잠재된 문제들 속에서 과연 실현할 수 있었는가? 이러한 궁금증은 ‘전투적 경제주의’에서 해소될 수 있었다는 것이 이 글의 입장이다.

1987년 이후 한국의 노동운동을 주도해 온 민주노조운동은 계급적·변혁적 이념과 노선을 내세운 급진적 노동운동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실제로 한국의 민주노조운동은 강력한 대중 동원력에 기반을 둔 전투적 노동운동을 주된 기조로 전개했다. 하지만, 그 구체적인 요구와 성과는 대체로 임금인상과 근로조건 개선이라고 하는 경제적 사안에 국한된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일부 연구자들은 이것을 ‘전투적 경제주의’ 혹은 ‘전투적 경제조합주의’로 명명해 왔다(임영일, 2003: 46). 여기에서 전투적 경제주의는 진보적 노동운동의 이념 부재, 노동자 계급정치 조직의 부재, 국가-자본의 억압적 노동통제, 기업 단위로 분산된 노동조합 조직체제 등의 열악한 조건 속에서 자생적으로 분출하는 노동자 대중의 의식과 정서를 강도 높은 ‘대중적 경제투쟁’으로 조직화해 내는 ‘과도적 역할’을 담당해 온 노동조합 운동노선을 의미했다(임영일·임호, 1993: 53).

이처럼 전투적 경제주의는 전투성과 실리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조합어이다. 그런데 전투적 노동조합주의의 전통에서 전투성은 계급성과 변혁성을 담고 있는 노동운동의 한 경향인 반면, 실리성은 노동조합이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이익집단으로서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서로 조합되기 힘든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투적 경제주의가 성립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실리적 조합원들과 변혁적 리더들 양자를 충족시킬 수 있는 요소를 갖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우선 변혁적 리더들의 경우, 경제주의적 성과와 관련 있는 임금인상과 단체교섭을 ‘전투적’으로 실천하는 가운데

노동자들의 계급성과 의식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다시 말해 임금과 복지라는 매개를 통해 노동자들을 조직화하고 의식화할 수 있는 주요한 투쟁의 고리라고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조합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임금인상과 기업복지의 경제적 실리를 획득하는 수단이 전투성과 선명성이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이들에게 전투성은 계급성과 변혁성이 아니라 그야말로 전투적인 방식의 임금투쟁인 것이었다.

이상에서 보듯이 ‘전투적 경제주의’는 실리적 조합원과 변혁적 리더가 민주화와 경제호황라는 특정한 정치경제적 상황에서 양자를 충족시키는 접합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리더들이 변혁적 실천이라는 맥락에서 실천을 기획했지만, 실리적 조합원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기묘한’ 조합은 그 존재론적 불안정성과 모순 때문에 언젠가는 해체될 운명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제4장은 새로운 환경 속에서 이것이 어떻게 자기 모순을 드러내는지 보여줄 것이다.

제 4 장

담론정치의 패배와 리더십의 위기 : 강자의 이익을 위한 투쟁

1. 위기설의 실현과 세계화 담론

가. 강제된 유연화와 분절화

1997년 말 경제위기 이후 한국 사회는 노동 배제의 강제된 신자유주의 정책의 전면 수용과 노동시장 분절화로 특징지워질 수 있다. 즉 한국 정부는 1980년대부터 세계화를 수용하려는 정책적 방향을 견지했는데, 1997년 말 경제위기를 계기로 신자유주의 정책이 강제되었고, 그 결과 급격한 노동시장 유연화로 나아갔다. 그리고 이같은 유연화는 한국의 노동시장을 심각한 분절화로 이끌었다. 1997년 말 경제위기의 도래는 그동안 ‘설’로만 회자되었던 ‘경제위기’가 현실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여기에서는 위기설이 현재화된 새로운 정치경제 환경, 즉 강제된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동시장 분절화 과정을 서술함으로써 노동운동이 새로운 환경에 처해 있음을 드러내고자 한다.

한국에서 세계화의 정책은 1980년대 전두환 정권부터 정치적으로 도입되었다. 전두환 정권은 1980년대 들어 이미 수입자유화와 금융자유화, 대외개방화, 탈규제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했다.⁵²⁾ 하지만 보다 적극적인

52) 임혁백(2005)은 이것을 박정희 정권의 시장형성적 권위주의(market shaping authoritarianism)로부터 시장순응적 권위주의(market conforming)로 국가의 성격이 바뀌었다고 평가한다. 즉 전두환 정권은 박정희 정권의 발전국가에 근거

세계화의 수용은 김영삼 정부라고 할 수 있다. 1993년 출범한 김영삼 정부는 국정지표로 ‘세계화’를 제시했고, 노동정책의 제1과제로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진했다(김유선, 2004: 162).

그렇다면,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으로 기능했던 발전국가는 왜 스스로 세계화 전략을 선택하면서 자기자신을 해체하기 시작했는가? 그것은 변화하는 정치적·경제적 환경 앞에서 발전국가의 한계를 느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1980년대 후반 공산체제의 붕괴로 냉전체제가 종식되면서 세계경제는 엄청난 지각변동을 경험하였다. 세계경제는 1980년대 말부터 글로벌화, 정보혁명, 금융국제화를 키워드로 하는 패러다임의 변화기에 진입했다. 우루과이라운드를 타결을 계기로 탄생한 WTO 체제(1995)는 각 국민국가에게 ‘글로벌스텐다드’에 근거한 단일한 세계시장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요구했다. 즉 WTO 체제는 무역, 외환, 자본이동의 자유화는 물론 정부의 산업지원 철폐, 정부 구매입찰에 외국인 참가 허용, 지적 재산권의 보호, 독과점 규제, 환경 규제, 노동법의 동일화 등을 추진했다.

한국에서 발전국가는 적어도 1980년대 3저 호황기까지는 한국경제 모델의 성장동력이었다. 하지만, 1980년대 세계화의 도래, 이에 기반한 미일 및 국제자본의 상품시장에 이어 서비스, 금융, 자본시장의 개방압력, 그리고 1990년대 세계화의 일환인 OECD 가입으로 인해 시장경제체제의 수용이 불가피했을 뿐만 아니라 관치금융과 정경유착에 기반한 정부주도의 성장방식은 그 적실성이 의심받았다. 특히 이 당시에 재벌과 정치인 또는 관료 간의 정치현금 또는 뇌물과 특혜적 금융지원을 매개로 형성된 정경유착과 정부, 기업, 금융기관이 담합의 정책 네트워크는 정실 자본주의(crony capitalism)로 비판받음으로써 더욱 버려야 될 유물 취급을 받고 있었다(최영기, 1998; 임혁백, 2005; 김수행, 2005).

이러한 상황에서 김영삼 정부는, 세계화 선언(1994. 11. 29)과 함께 세계화 전략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세계화라는 용어는 한국 사회에 본격적인 담론이 되었다.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 인식은 정치, 경제, 문화, 언

한 과도한 국가의 개입에 의한 자원 배분의 왜곡을 시정하고 시장기능을 회복시켜 국제시장의 경기변동에 대한 적응력을 강화하려는 시장순응적 정책을 실시했다.

론, 환경 등 모든 부문에서 세계 규범을 수용함으로써 선진국가의 반열에 든다는 의미의, 광범위하고 다분히 추상적인 슬로건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었다(고세훈, 2003: 74). 더 나아가 김영삼 정부는 자유화와 개방화를 계기로 아시아에서 정치적·경제적·군사적으로 ‘강대국’이 되고자 했으며 재벌들로 하여금 ‘한국을 대표하는 챔피언’이 되도록 지원했다(김수행, 2005: 382). 이것은 발전국가의 연장선상에서 세계화를 인식했다고 할 수 있으며 일종의 패권주의적 의식의 발로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 전략은 사회적 협의기구인 노개위를 통해 정리해고제 도입(2년 유예 조건)으로 귀결되었다.

이러한 상황의 세계화 전략의 추진은 자본의 권력이 강화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1980년대 초 전두환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은 재벌기업 간 중복투자의 조정 및 부실기업의 강압적 정리와 전보다 훨씬 억압적인 노동통제 제도의 수립을 골자로 했다. 결과적으로 재벌 중심의 경제체제가 더욱 강화되었으며, 특히 상위 5대 재벌 중심의 위계적 경제구조가 발전함으로써 국가의 거시경제 운용은 이들 소수 재벌의 협조없이 이루어지기 어렵게 되었다. 이후 노태우 정부에서의 국제화, 김영삼 정부에서의 세계화 역시 같은 내용과 결과를 가져왔다(최장집, 2002: 164~165).

김대중 정부의 세계화는 반노동자적인 동시에 반재벌적인 요소도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최장집, 2002: 165)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한 포괄적 프로그램을 담고 있었는데, 이것은 외환위기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 전략은 외환위기의 원인을 제공했는데, 즉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 선언은 실력에 비해 지나치게 앞선 것이었고 결국 경제위기의 발미를 제공했다”(삼성경제연구소, 1998: 30). 구체적으로 1996년부터 엔고 현상 퇴조 등 외부적 변화에 의해 수출이 둔화되는 등 경기침체가 지속되었고 이때 기업은 사업, 인력 구조조정에 나섰다. 정부는 불황대책에 착수했지만, 1997년 초부터 한보그룹(1월 재벌순위 14위)을 비롯해서 삼미특수강(3월, 28위), 진로(4월 19위), 대농(5월, 33위), 기아(7월, 8위) 등 대기업들의 도산이 잇따랐다. 이처럼 노동법 파동과 한보 도산 이후 한국 경제의 건전성에 의심을 품은 외국투자자들은 자금회수를 고려할 즈음에 태국(1997년 7월)과 인도네시아(8월)에 이어 홍콩

(10월)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금융개혁위원회의 설치와 전면적인 금융개혁 의지를 천명하고 한국은행을 통해 대규모 시장 개입을 감행했다. 하지만, 결국 1997년 대외신인도 하락, 외환보유고의 고갈과 이에 따른 유동성 부족으로 한국은 한국전쟁 이래 최대의 국난으로 평가되는 외환위기를 맞았다.

외환위기 직후에 등장한 김대중 정권은 역대 정권 중에서 가장 친노동적인 정권으로 평가받았지만, 외환위기라는 경제적 상황과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IMF의 권고를 준수할 것을 서명⁵³⁾하였기 때문에 경제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노동시장 유연화를 기조로 하는 기업, 금융, 공공부문, 노동의 4대 개혁을 실시했다. 이것은 공기업의 민영화, 노동시장의 유연화, 공기업·금융·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실현되었다. 이러한 정책은 사상 초유의 실업을 유발했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실업대책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안전망을 도입했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은 대통령 자문기구인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되었는데, 이런 점에서 노사정위는 노사정 간의 사회협약기구이자 외환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위기 연합이라는 이중성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사회적 협약안에 대해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지도부의 사회협약안을 거부함으로써 지도부가 총사퇴했다. 이것은 민주노총 지도부가 자신들의 대의원들에게 노동시장 유연화를 담고 있는 노동시장 개혁과 이에 대한 대가로 얻은 노동기본권 및 사회정책이 담고 있는 사회협약의 정당성을 설득하지 못함으로써 얻어진 것이었다. 이로 인해 운신의 폭이 좁아진 민주노총 지도부는 노사정위 참여에 대해 매우 제한된 자율성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노사정위가 노동조합의 기대와는 사회협약 사항조차 이행을 연기하거나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특히 재벌개혁과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노사정위원회에 의제를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노총은 결국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했다. 이후 노사정위는 노사관계 제

53) 강드쉬 IMF 총재는 대통령 후보자들에게 다음 정권에서도 IMF 협약이 지켜질 수 있도록 IMF 협상 결과를 받아들이는 각서 제출을 요구했고 각 후보자들은 이에 따랐다(12. 3). 특히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는 100억 달러 조기 지원을 위해 립튼 미 재무부 차관에게 IMF 협약을 준수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1998. 12. 12).

도개선 정도로 어젠다를 축소했다. 특히 이후 노사정위에 한국노총만이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대화의 전개와 효과는 반감되었고 결국 점차 사회적 대화기구인 사회적 불신의 대상이 되었다. 이처럼 사회적 대화의 노력은 사실 위기 연합 이후에 제대로 자기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보여진다.

이상의 한국에서 유연화 논의는 정리해고제 절차의 법제화와 파견근로자 관련법의 제정 등을 중심으로 놓고 국가정책과 노동정치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네 가지 점에서 특징적이다.

첫째, 개발모델에 근거한 발전국가의 해체를 전제로 하고 있다. 발전국가의 해체는 국가 중심적인 경제전략의 수정을 의미한다. 즉 이것은 정부 주도의 관치경제를 시장 주도의 개방경제(market-led open economy)로 전환시키는 작업이었다(최영기, 2002). 이는 시장과 자본이 경제 영역에서 보다 큰 힘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한국의 국가는 국내 산업의 보호와 금융자본의 통제를 통해 국내 대자본을 규율해 왔다. 하지만, 대외개방으로 국가는 국내 산업 보호의 수단을 상당 부분 잃었다. 특히 국가 소유 은행주식의 매각과 재벌의 제2금융권의 소유, 통제 허용 등으로 재벌에 대한 강력한 통제 수단을 상실했다. 재벌은 금융 자율화에 편승하여 제2금융권을 장악하여 금융을 사금고화했을 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 통제, 견제받지 않는 기업 지배구조를 확립했다. 그 결과 국가 통제의 이완으로 생긴 공간을 시장이 아니라 재벌이 대체하게 되었다. 이처럼 기본적인 제도적 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화가 추진됨으로써 시장에서 강자인 재벌의 영향력이 확대되게 되었다(임혁백, 2005).⁵⁴⁾

둘째, 세계화가 유연화에 초점을 맞추어 외부에 의해 강제적으로 추진

54) 김수행(2005)은 198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금융자유화가 1990년대 중반 이전에 이미 거의 완결된 상태였으며, 기업의 은행에 대한 의존은 점차로 감소해 1987년부터 '비은행' 금융기관(종합금융회사, 증권회사, 보험회사, 투자신탁, 단자회사 등)의 여수신 비중이 은행보다 더 커진 것은 물론, 기업의 자금조달 구조도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은행 차입보다 주식, 채권의 발행이 더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보기 때문에 경제위기가 도덕적 해이나 연고 자본주의에서 온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p.213).

되었다는 점이다. 발전국가의 해체를 주도한 것은 경제관료였고 이것이 보다 본격화된 것은 외환위기 이후 한국 경제에 개입할 권리를 합법적으로 갖게 된 IMF를 비롯한 국제금융시장과 IMF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미국이었다(이병천, 1999).⁵⁵⁾ 이처럼 새로운 강력한 정책입안자의 출현으로 인해 한국은 앵글로색슨 모델을 전면적으로 수용했다. 즉 한국의 시장개혁의 주도권은 IMF가 쥐고 있었고, IMF는 초긴축정책을 통해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정책을 권고했을 뿐만 아니라 민영화, 규제완화를 통한 구조개혁과 금융산업의 개방, 관세 인하 및 무역, 외환자유화를 포함하는 대외부문의 자유화 등도 요구했다(삼성경제연구소, 1998: 201).

하지만, 사실 한국의 정책입안자들이 이전부터 유연화를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따라서 이것은 내부의 필요에 의해서인 측면도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사실, IMF 요구 조건 대부분은 1990년대 이후 개발모델의 한계를 인식하고 경제자유화와 개방을 요구하던 정책당국자와 학계의 개혁 패키지이기도 했다. 이런 점에서 IMF 경제개혁 패키지는 IMF에 의한 국제금융시장의 요구만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국내 경제개혁그룹의 공통의 인식(common knowledge)이 반영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IMF는 한국의 시장주의 세력이 자신의 입장과 실천을 관철하는 데 기여했다(최영기, 2002).

셋째, 사회적 대화방식을 통해 교환의 정치방식이 이루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사회보장제도의 급속한 확충을 추진했다는 점이다. 사회적 대화방식은 김영삼 정부의 노개위와 김대중 정부의 노사정위를 통해 실현되었고, 법·제도 및 논의된 어젠다, 참여 주체 등의 측면에서 발전되었다. 하지만 민주노총의 불참과 논의 어젠다의 축소, 정부의 무관심 등은 여

55) 미국은 워싱턴을 정점으로 IMF본부, 한국에 온 협상팀과 미 재무부팀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한국과의 협상을 주도한 것은 IMF보다는 미국이었다(‘다큐멘터리 대환란’, 한국일보, 1998. 2. 5~2. 27). IMF가 요구한 조건 가운데는 IMF와 직접 관련 없는 것이 많았다. 수입선다변화제도 폐지, 무역관련 보조금 폐지, 수입승인제 폐지, 수입증명절차의 간소화가 그것이다. 또한 일본자동차 등에 대한 수입제한을 철폐해야 하고, 미국과 마찰을 야기해 온 조정관세제도의 대상 품목도 축소했다. 이 이행조건들은 IMF 협상을 기회로 미국과 일본이 포함시킨 사항이었다(삼성경제연구소, 1998: 99~100).

전혀 한국에서 사회적 대화의 취약성을 보여준다. 한편 사회적 대화는 정치적 교환을 위한 협상의 장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노동은 노동기본권의 대부분과 사회보장제도의 도입을 실현하였다.

이상에서 보듯이 정부의 4대 부문 개혁과 기업의 구조조정 및 노동시장 유연화는 대량의 실업자를 양산했을 뿐만 아니라 비정형 근로계층의 급속한 증가를 수반했다. 따라서 대량실업 사태가 일정한 정도로 해결된 1999년 하반기부터는 비정규직 문제와 소득불균등 및 고용의 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것은 노동조합의 조직 결속력과 교섭력에 기초해서 유지되어 온 대기업 노동자의 상대적 고용안정, 연공서열형 임금구조, 작업조직에서의 상대적 자율성 등이 위기를 맞이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일자리의 안정성과 임금이 어느 정도 회복된 반면 질 나쁜 일자리에 배치된 비정규직은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은 물론 사회보험과 기업복지로부터 사회적 배제를 당했다. 그 결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동자들 간의 임금격차 및 소득불균등이 증대하였다. 이처럼, 한국에서 노동시장 유연화는 주변부 노동자, 즉 비정규직에 집중적으로 나타났고 그 결과 비정규직은 정규직 절반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비정규직의 10명 중 7명이 저임금 계층이고, 이들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20%대이며,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수당 적용률은 10%대 등으로 나타났다(김유선, 2004: 169). 이처럼 노동시장 유연화는 노동시장의 분절화로 귀결되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분절화가 발생했는가? 이것을 대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여기에서 한국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찾을 수 있다.

일단,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는 한국 산업화의 불균등한 발전과정이라는 유산으로부터 유추될 수 있다. 한국의 산업화는 발전모델에 따라 이루어졌고, 발전모델은 대기업을 경제성장의 주역으로 간주했다. 그 결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내부노동시장이 발달했다. 대기업은 지속적인 성장과 이로 인한 지불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연공서열형 임금구조를 정착시켰다. 특히 대기업은 상당한 수준의 기업복지를 확립했다.

한편, 권위주의적 정부가 노동자들의 조직화를 억제하는 가운데 노동자들은 기업별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자기 조직화를 달성했다. 기업별

노조는 1987년 민주화 이후 강력한 권력에 기반하여 작업장 통제에 나섰고 기업경영자를 대상으로 조직노동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했다. 그 결과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양극화가 나타났으며, 조직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 내부노동시장은 호봉제·월급제의 확산 등이 더욱 강화되는 반면, 비정규직과 소사장제, 분사, 아웃소싱 등의 활용 증대로 2차 노동시장의 규모도 1990년대 이후 꾸준히 증대했다. 이처럼 노동시장의 분단과 양극화 경향은 한국 노사관계의 강한 기업별 특성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다(최영기·배규식, 2003: 20~21).

이처럼, 한국은 대기업노조의 보호를 받는 기업 내부노동시장은 경직된 반면 그렇지 않은 부분은 유연한 노동시장이 형성되어 왔다.⁵⁶⁾ 즉 한국의 산업화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와 기업별 노동조합을 배경으로 기업 내부노동시장과 노동시장 양극화를 유산으로 물려주었다. 따라서 정부의 유연화 노력은 사실 이 유산, 즉 내부노동시장의 경직성의 극복과 연공서열형 임금구조의 해체를 목표로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는 경제위기 이후 변화되지 않았고 결국 노동시장 유연화는 노동시장의 취약한 부분, 즉 비정규직에 집중됨으로써 분절화가 심화되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다시 강조되어야 할 것은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과 기업별 노동조합은 여전히 건재했다. 많은 기업이 퇴출되었지만 주요 대기업은 여전히 살아남았다. 소위 재벌개혁에도 불구하고 5대 재벌의 시장지배력은 오히려 심화되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시장 지배적 품목에서 5대 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7년의 41.9%에서 1999년 현재 45%

56) 따라서 위기 이전에도 한국의 노동시장은 유연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시기에는 국내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 고용의 비중이 이미 1997년 말 IMF 구제금융의 경제위기 이전에도 급격히 진행되고 있었지만 비정규직 고용이 1990년대 중반 이전까지는 주로 청소 및 경비 용역 등 주로 주변적인 업무에 한정되는 데 반해 이제는 거의 모든 직종에까지 확산되는 등 질적 변화가 수반되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났다. 특히 이 시기에는 실업과 비정규직 문제가 이슈화가 되지 않았다. 지속적인 성장에 의한 거의 완전고용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비정규직과 대기업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 간의 양극화는 크게 사회적 이목을 끌지 못했다. 이것이 본격적인 이슈가 된 것은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고 유연화 입법화로 정규직 노동자도 해고의 위협에 노출되면서부터이다.

로 3.1% 높아졌고 시장지배적 사업자에서 5대 재벌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1997년의 32.1%에서 1999년 현재 33%로 0.9% 높아졌다(손호철, 1999: 234).

한편, 대기업 노동자들의 자기조직화를 통한 저항 앞에서 기업들은 정리해고를 통한 해고보다는 명퇴 등의 방법을 사용했고, 정규직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 노동시장의 변화를 피하기보다는 비정규직과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유연화를 통해 기업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했다. 기업이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이유는 고용관계의 경직성 못지 않게 노동비용의 절감과 집단적 노사관계 관리의 용이성이 중시된다고 보아야 한다(최영기·배규식, 2003: 23). 그리고 노동조합은 산별을 향한 자기 노력을 했지만, 여전히 기업별노조 체제에 있었고 자신들의 조합원을 보호하는데 주요한 노력을 경주했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에서의 노사 간의 합의인 ‘완전고용 보장합의’는 내부노동시장에서 고용조정에 관한 규칙과 절차의 제도화라는 형식적 목적과 달리 정규직 조직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비정규직 미조직노동자의 유연적 활용이 주된 목적이었다. 즉 정규직 조직노동자가 자신의 고용안정을 위해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를 완충장치(buffer)로 이용하는 이중적·차별적 고용구조를 낳는 현상이 초래되었다.

이처럼 경제위기 이후 유연화 정치의 와중에서도 기업별 내부노동시장의 기본 구조는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지 않았다. 예컨대 연공서열형 임금결정방식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노동조합은 조직 결속력과 그것에 기초한 되찾기교섭을 통해 1998년 고용조정에서 입은 정규직 조직노동자의 경제적 손실 및 고용불안을 회복하여 내부노동시장의 안정성을 되찾았다. 한편, 사회적 대화를 통한 비정규직 보호 또한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난다. 앞서 언급했듯이, 사회적 대화는 재벌개혁, 구조조정에 대해선 개입하지 못했다. 결국 노동의 권리 부분에 집중되었는데 이것은 한국의 노사관계 현실에서 대기업 정규직의 권리를 의미했다.

더 나아가 비정규직들은 사회안전망으로부터도 크게 보호받지 못했다. 그동안 발전국가는 사회보장체제와 관련하여 자원의 분배와 생산에는 최대한 개입하면서 복지와 재분배에는 최소한 개입하는 발전주의적 노

동북지국가(the developmental workfare state)였다(신광영, 2003: 53). 이 당시 정부와 일반인들은 사회복지 마인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노동시장에서 고용 여부가 사회복지의 핵심이라고 믿고 있었다(신광영, 2003). 실제로 한국은 높은 경제성장으로 인해 1970년대 이후부터 거의 완전고용을 밀도는 저실업 시대를 경험하였다. 정부가 공적인 책임을 회피하자⁵⁷⁾ 이 의무를 가족과 기업이 떠안았다. 특히 기업이 노동자들에 대한 핵심적 복지 제공자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한국의 기업들은 사원 주택, 주택구입자금 지원, 교육비 지원, 스포츠와 건강관련 시설 등을 제공했다. 이러한 회사 복지를 제공하는 대가로 기업 경영자들은 노동자들에게 회사에 대한 충성과 회사 의식, 기업문화, 생산주의적 이데올로기의 내면화, QC(Quality Control), ZD(Zero Defect)와 같은 생산성 향상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요구했다(임혁백, 2005: 39).

이러한 상황에서 IMF는 김대중 정부 출범 초기에 경제개혁을 성공적인 달성을 위하여 사회안전망을 확충할 것을 요구했다. 세계은행도 1998년 9월 복지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요구를 제시했다. 이것은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유연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 노동시장정책의 한 부분으로서 사회복지개혁을 한국 정부에 요구한 것이었다(신광영, 2003: 65). 하지만, 사회복지에 기초가 없는 가운데 신자유주의적 이념에 기반하고 경제위기 상황에서 줄속으로 만들어진 사회복지의 잔여적인 속성을 넘어설 수 없었다.

결론적으로 유연화는 대기업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는 기존의 정규직 노동자들을 공격했다기보다는 노동시장의 가장 취약한 부분, 즉 비정규직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비정규직은 앞서 보았듯이 기업별노조의 묵인, 자신의 낮은 조직화, 사회협약의 정치의 취약성, 취약한 사회보장제도 속에서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고 있다.

57) 한국의 복지는 군인, 공무원, 교사와 같은 핵심적인 사회적·정치적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도입되었다(신광영, 2003: 59). 특히 사회복지의 적용대상을 대기업에 우선적으로 두고 점차 확대함으로써 정규직 대기업 노동자들을 우선적 대상으로 해서 실시되어 왔다.

나. 세계화 담론의 전면화

“김대중 정부의 수립으로 한국 사회는, ‘선거에 의한 야당 집권이라고 하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가장 어려운 조건을 통과’”했고(조희연, 1998: 397), 1980년대 후반부터 지속되어 왔던 ‘민주 대 반민주 구도’가 실질적으로 해체되었다(조희연, 1998: 395). 따라서 새로운 담론이 이 자리를 대신했는데, 본 글은 1990년 중반 이후 특히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주요 담론정치는 세계화 담론 대 사회공공성 담론 간의 각축 구도로 진행되었다고 본다. 세계화 담론의 주요 내용은 국가경쟁력 강화 또는 노동시장 유연화라고 할 수 있다면, 사회공공성 담론은 세계화 담론에 대한 직접적 반대를 표현하는 반신자유주의 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담론 구조는 언제 형성되었을까? 앞서 언급되었듯이, 세계화는 전두환 정권에서부터 정부 정책으로 수용되었다. 이것은 “시간적으로는 세계화가 민주화보다” 앞선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가장 급진적으로 우리 사회에 불어닥친 것은 1997년 IMF관리체제 시기”라고 할 수 있다(최장집, 2002: 164). 특히 담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내용을 갖게 된 것은 경제위기 이후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경제위기 이후 세계화 담론의 확산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공공성 담론 논의는 제 4장의 5 참조).

1987년 이후 지배담론의 변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한편으로는 이전의 근대화 담론의 변형과, 다른 한편으로는 저항담론의 선택적 포섭이라고 하는 방향으로 나타나게 된다. 전자와 관련하여서는 1960년대 이후의 근대화 담론이 세계화 담론으로 전환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1960년대 이후의 근대화 담론이 초기 산업화 단계의 지배담론이었다고 하면, 이제 ‘중진국’적 수준에 이른 단계에서의 지배담론의 글로벌라이제이션에 매개되면서 세계화 담론으로 전환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세계화 담론은 일종의 신근대화론, 신성장주의 담론이라고 할 수 있다(조희연, 2003: 83). 이것은 김영삼 정부에 있어서 경제전쟁과 한국병 담론과 함께 경쟁력 강화담론으로 나타났다. 즉 김영삼 정부까지의 세계화 담론은 “세계의 무한경쟁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

할 때, 노동의 요구는 과도한 비용의 증가를 가져오는 원인으로 비판되었고 재벌개혁의 요구는 세계시장에서 규모의 이점을 살릴 기회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거부되었다”(최장집, 2002: 172).

한편,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모토로 출범했던 김대중 정부는 “IMF측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적극 수용하면서 ‘경제위기’ 담론이 엄청난 힘을 얻었으며, ‘경제 살리기’가 최우선의 가치가 되면서 대중 동원을 비롯한 노동의 정치적 자원은 크게 약화됐다. 이같은 조건 속에서 김대중 정부는 민중블록의 요구사항을 부분적으로 수용하고, 재벌개혁을 내세워 사회세력들에게 국가 정책의 개혁성을 인식시키는 과정을 통해 노동시장 유연화를 국가 프로젝트로 전환시킬 수 있었다”(홍성구, 2004: 8~9). 이것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 “제대로 정의되지도, 정책으로 구현되지도 못한 채 수사적 담론으로 끝나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의미했다(최장집, 2002: 177).

이상에서 볼 때, 과거 근대화 담론이 반공주의를 기초로 북한과의 ‘의사 민족주의’적 경쟁의식을 활용하였다고 한다면, 세계화 담론은 국제경쟁력 강화와 같은 형태로 외부 민족과의 경쟁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하는 ‘경제적 민족주의’적 의식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지배담론의 변화 과정에서 민족주의 정서가 동원되는 방식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발독재하에서 민족주의는 반공주의적 조건에 부응하는 반복적인 의사 민족주의적 경쟁의식으로 표출되었고, 반대로 그에 저항하는 반독재 민주화운동에 의해서는 통일지향적인 진보적 민족주의 의식으로 동원화되었다고 한다면, 1987년 이후 민주화·세계화의 맥락에서는 한편에서 통일지향적 민족주의의 요구는 지배담론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포섭되면서 다른 한편에서 민족주의는 탈정치적이며 대외지향적인 경제적 민족주의의 성격으로 동원화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세계화 담론은, 한민족이 세계화와 악조건 속에서 놓여 있고, 민족적 생존을 위해서는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야 하고, 이는 최전선에 기업과 자본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잠재적 논리를 깔고 있다. 이러한 논리는 민족주의적 정서가 탈정치적인 경제적 민족주의로 활용되고 동원된다는 것을 의미한다(조희연, 2003:

85~86).

이상에서 볼 때 첫째, 세계화 담론은 “민주주의에 대한 냉소로 귀결” 되는 경향이 있다(최장집, 2002: 178). 이것은 “어떤 점에서는 과거의 반공주의-개발주의 지배담론이 지속되면서 변형”된 것으로서(조희연, 2003: 21) 지배블록 내 보수 세력과 자유주의 세력을 통합함과 동시에 진보 세력을 억압하는 담론으로 기능한다. 특히 노동시장 유연화와 경제위기를 강조함으로써 참여민주주의와 경제적 민주주의를 고려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둘째, 세계화 담론은 반복지 연대에 기반한 반복지 담론과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점이다. 세계화 담론은 시장주의와 연결됨으로써 ‘가난은 나라도 못 구한다’는 담론과 연관됨으로써 결국 이것은 빈곤이 국가 책임이 아니라 개인 책임으로 귀결시키는 경향이 있다. 또한 ‘선경제성장 후 복지’이거나 ‘파이가 있어야 나누지’라는 말과 친화성을 가짐으로써 복지담론이 언제나 발전주의 담론에 후순위로 배치되도록 한다. 이런 맥락에서 ‘영국병’, 즉 ‘복지병’은 복지담론에 대한 비판으로 자주 인용된다. 결국 세계화 담론을 기반으로 ‘한국이 복지사회로 진입하는 것을 가로막는 강고한 세력’, 즉 ‘재계, 관계,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반복지 사회에서 거대한 이득을 취하는 세력들이 연대해 ‘반복지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그렇다면 세계화 담론은 어떤 경로와 배경을 통해 사회의 지배적인 담론이 될 수 있었는가? 첫째, 경제위기로 표현되는 정치경제 상황이다. 경제위기는 세계 금융자본에 경제개혁이 종속되는 결과를 낳았고 이것은 세계화 담론이 지배적인 담론이 되도록 만들었다.

둘째는 보수언론의 절대적인 도움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다. 민주화 이후 언론은 권언유착으로 축적된 물질·인적 토대를 바탕으로 사회 의제를 설정하고 이끄는 중심에 자리하게 되었다. 그리고 서서히 언론은 스스로 권력화되었다(최민희, 2005: 223~224). 그런데 문제는 사회적 담론의 장에서 영향력 있는 일부 언론이 주도한 보수 또는 수구담론이 늘 우세했고 이것이 한국 사회의 주요 의제를 좌지우지해 결국 사회진보를 가로막아 왔다는 점에 있다(최민희, 2005: 231). 예를 들어, 언제나 마찬가지로 언론은 파업시위의 폭력적 이미지를 확대하는 데 렌즈를 고정했다.

아무리 둘러봐도 파업노동자의 요구와 속사정은 간데 없었으며, 대신 발목인 승객과 수출품, 신인도 하락에 대한 과도한 우려, 가뭄 기사가 자리를 차지했다(송호근, 2006: 230). 한편, 경제신문들은 외형상으로 국가 경제를 걱정하고 민생을 생각하는 색채로 가득차 있지만 행간을 읽어 보면, 상습적으로 되풀이되는 특유의 이데올로기를 꿰뚫어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기업과 총수 일가와 경제를 혼동하는 도식’, ‘경제정책의 주 대상인 일반 서민보다 특정 계층의 이익만을 쫓는 처방들’, ‘앞뒤가 맞지 않는 비판’, ‘경제=기업=총수 일가라는 도식’, ‘부동산 불패 신화’, ‘일관성 없는 민족주의’, ‘막무가내 감세 논리’, ‘공공부문 무력화 시도’, ‘무자비한 노동자 때리기’, ‘성장 논리에 분배는 뒷전’(미디어오늘, 2007. 12. 26).

세 번째는 저항세력과 저항담론의 약화가 지배담론의 진행을 막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세계화 담론의 저항담론으로 제시되는 “사회공공성 투쟁의 성격과 의의에 대해서는 아직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 사회공공성 투쟁이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활동임은 분명하지만 이것이 지니는 구체적 내용, 사회운동적 위상에 대한 논의는 미루어져 왔다. 현실 대중운동의 진전과 이론화 작업 사이에 ‘지체’가 엿보인다”(오건호, 2004: 96).

2. 유연성의 노동정치와 노동운동의 무기력

가. 신자유주의의 동반자 - 정리해고제의 수용

노사정위는 1997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노동계의 일정한 지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모토로 내걸었던 김대중 정부의 정체성 때문에 만들어졌다. 또한 정리해고제 등의 노동시장 유연화를 협상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데 이것은 노동의 동의가 없으면 상당한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는 판단도 노사정위 형성의 이유였다.

그렇다면 노동은 왜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했는가? 그것은 정부가 노사정위 위상을 높여 힘을 주겠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이것을 어느 정도 신

되었다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리해고제 법제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 재벌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기업이 정리해고제의 법제화에 관계없이 사실상 대량해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책없이 반대만 외치고 있을 수는 없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노동계는 노동시장 유연화 대가로 노동기본권의 획득 및 재벌개혁을 포함하는 정책 방향 및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을 하고 있었다(유범상, 2003: 136).

이러한 복합적이고 전략적인 판단 위에서 만들어진 노사정위는 사회협약을 통해 노사정 간의 노동시장 유연화를 도입하는 데 성공했다. 즉 1998년 1월 15일에 출범하여 짧은 기간(26일) 동안 집중적 협상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1998. 2. 6)을 도출하였던 제1기 노사정위원회는 노사관계개혁위원회의 3급3제 조항에 대한 교환에 이어, 또다른 교환의 노동정치와 사회적 대화를 위한 공론의 장으로 기능하였다. 노사정위원회회를 통한 정치적 교환의 주된 주체는 정부와 노동계였으며, 핵심적인 교환의 내용은 정리해고제의 2년 유예조항과 노동기본권 및 사회경제 개혁으로 집약해 볼 수 있다.

이처럼 사회협약의 목적은 경제위기 극복에 있었고, 그 핵심 의제는 1997년 노동법 개정에서 시행이 2년 유예되었던 정리해고제의 조기집행에 있었다. 노동시장 유연화의 도입을 위한 정치는 경제위기라는 구조적 조건 속에서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최초의 정권교체를 이룬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의 신정부측은 당시의 외환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IMF의 구제금융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따라서 IMF와 김영삼 정부가 체결한 “경제 구조조정 및 금융시장 개방에 관한 정책이행 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관한 항목으로서 정리해고의 제한 완화와 파견근로제의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를 서둘러 처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김대중 신정부는 사회협약을 통한 방식을 교환의 정치를 선호했다. 그것은 최초로 선거를 통해 여야 교체에 성공한 신정부가 다른 정권과 차별성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도 있었지만, 정리해고제에 대한 노동자들의 광범한 저항 심리와 노동계의 파업 위협에 대한 일련의 전략적 대응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노동계는 정리해고제의 조기 시행을 법제화하려는 신정부측의 의도를 충분히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례없는 경제위기 상황 때문에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협상에 참여하는 선택을 했다. 물론, 노사정위원회에의 협상 참여라는 노동계의 전략은 간단치 않은 조직 내부(특히 민주노총의 경우)의 논란을 거쳐 이루어졌던 것으로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의 ‘친노동자적인 정치성향’을 기대하는 노동계 지도부의 판단도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재계의 경우에는 경제위기의 원인 제공자로서 비판적인 여론의 대상이 되었던 만큼, 노사정위원회의 진행에 있어 독자적인 제 목소리를 낼 수 있기보다는 신정부측이 주도하는 협상에 자신의 이해가 대변되길 기대하는 소극적이며 피동적인 처지에 놓여 있었다.

단기간의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일괄 타결되어진 ‘사회협약’에서는 정부가 교원·공무원의 단결권 보장, 노조의 정치활동, 실업자원 확충, 의료보험 통합 및 국민연금 운영개선 등에 대한 노동계의 요구사항들을 수용하는 한편, 노동계가 정리해고제 및 파견근로제에 대한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임으로써 교환정치의 ‘빅딜(big deal)’이 이루어졌다. 정리해고제에 국한해서도 또다른 작은 교환이 성립되었는데, 정부의 핵심적인 요구사항들로서 ‘2년 유예 단서조항’이 삭제되고 ‘해고 사유로서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추가된 반면, 노동계의 입장을 일부 반영하여 ‘남녀 성차별의 금지’, ‘60일 전 사전 통보와 성실 노사협의’, ‘일정 규모의 경우 노동부에 사전신고’, ‘2년 이내 신규채용시 정리해고자의 우선고용 노력’ 등의 조항이 새로이 포함되어졌다. 이처럼, 정리해고제의 타협안은 경제위기에 강제되어진 노사정 주체들의 전략 선택에 의한 절충적 산물이었던 것이다.

사회협약의 체결 직후 민주노총 내부의 진통과 이어진 총파업의 위협이 돌출되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노동계의 투쟁 시도는 심각한 경제위기 속에서 오히려 비판적인 여론에 직면하여 무산되고 말았다. 다른 한편으로, 정리해고제 및 파견근로제는 국회로 이송되어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안에 대한 큰 이견 없이 2월 14일에 여야합의로 처리되어졌다. 그런데,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법제화가 신속히 처리되었던 2월 중순의 임시국

회에서는 ‘실업자의 초기업노조 가입’, ‘노조의 정치자금 기부 허용’ 등과 같이 노동계에게 주어지기로 되어 있던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사항들이 여야간의 입장 차이와 신정부측의 관철의지 부족으로 인해 입법되지 못함으로써 이후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공론의 노동정치에 심각한 균열을 초래하게 되었다. 실제, 2월 임시국회에서의 활동 결과는 정부에 대한 노동계의 깊은 불신을 초래하였고, 이후 1998년 6월 초부터 가동되기 시작한 제2기 노사정위원회를 통해서 정부의 합의사항 중에 이행되지 않은 것 때문에 노정간 협의에 크나큰 걸림돌이 되었을 뿐 아니라 노동계에 의한 장외투쟁의 빌미가 되었다. 이렇듯, 노사정 간의 역사적인 대타협을 통해 사회협약을 체결하였던 노사정위원회 중심의 공론적 노동정치는 붕합되기 어려운 균열의 상처를 안은 채 급속히 허구화되어졌다.

이상에서 보듯이 민주노총은 경제위기라는 구조적 상황에서 노사정위를 외면할 명분이 없었고 특히 IMF의 요구 사항 앞에서 책임있는 주체로서 행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판단은 민주노총이 정리해고제 도입의 협약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민주노총이 노동기본권과 사회안전망 등의 노동시장 유연화와 대비되는 조항들과의 교환의 성격을 띠는다고 이해했는지 몰라도 일반 국민들과 조합원들에게는 정리해고제 도입의 찬성자로 이해되었다. 특히 노동법 개정 이후 정부가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현실 앞에서 민주노총은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된 것으로 보인다.

나. 노동운동의 무기력(1) : 제도 도입

경제위기 이후 노동운동은 두 가지 차원에서 자신들의 무기력을 발견했는데, 첫째는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한 조치, 즉 실업대책, 비정규직 보호, 노동시간 단축 등의 제도 설계에서의 무기력이고, 다른 하나는 노사정위원회와 정당정치 등의 제도정치에서의 무기력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우선, 제도 도입 정치에서의 노동운동의 무기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경제위기 이후 회사의 도산과 구조조정 등으로 전례없는 실업자들이

양산되었다. IMF 이전 2%대를 유지하던 실업률이 1999년 1월에는 최고 8.5%에 이르렀다. 이후 실업률은 다시 낮아졌지만, 과거와 같은 사실상의 완전고용 상황은 종결되었다. 대폭 늘어난 비경제활동인구, 실망실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증가분, 건설일용직 실업자들을 감안한 실질 실업률이 공식 실업률의 대략 2배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한국의 노동시장이 받은 충격의 정도를 짐작할 수 있다(임영일, 2003: 41).

우선 실업정책과 관련하여 노동운동의 대응을 살펴보자. 경제위기 이후 대량으로 발생한 실업자의 생계보호를 위해 현재의 고용보험상의 실업급여가 불충분하고, 소극적인 차원의 생계보호대책이 대다수 저소득층 실업자에게는 생존의 주요한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안전망이 부실한 한국의 상황에서 우선적 관심이 실업 이후 소득보전의 효과가 있는 사업에 집중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엄규숙, 1998: 160).

대량실업 사태에 대한 정부의 실업대책은 ① 고용유지, ② 고용창출, ③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④ 실업자 생계보호의 4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정부는 1998년 총 10조 원의 예산 중 순수 실업예산으로 5조 6,000억 원을 지출하였고, 이 중 정부예산 3조 6,000억 원을 투입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실업대책은 기본적으로 신속한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고용을 창출한다는 전략에 기초한 것으로, 단기적인 실업증가를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하였고 실업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보호에 한정된 실업대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측면 때문에 실업급여, 공공근로사업, 한시적 생활보호 등 실질적 혜택의 수준과 내용이 낮아서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가 너무 넓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실업대책은 기업의 고용유지 및 해고회피 노력에 대한 지원, 부당한 정리해고에 대한 규제,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공유를 위한 정책적 노력 등 실업을 예방하기 위한 거시경제 운용이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윤진호, 1999; 임영일, 2003: 41~42).

노동조합은 한편으로는 정부의 실업대책을 이상의 차원에서 비판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독자적인 대책 마련에 부심하였다. 즉 실업자들을 조직화하거나 실업자들의 노동조합 가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전개되었다.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련의 실업자조직, 부산실직자쉼터 주도

의 실직자 거리행진모임, 민주노동당의 전신인 ‘국민승리 21’이 주축이 된 ‘실업자동맹추진운동’ 등 실업자에 대한 조직화 움직임이 이루어졌다. 특히 ‘국민승리 21’이 주도한 실업자동맹 준비모임은 주 40시간 노동제로 130만 개 일자리 창출, 실직자 직업교육기관 대폭 확충 및 프로그램의 체계화, 실업자 대표가 참여하는 범국가적 대책기구 구성, 재벌 중심 경제정책 즉각 철회 등을 주장했다(한국노동연구원, 1998: 41). 한국노총도 지역별로 실업자협의회와 같은 명칭의 실업자 조직을 구성해 구직활동을 전개하며 실업자 생활지원과 직업훈련, 일자리 창출을 정부에 촉구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임영일, 2003: 42).

한편, 노동운동은 보다 적극적으로 노동시간 단축⁵⁸⁾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를 시도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실업에 대응하기로 했다. 즉 노동계는 근로시간 단축이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일자리를 나누어서 고용을 창출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맥락에서 노동계는 임금삭감 없는 법정 근로시간 단축을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우리는 고용유지형 정책의 핵심이 노동시간 단축에 있다고 확신한다. 노동시간을 단축하면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새로이 만들 수 있다. … 노동시간 단축이야말로 고용실업문제와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입니다”(윤진호 외, 1999: 7~8)

이처럼 민주노총은 ‘민주노총 대정부 5대 요구안’에서 고용안정 방안으로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제안하고 구체적 방법으로서 ① 전 산업에 주 40시간 법정 근로시간제 실시 ② 특정 산업의 경우 주 35~38시간의 산업별 협약으로 현 수준의 고용유지 ③ 노동시간단축 특별법의 제정, 노동시간단축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양대 노총은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전 산업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임금보전을 전제로 실질적인 근로시간 단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휴가·휴일일수 조정, 생리휴가, 초과근로에 대한 임금할증률 문제를 고려해야

58) 노동운동의 역사가 곧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라고 할 정도로 노동시간 단축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이것은 성장과실의 배분이라는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고용에 초점을 둔 일자리 나누기 방식과 여가시간의 확대에 초점을 둔 삶의 질 향상의 방안 등의 적극적인 의미를 갖는다.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계는 임금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하면서 노동계의 주장을 거부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유지가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임금비용 부담을 높여 오히려 기업의 악순환을 야기시킨다고 주장했다. 재계는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될 경우에 충분한 유예 기간(2003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 10년 정도의 기간을 거쳐 12년째 마무리)을 두고 시행되어야 하며 생리휴가 폐지, 연월차 통합 및 휴일·휴가일수 단축, 초과근로에 대한 임금할증률 인하를 주장했다.

이처럼 노사는 각기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법개정 추진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자 했다.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원회 내 협상을 중심으로 협상과 투쟁을 병행해 나간다는 원칙을 세웠다. 법개정 협상이 지지부진해질 경우 단위노조의 2002년 임단협과 연계한 투쟁을 벌여나가는 한편, 선거 국면에서는 다른 정책 요구와 연결시킬 방침을 세웠다. 민주노총은 주5일제의 단계적 실시, 휴가일수 축소, 생리휴가 무급화 등 근로조건 저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한편, 개악된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될 경우 ‘중소영세 비정규 노동자 희생없는 주5일 근무제 쟁취’를 위한 총파업에 들어갈 계획을 수립했다. 반면, 경총은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금보전 문제, 휴가일수, 임금할증률 등 관련 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정토록 하는 한편, 기업의 근로시간 관리를 합리적·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활동을 강화할 계획을 세웠다.

한편, 공익위원안(2001. 8)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1년 이내로 확대하고, 초과근로 상한선과 초과근로수당 할증률은 현행대로 유지하며, 연차휴가를 1년 이상 근속자에게 18일 주고 3년당 1일씩 추가해 상한선을 22일로 설정하는 한편, 시행 일정은 2002년 7월부터 2007년 1월까지 4단계로 시행하되 중소기업 조기도입시 정부로 하여금 지원조치를 취하게 하는 등 12개 쟁점 사항에 대한 공익위원안을 마련했다. 공익위원안은 임금보전을 법 부칙에 명시하고 사용자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는 금전보상 의무를 없애고 주휴생리휴가를 무급으로

바꾸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 어젠다는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2000. 5. 17)에서 논의되었고 특위는 법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기본적인 원칙을 담은 『근로시간 단축 관련 합의문』이 노사정 합의로 채택되었다(2000. 10. 23).

하지만 이후 논의에서 구체적 시행 시기와 휴일·휴가제도 개선 등의 핵심 쟁점 항목에 대해서는 노사정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근로시간 단축특별위원회는 10가지 쟁점을 토론했다.⁵⁹⁾ 이 중 휴일·휴가일수 조정, 생리휴가, 초과근로시간 할증률, 그리고 시행 시기 등의 사항은 노사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쟁점 사항이었으며, 특히 휴일·휴가일수에 대해 경영계와 노동계의 견해차가 매우 컸다. 이처럼 양자 간의 이견으로 인해 어떤 결론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주5일 근무제가 단위사업장, 업종, 산업별 노사교섭을 통해 실시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예를 들어, 공무원의 주5일 도입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었고 일부 대기업들이 주5일제 도입을 실시할 방침인데다 금융 및 공공부문 노조들이 임금보전을 전제로 주5일제의 실시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사정 삼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협상을 재개했다. 최대 쟁점은 법정근로시간 4시간이 줄어드는 데 대한 임금보전 문제였다. 노사 양측이 임금보전 원칙에는 합의했으나 노동계는 구체적인 임금보전 방식을 법 부칙이나 노사정 합의문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계는 세부적인 내용은 개별 사업장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결국 노사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자 노사정위원회는 논의 중단을 선언했다. 결국 노동부가 그동안의 논의를 바탕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기존 노동자의 임금·근로조건을 후퇴시키고,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와 대기업 노동자 간의 양극화를 심화시킨다고 보고 정부의 입법안을 반대했다면, 경총·전경련 등 경영계 역시 정부 입법안

59) 10대 쟁점 사항은 연장근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문제, 유급주휴일, 연월차휴가, 여성보호규정, 근로시간제도 탄력화, 근로시간 단축 일정, 공공부문 근로시간, 자율적 근로시간 단축, 노사정의 역할 등이었다.

이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우리 경제여건에 비해 휴일·휴가가 지나치게 많아 폐단이 있으므로 수용할 수 없다는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하지만, 결국 이것은 노사의 비판 속에 2003년 8월에 국회를 통과했다.

한편,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해지자 노동계를 중심으로 비정규직 대책 마련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었고, 언론·시민단체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한국노총(2000. 7), 민주노총(2000. 10), 여성단체연합(2000. 9), 비정규직 공대위(2000. 10)에서 비정규직 보호입법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노사정위원회는 비정규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논의를 시작하였다(노사정위, 2003. 10).

노사정위 논의 이전에 이미 노동부는 2000년 10월 5일 ‘비정형근로자 대책방안’이라는 문건을 발표하고 대책 마련을 검토했으나, 당시 노사 양측으로부터 이 정부안은 많은 비판을 받고 그 시행을 유보한 상태였다. 비정규특위는 노사간의 큰 입장 차이로 인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노사정위원회는 2003년 7월 25일 개최된 본위원회에 그간의 논의 경과와 함께 노사의 입장 및 공익위원안을 첨부하여 정부에 이송하고 사실상 논의를 종결하였다. 환노위에 넘어간 비정규직 법안은 계속 처리가 유보되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법안의 노사정 교섭방침을 결정하면서(2005. 3. 17)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민주노총을 포함하여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와 국회-노사정 간의 실무협상을 수차례 진행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5년 11월 말, 한국노총 수정안(한국노총 최종안)이 제시되었다. 이것은 민주노총이 그동안 강력하게 반대해 온 사유제한 도입을 포기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한국노총이 이 타협안을 제시한 것은 사유제한 도입과 관련된 정부여당의 논리에 동의해서가 아니라 현재의 계급지형이나 정치지형을 볼 때 사유제한 도입이 조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어려우며 이러한 입장을 고수하는 한 그동안의 투쟁 성과를 입법화하는 것이 한없이 미루어질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 때문이었다. 특히 자본진영이 비정규 입법에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상황에서 그동안의 투쟁성과를 일단락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측의 정치적 결단과 승부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었다”(장대익,

2006: 35).

한국노총의 수정안을 토대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졌지만 핵심 쟁점에 대해선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006년 사학법 대치정국으로 상당 기간 논의조차 되지 못했던 비정규직 법안은 2월 국회가 정상화되면서 2월 7일 두 달 만에 소위에서 논의가 재개되었다. 그러나 소위는 민노당 의원들의 계속된 회의장 점거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채 17일 법안을 전체회의로 회부했고 20일 전체회의도 민노당 저지로 무산되자 한나라당 소속의 이경재(李敬在) 위원장은 “2월 국회에 처리하기 위해 물리적 방해가 계속되면 국회법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민노당에 최후 통첩을 보내기도 했다. 결국 2006년 2월 27일 비정규직 법안은 상임위를 통과했다. 즉 2월 국회 내 처리를 주장해 온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노동계의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민주노동당을 따돌리고 국회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서 일사천리로 법안을 처리해서 법사위로 넘겼다.

한편, 한나라당은 2006년 4월 10일 “비정규직 법안에 관한 한나라당의 입장은 환경노동위원회 통과 법안의 내용 중 2가지 사항을 수정해 처리하도록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2가지 사항이란 비정규직 법안 중 하나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내용에서 불법파견과 관련된 내용이다. 진수희 공보부 대표는 “먼저 불법파견 적발시 2년 후 부과하는 ‘고용의무’를 ‘즉시 고용의무’로 바꾸고, 다음으로 비정규직을 합법적으로 파견했을 경우 2년 후 부과하는 ‘고용의무’를 ‘고용의제’로 수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의 입장은 이제 비정규직 법안과 관련해 열린우리당과 한국노총의 입장이 거의 동일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나라당이 이날 밝힌 내용은 이미 지난 2월 국회에서 열린우리당이 제안한 내용이고, 이보다 앞서 지난해 11월 한국노총이 내놓은 ‘최종 수정안’의 내용과 같기 때문이다.

한편, 기간제근로 사용에 있어 ‘사유제한 도입’ 규정 도입을 주장하며 비정규직 법안 처리를 반대하고 있는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은 한나라당의 발표에 대해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하게 됐다. 이에 민주노총은 2006년 4월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비정규법안 강행처리 저지, 로드맵 폐기, 무상교육·무상의료 쟁취, 한미 FTA 협상 중단을 걸고 오늘부터

14일까지 연맹별 순환 파업의 날을 선포한다”며 “연맹 특성별 실천으로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투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부터 14일까지 금속연맹 13만 명 4시간 부분파업을 포함해 부분파업, 총회 투쟁, 확대간부파업 등 16만여 명이 파업에 참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계속 유보되었다. 이 과정에서 열린우리당은 2006년 2월 국회 처리를 위해 민주노동당에 대해 한국노총 최종 타협안에서 한 걸음 나아간 안(불법파견 적발 시 즉시 고용의무 안에서 즉시 고용의제 안으로)을 제시했으나 민주노동당은 사유제한 도입을 채차 요구하며 이를 거부했고, 그러자 열린우리당은 한국노총 최종 타협안에서 후퇴된 안(불법파견 적발 시 ‘2년 후 고용의무’와 합법파견도 고용의무)을 제시했던 한나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비정규 법안을 통과시키고자 했다(장대익, 2006: 35~36). 결국 시행 시기를 2007년 7월 1일로 조정(차별관련 규정은 단계적으로 시행)된 비정규직 법안은 의장직권 상정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2006. 11. 30).

이상에서 보듯이 노동운동은 “신자유주의적 시장만능주의의 논리를 등에 업고 IMF가 요구하는 구조조정이 고용조정 부분에 집중되어 수량적 유연화만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최선책인 듯 지금까지의 구조조정” 앞에서 “한편으로는 최근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부분퇴직 등 노동조건을 변화한 경제상황에 적응시키려는 노력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취업구조의 변화로 인한 조직력과 조직률 감소의 극복방안”을 모색해 왔다(엄규숙, 1998: 157).

하지만, 노동조합은 정책 논의에 참여하고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어려움과 무력감을 느꼈다. 즉 노동운동은 “시장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새로운 제도 설계(institution building) 과정에 적절히 개입하지 못하고 있다”(최영기, 2001: 48~49).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가?

그것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노동조합을 정책협의와 결정 과정에서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지 않은 것에 기본적인 문제가 있기도 했지만, 노동조합 자체에도 문제가 있었다.

우선 노동조합이 제기한 구호, 즉 목표와 현실과의 괴리가 지적되어야

한다. 특히 민주노총의 경우, 구호로서 ‘비정규 철폐’를 외쳤던 노동계가 비정규직을 인정한 가운데 보호 방안을 논의해야 하는 데에서 오는 괴리가 있었고, 설사 비정규직 존재의 불가피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사유제한’ 원칙만 내세운 채 그 이외 논의 사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고민을 하지 않았던 측면에 존재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디까지가 양보 또는 관철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략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보다 근본적으로 그동안 노동운동은 “대체로 임금인상과 근로조건 개선이라고 하는 경제적 사안에 국한”해서 기업 내 노동조합 정치를 전개해 온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한국의 노동운동은 “총자본(capital in general) 수준에서 발생한 축적 위기, 그리고 민영화, 대량실업, 구조조정, 노동시장 유연화 등 노동시장 구조의 전면적인 개편 문제에 대하여 정치적·사회적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거나 개입할 역량을 발휘할 수 없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러한 한계를 절감하고 노동운동의 이념적·정치적·정책적·실천적 지향을 새로 정립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그 결과는 별로 성과적이지 못했다”(임영일, 2003: 46). 다시 말해 그동안 단위노조의 정책 활동은 조사사업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사업으로 이루어졌는데, 조사사업의 내용은 조합원의 임금 및 노동조건, 생활 및 의식상태 그리고 동종 다른 사업장과의 근로조건 비교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정책연구사업은 최근 들어 일부 대기업 노조에서 이루어진 바 있다. 그러나 조사사업은 임단투시에 요구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행해졌을 뿐, 노동운동의 중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사업으로 발전되지는 못했다. 또한 연구사업은 자본측의 경영전략의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외부 연구단체에 용역을 주는 방식으로 추진되었으나 그 내용은 실천적인 대안보다 문제 제기 수준에 그치는 특징을 나타냈다. 이러한 한계는 기업별노조 체계가 지속되는 한 불가피하게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기업별노조 체계의 경우 기업단위 노조가 임단투를 활동의 중심에 두지 않을 수 없고 정책활동을 위한 역량도 충분하게 갖추기가 어렵기 때문이다(이원보, 1998: 182).

다. 노동운동의 무기력(2) : 제도정치

노동조합은 정당정치와 사회적 협의기구에 참여함으로써 제도정치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 왔다. 노사정위가 사회적 협의의 대표적인 기구라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서 시도된 정치 정당 건설은 정치 영역에서의 제도정치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여기에서 ‘제도정치’는 제도권 내에서의 거시정치를 의미하는데, 그것은 거시노사 차원에서의 사회적 협의의 정치와 국가정치 차원에서의 정당정치를 핵심 요소로 하고 있다(이하 유범상, 2005 참조).

우선 노사정위의 경우 김대중 정부의 전 기간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적 협의기구이다. 노사정위는 대체적으로 세 시기로 구분하는데, 제1기는 노사정 및 정당이 참여한 가운데 1998년 1월 5일부터 1998년 2월 9일까지 가동되었고 최초의 사회협약을 도출하였다. 제2기는 1998년 6월 3일부터 주로 사회협약의 이행과 구조조정 협의를 목표로 시작되었으며 1999년 초 노동계와 경영계가 탈퇴할 때까지 진행되었다. 제3기는 노사정위의 법제화에 따라 1999년 9월에 만들어져 현재까지 가동되고 있다(최영기·유범상, 2001: 68 참조).

〈표 3-3〉 노사정위원회 전개 과정과 특징

	제1기	제2기	제3기
성 격	정치적 협의기구, 상설	대통령 자문기구, 상설 사회적 협의기구(대통령령에 설치 근거)	대통령 자문기구, 상설 사회적 협의기구(법률에 설치 근거)
참 여 자	노사정 및 정당	노사정공익 및 정당	노사정공익 * 민주노총 불참
활동기간	약 1개월 (1998. 1. 15~2. 9)	1년 3개월 (1998. 6. 3~1999. 8. 31)	약 3년(1999. 9. 1~ 2002)
조직체계	본위원회-기초위원회-전문위원회	본위원회-상무위원회-3개 특별위원회·4개 소위원회	본위원회-상무위원회-4개 특별위원회·2개 소위원회
주요의제	노동시장 유연성, 노동기본권, 사회정책, 재벌개혁	구조조정, 사회정책, 노동기본권	구조조정, 사회정책, 근로시간단축, 노사관계제도 개선
합의건수	90	10	29

주: 2002년 12월 말 기준

출처: 노사정위원회(2003), p.7, 11 참조; 유범상(2003b), p.28.

그렇다면 한 정권에서 법적 위상, 참여 주체, 정치적 의제 등이 다른 3개의 노사정위가 시계열적으로 존재한 이유는 무엇일까? 세 시기의 노사정위는 행위자들간의 권력 및 전략 관계에 따른 전략적 선택의 불가피한 정치적 결과물이다. 노사정위 제1기는 사회협약 이후 민주노총의 사회협약안 거부로 더 이상 존립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제2기는 노동을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정부가 법적 위상을 강화하고 노동이 요구하는 정치적 의제를 수용하면서 제1기와 차별성이 생긴 것이다. 제3기는 제2기의 ‘난파’ 이후 정부의 ‘재건’ 노력으로 생겨난 것이다. 즉 1998년을 전후해서 노동과 경영계가 노사정위를 모두 떠나자, 정부는 법적 위상을 보다 강화하고 논쟁적 의제를 다룰 것이라고 약속하면서 제3기 노사정위를 만들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끝내 불참했다.

이처럼 민주노총은 제2기에서 노사정위를 떠난 이후 현재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는 반면, 한국노총은 현재까지 노사정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이것은 노사정위를 둘러싼 양대 노총의 상이한 입장, 전략, 이해관계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상대적으로 노사정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한국노총은 “노사정위를 개혁의 주체로서 국민적 기구로 확립시킬 필요가 있으며 한국노총의 조직 쇄신과 인적자원의 보강을 통해서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제1기 노사정위 파행 이후 한국노총은 노사정위를 이룬 시일 안에 대통령 직속기구로 상설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청와대와 국회, 각 정당에 제출했다(1998. 3. 10). 한국노총은 자신들의 위상을 “균형추, 체제의 안전판”으로 규정짓고 “양대 노총이 존재하는 상황하에서는 민주노총과의 관계에서 지렛대 역할”로 힘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한국노총은 자신들의 힘의 근원이 “온건합리적 요구와 투쟁방식을 견지함으로써 획득한 균형성(즉, 국민경제의 발전과 노동운동, 국민적 이해와 노동자의 이익을 조화시키는 노동운동), 한국 사회 좌우익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힘, 그리고 이에 기초한 국민적 지지에서 나온다”고 분석했다(한국노총, 『정세전망과 정책과제』, 1999: 191~192). 이것은 한국노총이 민주노총에 비해 현장 장악력과 동원 능력이 부족한 권력자원의 조건, 참여를 통한 실질적 조합주의의 표방 등의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

노총은 제2기까지 제1기 노사정위의 사회협약 이행을 요구하며 노사정위 참여를 거부 또는 유보했지만 한편으로는 정부와의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하지만, 제2기 탈퇴 이후부터는 노사정위 참여에 대한 논의조차도 하지 않았다. 이것은 한국노총과 다른 민주노총의 역사성, 현장동력, 정부에 대한 불신 등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한다. 하지만 민주노총 지도부의 정치적 리더십 부재도 중요한 요인이었음이 지적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민주노총 지도부는 사회협약의 불가피성과 이득을 자신의 조합원들에게 설득시키지 못했고, 결국 사회협약안과 지도부는 조합원들로부터 거부되었던 경험을 갖고 있다.

노사정위에서의 ‘사회적 합의의 정치’는 민주노총과 정부 간의 관계를 통해서 볼 때 제1기 사회협약, 제2기 불안정한 동거, 제3기 완전 결별의 양태로 바뀌어 갔다. 이것은 한국노총이 대체적으로 노사정위를 지켰다는 점에서 볼 때 민주노총과 정부의 대결의 정치와 한국노총과 정부의 ‘사회적 합의의 정치’가 노동정치를 규정하는 틀로 자리잡아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두 개의 전략 관계는 양대 노총 사이를 ‘어색’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보다 큰 문제는 이러한 전략 관계와 현상이 ‘사회적 합의의 정치’와 공론장을 역기능적으로 만들었다는 데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의 정치’를 하면 할수록 상호이해와 소통이 증진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신과 분노가 심화되고 고착화되는 기현상이 나타났다. 민주노총은 ‘사회적 합의의 정치’ 참여를 ‘들러리’ 서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노사정위에 참여한 한국노총에 비판적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노총은 어떤 결정을 내릴 때마다 그 판단을 제약당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노사정위를 대신할 다른 노정 협상의 틀을 요구했는데, 정부는 이것을 수용할 수 없었다. 그렇게 될 경우 노사정위에 남은 한국노총과 경총으로부터 비판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점에서 노사정위가 노사관계 관리의 기구라고 생각한 측면도 있다. 정부는 민주노총이 대화하기를 청할 때마다 ‘노사정위로 오라’고 반복하기만 하면 되었다. 또한 노사정위로 인한 노동계의 분열은 정부 내 강경 세력에게 있어 그다지 나쁘지 않은 현상이었을 것이다.

민주노총의 사회적 합의의 틀에 불참한 이유는 노사정위에서 논의된

사회정책 의제를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다.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노사정위 제1기의 사회협약은 노동계에게 불리한 것만은 아니었다. 노동기본권 및 사회보장 조항들은 노동계가 그동안 주장해 온 대부분의 것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하지만 노동시장 유연화 관련 법제가 도입된 제1기 노사정위 이후 제2기로 가면서 사회적 합의의 폭은 축소되었다. 제2기 노사정위는 위원회 구성으로 볼 때 구조조정과 사회정책 전반을 포괄하고 있었다. 소위원회는 사회보장, 고용실업대책, 노사관계, 경제개혁 등의 4개 소위원회로 구성되었고, 특별위원회는 공공부문구조조정특별위원회, 부당노동행위특별위원회, 금융산업발전대책위원회로 구성되었다. 소위 구성과 논의 메뉴로 볼 때 노동계가 요구한 대부분의 것이 반영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정책 의제들은 논의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논의되거나 합의되었다 하더라도 정치권과 정부에 의해 굴절되었다.

제3기 노사정위는 구조조정과 노사관계 제도개선 문제로 국한되었다. 이 시기에는 금융 대타협, 체신부분 인력감축 합의, 노조전임자 및 복수노조 유예안 합의, 단체협약 실효성 방안 마련 등의 성과가 도출되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제3기 노사정위에서는 사회정책보다는 노사관계 제도개선 의제로 논의 범위가 축소되었다.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 문제, 비정규직 문제 등에서 보듯이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합의안을 만들어내는 데 실패했다. 한편 제3기 노사정위가 진전되면서 점차 노사관계 쟁점이 노사정위의 틀 내에서 해소되지 못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노사정위는 대체적으로 재벌개혁과 구조조정 문제에 관한 한, 철저하게 소외되었다고 볼 수 있다. 재벌개혁의 경우 실제 정책결정은 정재계 간담회에서 결정되었고 그것의 집행은 비상대책위원회나 금융감독위원회, 재정경제원에서 진행되었다. 따라서 노사정위는 정부와 재벌 간의 결정을 추인하는 역할에 만족해야 했다. 이러한 추인의 형식적 절차조차도 사회협약 이후 생략되었다. 금융과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현상이 나타났다. 이런 입장은 노사정위 제2기와 제3기에도 그대로 견지되었고 오히려 심화되었다. 구조조정을 둘러싼 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제2기 노사정위에서 노동계가 불참과 참여를 반복하는 원인을

제공했고, 결국 제3기에서 민주노총이 탈퇴하는 핵심적인 원인이 되었다.

한편, 2004년 민주노총 제4기 이수호 집행부는 선거 당시부터 노사정 위원회 참여를 선언하고 당선되었고, 이러한 선거 결과는 사회적 대화 노선이 조합원 다수의 지지를 받았음을 의미했다. 민주노총 제4기 지도부는 사회적 교섭과 노사정위 복귀를 주장하면서 전술적 참가, 교섭과 투쟁의 병행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제4기 집행부는 노사정위원회 복원을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소집하면서 다시 논란이 재개되었다. 이수호 집행부는 사회적 교섭을 명분으로 2005년 다시 노사정위원회에 참여를 시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내부의 저항과 대의원대회에서의 충돌로 사실상 사회적 대화 노선은 심각한 내적 균열만을 초래한 채 종결되었다(배규식 외, 2008: 245).

이상에서 보듯이 노동운동은 사회적 협의를 둘러싸고 오히려 분단되었고 불신이 증폭되었다. 그것은 노동운동 조직간의 차이에서도 기인하지만, 노사정위 자체의 한계에서도 기인한다. 즉 정부는 노사정위를 통해 노동운동이 다룰 수 있는 어젠다의 범위를 제한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사회적 협의기구의 제도화는 오히려 불신의 제도화와 같다.

정당정치와 관련하여 볼 때, 1987년 이후 한국의 노동운동은 독자적인 노동자계급정당을 통한 정치세력화를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해 왔는데, 그것은 민주노총 총파업을 거치면서 그 필요성이 노동운동 리더들에게 더욱 각인되었고 그 결과 1997년 말 ‘국민승리 21’을 급조하여 대통령 선거에 참여함으로써 실현되었다. ‘국민승리 21’은 민주노총이 대의원 대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승인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지식인과 활동가 중심의 진보정당과는 확연한 차이를 갖고 있었다.

민주노총은 물론 진보진영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출범했던 ‘국민승리 21’의 1997년 대통령 선거 참여는 ‘의미있는 득표’로 잡았던 250만 표(10%)에 크게 못 미치는 30여만 표(1.2%)를 받음으로써 실패한 것처럼 보였다. 민주노총과 같은 대중조직이 공식적으로 지원했고, 80여 개 지부, 220개 선거연락사무소, 700여 명의 상근자, 1,500여 명에 달하는 자원봉사자 및 4만여 명의 회원을 두었던 국민승리 21의 활동 결과로서는 너무나 비참한 결과가 아닐 수 없었다(김세균, 2001: 10; 김석준, 2003

참조). 하지만 국민승리 21은 민주노총의 임시대의원대회의 결정(1998. 5. 20)으로 기사화생활 수 있었다. 민주노총 제2기 집행부가 “국민승리 21을 확대개편하여 노동자 중심의 진보정당을 건설하기 위해 적극 지원 연대한다”라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노총 제1기 집행부가 국민과였다는 점에서 진보정당 건설에 적극적인 것은 이해가 가지만, 현장과 집행부인 제2기 집행부가 제1기의 정치세력화 방침을 수용하고 국민승리 21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이것은 제2기 집행부가 민주노총 내부의 정당건설운동 흐름을 거부할 수 없었기 때문이며 이 공간을 노동자계급 조직화의 전술적 활용 단위로도 생각했기 때문이다. 보다 근본적으로 민주노총 내부의 역학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민주노총의 집행부를 좌파가 장악해도 대중조직, 예를 들면 대의원대회와 중앙위원회, 그리고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다수를 차지하지 않으면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기가 쉽지 않다. 여기에서 대의원대회(이하 대대)와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가 중요한데, 특히 임원, 실장, 지역본부장, 산별연맹 위원장 등이 주요 구성원인 중집은 민주노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좌파들은 대체적으로 대대를 확고하게 장악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중집에서도 힘의 확실한 열세에 있었다. 중집에 참여한 연맹대표자들은 국민과적 성향의 위원들이 대부분이었고, 금속연맹과 지역본부 정도에서 현장파를 지지하는 경향이 있었다.

중앙파인 제3기 집행부는 민노당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졌다. 이 시기에 민노당은 세 번의 선거(2000년 4·13 총선, 2002년에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치렀는데, 민주노총은 이에 대한 물질·인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민주노총 방침의 이면에는 정치세력화에 대한 민주노총의 열망뿐만 아니라 중앙파의 적극적인 의지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중앙파는 현장파와는 달리 합법적 대중정당 건설에 가장 적극적인 행위자였고 최고의 공로자로 평가되었다. 중앙파는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방침과 정치세력화 방침에서 국민과와 현장파 사이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노사정위 참여 문제는 현장파에 가깝고 합법정당 건설은 국민과에 가깝다. 이러한 점에서 중앙파 노선은 향후 자기 정체성

에 대한 정립이 요구될 운명을 갖고 있었다. 특히 이 시기에 대통령선거가 있었는데, 민주노총은 16대 대선 전략으로 민노당 후보 지지 계급투표 조직, 조합원 1인 1,000원 모금운동, 하반기 대중투쟁과 선거운동 결합 등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11월에 진행된 3대 악법저지 총파업투쟁과 민주연대투쟁으로 민주노총의 본격적인 대선 활동은 11월 10일 전국노동자대회 이후에야 진행되었다. 제4기 집행부로 다시 복귀한 국민과는 보다 적극적으로 민노당을 지원했다. 그 결과 민주노총 제4기는 정치세력화에 있어서도 10명의 민노당 국회의원이 의회에 진출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

한편, 국민승리 21은 이후 진보진영의 정치세력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그리고 ‘국민승리 21’은 원래의 방침대로 1998년 6·4 지방선거에 참여하였다. 여기에서 민주노총은 무소속 후보(실제로는 민주노총/국민승리 21 후보)로 자신들의 후보를 대거 출마시켰다.

선거 결과는 민주노총·국민승리 21 공동후보로 모두 49명이 출마하여 23명이 당선됨으로써 46.9%의 당선율을 보였다. 당선자에는 울산의 북구청장과 동구청장, 그리고 경남 남해군수 등 기초단체장 3명, 울산 시의원 등 광역의원 2명, 대전 유성구의원 등 기초의원 17명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울산 지역에서는 기초단체장을 2명이나 당선시켰을 뿐만 아니라 울산 민주노총이 지지한 송철호 광역단체장 후보가 현대그룹 등 기업층이 지지한 한나라당의 심완구 후보와 막판까지 박빙의 승부를 겨루는 패거리를 기록하였다(정영태, 1999b 참조).

비록 2000년 총선에서 전국 평균 1.2%의 정당 득표율을 기록하였지만 출마 지역에선 평균 13.1%의 득표율을 기록하였고, 특히 울산·창원 등의 지역에선 40%에 가까운 득표율을 보임으로써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2002년도엔 양대 선거, 즉 6월 지방선거와 12월 대통령선거가 있었다. 민노당은 2002년 양대 선거, 즉 지자체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의 선전을 통해 당의 과도기적 상황을 극복하고 2004년까지 150개 이상의 지구당 건설을 목표로 하였다. 특히 6·13 지자체선거는 선거 사상 처음으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실시되어 민노당의 경우 유리한 조건에 놓여 있

었다.

지방선거의 경우 한나라당 압승, 민주당 참패, 민노당 약진, 자민련 몰락으로 나타났다. 민노당은 7군데에서 광역단체장 후보를 내어 전국적으로 4.7%의 지지율을 확보했다. 또 광역의회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 지지율에서 8.1%를 얻어 6.5%의 자민련을 제치고 한나라당, 민주당에 이어 제3당으로 떠올랐다. 그 결과 민노당은 전국적으로 9명의 광역의회 비례대표를 배출했고, 사상 처음으로 국고보조금을 받게 됐다. 한편, 제 16대 대선을 맞아 민노당은 임시당대회(2002. 9. 8)에서 대선 목표로 100만 표 이상의 득표를 내세웠다. 그리고 권영길 대표를 대통령 후보로 선출하고 본격적인 대선 활동에 들어갔다. 한편, 민주노총은 중앙위원회(7차 2002. 10. 11)에서 대선 정치방침을 확정하였다. 결과는 민노당 권영길 후보가 957,148표(3.9%)의 득표로 나타났다. 민노당은 6·13 지방선거에 이어 16대 대선을 거치면서 명실상부한 대중정치세력으로 입지를 확고히 다졌다.

2004년 17대 4·15 총선에서 민노당은 지방선거에 이어 원내 제3당으로 중앙무대에 화려하게 데뷔했다. 지역구 총 출마자수는 123명이었으며 당선자는 2명이었다. 지역구 2명은 울산과 창원이었다. 그런데 정당투표에서 총득표수는 2,774,061표로 13%를 획득하였으며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 의해 8명의 비례대표의원이 배정됨으로써 총 10명의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이 되었다. 민노당의 제도권 진입은 한국의 정치사에서 놀라운 사실인 것만은 틀림없다: “2004년 4·15 총선은 한국 의회정치사에서 혁명이었다. 그동안 국회는 극우반공주의자 또는 수구냉전세력이 주류였는데, 4·15 선거를 통해 처음으로 탈냉전적 의회민주주의자 또는 중도적 정치세력이 의회 다수파가 되었다는 것은 획기적인 사건임에 틀림없다. … 한국도 이제는 혁명적 사태가 벌어지는 것 없이 혁명적 변화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4·15 총선은 보여주었다”(서중석, 2004: 20, 21).

한편, 한국노총의 정치활동은 전통적으로 정책 건의나 청원활동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자신들의 이익을 정치권으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었는데, 이것은 정부·여당을 전폭적으로 지지함으로써 그 대가를 보상받거나, 한국노총 출신의 국회의원을 매개

로 자신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런 전통적인 정치활동 전략은 민주화운동 이후 한국노총이 자주성과 민주성을 천명하면서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다. 이것은 더 이상 정부가 한국노총의 전적인 후견자가 될 수 없는 정치적 상황과 정부 후견을 받는 노동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외면당하는 내부 정치상황에 따른 것이었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은 첫째, 정부 여당으로부터 독자적 정치활동을 구상하려 했고, 각 선거에서 노동계 후보나 친노동자 후보를 지지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노동악법의 철폐 및 정치적 진출을 위한 교두보 마련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이러한 단기적 성과를 토대로 노동자정당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이러한 계획은 보다 구체화되었는데, 그것은 1997년 6월에 ‘지역할거주의 정치 타파와 노동자 정치세력화 원년’을 목표로 내건 문건, 즉 ‘희망의 21세기를 한국노총과 더불어’에서 구체화되었다. 이 계획에 따르면 1997년 대선에서는 친노동자적 후보와의 정책 연합을 실현하고, 2000년 총선에서 노동계 및 친노동계 의원을 원내 교섭단체 규모인 20명 정도 확보하며, 2002년 대선에서는 친노동자정당과의 제휴를 통해 정권에 참여하고, 2004년 총선에서는 그때까지 축적된 노동계 정치인과 국가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노동자와 국민대중의 독자정당’을 공식적으로 출범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이러한 한국노총의 계획은 실제로 이행되었는데, 문제는 자신들이 의도한 대로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 있었다. 우선, 1997년 친노동자 후보와 정책연합을 실천하였다. 비록 내부 조직의 결의에 의한 지지의 형태를 취하지는 않았지만 한국노총이 최초로 야당 후보를 정책연합으로 선택했다는 점과 이 모험이 야당 후보인 김대중 후보의 당선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것이었다. 당과의 정책연합이 한국노총 정치세력화의 첫 번째 신대륙이었다면 두 번째는 독자적인 정당 건설에 있었다. 후자는 2000년대 한국노총 정치세력화의 최대 화두였다. 한국노총은 2002년 대선을 앞두고 상층 간부를 중심으로 민주사회당을 결성했고 이것은 곧 사회민주당, 녹색사민당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총선에서 득표율이 0.5%에 그침으로써 정당은 자진 해산하고 한국노총 지도부는 총사퇴

하는 비운을 맞게 되었다. 이처럼 2004년 총선에서 ‘녹색사민당’ 창당을 통한 독자정당 건설 또는 독자적인 정치세력화 시도가 참패로 끝난 이후 한국노총은 지도부의 사퇴 등 적지 않은 조직적 진통을 겪었다. 특히 민주노동당이 지역구 2석을 포함해 총 10석을 획득했다는 것은 한국노총의 정치적 실패를 더욱 두드러져 보이게 했다.

한편 노무현 정부 들어서 한국노총은 정치세력화에 위기를 맞고 있는 듯이 보인다. 국회 내에 여야 정당을 떠나 한국노총의 조직적 입장을 말 그대로 조직적으로, 끝까지 대변해 줄 수 있는 국회의원이 거의 없다는 점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이번 17대 국회 이전에 기존 여야 정당에 지역구 공천 또는 비례대표로 몇 명의 국회의원을 포진시킬 수 있었다. 김대중 정부 시절이었던 지난 16대 국회에서는 박인상 전 한국노총 위원장(비례), 조성준 전 홍보실장(지역구), 조한천 전 정책본부장(지역구) 등 3인이 여당 소속의 국회의원으로 있었고 김락기 전 연합노련 위원장(비례)이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있었다. 이 숫자가 결코 많은 것은 아니었지만 한국노총이 국회에서 자신의 조직적 현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 교두보로서의 의미는 결코 작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17대 국회에서는, 금융노조 출신의 김영주 의원(열린우리당) 정도를 제외하고는 한국노총 출신이거나 한국노총과 조직적 연계를 갖고 있는 국회의원 이 없다(장대익, 2006: 36).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노총은 2005년 말 정치기획단을 구성했다. 이 기획단은 노총 중앙간부와 함께 각 산별 조직 및 지역본부에서 실무 책임자들이 1인씩 참가하는 형태로 구성되었다. 이 정치기획단은 말 그대로 기획 단위이다. 이 기획단에서는 한국노총의 정치방침 수립과 관련된 제반 주객관적 상황을 분석하고 채택 가능한 복수의 정치방침 안과 함께 로드맵을 작성해 산별 및 지역본부 대표자들로 구성된 중앙정치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장대익, 2006: 34).

현재 한국노총의 핵심적 고민은 이미 ‘노동자정당’이 의회에 진출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강화할 것인가에 있다. 한국노총이 택할 수 있는 정치활동은 민주노동당과는 별개의 정당(노동자정당, 계급연합정당, 또는 국민정당)을 건설하는 방안, 민주노동당을 비롯

한 기존 정당과의 정책연합, 선거정치는 포기하고 대신 입법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하는 방안 등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어느 길을 택하든 쉽게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물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노총의 딜레마가 있다(정영태, 2006: 61).

3. 리더십 위기의 징후들 : 거부, 비리, 균열, 경쟁, 단절

가. 거부 : 리더십의 훼손

여기에서는 노동운동 리더들이 사용자 또는 정부를 상대로 한 합의가 기층 조합원들에 의해 거부됨으로써 지도부가 총사퇴한 사례, 즉 사회협약안과 발전노조 파업 합의안의 부결 사례를 노동운동 지도부의 리더십 위기의 징후로 보고 이 사건을 서술하고자 한다.

제1기 노사정위원회에서 만들어진 사회협약에 대해 민주노총 산하 단위노조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제8차 임시대의원대회(1998. 2. 9)를 개최하여 잠정 합의된 노사정 협약을 놓고 6시간 동안 격론을 벌인 끝에 기립 표결을 실시했다. 협약안은 찬성 88표, 반대 184표의 표결 결과에 따라 민주노총 조합원들에 의해 거부되었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노사정위 협상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고, 즉각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단병호 금속산업연맹 위원장을 비대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비대위는 “2·6 사회협약안은 재벌총수 퇴진 및 사재 헌납, 노동자 경영참가법 제정 등 노동자의 요구를 저버리고 형식적인 재벌개혁안만을 담고 있고, 또 대량실업을 야기하는 정리해고를 법제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1996년 말 날치기 노동법과 다름 없는 ‘인수·합병·양도’ 시까지 정리해고를 무제한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매일노동뉴스>, 1998. 2. 11). 그리고 민주노총은 “정리해고 법제화 반대를 전제로 재교섭을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노사정위 불참을 선언한다. 총파업 투쟁의 일정과 계획은 비대위에 위임한다. 국회 강행처리 시 즉각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원칙을 확인했다(민주노총, 1999: 123).

정부는 민주노총의 파업 선언에 대해 강경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2월

12일 통상산업부, 노동부, 경찰청 등 7개 유관기관 책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노사분규 수사지도협의회」에서 13일로 예정된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검찰은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국회의 입법행위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전형적인 불법파업”이라며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파업 주도자들을 조속히 검거하고 과격시위 가담자들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동아, 1998. 2. 14).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총파업 계획을 철회했다. 철회 근거는 첫째, 경제위기 속에서 총파업은 여론적으로 불리하고, 둘째, 조직 내 갈등이 증폭되었고, 셋째, 투쟁 동력이 부재했기 때문이었다(민주노총, 1999. 2: 155). 민주노총 단병호 비대위원장은 “파업 철회가 곧 노사정 합의안을 인정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만일 임시국회에서 노사정 합의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총력투쟁에 나서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파업철회 조건으로 내건 재벌체제의 근본적 개혁, 노동자 경영참가법 제정, 고용안정기금 10조원 확보, 국제기준에 맞는 노동기본권 보장 등 요구 사항의 이행을 정부와 재계에 재촉했다.

이상에서 보듯이 민주노총은 제1기 노사정위 과정에서 조합원들에 대한 리더십의 부재를 그대로 표출했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정리해고제 문제로 과잉 정치화되어 있던 조합원들을 설득하지 못한 채 안이하게 표결함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리더십에 상처를 입었다. 또한 강경파와 온건파 간의 내부 갈등을 봉합하지 못함으로써 정치력과 신뢰의 손실을 초래했다. 더 나아가 투쟁의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파업을 선언했다가 번복한 것은 당시의 민주노총 지도부의 현실 판단이 안이했음을 드러냈다.

한편, 발전노조파업은 구조조정과 민영화를 둘러싼 노동정치적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즉 이것은 김대중 정부가 “공공부문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전력산업의 구조개편 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병훈, 2004: 40)되어 있었다. 정부는 2001년 하반기 들어 전력산업 분할매각 정책을 추진했으며 국무회의는 철도 민영화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2001. 12. 4). 이것에 따르면, 기존의 철도청과 고속철도공단을 통합하고, 철도시설의 건설과 자산관리는 2002년 7월 발족하는 철도시설공단이 맡

고, 운영은 2003년 7월 전액 정부 출자로 철도 운영회사를 만들어 넘긴 뒤 단계적으로 주식 매각을 통해 완전 민영화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철도, 발전, 가스 등 공공부문 노조들은 ‘국가 기간산업 민영화(사유화)저지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를 조직하여 대항하고자 했다. 공투본은 국가 기간산업의 민영화가 근로자들의 생존권 불안과 더불어 가격인상 및 서비스 불안 등 국민생활 수준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민영화 정책에 반대했다. 결국 철도, 가스, 발전 등 공공부문 노조들은 2002년 2월 25일 연대파업에 돌입했다. 연대파업 하루 또는 이틀 만에 한국노총 소속의 가스 및 철도노조가 현안 문제의 타결을 이유로 파업을 철회하였다. 하지만 민주노총 소속의 발전산업노조는 ‘민영화 철폐’라는 요구안을 내걸고 파업을 지속했다. 이에 발전 5개사로 구성된 회사측 협상대표단은 “민영화 문제 논의 불가”라는 원칙을 주장하며 교섭을 중단했다.

이처럼 정부와 회사는 민영화 정책 기조의 변화를 촉구하는 노조의 요구에 대해 ‘절대 불가’라는 태도와 불법파업에 대한 강경대응 방침에 변함이 없었고, 노조는 민영화 문제에 대한 정부의 양보를 요구했기 때문에 노정간의 타협점을 찾기 어려웠다. 정부는 노조간부 24명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였고, 회사 경영진은 763명(전체 조합원 대비 13.6%)을 고소하는 한편 49명 노조간부를 해임했다.

한편, 이 과정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가스, 발전, 철도 노조의 파업을 지원하고 개입하고자 했다. 한국노총은 전력분할매각저지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중앙단위 차원의 대응을 하기로 공식적으로 천명했다. 한국노총은 전력산업 분할매각 정책에 대한 대응으로 노사정위원회의 무기한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그리고 한국노총은 현 정부와의 정책연합도 파기하는 동시에 다음 국회의원 총선에서 여당 의원의 낙선운동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취했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산하 조직인 철도노조와 가스공사노조가 연대파업에 돌입한 뒤 ‘협상노선’에 따라 파업의 조기타결을 꾀했다.

민주노총은 파업중인 노조, 특히 발전노조의 투쟁을 동조파업으로 지원함으로써 투쟁을 통한 대정부 교섭력을 강화하고자 했다. 민주노총은

발전노조 파업에 대한 연대와 주5일제 쟁취, 구속자 석방 등을 공동 요구로 내걸고 2월 26일 현대차, 기아차, 금속산별노조 등 금속연맹을 중심으로 전국 100여 개 사업장, 13만여 명의 조합원이 4시간 동맹파업에 돌입했다.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민주노총 임원을 비롯한 산하 연맹 위원장들은 대화를 통한 원만한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3월 20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3월 25일을 경과하면서 파업참가 조합원들의 현장 복귀율이 30%를 넘게 되는 가운데, 파업 장기화의 부담을 의식하여 발전노조 및 민주노총 지도부가 민영화 저지의 기본 요구를 철회할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힘”으로써 “본격적인 막바지 협상에 돌입”하였고 결국 4월 3일 협상에 도달했다(이병훈, 2004: 44).

38일간의 장기파업을 벌였던 발전노조는 파업 이후 노사간의 관계 회복을 하지 못하고 심각한 내부 갈등을 겪었다. 발전노조의 경우 전체 37개 지부 중 27개 지부장들이 산별 집행부 퇴진을 주장하며 집행부가 정상화될 때까지 전 지부를 총괄하는 ‘수습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한편 발전노조의 교섭권을 위임받아 협상을 벌여왔던 민주노총 지도부는 합의안에 반발하는 조직 내부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 위원장 직무대행 및 사무총장을 비롯해 부위원장 전원이 사퇴하는 조직 내 혼란을 겪었다. 민주노총은 4월 8일 긴급중앙위원회를 열고 발전파업과 관련한 노정합의 과정에 대한 보고와 토론을 갖고 임원들의 사퇴 의사를 수용하고 비상대책위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상에서 보듯이 공공부문 파업은 관련 3개 노조들이 기존의 ‘협상’ 위주의 방식에서 벗어나 ‘투쟁을 통한 교섭력 확보’라는 노선을 선택함으로써 대립적 노사관계가 공공부문에 확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대립적 노사관계로의 전개는 민주파 노조 집행부의 등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공공부문의 급격한 환경변화와 구조개편에서 오는 노동자들의 혼란, 배반감, 불안감 등은 먼저 과거의 보수적·수동적 노조 집행부를 투쟁적 집행부로 교체하는 것으로 표출되기 시작했다. 이것은 전력노조의 2000년 노조 집행부 교체, 철도노조의 노조 민주화투쟁과 2001년 노조 집행부 교체, 2001년 발전노조의 한국전력노조로부터의 분리, 설립, 2000년 가스공사노조 집행부 교체로 나타났다. 민주파 노조 집행

부는 민영화에 대한 반대, 노동조건 개선 및 고용보장 요구 등을 중심으로 노조원들을 새롭게 조직하여 강력한 투쟁을 준비해 왔다.

나. 비리 : 도덕성의 위기

노동조합의 재정 비리는 조합비 유용 비리, 조합비 이외의 재정관련 비리, 복지시설 운영관련 비리, 그리고 회사와의 담합구조로 인한 비리 등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김정환, 2005: 5).⁶⁰⁾ 최근 짧은 기간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할 것 없이 이러한 유형의 모든 비리에 연관되어 있음이 밝혀짐으로써 노동운동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주었다. 최근에 밝혀진 비리 사건은 기아차노조, 항운노조, 택시노련, 한국노총, 현대차노조 등에서 나타난 노조 비리 사건들 등이다.⁶¹⁾

60) 조합비 유용 비리는 노조 집행부가 조합비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비리로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비리이다. 조합원 선물비나 조합원 티셔츠 등을 조합비로 구매하는 과정에서 납품업자와 결탁하여 선물비 등을 과대 계상하는 수법을 사용하거나 리베이트를 조합간부가 사용(私用)하는 비리이다. 이외에 금융산업노조 국민은행지부에서와 같이 자녀등록금, 가정부 고용비,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조합비를 ‘쌈지돈’으로 여겨 개인적으로 횡령하는 사례도 발견된다. 조합비 횡령 이외의 재정관련 비리로는 주택조합을 결성할 목적으로 모은 주택기금이나 지방자치단체나 사용자측이 제공한 복지기금 등을 유용하여 일어나는 비리이다. 최근 택시노련의 복지기금 유용 사례가 대표적이며, 일부 대공장노조에서 주택조합을 결성하는 과정에서 일어나기도 하는 비리이다. 복지시설 운영관련 비리는 노동조합이 소비조합, 복지회관, 자판기 등을 운영하거나 업자에게 위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며, 주로 대공장 노조에서 일어나는 비리이다. 기아차노조 광주공장지부와 항운노조의 채용 비리는 회사가 자초한 측면도 적지 않다. 개발독재 시절 회사는 조합원들의 불만을 억제하기 위해 그리고 노사분규를 회피하기 위해 노조간부에게 검은돈을 주거나 각종 특혜를 베푸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비리이다. 이와 같은 담합구조로 인한 비리는 노조 임원선거가 직선제보다는 간선제를 택한 노조, 다시 말해 노조의 민주성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은 노조에서 많이 일어난다. 과거 섬유업계나 택시업계 등에서 자주 발견되는 비리이다(김정환, 2005: 5).

61) 예를 들어, 서울의 ㄱ노조 위원장은 회사 내 매장을 공개입찰가보다 턱없이 싼 값에 받아 운영하다 드러나자 위원장직은 물론 아예 회사까지 그만두었으며, 또 다른 위원장 역시 사내 매장과 관련해 각종 이권을 챙긴 것으로 밝혀져 노조의 도덕성, 자주성에 먹칠을 했다. ㄱ노조 위원장은 ‘현업 직원처럼 승진은 못 시켜주는 대신 현업으로 돌아갔을 때 바로 승진시켜 주면서 임금 또한 소급적용’하는

이와 같은 노동조합 내 비리 현상은 지속적으로 존재해 왔을 뿐만 아니라, 현재 일상적이고 만연되어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즉 기업별노조 체제하에서 노동조합의 비리와 부패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 이래 뿌리 깊은 관행으로 보이지 않게 존재해 왔다. 특히 임금교섭과 단체교섭을 둘러싸고 사용자들의 묵인 혹은 직간접적인 거래, 지배개입 혹은 노사간의 담합 속에 존재해 왔다. <표 4-1>에서 보듯이 2002년에 노조 비리로 노조 집행부가 물러난 경우가 전체의 8~9%로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배규식, 2005. 5: 32).

이러한 비리 사건에 노동조합 최상층부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이남순 한국노총 전 위원장과 강승규 민주노총 전 수석부위원장의 구속은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런데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비리가 이미 관행처럼 되어서 노동조합 간부들이 도덕적 불감증이 걸려 있다는 사실에 있다. “이들 대부분은 기아차, 현대차, 향운노조(입사비리), 국민은행노조(조합비 횡령)처럼 검·경찰의 수사로 밝혀지지 않는 한 스스로 반성하거나 조직적으로 징계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미적미적하는 경우보다 책임지고 사퇴하는 경우가 더 양심적으로 보일

<표 4-1> 조합원 규모별 노조 예산운용 관련 부정이나 횡령 등으로 불신임 경험 (단위: %)

	노조 집행부의 불신임 혹은 자진사퇴	노조 집행부의 조직유지의 어려움 경험	불신임 경험 부재
500인 미만	8.0	3.8	88.1
500인 이상	9.0	4.8	86.2
전 체	8.6	4.4	87.0

자료: 김정환(2002), 『합리적 노동운동을 위한 노동조합의 재정자립방안』, 『한국의 노사관계 발전방안 연구 II』, 노동부 정책연구용역사업(배규식, 2005: 32에서 재인용).

내용의 노사간 보충협약을 맺어 도마 위에 오르고 있고, 노조 위원장은 조합비를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렇듯 노조 비리는 조합비 횡령에서부터 기념품, 업체한테서 관행적으로 받는 ‘노조발전기금’ 명목의 뒷돈 유형 등 가지가지다(민주노총, 『노동과세계』, 2005. 5. 25).

정도다. 더 큰 문제는 순전히 노조간부 개인이 저지르는 경우도 많지만 다른 간부들이 눈감아 주거나 동조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민주노총, 『노동과세계』, 2005. 5. 25).

이렇게 만연되어 있는 현실 앞에서 노동계는 “노동계 비리 사건이 불거져 나오는 배경에는 ‘노동운동 목죄기’ 차원의 기획수사 혐의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음”⁶²⁾에도 불구하고 “사실이 명명백백하고 꼬리를 물고 있는지라 이런 항변을 내놓을 처지도 못 되는 형편이다”(민주노총, 『노동과세계』, 2005. 5. 25). 그리고 이것은 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즉 “이 경우 회사와 대립각을 세울 때 원칙과 소신으로 밀어붙이지 못하고 대충 타협할 가능성이 높아질 건 뻔한 일이다. 구조조정 등 첨예한 사안으로 맘 잡고 투쟁에 나서더라도 회사에 발목이 잡혀 결국 굴복할 수밖에 없게 된다”(민주노총, 『노동과세계』, 2005. 5. 25). 보다 큰 문제는 노동조합이 도덕성에 심각한 상처를 입음으로써 조합원들은 물론 사회적 불신을 받게 됨으로써 리더십의 위기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서는 강승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의 사례를 들어 노동조합의 비리와 부패가 노동운동 리더십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주는지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2005년 10월 7일 오후 강승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비리혐의로 긴급체포되었다. 검찰이 법원에 신청한 구속영장 내용에 따르면 강승규 전 수석부위원장이 사용자 측에 먼저 돈을 요구했고 받은 돈의 사용처 역시 장인의 빚을 갚고 적금 가입 등 개인적 용도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직을 맡고 있던 시기에도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 수석부위원장은 “기아자동차 사태시 진

62) 노동조합은 정권의 노동운동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공세라고 확증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노무현도 인정했듯이 노 정권의 사회적 포섭 전략은 이미 실패했고, 상승하고 있는 투쟁의 국면에 노동운동에 대한 전방위적이고 총체적인 압박 공세의 일환이다.” 이에 대해 이상욱 현대자동차노조 위원장은 “이번 조사가 검찰과 언론이 현대차노조를 무력화시키려 하거나 2005년 임단투에 영향을 미치려 하는 등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라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했다.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 역시 “비리와 관련해서는 검혀하게 반성하겠다. 그러나 자본이 노동자를 포섭하려는 전략이 드러나고 있다”며 ‘기획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노무현 정권의 노동계를 길들이기 위한 공세가 시작된 것이다(박명선, 2005. 6. 20).

상조사단장으로서 삭발로 자정 의지를 밝혔고, 이후 민주노총 조직혁신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민주노총의 조직혁신 사업을 총괄하였지만, 정작 자신이 비리의 주범이자 1급 혁신 대상인 것으로 드러났다”(노힘, “강승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구속사태에 대한 성명”, 2005. 10. 10)

그런데, 문제는 강승규 사태 이후 나타난 민주노총 내부의 분란이었다. 이 사건이 터지자 10월 10일 저녁 중집회의에 참석한 이수호 위원장은 본인의 직무를 정지했음을 밝히고 오길성 부위원장을 공식중인 수석부 위원장에 지명해 업무를 맡긴 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한편 이수봉 대변인은 MBC 마감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수호 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표명했고, 결론은 안 났지만 사퇴 의지가 높다”고 밝혀 향후 사건 처리 방향을 시사했다(원영수, 2005. 11. 14). 하지만 이 위원장은 다음날 ‘하반기 투쟁과 조직혁신’을 책임져야 한다는 명분으로 위원장직에 복귀했다.

이에 대해 사무총국 활동가 15명은 사직을 통해 ‘지도부의 총사퇴 통한 민주노조운동의 혁신’이라는 자신들의 입장을 표명했다. 조합원들은 연일 자신들의 의지를 담은 성명을 발표했으며, 민주노조운동 역사상 유래 없는 지도부의 퇴진운동이 대중적으로 일어났다. 결국 10월 7일 강승규가 체포된 지 2주일이 지난 10월 20일에서야 이수호 전 지도부는 총사퇴를 단행하기에 이르렀으며, 그 결과 전재환 금속연맹 위원장을 중심으로 9명의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다(허성호, 2005. 11. 28).

이처럼 강승규 부위원장의 비리는 노동운동에게 심각한 손실을 가져왔다. 일단, 그가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라는 직책 이외에도 민주노총 조직혁신위원회를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비리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다. 이것을 호재로 보수언론과 정부는 노동운동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을 하기 시작했다. 즉 보수언론은 사실과 기획연재 등을 통해 연실 노조를 비판하기 시작했다. “노조의 권력이 과잉되었다”, “노조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정신적인 혁신이다”, “노조는 정신적으로 재무장해야 한다.” 그들의 논리는 노조가 무소불위의 ‘노동권력’을 휘둘러 왔기에 생긴 문제이므로 강성 노동운동을 그만두고 도덕성으로 무장하여 선진 노사관계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박명선, 2005. 6. 20).

이처럼 비리는 진보진영 내부에서 인정하고 있듯이 한국의 노동운동

이 귀족노조화되었다는 것과 비리의 온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실마리를 제공했다: “이번 사태는 강 부위원장 개인의 비리를 넘어, 현 민주노총 지도부의 총체적 위기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정권과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민주노조운동의 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행위가 지도부 자신의 손으로 저질러졌고, 이로써 수많은 열사의 죽음과 수백만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쟁취한 민주노조운동을 비도덕적 이기주의의 집단으로 매도할 수 있는 빌미를 주고 말았다”(노힘, “강승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구속사태에 대한 성명”, 2005. 10. 10). 한편, 이 과정에서 나타난 노동운동 내부의 균열은 노동운동 리더십에 치명적인 상처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에 대해 노동운동은 규율위원회 구성, 회계감사위원회 구성, 비리엄단의 법제화 등 대안 제시에 골몰하고 있지만, “기업별노조에서는 노사담합과 실리주의, 사측 회유 등으로 부정부패와 비리가 끊이지 않는다”(하부영, 민주노총, 『노동과세계』, 2005. 7. 6)는 언급에서 보듯이 비리가 이미 관행이 되어 있고 구조적인 요인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해결 대안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 균열 : 연대성의 위기

경제위기 이후 노동운동은 다양한 차원에서 균열을 경험함으로써 노동운동 내부에서조차 연대성이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고 이것은 리더십의 위기적 징후로 독해되었다. 여기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노동자들의 균열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간의 노동운동 조직 내의 균열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의 경제위기 이후 노동자 내부의 격차도 크게 확대되어 왔다. 이것은 고용안정성, 작업환경, 노동권 등에서뿐만 아니라 특히 임금과 기업복지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민주노총, 2003. 2:2~4 참조). 이러한 ‘분단현상’은 중소기업 노동자들과 대기업 노동자들 간, 그리고 정규직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 간 등에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선,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들 간의 분단 현상을 살펴보자. 노동

조합은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다. 즉 양 노총의 조합원은 대부분 대기업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4년 현재 기업규모별 종사자수를 보면, 300인 이상 대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전체의 10.1%에 해당하는 약 1,264천 명이다. 89.9%에 해당하는 노동자들은 299인 이하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조합원 구성에는 반대의 현상이 나타난다. 한국의 조직노동자 1,605천 명 중 500인 이상 대기업에 종사하는 조합원은 전체의 72.5%에 해당하는 1,165천 명이다. 50~99인 이하 기업에 종사하는 조합원은 4.9%인 78,447명이며, 49인 이하 영세기업에 종사하는 조합원은 3.3%인 52,895명에 불과하다. 결국 중소기업 이하 사업장에서는 대부분 노동조합이 없는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6년 현재 노동조합 조직률을 약 10%로 볼 때 약 90%가 조직되어 있지 않은 노동자들과 조직되어 있더라도 중소기업 사업장에 있는 노동자들을 과연 조직노동이 이들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표성이 있는가는 문제에 봉착해 있다(정길오, 2004: 28).

1987년 이후 노동조합운동은 막강한 힘을 가진 대기업 중심의 임금인상투쟁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대중동원에 의한 전투적 방식의 투쟁은 사업장의 현장 장악력과 재정력을 갖출 때 가능할 수 있다. 이것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중소기업 이하의 사업장은 전투적 방식의 투쟁이 가능하지 않은 실정이다. 기업별체제하에서 상급단체를 압박할 수 있는 정도의 힘을 가진 대기업노조는 총연맹의 동원에 협력하는 한편, 임투나 구조조정 반대투쟁 등 사업장 관련 이슈들을 총연맹의 중심사업 일정과 시기적으로 집중해서 배치해 왔다. 총연맹의 임원까지 대기업의 이슈를 지원하는 현재와 같은 방식하에서 대기업의 임투나 주요 이슈에 대한 투쟁은 거의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정길오, 2004: 28).

그 결과 대기업 노동자와 중소영세기업 노동자의 양극화가 고착화되어 있다. 기업규모간 임금격차를 보면, 500인 이상 기업을 100으로 했을 때 100~299인 사업장은 73.3, 5~9인 사업장은 50.7로 절반에 해당된다. 연도별 임금격차를 보아도 500인 이상 사업장의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기업규모별 임금격차가 매년 확대되고 있다. 5~9인 사업장의 경우 1999

년 59.0에서 2003년 50.7로, 100~299인 사업장이 1999년 77.3에서 2003년 73.3으로 임금수준이 저하되고 있다(정길오, 2004:28). 민주노총 조사도 이를 입증하는데, 1997년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수준이 대기업의 74.3% 수준이고 IMF 이후 2000년에 67.2% 수준으로 떨어졌다. 기업복지에 해당하는 비현금급여는 더욱 심각하여 1997년에 71.9%, 2000년엔 56.9%로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민주노총, 2003. 2:2~4 참조).

한편, 노동자 내부의 격차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에서도 드러난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월평균 89만 원으로 정규직 노동자의 52.9% 수준이다.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서 퇴직금, 상여금을 적용받는 비율도 각각 13.6%, 14.0%,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는 경우는 9.7%에 불과하다”(민주노총, 2003. 2:2~4 참조). 이와 같은 ‘비정규 노동’ 문제는 1990년대 후반부터 이미 사회화되었지만, 한국 시민사회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전면적으로 등장한 것은 1998년을 전후로 한 시기였다. 최초의 비정규직 투쟁은 한라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독자적인 투쟁과 조직화였다. 2001년 이후 광주 캐리어 사내하청 노조, 근로복지공단 계약직 노조, 이랜드 계약직 노조, 한국통신 계약직 노조 등 다양한 비정규 노동자들의 노조 결성 및 차별 철폐 움직임이 존재했지만, 이들의 투쟁이 성공적인 조직적 성과를 낳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자본측과 정부의 비정규직에 대한 완고한 태도가 1차적인 원인이었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요인은 민주노총을 조직적 근간으로 구성된 정규직·남성·대공장 노동자들(이하 정규직으로 통칭)의 비정규직에 대한 태도 때문이었다. 잇따른 비정규 노동자들의 노조 결성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차별철폐 등의 움직임에 대해 민주노총, 산별연맹 그리고 단위사업장 정규직 노조가 보여준 태도는 방관, 형식적 연대, 그리고 배제 및 차별이 대부분이었다(김원, 2005).

한국통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갈등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1997년 경제위기 국면에서 한국통신의 상황을 보면, 경제위기 이후 정부는 기획예산처를 중심으로 한국통신의 대대적인 인원 감축을 공표했다. 실제로 1998년 1만여 명을 명예퇴직시켰으며, 2000년에는 비정규직 7,000명에 대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한국통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517일간의 파업을 전개했다. 그런데 이 과정은 한국통신과 정규직 노조라는 비정규 노동운동의 ‘이중의 적’에 대한 불신이 갈수록 심화되는 과정인 동시에, 단위사업장 정규직 노조(조합원)뿐만이 아닌, 그간 개입했던 민주노총 등 기타 노동운동 단체에 대한 불신도 강화되는 과정이었다(김원, 2005).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고백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분단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보여준다:

활동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정규직 노조를 만나서 일을 진행시킬 때다. 물론 생각의 차이가 없을 수는 없지만,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의 관계에서 갈등이 많다. 일례로 비정규직에서 12, 19일 잔업거부를 결정했는데, 이에 대해 정규직 노조는 ‘함께 잔업 거부를 할 수 없음’을 밝혔다. ... 현장조직들도 마찬가지다. ‘집행부와 비정규직 노조가 얘기가 잘 안 되었는데,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라는 얘기가 현장조직 간담회 때 항상 나온다. 현장조직이면 집행부의 입장과 관계없이 적극적인 연대, 활동을 벌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비정규직 안기호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 2005. 3. 13, 기관지 노힘 제70호)

다양하게 나뉘어져 있지만, 조합원 절대다수가 여전히 비정규직은 고용방패막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들에게는 ‘이미 98년 정리해고 때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안전판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 ‘나 살자고 남 죽으라고 하면 되겠냐’, ‘당신 아들딸이 선택받은 정규직에 의해 희생양되게 만들 거냐’ 등을 이야기한다(정규직노조 김태곤 현대자동차 수석부위원장, 2005. 3. 13, 기관지 노힘 제70호)

이처럼 ‘분단 현상’은 “파편적인 기업별노조 체제 속에서 진행된 민주노조운동의 성장이 초래한 의도하지 않은 결과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임영일, 2003: 67). 기업별노조에 간혀 있는 사이, “사회적 임금(주책, 사교육비, 사회보험, 조세, 물가 등의 조절을 통한 사회적 임금 제고)” 등과 관련된 사항은 핵심적인 노동정치 의제가 되지 못했고 결국 이것은 “노동자 내부의 양극화”를 확대했다(정길오, 2004: 28).

이같은 분단 현상의 사례는 지면이 부족할 정도로 풍부하고 이것은 노동운동 리더십의 위기에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즉 “노동시장의 분단

이 강화되면서 노동시장에서의 승자와 패자 사이의 차이와 차별이 심화되고 있다. 기업별 고용시스템과 노사관계로 인해 기업을 뛰어넘는 지역별·업종별·산업별 수준에서 노동자들 사이에 요구와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통일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 “심지어 같은 기업 내부에서도 직종/직업별·직위별·고용형태별로 이해관계가 복잡화되고 상충하면서 노동자들 내부에서 이해관계를 하나로 통일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배규식 외, 2003: 37). 한편, 노동자들간의 분단 현상이 나타나고 학습되면서 노동자들은 보다 실리주의적 경향을 띠게 되고 이것은 또다시 노동운동 리더십의 위기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노동자들 내부의 균열에 더해서 노동운동은 양대 노총의 균열에 직면해 있다. 한국노총은 1990년대 중반 이래 통합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하지만, 최근 한국노총의 민주노총과 확연히 구분되는 행보는 민주노총과 관련하여 더 이상 통합에 연연하기보다 자신의 길을 가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한국노총에 대한 민주노총의 평가는 ‘전투적 조합주의’라는 담론에 응축되어 있다. 이용득 위원장은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수호 집행부 당시에는 1년 6개월 동안 중요 사안에 대해 공조하고 연대투쟁을 했다. 당시 새로운 운동 방향을 함께 할 수 있다고 봤다. 서로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민주노총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한계를 느낀다. 민주노총의 운동기조는 20년 전과 똑같은 것 같다. 민주노총은 오직 투쟁을 통해서 사회를 개혁하려 한다. 이른바 전투적 조합주의다. 민주노총은 먼저 투쟁 일정을 세워놓고 교섭을 한다. 임단협을 하면서도 투쟁을 시작한 후 목표를 세운다. 그러니 투쟁이 상투적이 됐다. 대중으로부터 각인은 되겠지만, 외면당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상태로라면 민주노총과의 연대는 불가능하다(<내일신문>, 2007. 1. 11).

이러한 입장은 한국노총의 ‘2006년의 평가와 2007년의 전망’이라는 글에서 확증된다. 즉 이 글의 부제는 ‘한국노총, 책임 있는 조직체 역할론 vs 민주노총, 전투적 노동운동’이다: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 전면 참여 및 투쟁과 협상을 병행하는 책임 있는 조직체로서의 역할론을 주장한 반

면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 불참과 계급적(전투적) 노동운동의 투쟁론을 주장했다”(http://www.inochong.org/news/view.asp?arId=5548).

한국노총의 비판 대상인 민주노조진영은 그동안 한국노총을 노동운동 조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을 보여왔으며 이것은 다소 완화되었을지 몰라도 지금도 여전히 관철되는 기본적인 태도이다: “한국노총이 ‘어용’의 상징성을 탈피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권이 말하는 ‘고임금론에 근거한 임금 자제’를 전면적으로 주장하고 다닌 사람이 바로 한국노총 위원장이었으며 일자리 창출 사회협약, ‘산업 지키기, 경제 살리기’를 위한 산업 공동화 특위 구성 등, 정권의 ‘사회적 합의’ 공세에 가장 적극적으로 조응한 세력도 바로 한국노총 지도부였다”(선지현, 2005. 3. 13).

그렇다면 양자 간의 이러한 대립이 존재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첫째 양자 간의 역사성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노총은 반공주의에 기반해서 정권의 필요에 따라 위로부터 급조되었던 노동운동으로서는 태생적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최소한 1987년 이전까지 국가의 후견 속에 성장해 왔다. 반면 민주노총은 사회주의의 지적 세례를 받았고 억압적 권력과 자본에 저항하면서 성장했다. 따라서 이러한 역사성으로부터 내재된 세력과 관성은 쉽게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조직 기반에서 양자 간의 대립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노총과는 달리 한국노총이 서 있는 기반은 다음과 같다: “한국노총의 조직 분포는 대부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조직화되어 있는데,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조직 분포가 88%에 이르고 있는 데 반해 전체 조합원 분포는 35.7%로 비대칭적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중소기업 위주의 조직 분포는 노사협력적인 경향을 지니며 대중투쟁방식보다는 상급단체의 정치력과 협상력에 의존하는 경향성을 지니고 있는 반면, 조직체계는 산업구조 개혁이나 사회개혁 투쟁을 수행할 산별노조보다 기업별노조를 유지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백헌기, 2006: 27~28). 이것은 재정구조, 정치전략, 협상전략 등에서 차이를 발생시킨다. 즉 한국노총 중앙과 산별연맹의 인력과 재정구조를 보면, 중앙은 정부의 재정의존도가 높고 1만 명 미만의 영세산별

도 24개 연맹 중 8개에 이르는 등 대단히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재정집중화나 산별노조로의 조직체계 변경이라는 과제가 남아 있다. 그리고 한국노총은 대화와 투쟁을 병행하고 있지만 참여와 대화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대규모 확대와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현장노동자들에게 있어서는 중앙의 투쟁력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백헌기, 2006 : 27~28).

세 번째, 최근에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과도 양자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이 있다. 즉, 노사관계 로드맵 협상 결과 9월 11일, 5자 대표자 간에 대타협이 이뤄졌으나 불참한 민주노총의 반발로 연초의 중앙단위 노사관계의 진전은 결국 정부와 민주노총의 갈등,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사이의 갈등으로 증폭되어 다시 경색 국면이 형성됐다. 특히 비정규직 입법 논의 과정에서의 이견 등으로 나타난 양 노총 사이의 노선 갈등은 ‘로드맵 합의’ 이후 본격적으로 드러나면서 공조 파기와 함께 운동노선과 방식에 대한 대립구도로 전개됐다(<http://www.inochong.org/news/view.asp?arId=5548>).

민주노총 내부 온건파들이 양 노총 통합에 대해 호의적일지라도 대체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다: “양대 노총 대통합의 전제는 한국노총의 전면적 민주화이다. 통합 과정은 위로부터가 아니라 아래로부터 조직되어야 한다. 통합 과정은 민주노총의 공세적 주도적 과정이 되어야 한다. 통합은 민주노조운동의 계급적 발전 과정으로 배치되어야 한다”(원영수, 2005. 11. 10). 이에 반해, 한국노총이 변화된 상황에서의 자신감으로 인해 특히 최근 대통령선거에서 한국노총의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로 인해 이제 이 대립과 경쟁은 봉합되기 힘들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한국노총은 이제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해 왔던 통합론⁶³⁾을 더 이상 제기하지 않을 듯싶다.

이상의 양대 노총의 균열에 더하여 사무직 노조와 생산직 노조 간의

63) “양대 노총 통합론은 1995년 민주노총 출범시부터 내부에 존재해 왔다. 특히 민주노총과의 경쟁에서 위기감을 느낀 한국노총이 개혁노선(?)으로 선회하면서 통합론은 서서히 강화되어 왔다. 물밑에 잠복하던 통합론은 1997~98년 경제위기 시의 노동운동 노선 논쟁, 2004~05년 사회적 합의주의 논쟁을 경과하면서 가시적인 형태로 드러났다”(원영수, 2005. 11. 10).

균열도 점차적으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한 조사에 따르면,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에 비해 금융노조 간부들이 노동조합 목표나 간부로서의 정체성, 정치이념에서 보다 온건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실리적·도구적 지향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금속노조와 보건의료노조의 간부들에서 경력 지향적 리더십의 비중이 낮고 사회변혁운동이라는 이념적 헌신에 기초한 리더십이 다수라면, 금융노조에서는 직업적 전문성을 강조하는 경력 지향적 리더십과 규범적 헌신과 자기희생적인 동기를 가진 간부 유형이 상대적으로 많이 존재한다(조효래, 2004: 212).

구체적으로 전임 간부들의 가치 지향을 노동조합별로 구분해 본다면, 먼저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에 비해 금융노조 간부들이 노동조합 목표에 대한 인식에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금속노조나 보건의료노조에 비해 금융노조 간부들의 경우 ‘노동자들의 계급적 단결과 정치세력화’를 목표로 하는 정치적 계급 지향은 21.9%에 불과하며, 오히려 경제적 실리 지향과 산업민주주의 지향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사무직 노동조합 간부들이 생산직이나 서비스직 노동조합 간부들에 비해 노동조합에 대한 실리적·도구적 지향을 강하게 가지고 있고, 중간계급적인 특성을 반영하여 작업장 내 의사결정 참여와 같은 쟁점에 강한 선호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에 금속노조와 보건의료노조 간부들은 상대적으로 근로조건 개선이나 산업민주주의 쟁점보다는 전체 사회 수준에서 사회적 연대 지향과 정치적 계급 지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일상적 활동과 기능이 임금 및 고용과 같은 경제적 이익추구 활동이라는 점에서, 이는 금속노조와 보건의료노조에서 일반조합원과 간부들 사이에 상당한 인식의 격차가 존재하며, 조합간부들의 강한 이데올로기 지향성이 산별노조의 활동 방향에서 일반 조합원들의 요구와 일정한 균열의 가능성을 안고 있음을 의미한다(조효래, 2004: 199~200).

이상에서 보듯이 사무직 노조인 금융노조의 간부들은 다른 두 노조 간부들과 현격한 인식의 격차를 보이고 있고, 이것이 기본적으로 조합원들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사무직 노동자들과 생산직 노동자들 간 연대의 균열 가능성이 존재한다(조효래, 2004: 212).

라. 경쟁 : 조직이기주의

정치세계에서 정파의 존재는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권장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정치세계는 상이한 이익 또는 계급의 개인과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간의 경쟁을 통해 갈등을 조정 또는 해소하는 존재론적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의 노동운동은 정파에 의한 갈등이라기보다는 분파⁶⁴⁾에 의한 갈등이고 이 갈등이 정상적인 절차나 토론을 통해 해결되는 데 취약하다는 데 문제점이 있다. “문제는 정치적 견해와 노선을 앞세워 분파적 이익을 추구하고 분열을 통해 반사이익을 얻으려 하는 데 있다.” 그리고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동지를 적대시하고 노동자 대중의 이익을 위해 헌신 복무하기 보다는 자파의 이익을 더 앞세우는 분파주의가 문제이다. 그리고 이런 분파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대중을 분열시키고 그 반사이익을 챙기는 분열주의 또한 문제이다. 이처럼 분파주의, 분열주의는 교묘하게 정치적 구호와 주장 뒤에 숨어서 한국 노동운동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심각한 문제이다”(오길성, 2004: 19~20). 이상학 민주노총 실장도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탄식하고 있다:

중소영세업체에는 상근자가 한 사람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역량이 있는 노조에서는 상당히 많은 간부들이 대중조직의 일상활동이나 조합원 조직보다는 소위 ‘정파싸움’에 에너지를 소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장조직력이 약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직 확대나 산별노조 전환 등이 이뤄지지 못하고, 그 때문에 사회적 변화에 대해 정책적 조직적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이러한 현상이 불거지면서 노동조합의 의사결정 과정이 현장과 괴리되어 현장조직력이 약화되고…; 이렇게 문제가 악순환을 반복하며 총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2005: 40~41).

64) 정파는 비슷한 이념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간의 모임으로 다른 정파와의 차이는 이데올로기적 특징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정파는 더 많은 이데올로기(이념)적 특징을 갖고 있고 조직 구성원들에 의해 선출된 리더십을 통제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분파는 특정한 원칙을 가진 정책보다는 승리했을 때의 이득이나 권력 유지에 주목하거나 이권을 챙기는 그룹으로 전체의 목적보다는 분파 구성원의 이해를 위한 활동에 더 주력한다(진숙경, 2008).

한편, 민주노총의 2005년 대의원대회의 파행은 이러한 민주노총 내의 정파간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 갈등의 해결방식을 보면 현재 한국의 정파들이 갖고 있는 행위 양식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2005년 새롭게 당선된 민주노총 이수호 지도부는 노사정위 복귀를 위해 대의원대회에서 이 안건을 통과시키려고 하였다. 이러한 지도부의 방침에 동의하는 대의원 수가 과반수가 확실시되므로,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복귀안은 난항 끝에 통과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하지만, 정상적인 회의 절차를 통해서는 다수결에 의해 밀릴 것으로 판단한 반대 세력들은 단상을 점거하였고, 이를 막으려는 집행부와 몸싸움이 벌어지고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폭력사태’가 벌어져 사회적 비난을 받았었다(진숙경, 2008). 다음은 당시의 상황을 묘사한 글이다:

대의원대회가 시작되기 전 대회장인 교통회관 주변에는 전운과도 같은 긴장감이 충만했다. 여기저기 삼삼오오 모여 ‘작전회의’ 같은 것을 하며 이쪽저쪽 떠도는 정보들을 수집하고 소통하고 있었다. 대회장 입구 쪽 접수대 주위로 ‘질서’ 완장을 찬 사람들이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의 분위기를 삭막하게 만들고 있었다. 1시 30분이 지나, 교통회관 앞에서 전노투는 간략한 사전집회 뒤 곧바로 대회장 진입을 시도했다. 이들이 접수대 앞으로 왔을 때, 질서 완장들은 이미 방어 준비를 하고 있었고, 첫 충돌이 벌어졌다. 양쪽의 밀기 시험은 중간중간에서 터지는 주먹질로 균형이 깨지고, 어느새 대회장 입구로 전선이 이동됐다. 한쪽 문은 폐쇄되고, 남은 한쪽 문 안에서 질서 완장들이 완강하게 방어했고, 문 앞에서는 진입하려는 쪽과 질서 완장들과 난투가 한동안 벌어졌다. 그동안 한쪽 옆으로 난 비상구를 통해 20여 명이 진입을 시도했고, 무대쪽 비상구에서 규모가 작은 전선이 형성됐다. 그러다가 대회장이 뚫린 곳은 엉뚱한 곳이었고, 대회장 옆문으로 첫 진입이 시작된 지 10여 분 만에 대회장은 완전히 개봉되었다. 대회장 안은 대부분 사회적 교섭 반대파들이 자리를 잡았고, 단상에는 집행부 몇과 반대파가 자리를 잡고 실랑이를 벌였다. 한때 찬성파에서 동원한 조합원들이 단상 앞에 스크럼을 짜고 “질서 유지, 폭력 반대” 등을 외쳤고, 질서 완장들이 단상 옆에서 하이에나처럼 점거자들을 뜯어내 린치를 가하기도 했다. 집행부는 상황을 진압해 보려고 시도했지만, 대회장을 가득 매

은 조합원들의 “사회적 교섭 폐기하고, 총파업을 조직하라”는 구호에 진압되고 말았다. 이후 증집회의가 열렸고, 곧 이석행 사무총장이 “일주일 내에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겠다”고 마이크를 잡고 밝혔지만, 집행부가 퇴장할 때까지 대회장 안의 조합원 대부분은 그들이 무엇을 이야기했는지 몰라 기자들을 붙잡고 “뭐라고 그랬나요?”라고 묻기도 했다. 집행부가 마이크를 잡아도 계속 구호만 외쳤기 때문이다(허성호, 2005. 3. 28)

이에 대해 이수호 위원장은 상집회의를 통해 일주일 내로 예고한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하지 않고, 위원장 직권으로 사회적 교섭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했다(이상 허성호, 2005. 3. 28)

이상의 대의원대회는 분파정치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분파정치는 노동조합 내부 선거정치에서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것으로 보인다. 노동조합의 내부정치는 노조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노조 위원장 선거를 둘러싸고 개시된다. 노동조합에서 집행부를 뽑는 선거는 노조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통로가 된다. 노조 집행부는 노조 권력의 핵심으로서 조합원들의 요구와 의견을 통일시키고, 내부 의사결정의 중심에 있으며 경영진을 상대로 형식상 대등한 위치에서 교섭을 한다. 따라서 적지 않은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 위원장 자리는 노동운동에 뜻을 둔 조합원들이 자신의 뜻을 실현해 볼 수 있는 매력적이고 힘 있으며 책임이 따르는 자리가 된다(배규식 외, 2003, 27). 따라서 위원장을 둘러싼 노동조합 내부정치는 피선거권을 가진 모든 노동자들이 민주주의를 학습하고 정치를 배울 수 있는 공간일 수 있다.

그런데, 현재 한국의 노동조합 내부정치는 민주주의를 학습하는 측면보다는 권력정치를 배우는 차원으로 전략하는 측면이 있다. 이것은 우선 위원장 선출이 단기적이고 실리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첫째, 기업별노조주의로 인해 조합원들이 실리적 노동조합주의로 경도되는 경향이 있어 위원장 후보는 이들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위원장이 되려면 현장노동자들의 단기적인 이익에 민감한 공약을 내을 수밖에 없다.

한편, 현행 선거 제도는 노조집행부의 전문성에도 문제를 일으키는데,

“기업별노조에서 2~3년마다 치러지는 선거 때문에 노조 집행부는 짧은 임기(2~3년)를 주기로 자주 교체된다. 노조 집행부가 교체될 때마다 노조전임 간부들이 사실상 모두 교체되므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조직적·정책적 역량이 사장된다. 즉 기업별 노동조합에서는 관료적 전문 역량이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시적 방식의 조직 운영 및 활동이 반복된다. 신임 집행부는 전임 집행부가 경험했던 시행착오를 반복해야 하고 학습 및 경험 부족으로 노조의 지도력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짧은 임기 때문에 노동조합 집행부가 정책적인 역량을 갖추 시간적 여유도 없고 중장기적 정책을 세워 이를 추진하기도 용이하지 않다. 기업별노조의 잦은 지도부 교체는 노조 지도력의 불안 혹은 취약성을 가져와 노동운동의 안정성 나아가서는 노사관계의 안정성을 해치고 있다”(배규식 외, 2003: 29).

한편, “단위노조, 산업별 노조연맹, 전국총연맹 수준에서 노조 집행부의 선출을 둘러싼 선거는, 한 노조에 한 명의 위원장을 뽑는 승자독식(winner-takes it all)원칙이 적용된다. 여기에 정당정치의 형태를 일정한 모방하여 선거에서 승리를 위해 다양하고 치열한 경쟁과 갈등이 동시에 일어난다. 이 과정에서 한편으로는 전국적인 수준에서의 노동운동 내부의 이념적 노선이나 전략 간의 대결이 선거를 계기로 일어날 뿐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 노조 위원장 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해 노조 내부의 각 개인, 계파와 공식 비공식 그룹 간의 경쟁, 갈등, 합종연횡 등이 이루어지며 이해관계와 내부정치가 복잡하여 얽혀든다. 이 때문에 노조 위원장 선거를 둘러싼 내부정치는 노조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목적 속에 노조 내부의 통일과 단결보다 자주 노조 내부의 심각한 분열과 분파들을 낳은 계기가 되고 있다. 여기에 전직 노조위원장들의 경력진출 통로가 없기 때문에 이들이 현장에 남아 노조 위원장 선거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내부정치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이다”(배규식 외, 2003: 27).

이상의 선거 시스템은 노동조합 지도부가 책임 있는 활동을 하는 것을 방해하는데, 예를 들어 “임단협 합의안 합의 때 혹은 노사관계에서 참여를 통한 전략적 개입을 선택해야 할 순간에 노조 집행부는 망설이게 된

다. 노조 집행부는 노동조합 내 여러 계파간 이해관계와 갈등을 의식하여 차기 위원장 선거에 부담이 되는 책임 있는 선택보다 부담이 되지 않고 책임이 따르지 않는 투쟁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선거용 조직이 급조됨으로써, “현대자동차노조에서 보듯 노조의 조직 분화 및 분파의 양산으로 귀결되기 쉽다. 결국 기업별 노동조합의 내부정치 복잡화→기업별노조 지도력 불안→노사관계의 불안정화 등의 연관을 갖게 된다”(배규식 외, 2003: 27).

그렇다면 왜 각 정파들은 선거 과정에서 분파적인 요소를 띠는가? 그것은 정파들의 자기 실현의 통로 이외에도 상당한 이권이 걸려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활동성, 민주성이 강한 노조일수록 노조 지부도를 말는 것은 개인적 희생과 헌신을 의미하지만, 노조가 권력자원화되어 있는 노조일수록 지도부를 말는 것은 이권의 획득을 의미하는 경향이 있다. 일부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인사·승진’ 문제 등에 대해서까지 비공식적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비공식적 영향력은 일종의 권력 자원이 되고 있으며, 이들 노동조합에서 리더십을 둘러싼 치열한 선거 경쟁의 유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 경우 리더십 경쟁이 상대적으로 치열하며, 노조 내부의 각종 차이(지역, 출신 학교)의 이용이 극대화된다. 그리고 이러한 노동조합일수록 선거 이후에도 후유증이 오래 남는다. 집권에 실패한 분파들은 단체교섭의 성과를 문제삼아 기존 집행부를 혼드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선거정치의 문제점은 노선에 따라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있다: “이들이[현대자동차 내 현장조직들] 지닌 입장과 노선의 현실적 경계는 불명확하다. 각 집행부별로 노선의 차이를 대변할 만큼의 정책적 차별성이 별로 없으며, 대부분 구호에만 의존한 채 경향적으로만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허민영, 2006: 303). 즉, 리더십 경쟁의 구조는 내용에 있어서 노동운동이나 노조활동의 노선 문제를 둘러싸고 나타난 것이기도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인맥과 파벌 등의 속인적 요인에 의한 경쟁구조도 강하게 작용한다(윤영삼, 2005: 274).

더 나아가 분파정치는 이익집단정치로 나아가는 데 문제점이 있다. 즉 활동가 집단이 분열되어 있을 경우 지도부 장악에 실패한 활동가 집단이

마치 야당처럼 지도부를 흔들어 리더십의 안정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또 선거에서 지도부를 장악한 분파는 자파 일색으로 지도부를 구성하여 조합원, 또는 조합 내의 다양한 견해와 세력을 고루 대표하지 못함으로써 대표성에서 약점을 지니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는 더 나아가 특정 활동가 집단이 조합 집행부를 장악했을 경우 이들 활동가 집단은 조합 집행부와 “뿌리가 같다”는 이유 때문에 스스로의 활동과 운신의 폭에서 한계를 갖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향은 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 지도부 또는 노동조합 내의 활동가 집단을 “자신들의 개인적 야망을 위해 노동조합을 이용하려는 이익 집단”으로 비치게 하는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김준, 1998: 129).

마. 단절 : 조합민주주의의 위기

내부민주주의에서 토론은 핵심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토론은 단순히 정보공유의 차원을 넘어서서 노동운동 간부와 조합원들 간의 가치 및 전략을 공유함으로써 노동운동의 리더십을 형성하는 주요한 수단이자 그 자체로 노동조합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우선 현재 한국의 노동조합은 조합원과 간부들 간의 접촉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즉, 민주노총 조직혁신위원회가 2005년 4~5월 간부,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식조사를 보면 정체된 조직 상황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조합원이 노조 대의원(소위원)과 대화하는 횟수’에 대해 ‘거의 매일’이라는 답변이 21.7%인 데 비해 ‘1~2주에 한 번쯤’과, ‘거의 만나지 않음’이 각각 22.2%였고, ‘한 달에 한 번쯤’이라는 답변은 18.9%로 나타났다. 노조 상근간부와 대화 횟수도 크게 다르지 않아 거의 만나지 않음(23.7%), 1~2주일에 한 번쯤(23.7%), 한 달에 한 번쯤(20.1%) 순이었다. 또한 노조 교육의 경우 분기별 한 번(27.7%), 1년에 2번(21.5%), 1년에 1번(15.3%) 순으로 조사됐고, 교육이 전혀 없다는 응답도 14.1%나 된다. ‘노조가 제공하는 교육기회가 충분하냐’는 물음에는 보통이라는 답변이 44.3%, 아니다는 응답은 40.1%였다. 이는 조합원들의 목소리가 노조간부에게 전달되고,

주요 사업이나 투쟁이 조합원들과 공유되지 못하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 준다(민주노총, 『노동과세계』 2005. 7. 21).

이러한 현실에서 전국수준에서 노동운동이 전개하는 각종 정치활동, 정책적 요구와 제도개선 요구는 평조합원들의 요구와 이해를 하부로부터 통일하고 일반화하여 나온 것이 아닌 경우가 많다. 양 노총의 상층간 부들이 사실상 일방적으로 제시한 정책과 제도개선 요구를 하부 노조의 조합원들이 받아서 벌이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정책과 제도개선 요구가 평조합원들과 상대적으로 괴리된 것은 우선 노동운동 조직의 구조적인 문제로서 핵심 의사결정권이 기업별노조에 있으며 조직구조가 파편화된 데 있다. 또한 이것은 의사결정구조의 문제이기도 한데, 즉 양 노총과 산업별 노조연맹들이 형식적인 대의원대회 이외에 평조합원들의 요구를 하부로부터 수렴하는 체계적이고 민주적 의견수렴 구조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결과 조합원들은 항상 정상 조직의 결정, 즉 정치활동 내용, 정책 요구, 제도개선 요구에 대해 공감하거나 지지하는 조합원들이 매우 적은 편이다.

대의원대회의 경우, 한국의 노동조합은 보통 1년에 한 번, 그것도 만나 질 가랑 대의원대회를 개최한다. 민주노총은 출범한 지 2년 반 만에 대의원대회를 열두 번 개최했고, 1998년 상반기에는 네 번 개최했다. 이처럼 대의원대회를 자주 개최한 것은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 잇따라 발생했기 때문이지만, 현장 간부들의 참여 아래 주요 사안을 결정함으로써 현장 간부들의 소외감과 박탈감, 불만을 해소하려 한 데서 비롯된 측면도 크다. 그러나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대회를 잇따라 개최하면서 대의원대회의 권위는 실추되고 형해화되었으며, 회의의 효율성과 책임성은 담보되지 않고, 결정사항은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김유선, 1998: 48): “대중적인 사업 공유를 통한 결정과 책임 있는 집행에도 구멍이 뚫려 있다. 당일치기, 길어야 1박2일로 열리는 대의원대회는 대의원을 안건 처리를 위한 ‘거수기’로 내몰고, 이렇게 결정된 방침은 집행 과정에서 누수현상으로 이어진다”(민주노총, 『노동과세계』 2005. 5. 25). 이처럼, 대의원대회의 경우 일상적인 사업 방침이나 의사결정에서는 집행부의 안을 추인하는 거수기의 역할을 하는 집행부의 수입

기구화되는 경향이 존재한다(배규식 외, 2008: 343~344).

또한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상임위원회 등 규약상 각종 의결·집행기구도 덩달아 형해화되고 그 권한과 책임이 불분명해졌으며, 복잡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지도부는 자신의 권한 행사를 포기한 채 대의원 대회에 모든 것을 물음으로써 결과적으로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악순환이 빚어지고 있다(김유선, 1998: 48).

이러한 상황은 노동운동이 현장 조합원들에게 리더십을 갖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현장 조합원들의 토론을 통한 결의가 없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동당의 지지를 결정해도 소속 조합원들이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비율은 낮다. 마찬가지로 양 노총의 정책적 요구와 제도개선에 대해서도 조합원들이 공감하는 폭이 적다. 양 노총이 지지하는 정치활동이나 정책적 요구, 제도개선 요구는 상층 간부들만의 활동 및 요구에 그치기 때문에 정치적 힘과 동원력이 떨어진다. 노동운동 상층부의 정치적 요구와 평조합원들의 일상적 요구 및 정치적 의식 사이에는 심각한 괴리가 존재한다. 이 또한 한편으로는 노동운동의 정체성 위기의 주요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배규식 외: 2003, 37~38).

한편, 단위노조와 상급단체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소통의 부재하에 있음이 발견된다. 현행 기업별노조 중심체제에서 총연맹은 하부 조직과의 관계에서 민주적 집중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 있으며, 사업장 단위 노조에 의해서 상급단체가 휘둘리는 일이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전국 7,000여 개로 파편화된 노조의 요구에 대해서 연맹이나 총연맹이 조정하거나 통제할 권위가 제도적으로 갖춰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를 외면할 경우 ‘맹비’를 무기로 연맹이나 총연맹을 압박하거나 상급단체의 변경을 카드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총연맹 차원의 사회적 제도개선 투쟁은 산하 조합원의 지지와 동력을 이끌어내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정길오, 2004: 28).

한편 단위노조도 상급단체에 대해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장 간부들은 상급단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반 사안과 관련해서 정보조차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고, 상급단체가 자신들의 요구와 의사를 잘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지도부와 현장 간부 사이에 인식

의 차이가 확대되고 있다”(김유선, 1998 : 47~48).

정파간의 소통도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오래 전에 확인되었다. 사실 정파들은 소통은 고사하고 상호간의 불신이 깊어져서 대화의 가능성조차 의심스러운 지경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사회적 교섭 문제를 둘러싼 2005년 민주노총의 대의원대회가 파행·폭력 사태로 나타난 것은 단적인 예이다. 민주노총은 이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폭력으로 얼룩진 민주노총’이란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주고 신뢰를 깎아먹는 타격을 입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조직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빚어진 문제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민주적 절차와 내용적 민주주의’라는 문제를 제기했다(민주노총, 『노동과세계』, 2005. 5. 25).

4. 대안을 위한 논의

가. 노동운동 위기 논쟁⁶⁵⁾: 쟁점의 재확인

2004년 노동운동 위기 논쟁은 1992년 위기 논쟁의 핵심 논자였던 박승옥(2004. 9)으로부터 촉발되었다. 박승옥은 한국의 노동운동이 현재 “정당성의 위기와 존폐의 위기” 상황으로서 “때늦은 개화, 때이른 조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존폐의 위기를 불러올 정도의 정당성의 위기는 무엇인가? 그것은 노동운동이 기득권을 가진 비도덕적 소수자의 운동이 되었다는 점에 있다:

21세기에 들어서서 한국의 노동운동은 위기를 걱정하는 수준을 넘어 어느새 ‘또 다른 가진 소수’의 운동으로 바뀌었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대기업 정규직 남성 노동자 중심의 민주노총은 오히려 기득권 세력으로 매도되기도 하고 이에 대해 동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은 이제 공공연한 사실이 되었다. 더구나 노동운동은 ‘왕자병 환자’로 치부되는 경향 아래 자신을 옹호해 주는 어떠한 사회 세력도 없는 고립무원의 상태에 갇혀 있는 실정이다(박승옥, 2004; 이하 인용은 동일).

65) 자세한 것은 유범상(2005 : 229~466) 참조.

그렇다면 노동운동의 위기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박승옥은 책임 소재를 이전과 마찬가지로 “전투적 노동조합주의”에서 찾고 있다. 그가 보기에 전투적 노동조합주의는 “노동계급 이외의 어떠한 사회세력과의 협력하지 않고 오로지 노동계급 독자주의의 폭력 총파업과 직접 전투를 통해 자본주의에 대한 경제 공격과 해체”를 꿈꾸는 “한국판” “생디칼리스트”에 불과했다. 또한 “기업별노조의 변형”에 지나지 않는 산별 전환도 정규직 대기업 노동자의 이득에 복무할 뿐이라고 보았다. 박승옥은 노동운동의 전략을 “정치세력화” 모델로 규정짓고, 이 모델이 성장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성장의 노동운동”이라고 비판한다: “더 많은 임금, 더 많은 여가, 더 많은 권력을 지향하는 ‘성장의 노동운동’은 결코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대안이 될 수도 없다.” 이처럼 박승옥은 초기 논쟁에서처럼 전투적 노동조합주의를 생디칼리즘이라고 비판하면서 대기업 정규직 노동조합을 이기주의와 소수자 운동으로 변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박승옥의 노동운동 비판은 찬반 논쟁을 불러일으켰는데, 전지윤(반전 반자본주의 노동자운동단체 ‘다함께’ 기자, 2004. 9)은 대기업 노동자들에 임금이 여전히 열악하다고 주장하면서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연대해서 근로조건과 임금의 상향 평준화를 위한 투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다른 비판론자인 황광우는 박승옥의 “조직를 타령”에 대해서도 전경련의 조직률이 “국민의 0.1%”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비판한다. 그리고 “70만 명이나(!) 되는 이 거대한 힘을 정당하게 이끌어가고 있지 못하는 우리의 무능력을 고민해야 할 때이다”라고 주장한다.

1992년에 이어 지상으로 두 번째 전개된 위기 논쟁은 1992년의 쟁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즉 박승옥으로 대변되는 위기론자들은 전투적 노동조합주의는 주체, 이념 또는 가치, 그리고 전략의 측면에서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국민들에게 리더십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보다 세련된 측면이 있다면 위기론자들이 현재의 노동운동을 비도덕적인 귀족노조라는 좀더 선명한 비판을 했다는 점과 생태주의라는 대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이다.

초기에 익명의 논자들이 논쟁에 참여하는 등 논쟁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될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한 채 노동운동 위기

론은 곧 수면 아래로 잠복해 버린 듯 보인다.

나. 민주노총 : 반복된 혁신의 시도와 좌절

2004년 민주노총 조직혁신위원회의 토론 이전에 이미 이갑용 집행부와 단병호 집행부에서 두 번의 내부혁신 논의가 있었다. 두 논의는 민주노총의 위기를 진단하고 내부 리더십의 확보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기획되고 실천된 것이었다.

우선, 1998년 말에 이갑용 민주노총 제2기 집행부는 조직혁신위원회를 구성했고, 1차 제도개혁과 2차 노동운동 방향 및 조직발전 전망을 제시했는데, 1차 과제는 크게 민주노총 임원선출제도 개혁, 대의원대회를 비롯한 회의기관과 기구의 구성과 운영, 민주노총 총국의 개편 등 조직체계와 운영의 개혁, 재정 개혁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러한 1차 제도개혁이 의미하는 핵심 의의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조합원이 직접 민주노총의 주체로 나서게 하는 통로와 과정을 개방하는 것이다. 민주노총 상층 지도부와 노동자 대중과의 거리를 좁혀 안으로는 민주주의를 확대·심화하고, 밖으로는 정권과 자본의 간섭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이다. 또 하나는 민주노총의 중앙지도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이다. 앞에서 말한 현 경제위기의 성격과 그리고 1998년 투쟁의 경험에서 확인했듯이 민주노총을 정점으로 하는 중앙집중투쟁 전선의 강화를 통해서만 노동자대중의 생존권 사수와 노동조합의 존립이 비로소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민주노총, 1999. 1: 125 참조). 하지만, 1999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수 확대, 지역본부장 중립 포함, 정무직제가 채택되고 나머지는 2/3 찬성을 획득하지 못해 부결되었다. 한편, 1999년 보궐선거로 당선된 단병호 보궐집행부가 2000년 초에 조직 내외의 19명으로 노동운동 발전전략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리고 이념과 노선, 구조조정 대안, 임금고용정책, 교섭투쟁전략, 조직혁신전략을 1년간 토론하여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제도개선안으로 진전되지는 못했다.

민주노총은 2000년 1년 동안 “노동운동 발전전략위원회”를 구성하여 민주노총의 이념, 노선, 정책, 운동방식에 대한 방대한 조사연구 및 토론

자료를 작성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조직 전체에 걸친 내부토론과 의견수렴을 진행하였으나, 조직 내부의 관심 부족과 의견의 충돌로 합의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관련 자료만 남겨 놓은 채 작업을 종료하였다(임영일, 2003: 47).

제4기 이수호 집행부가 들어선 뒤 민주노총은 2004년 3월 3일 1차 중앙위원회에서 조직혁신사업을 추진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이 조직혁신에 나선 것은 최근의 낮은 조직률과 정규직 중심의 노조활동으로는 더 이상 노동계급을 대표할 수 없다는 문제 의식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는 현장조직 약화로 대중투쟁력이 떨어질뿐더러 재정압박, 조직 피로도 누적, 내부민주주의를 둘러싼 갈등 등 현실적인 문제도 작용했다”(김태연, 2005. 9. 25). 열 달 가까운 조사 연구사업 끝에 민주노총은 같은 해 12월 15일 18차 중집위에서 강승규 당시 수석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직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혁신사업을 본격화했다.

조직혁신위는 이때부터 2005년 6월까지 5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현장토론용 초안을 마련했고, 초안을 바탕으로 7~8월에 순회토론을 벌인 뒤 2005년 9월 9일 5차 중앙위에서 조직혁신안을 의결하기에 이르렀다. 이때 마련된 조직혁신안은 산별건설특위 구성, 대의원 선거제도 개선과 소수할당제 실시, 대의원대회 운영 혁신, 규율위원회 구성, 재정안정성 확보, 윤리강령 채택, 조직혁신을 위한 특별 결의 등을 뼈대로 하고 있다.

이 같은 조직혁신안은 2005년 9월 23일 열린 35차 대의원대회에 상정됐다. 이날 대의원대회에서는 산별건설특위 구성과 조직혁신을 위한 특별결의만 의결하고, 조직혁신 과제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규약, 규정 제개정이 필요한 세부적인 혁신사업은 각급 의결기구에서 처리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대의원대회 직후 민주노총은 강승규 당시 수석부위원장의 비리 사태로 내홍에 휩싸여 지도부 총사퇴에 이르렀고, 비상대책위 체계로 운영됨에 따라 조직혁신사업은 잠시 중단됐다.

2006년 2월 21일, 보궐선거로 출범한 조준호 집행부는 곧바로 조직혁신 과제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미 앞서 열린 1월 11일 1차 중앙위에서 재정구조 혁신안, 선거제도 및 대의체계 혁신안, 비정규할당제, 재정투명

성 원칙, 윤리강령 채택안 등을 대의원대회에 상정해 의결키로 결의한 바 있는 터다.

민주노총은 연구작업을 거쳐 7월 13일 17차 중집위에서 선거인단 선거제, 대의원대회 내실화, 2007년부터 의무금 1천 원 인상, 정부예산 활용 확대 등을 뼈대로 하는 ‘조직혁신안 토론자료’를 채택했다. 7월 14일부터 8월 17일까지 15개 지역본부와 연맹별 단위노조 대표자 설명회를 진행하며 의견을 수렴한 상집위는 8월 16일 전격적으로 ‘임원직선제 안’을 조직혁신안에 포함시켰다. 또 의무금은 2008년부터 5백 원을 인상하고 2010년부터 정률제를 시행한다는 안으로 수정했다.

이어 8월 18일 20차 중집위가 상집위안을 일부 수정해 중앙위에 상정키로 함에 따라 ‘임원직선제’는 민주노총 안팎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직선제 찬반 논쟁부터 선거인 명부 확정의 문제, 선거 관리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논의가 곳곳에서 벌어졌다. 그러나 그런 논의도 무색하게 9월 19일 열린 38차 대의원대회에서는 혁신안 자체에 대한 논의나 의사분포 확인조차 해보지 못하고 정족수 부족으로 유회됐다.

한편 이미 결정돼 있는 규율위원회 구성 역시 6월 13일 4차 중앙위에서는 투표자수가 전체 중앙위원의 반을 넘지 못해서, 8월 22일 5차 중앙위에서는 규율위원 선거 건을 다루기 전에 회의가 유회되는 바람에 결국 규율위원 선출에 실패했다. 이처럼 2006년 들어 4번의 대의원대회가 유회 또는 무산된 데 이어 어렵사리 성사된 38차 대의원대회는 전체 대의원 1,036명(과반 519명) 가운데 한때 680여 명까지 참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조직혁신안 심의 도중 자리를 지킨 대의원은 510명에 불과했다. 결국 9명이 부족해 대의원대회는 유회됐다(민주노총, 2006. 9).

이상에서 보듯이 그동안 제시되었던 대안들은 노동운동을 바꾸어내지 못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것은 “조직혁신안이 그간 민주노총이 안고 왔던 과제를 담고 있지만 그 내용은 용두사미격이 되어버렸다. 제출하고 있는 내용도 매우 형식적이고 피상적이어서 제도개선안으로 담아 내기에는 매우 부족하다”는 언급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김태연, 2005. 9. 25). 즉 혁신안이 실천의 지침이 되지 못했던 것은 혁신안의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둘러싼 세력과 실천 의지의 문제였던 것이다.

민주노총의 경우 그동안 혁신의 논의와 제출된 혁신안은 노조원들의 무관심 또는 정파간 이견으로 사문화되는 경향이 많았다. 예를 들어, 두 번에 걸쳐 혁신사업에 참여했던 김태연 당시 정책국장에 따르면, “1999년엔 지역 순회토론까지 거쳐 혁신안을 제출했으나 핵심 내용이던 직선제에 대해 총연맹의 과도한 개입론, ‘집권 연장’으로 보는 정파적 시각, 시기상조론 등의 반대론 속에 규약 개정에 필요한 2/3 찬성에 못 미쳐 부결됐다. 재정자립 방안 또한 총연맹의 개입을 부정적으로 보는 태도 등으로 폐기됐다. 2000년의 경우 교수진까지 참여했으나 노동운동 방향 등 너무 큰 범위를 다루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어려움을 겪어 보고서를 내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민주노총, 『노동과세계』, 2005. 5. 25). 한편 2004년부터 비교적 오랫동안 현장의 참여를 독려하며 논의되었던 조직혁신안도 대의원 정족수 부족이라는 이유로 대의원대회에서 표결도 해보지 못했다. 다음의 자체 조사는 조합원들의 무관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보여준다. 단위노조 간부, 상급단체 간부, 그리고 단위노조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의 안전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응답(40.1%)이 모르고 있다는 응답(37.3%)보다 다소 높은 응답 분포를 보였다. 한편 단위노조 조합원들은 모른다는 응답(51.3%)이 안다는 응답 (21.9%)보다 훨씬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대의원대회 안전에 대한 토론은 응답자의 36.9%가 진행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한편 응답자의 41.1%가 대의원대회가 조합원의 의견수렴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민주노총정책연구원, 2005: 67).

다. 한국노총 : 리더 주도의 정체성 모색⁶⁶⁾

한국노총은 1988년 이후 개혁노총을 선언한 이후 내부개혁과 내부민주주의와 조직혁신을 위한 노력을 부단히 전개해 왔다. 예를 들어, 한국노총은 1987년 이후 노동운동 내에서의 헤게모니가 민주노조운동진영으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로서 1991년

66) 유범상(2005) 참조.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이라는 새로운 운동 기조를 천명한 바 있고(한국노총, 1991), 경제위기 이후 다시 유사한 기존의 운동 노선을 천명한 바 있다(한국노총, 1999). 그러나 한국노총의 경우 이것이 조직 내부의 폭넓은 토론과 합의에 기초한 것이 아니었고, 그 내용도 실상 매우 소략하여 실질적인 의미는 거의 없는 것이었다(임영일, 2003: 47).

한국노총은 1994년에는 ‘노총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2002년에는 ‘한국노총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한국노총의 개혁과 혁신을 도모하고자 하였고, 2005년에는 노조 재정 비리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조합원과 일반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한국노총은 ‘노동조합의 도덕성과 재정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직혁신위원회와 기획단’을 구성하여 구체적인 혁신방안과 실천적인 개혁 추진방안을 마련해 왔다. 한편, 한국노총은 이념 정립을 위한 노력도 전개하였는데, 1991년 “민주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노동조합주의”, 2001년 “힘·연대·정책·희망”을 표방한 인본주의의 지도이념을 채택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이러한 한국노총의 혁신과 이념 정립의 노력은 최근 이용득 집행부 들어 보다 구체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서는 한국노총 60주년 기념토론회와 그 이후의 흐름을 중심으로 한국노총의 내부혁신 논의와 노동운동이념을 서술하고자 한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기존의 논의들을 살펴보면, 한국노총개혁특별위원회는 개혁방안을 담은 최종보고서(2003. 2)에서 개혁의 필요성, 한국노총운동의 발전방향, 한국노총 발전방향과 제도개선, 노동운동 역량강화 방안과 사무총국 체제개선 등 포괄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한국노동운동의 발전방향으로 산별 통합 및 건설과 양대 노총의 통합을 제시하고 있으며, 한국노총의 발전방향으로는 각급 의사결정 구조의 민주성 강화, 임원선거 제도개선, 노총 임원의 정계 진출시 조직적 대표성 부여 방안, 여성할당제 도입 등 여성 노동운동의 활성화 방안, 재정 자립 및 재정 운영의 투명성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조직혁신기획단은 권오만 한국노총 사무총장 등이 연루된 택시노련 기금투자 관련 비리 사건 등을 계기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2005년 5월 산별 및 지역본부 실무간부들로 ‘노동조합 도덕성 및 재정 투명

성 확보를 위한 조직혁신기획단'을 구성했다. 이 '조직혁신기획단'은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노동조합 도덕성과 재정투명성 확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활동했다. 그리고 조직혁신안은 대의원대회에서도 압도적인 표결로 통과가 됐다. 그리고 혁신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나 의결되는 과정에서 충돌이라고 할 만한 것들도 없었다. 이른바 '보수'이건 '개혁'이건, 노총이 변화해야 한다는 데는 모두가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용범, 2005a: 5).

한편, 한국노총은 이념적 측면에서도 정체성 확립을 위해 노력해 왔는데, 1991년 “민주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노동조합주의”와 2001년 “힘·연대·정책·희망”이라는 문건으로 표명된 인본주의 이념이었다. 전자가 민주노조운동과의 조직경쟁력 차원이었다면, 후자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대항 이념이었다. 이후 한국노총이 창립한 사회민주당이 선거 과정에서 사회민주주의를 자신들의 이념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두 문건이 대의원대회 결의라는 요식 절차를 거치기는 했지만 광범한 대중적 토론을 기초로 한 것은 아니었으므로 한국노총에 있어서 지도적 역할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문건의 한계를 더 크게 하는 것은 실천 측의 문제로서, 첫째로 결의와 실천의 괴리가 용인되는 관행과, 둘째로 보다 본질적인 문제가 되겠지만 실천 주체의 문제가 더 크게 가로놓여 있었다. 실천 주체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노총이 전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 첫째, '선택과 집중'을 하기 어려운 분권적 조직 풍토가 크게 자리잡고 있다는 점과, 둘째, 한국노총 체계에서 전통적으로 지배해 온 실용주의적이고 실리적인 경향성이 이념의 실천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한국노총, 2006. 2: 25~26). 이처럼 기존에 제출된 이념들은 내부토론을 통해 제출되는 과정을 생략해서 제출되거나 제출된 이후 현장에서의 토론과 현장에 대한 규정력이 취약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 것이었다.

2006년 이전의 앞의 조직혁신과 이념 논의들은 기본적으로 민주노조 진영, 즉 민주노총을 의식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응으로 추진되고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력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현재의 논의들은 이와 다소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이것은 한국

노총이 일정한 자신감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우선, 한국노총은 자신들의 원죄였던 자주성의 문제로부터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1996년 말 노동법 총파업과 1997년 대통령선거에서의 야당과의 정책연합을 통하여 집권여당 편향을 결정적으로 벗어나기 이전까지 가장 큰 문제점은 자주성 문제였다. 그러나 이 자주성 시비 또는 어용 시비로부터는 확실하게 벗어났다. 실상 ‘녹색사민당’을 통한 독자적인 정치세력화 시도는 권력과의 자주성이라는 측면에서만 보자면 1997년 야당과의 정책연합 이상으로 의미가 분명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노총이 제반 사업을 기획해서 추진하거나 정치 방침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데 있어, 그리고 조직 안팎에서 이를 평가하는 데 있어 자주성의 잣대를 버릴 것을 제안한다”(장대익, 2006: 41).

한편, 한국노총의 최근의 행보는 민주노총에 대해서도 일정한 자신감을 갖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한국노총은 민주노총의 현장력과 선명성 그리고 이에 기반한 투쟁성에 대해 지극히 열세였고 이것에서 나오는 노동의 힘과 노동자들의 지지에 대해 열등감을 가져왔다. 그런데, 1990년대를 경유하면서 이러한 전투적 노동조합주의가 노동운동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받으면서 한국노총은 민주노총과의 차별성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보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운동의 방향이 사회의 변화와 함께 해야 한다. 1980년대 말 노조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등장한 전투적 조합주의는 큰 호응을 받았다. 당시 정치민주화가 절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대중이 이를 거부한다. 노동운동 주체들이 이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 더구나 생산현장에 나이가 많은 노동자가 늘어나는 데 비해 진취적인 젊은 노동자들이 유입되지 않으면서 노조활동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이용득 인터뷰, <내일신문>, 2007. 1. 11).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노총은 2006년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 새로운 노동운동 이념을 제창한다. ‘평등복지사회 실현’을 추구하고 ‘참여와 사회연대적 노조주의’를 운동기조가 그것인데, 한국노총은 창립 60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노동운동 역사에 대한 단절과 계승, 발전과 도약이라는 대명제하에 운동 이념으로서 ‘평등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참여와 사회연대적 노동조합주의’를 지향하고, 노동운동의 사활이 걸린 조직 강화와 확

대전략, 노동의 유연화에 대항하는 반신자유주의 연대투쟁이라는 두 가지의 운동전략과 산별노조 건설을 통한 조직확대 및 강화, 사회개혁(공공성)투쟁의 강화, 사회적 대화체제의 구축이라는 주요한 3대 운동방향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시급한 사회 양극화와 빈곤 문제를 해소하며 궁극적으로 평등복지사회 건설을 위해 노력할 것을 제시했다(한국노총, 2006. 2. 25).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최근의 인터뷰에서 새롭게 정립된 한국노총의 이념이 의미하는 바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그에 의하면 사회개혁적 노동운동의 실천 전략은 투쟁성보다는 대중성에서 나온다: “협조주의라면 투쟁 없이 협상만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우리 참여정부 이후 노사정책 후퇴에 대해 단식·식발투쟁뿐만 아니라 40일간의 천막농성과 장관 퇴진운동까지 했다. 노사관계 로드맵에서 근로자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10여 회 대규모 집회를 가졌고, ILO총회에서 철수하기도 했다. 이런 투쟁활동을 협조주의라고 할 수 있나(앞으로 투쟁을 강화한다는 뜻인가). 운동방향을 관철시키기 위해 어떤 수단을 선택할 것이냐가 문제다. 한국노총은 대화와 협상을 중심으로 한다. 하지만 이것은 협조라는 의미와 다르다. 교섭에서 협상력을 높이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투쟁성과 대중성이다. 특히 대중성을 잃어버리면 운동을 할 수 없다”(이용득 인터뷰, <내일신문>, 2007. 1. 11). 이처럼 그는 투쟁성보다는 대중성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최근에 보인 한국노총의 실천 방식, 즉 평화집회, 외자유치 활동, 노사발전재단 설립 등은 이러한 한국노총의 최근 인식과 실천방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최근 평화집회도 대중성을 확보하려는 활동인가) 그렇다. 평화집회뿐만 아니라 정부·재계의 외자유치를 지원한 것도 마찬가지다. 대중성을 높이지 않으면 협상력이 극대화될 수 없다”(이용득 인터뷰, <내일신문>, 2007. 1. 11).

우선 한국노총은 2006년 11월 25일 집회에서 평화집회를 주도했고 이것에 대해 한 언론은 민주노총과 비교하면서 이 집회를 다음과 같이 논평하고 있다: “한국노총의 ‘전국노동자대회’는 평화집회 공약을 실천한 자기 규율의 모범으로 무척 빛났다. 이날 집회에서는 죽봉도 쇠파이프도

보이지 않았다. 교통체증도 없었다. 그렇다고 이들이 시도한 집회 개최의 주요 요지가 알려지지 않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2만5,000명이 참가한 집회가 불상사 없이 끝남으로써 이미지 개선에 따른 홍보 효과는 대단히 컸다. 이날 평화시위는 지도부의 강력한 의지가 이끌었다. 22일 민주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등이 잇따라 벌인 폭력시위에 대한 시민의 분노를 한노총 지도부가 재빨리 수용하는 리더십을 보였다. 전술 변화로 한노총은 긍정적 여론 획득은 물론 ‘엘로 노조’ ‘뒷골목 노조’라고 서로 비방하던 민노총과 차별성을 확실히 부각시켰다”(〈헤럴드경제〉, 2006. 11. 28). 한편, 한국노총은 “우리나라 사회의 책임 주체로서 외국인의 건전한 직접투자를 유치해 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 4월 18일 한국노총과 KOTRA가 체결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공동협력 약정서’에 의거 노·사·정·외가 공동으로 IR을 실시”했다고 보고했다(한국노총, 2006. 7. 4). 이에 이용득 위원장은 경제단체장들과 더불어 뉴욕에 가서 ‘내가 총대를 멘 테니 나를 믿고 한국에 투자하라’고 외국기업 투자유치에 발 벗고 나섰다(이용득 위원장 인터뷰, 2007. 1. 23, 뉴스메이커 709호). 특히 2007년 2월에 정식으로 출범하는 ‘노사발전재단’ 역시 논쟁이 되고 있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과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상수 노동부 장관, 조성준 노사정위 위원장은 2006년 11월 30일 오후 여의도 노사정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관계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노사 주도의 정책사업추진 기본합의문’을 채택했다: “노사정은 최근 우리 사회가 직면한 치열한 국제경쟁,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 약화 등 대내외적인 도전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그간의 노사관계 및 정책추진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구축하는 것이 긴급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또한 노사정은 자율화 분권화의 세계적 흐름에 부응하여 고용, 직업능력개발, 근로복지 등 각종 정책추진에 있어 노사의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대화와 협력에 기반한 파트너십을 굳건히 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전략이라는 데 공감하였다”(노사관계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노사 주도의 정책사업추진 기본합의문, 2006. 11. 30). 이 기본합의문은 노사발전재단의 사

업을 승인하고 진전하는 기본 원칙인데, 이용득 위원장은 이에 대해 “그 동안 노사가 서로 대립하던 칼 대신 호미를 들고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공동 경작할 땅이 없었다. 땅은 모두 정부의 것이었고, 경작도 정부가 했다. 유럽 노사는 100년 이상 스스로 머리를 맞대고 법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활동을 했다. 이런 문제 의식을 기반으로 노사발전재단을 통해 새로운 노사 패러다임을 정립하자는 게 내 주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이용득 위원장 인터뷰, <내일신문>, 2007. 1. 11).

이상의 언급들과 실천들은 이제 확실하게 한국노총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민주노총의 이념과 실천전략과 상당히 차이를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용득 위원장의 다음의 인터뷰는 이것을 보다 잘 드러내 준다: “무엇이 선이고 악이라는 생각에 반대한다. 보수와 진보는 늘 병존한다. 서로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다. 내 개인 성향은 진보적이다. 지금도 개혁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에게 보수가 적은 아니다. 보수도 많은 장점이 있어 국민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다”(이용득 위원장 인터뷰, <내일신문>, 2007. 1. 11); “노동운동의 조직률은 지난 1977년 첫 통계가 나올 때 25.4%였는데, 지금은 10.4%예요. 이제 곧 한 자리 숫자로 떨어질 겁니다. 이제는 일신영달을 위한 노동운동도 안 되고, 이념운동도 안 되고, 순수한 노동운동으로 가야 합니다. 순수 노동운동으로 가서 현장 조합원과 함께, 또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이 돼야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지 않죠”(이용득 위원장 인터뷰, 2007. 1. 23, 뉴스메이커 709호).

이상에서 보듯이 한국노총은 민주화 이후 내부개혁을 통해 혁신을 시도해 왔다. 이것은 민주화라는 시대적 배경과 민주노조운동이라는 경쟁자의 등장으로 인한 외부로부터 그 계기가 주어진 측면이 많았다. 그동안 한국노총은 자주성, 민주성, 현장성의 결함으로 민주노총을 쫓아가려고 하였고 때문에 그 차이는 오히려 좁혀져 왔다. 그러나 이런 2007년 들어 차이가 확대될 전망이다. 노동운동 위기가 본격화되면서 이 위기의 담론이 주로 민주노조운동의 실천방식에서 비롯된 것이었기 때문에 한국노총이 보다 자신감을 갖고 조직민주주의와 내부혁신 그리고 이념 정립을 시도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즉 한국노총은 1987년 이후 내

부개혁을 통해 국가로부터 일정한 자주성을 획득했다고 평가하고 있고, 총파업의 참여를 통해 현장성을 일정하게 가졌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노총은 최근 투쟁과정에서 슬로건을 ‘현장과 함께 국민과 함께’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현장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혁신이나 김태환 열사 투쟁에서 선명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물론 아직 다양한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만, 그동안 한국노총이 시달려 왔던 ‘어용 시비’의 멍에로부터는 이제 분명하게 벗어났다고 판단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주체 몇몇의 의지가 아니라 객관적인 상황과 조건으로 인해 한국노총은 확연하게 변화와 개혁의 길을 들어서 있습니다”(이용범, 2005: 36). 특히 노동운동 위기 이후에 민주노조운동의 전투성이 오히려 조직노동의 위기의 주범이 되는 상황에서 한국노총은 더 이상 민주노조운동의 잔상에 있는 것이 효과적인 전략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 특히 최근에 비정규직 법안을 둘러싼 한국노총과의 갈등은 독자노선을 가는 데 한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개혁 논의들은 민주노총과 비교하여 현장의 참여 없이 집행부의 의지와 의도에 따라 진행되어 온 측면이 크다. 특히 위원장 개인의 소신과 정치적 행보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향후 조직 내부의 문제가 될 여지를 담고 있다.

라. 위기의 공감과 대안의 모색 : 산별노조 전환의 경우

1992년 일각에서 노동운동 위기론이 제안될 때만 하더라도 노동운동 진영은 위기를 승인하지 않았다. 하지만, 점점 낮아지는 조직률에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노동조합 위기는, 2007년을 분기점으로 노동운동 전체가 객관적인 사실로서 공감하기 시작했다. 위기의 승인은 자연스럽게 혁신 논의의 반복으로 나타났다. 양 노총의 혁신안은 내용에 있어서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 대표성과 연대성의 위기에 직면하여 제시된 정치세력화, 사회협약, 산별노조 건설 등의 전략은 큰 경향에서 차이를 찾기 힘들다. 이 중에서도 산별노조 건설은 노동운동 위기의 핵심적인 주범으로 지적되어 온 기업별노조 체제를 극복하는 근본적인 대

안으로 인식되어 왔다.

한국노총은 1996년 대의원대회에서 “자주적인 산별 체제 건설을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결의한 바 있으나, 1997년 대의원대회에서 다시 “강력한 산업별 단일노조 건설을 위해 다양한 경로와 방법을 모색”하기로 결의하였다(한국노총, 1998: 261). 민주노총은 출범 당초부터 산별노조 건설을 가장 중요한 조직적 목표로 설정하고 있었고, 산별노조로의 전환을 위한 여러 가지 모색과 시도를 계속해 왔다. 민주노총은 산별노조로의 전환 경로와 관련하여, 기업별노조의 산별노조로의 재편과 미조직 노동자의 가입 추진, 공동요구에 기초한 공동교섭, 공동투쟁을 통해 단위노조의 권력을 점차 산별연맹으로 이관할 것, 유사한 산업별 조직간의 통폐합, 각 조직의 조건에 따라 소산별 단일노조를 건설하거나 산별연맹을 바로 산업노조로 전환시키는 경로 등 다양한 방침을 모색했다(임영일, 2003: 54~55).

보다 본격적으로 산별노조 건설이 논의된 것은 1997년 노동법 개정과 경제위기 이후 현실적 화두로 떠올랐다. 경제위기와 이로 인한 노동법 개정은 노동자들의 권위를 신장시킨 측면도 있었지만, 노동시장 유연화, 즉 정리해고제, 파견근로제 등의 도입과 임금삭감, 상여금 반납 등의 조치를 취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중소기업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정규직 대기업 노동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이에 대해 노동운동 지도부와 대기업 노동자들을 포함한 일반노동자들은 점차 기업별노조 체제로는 이러한 노동시장 유연화 공세, 노동운동에 대한 공격, 다시 말해 노동운동 위기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민주노총, 『노동과세계』, 2005. 8. 25; 김석준, 2003: 231). 이와 관련하여 김태연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노조 이기주의, 노동귀족 등 대기업 노조에 대한 이데올로기 공세와 그에 따른 사회적 압력에 부딪히면 대기업 노조도 결국 고립되고 말 것 … 시급히 산별노조로 전환해야 한다”(민주노총, 『노동과세계』, 2005. 8. 25).

하지만, 경제위기 이전에 산별노조 전환은 노동조합 지도부의 높은 인식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노동자들의 반대로 쉽게 진전되어 오지 않았다. 이런 중에 노동시장의 급변에 따른 고용불안과 고용형태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개별 기업의 정규직 노동자만을 조합원으로 하는 기업별노조는 적절한 대응 방안을 찾을 수 없었고, 산별노조로의 조직 전환을 통해 비정규직과 미조직 노동자들을 폭 넓게 조직하는 것만이 유일한 활로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즉 1997년 위기 이후 광범위한 노동시장 유연화 공세 앞에서 평범한 일반 노동자들도 서서히 산별노조의 필요성을 자각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즉 경제위기 이후 진행된 노동시장 유연화 공세와 고용위기에 직면하여 이처럼 기업별노조 체제와 분권화된 단체교섭 체도를 골간으로 하는 기존의 노동체제가 한국의 노동운동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노동운동 발전의 유효한 틀이 아니며, 오히려 노동운동의 위기를 촉발, 심화하는 구조적 원인이 되어 있다는 점은 이제 적어도 민주노총 조직과 조합원들에게 폭 넓게 인식되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 조직을 기업별노조에서 산별노조로 전환시키고 그에 상응하는 조직체계와 운영의 혁신을 꾀하며, 나아가 정부와 사용자를 압박하여 단체교섭구조를 기업별 교섭구조에서 산업별 교섭구조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정도의 차이, 강조점의 차이, 우선순위의 차이는 있으나) 폭 넓은 합의가 존재하게 되었다(임영일, 2003: 38, 55).

이러한 인식하에 양대 노총은 산별노조로의 전환을 서둘렀는데, 민주노총의 경우, 가장 먼저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이 1998년 2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결성식을 개최하고 산별노조로 전환했다. 보건의료산업노조에는 병원노련 산하 130개 노조 중 93개 노조 25,704명이 참여하였다. 보건의료산업노조는 사실상 최초의 산별 단일노조였으며, 다른 산업의 산별노조로의 전환을 위한 선례가 되었다(임영일, 2003: 55). 이 결과 2004년 12월 말 조직 현황에 따르면 민주노총 소속 산별노조는 35곳(조합원 29만 3,347명)으로 전체 조합원(62만 812명)의 47.4%에 이르렀다.

이후 각 산업에서 산별노조를 위한 노력이 전개되었지만, 대기업 노조의 반대로 인해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기업 노조들이 산별노조를 찬성하게 된 ‘대사건’이 일어났는데, 2006년 6월 현대, 기아, GM대우자동차 등 완성차기업 노조들이 산별전환 여부를 묻는 조합원 투표를 실시한 결과 규약 개정에 필요한 70%선을 모두 넘어 산별노조로 결집되게 되었다. 기존 금속노조는 자동차부품업종 등 주로 중소

사업장 위주로 4만 1,000여 명이 조직되었던 것에 비하여 현대자동차만으로도 4만 3,000여 명의 조합원이 일거에 금속노조에 가입하고 기타 완성차업체들은 물론 조선, 기계, 철강 등 금속산업 노동조합들 중 상당수가 산별 전환을 결의했다. 우선 2006년 11월 15일 민주노총 산하 철도노조(조합원 2만 4,842명)가 68.4%의 찬성으로 운수산별 전환을 통과시키고, 뒤이은 12월 26일 철도·화물·버스·택시 등이 참여한 전국공공운수노조연맹이 출범하였다. 동시에 11월 2일 사회보험노조가 68.6%의 찬성으로 산별 전환에 성공한 뒤 11월 30일 ‘공공서비스노조’가 창립 발기인대회를 가지면서, 양대 노조의 통합연맹 구성이 본격화되었고 결국 2007년 1월 19일 공공서비스노조, 운수노조 그리고 공공연맹 산하 산별미전환 노조를 포함한 15만 산별연맹이 출범하였다. 또한 11월 23일 금속연맹 산하 34개 노조(조합원 14만 4,492명)가 ‘금속산별노조’로 공식 출범하였고, 보건의료 및 금속, 금융 등에서 산별교섭이 이루어졌으며, 지역일반노동조합이나 여타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초기업별 임단협이 추진되기도 하였다(은수미 외, 2008: 2)

이상에서 보듯이 산별노조로의 전환은 하나의 경향으로서 점차 대기업으로부터 공공부문에까지 확산되었다. 그 결과 2007년 초 민주노총 조합원의 76.7%가 산별노조에 속한 것이 되었다. 한국노총에서도 금융, 택시와 버스의 지역노조 결성, 전력·체신·담배인삼의 단일 산별노조를 포함하면 산별노조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30%에 달하고 있다(p.264). 이처럼 2007년 이후 조직형태 면에서는 산별노조가 한국의 주도적인 노동조합 조직형태로 등장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왜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은 2006년에 산별을 선택했는가? 그것은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더 이상 기업별노조가 자신들의 이익을 보장해 줄 수 없는 것이 보다 명확해졌기 때문이다. 즉 “1987년 이후 근로자들의 지위 향상에 매우 유효한 기구였던 기업단위에서 교섭 중심의 노동운동 및 노사관계가 오히려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노동자들의 계층 분화를 심화시키는 상황은 분명 노동운동의 위기로 인식되었을 것이고, 노동조합은 유연화된 노동시장에 대응하는 새로운 연대의 틀로서 산별 조직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노동조합이 눈에 보이는 기

득권에 안주하지 않고 비정규직·하청기업 노동자들에까지 조직의 폭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은 이타심이나 연대의식보다는 오히려 기업별 노동조합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 이제는 별로 없다는 변화된 정치지형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 기인한다. 즉 노동자들은 기업 내 임금·근로조건 결정에서 큰 효과를 내기 어렵게 되었고, 고용보장에 대한 노사 합의라는 것도 매우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대처방식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최영기, 2006. 9:2).

이에 대해 최영기(2006. 9)는 기업별노조가 약화되는 가운데 당분간 기업별지부가 별도의 노동조합으로 활동하면서 산별 조직과 권력을 분점하는 혼합형 산별노조인 한국형 산별노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2007년 현재 기업별노조의 관행과 의식이 재정, 인사, 교섭, 투쟁 등에서 지속되면서 산별노조로 필요한 중앙집권화가 되지 않고 있다. 즉 기업별노조와 기업별 노사관계의 관성과 관행은 사용자들은 물론이고 조합원, 노조간부들의 의식, 행동, 정체성에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다(배규식 외, 2008:377).

대기업에서 산별노조 전환을 가결한 것과 산별노조에 포괄된 노동자들의 확대는 분명 2007년을 새로운 노동운동의 원동력의 해로 삼을 만큼 대사건으로 보인다. 이것은 그동안의 진전, 즉 산별노조 중앙으로의 인력 및 재정 집중, 주요 산업에서의 산별 중앙협약 체결 및 사용자단체 구성의 부분적 실현, 산별 최저임금 설정 및 비정규직 우대조항 체결 등 전 사회적 의제의 추진, 산업 내 임금 및 근로조건 통일을 위한 움직임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산별노조의 전망을 밝게 해주는 측면이 있다(배규식 외, 2007:265).

그러나 한국의 산별노조 운동은 여전히 많은 한계와 과제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즉 첫째, 기업별노조로부터 산별노조로의 전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별노조의 기업지부 존속이나 지부의 독립성 유지 등 기업별노조의 잔재가 강하게 남아 있다. 문제는 이들 대부분이 ‘무늬만 산별’이라는 ‘자가진단’과 냉소적 평가가 높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해 임영일은 기업지부 체제, 보건의료노조 산별협약 논란, INI스틸 금속노조 탈퇴 등을 예로 들며 “이는 실제로 조직 편제와 활동을 산별노조 체계로 전환

하지 못해 무늬만 산별이지 내용은 여전히 기업별노조 연합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만든다”고 진단했다. 임 소장은 이어 “산별로 전환했든, 전환을 준비중이든 대부분 ‘전환’만 있지 ‘내용’은 없다”며 “산별노조로 전환되면 다된 것으로 여기고 있지만 그렇다고 산별노조가 되는 건 아니다”고 비판했다(민주노총, 『노동과세계』, 2005. 8. 25). 둘째, 전체 노동자계급 가운데 주로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만 포괄하고 광범한 영세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포괄하지 못함으로써 ‘대표성의 위기’를 맞고 있다. 즉, “노동시장 분절화 경향이 한층 강화된 현실에서” “대부분의 조직이 기존의 기업별노조를 해체하여 산별노조로 재편하는 과정을 밟았을 뿐, 그 과정에서 하청, 파견, 비정규직 등 기존의 조직 대상이 아닌 노동자들까지 흡수하는 조직을 만들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임영일, 2003: 68). 특히, 주목되어야 할 것은 대공장 노조들이 산별 전환을 위해 조합원들을 선전하는 과정에서 기득권 보장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그리고 산별 전환 이후에도 실질적으로는 1사1노조가 원칙이 현장에서 관철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산별교섭에서 임금이 중앙교섭의 의제가 되면 노동조합 내부의 논란과 균열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산별노조의 핵심 목표인 산업 내 임금 및 근로조건의 통일적 구조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넷째, 산별교섭의 안정적인 교섭 틀이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pp.264~265).⁶⁷⁾ 이것은 정부와 사용자의 태도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크다. 기업별노조를 산별노조로 전환시키는 작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에 비해서 단체교섭의 구조가 산별교섭으로 전환되

67) 금속노조의 경우 산하조직 사용자들 모두를 중앙교섭에 참여하거나 사용자단체에 가입하도록 강제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1,000인 이상 대공장 지회의 경우는 이를 강제할 만한 조직력을 전혀 보이고 있지 못하다. 이에 따라 금속노조 조합원 15만 명 가운데 중앙교섭에 참여한 노조는 겨우 2만 명을 포괄하고 있는데 불과하며 사용자들에 대한 중앙교섭의 강제력도 낮는데, 이는 노동조합의 현장 조직력이 취약하다는 것을 뜻한다. 보건의료노조는 서울대병원 등 일부 대학병원들이 노조를 탈퇴하면서 조직 축소는 물론이고 일정하게 산별교섭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의료노조의 경우 2007년 교섭에서 사용자단체 참가병원 수는 96개로 2006년의 산별협약 수용병원 수 102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중앙교섭 참여를 강제하기 위해 사용자단체 구성을 법적으로 강제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은 형편이다(배규식 외, 2007: 146~151).

고 산별단체 협약이 체결되는 것은 정부의 이 문제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 그리고 특히 사용자와 사용자단체의 완강한 거부로 별다른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는 1998년 6월 민주노총과 “산업·업종별 노사단체가 간담회·협의회를 정례화·활성화한다”고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003년 노무현 신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협조적 노사관계를 위한 사회적 파트너십 형성을 위해 노사정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산별교섭의 점진적인 실현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관련 법과 제도의 개편 등 산별교섭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일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단체교섭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는 사용자들의 태도에 있는데, 이들은 산별노조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를 지속적으로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98년 2월 사실상 최초의 단일 산별노조로 전환한 보건의료노조가 사용자단체의 완강한 산별교섭 거부로 매년 대규모의 파업투쟁과 지도부 구속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 사례라 할 것이다(임영일, 2003:57 참조).

5. 담론투쟁 : 지배담론의 사회적 승인과 노동운동 리더십 위기

앞서 진보세력이 반신자유주의 (또는 사회공공성) 담론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화 담론이 국가정치 수준에서 전면화되었다는 것을 서술했다(제4장 1 참조). 여기에서는 노동정치 영역에서 담론투쟁을 서술하고 어떻게 이기주의라는 지배담론이 사회적 승인을 얻게 되었는지를 서술하고자 한다.

1997년 말 경제위기 이전에 노동정치 영역에서 민주노조운동이 민주주의를 대변한다고 인정되었고 이와 관련된 ‘민주노조’, ‘노동해방’ 등의 담론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되었다. 이런 담론하에 있었던 조합원들은 노동운동 리더들을 믿고 따랐다. 노동자들이 보기에 지도부는 민주주의의 투사였고, 임금과 복지를 향상시키고 개선시켜 주었으며 대의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경제위기는 이러한 장면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이제 리더들은 불신의 화신이 되었다. 그들은 단지 자신들만의

이익과 권력을 추구하는 존재, 즉 노동조합은 이제 이기주의 집단이자 노동귀족들의 집합소가 되었다. 그리고 노동운동의 파업은 국민경제를 해치는 행위이고 노동운동 리더들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트러블 메이커’에 불과한 것으로 비추어졌다.

이것은 그동안 꾸준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지배세력의 담론이 사회적으로 승인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배담론 형성과 유포의 주요 주체는 전경련, 경총 그리고 각종 기업연구소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등과 경제신문들로 대변되는 보수언론들 그리고 자유주의 정치세력, 뉴라이트 전국연합, 자유주의 연대 등으로 대표되는 보수적 시민단체들이었다. 여기에서는 자유주의 연대의 회원들인 이재교·김혜준(2007)의 <거꾸로 가는 민주노총>과 경제신문 기자인 윤기설(2006)의 <제5권력>을 중심으로 노동운동에 대한 지배담론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책들은 공통적으로 비판의 칼끝을 민주노총에 맞추고 빨갱이, 경제위기 주범, 그리고 이기주의자라는 세 가지 담론들을 분석의 무기로 활용하고 있다. 우선 이들은 민주노조를 지칭하는 담론으로 <제5권력>(윤기설, 2006) 또는 <빨간 조끼>(이재교·김혜준, 2007)를 사용한다. 전자는 민주노총이 ‘무소불위’의 힘을 갖고 있고 이를 통해 자신들만의 이익을 대변할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용어라면, 후자는 노동운동이 공산주의자들의 결집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이름인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제5권력>에 따르면, 노동운동은 강력한 힘을 가진 ‘노동권력’으로서 특정 이익과 고임금에 집착하는 등의 집단이기주의에 빠져 있고 이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노동권력’을 피해 중국, 인도, 동남아 등지로 도망치듯 빠져나가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이 실질적으로 전체 근로자의 절반이 넘는 상황에서 고임금을 받는 1%의 ‘귀족노조’들의 내륙 찾기 투쟁은 우리 사회를 더욱 양분시키며 상대적 박탈감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2005년 한 해 동안 파업에 참가한 국내 노동자수는 18만 4천명으로 전

체 임금근로자 중 1.2%에 불과했다. 임금근로자 1백명 중 1명꼴로 파업을 벌인 셈이다. 다시 말해 1%의 근로자가 99%를 뒤흔들고 있는 셈이다. 자기 목소리를 내는 노동자는 1백명 중 1명꼴에 불과하고 나머지 99명은 자기 업무에 충실하고 있는 것이다(윤기설, 2006).

이처럼 윤기설이 노조 이기주의에 주목하면서 이것을 노동운동이 경제위기 주범이라는 것에 연결짓는다면, 이재교와 김혜준은 빨갱이 담론을 가지고 경제위기 주범과 노조 이기주의를 보여주는 전략을 택했다. 우선 그들은 전교조, 한총련, 통일연대 등과 함께 민주노총을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가로막는 5적’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그 근거로 민주노총을 북한에 동조하는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민노총의 정체를 잘 모른다. 그저 좀 과격한 노동단체로만 알고 있다. 하지만 민노총의 행태와 정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노동단체로서의 순수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친북, 정확하게 말하면 친김정 일적인 정치운동단체로 보일 뿐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김정일 정권에게는 도움이 되고 자신의 조합원들에게는 손해가 될 일만 골라가면서 할 리가 없지 않은가(이재교 · 김혜준, 2007: 7).

이 언급에서 보듯이 이재교 · 김혜준이 보기에, 민주노총은 좌파 집단임이 틀림없다. 더 나아가 이들은 민주노총이 친북단체라는 성격 때문에 투쟁만능주의와 이기주의 전략을 선택했다고 본다. 특히 이들이 보기에 노조조합 이기주의는 고용의 경직성을 만들어 내고 이에 기업들은 배치 전환과 고용조정이 보다 용이하고 과중한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는 비정규직을 선호하게 된다. 따라서 비정규직 문제는 ‘대기업 노조의 조직 이기주의 타파’, 다시 말해 정규직의 고도한 고용경직성 완화와 적절한 수준의 임금삭감에 있다고 본다(p.121).

한편, 노동운동 또한 세계화 담론과 이기주의 담론 등의 지배담론에 대해 사회공공성이라는 대항담론을 제시하고 담론투쟁을 전개해 왔다. 노동운동 내에서 공공성 담론은 ‘사회개혁 투쟁’ 또는 사회개혁적 노동조합주의’ 형태로 제출되어 왔는데, 이것은 1990년에 출범한 전노협과 1995년 출범한 민주노총에서 맹아적인 형태로 나타났다. 공공성 논의가 본격

화된 것은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공공부문에 구조조정이 몰아닥치면서 부터였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새로운 지배질서 구축 차원에서 진행된 구조조정에 맞서, 저항의 담론이자 현장에서 치열한 대중투쟁의 도구로서 ‘공공성 강화’가 제기되었다.

사회공공성 담론에 대해서는 아직 본격적인 토론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대체로 ‘시장화·이윤화에 대한 대항 또는 그것을 위한 행위’로 정의된다. 따라서 사회공공성 운동은 시장화·이윤화에 대한 반대 투쟁으로서 “자본주의를 넘어서려는 자본주의 비판운동”으로 정의되는 경향이 있다. 한편 사회공공성에서 ‘사회’는 여러 부분을 포괄하는 것으로서 예를 들어, ‘의료공공성’, ‘교육공공성’, ‘에너지공공성’, ‘공공철도건설’, ‘지하철 안전’, ‘문화예술 공공성’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사회공공성은 이런 각 부문의 공공성을 포괄하는 담론이다(오건호, 2004, 2008:380).

사회공공성은 필수서비스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계급과 민중의 이익을 위해 확보해야 할 사회경제적 영역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데, 따라서 사회공공성 투쟁은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전략’과 ‘노동운동의 사회화’를 위해 영역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노동운동의 사회화’의 경우, 비정규직 차별 철폐 및 정규직화 투쟁, 주40시간제 도입에 따른 공공부문 인력충원, 사회연대기금 조성 및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사회임금 쟁취투쟁,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개혁투쟁 등이 포함될 수 있다(박용석, 2004:57~58).

2003년 민주노총은 향후 5년간 추진해야 할 사회적 과제로 ‘사회공공성 강화’를 채택했고 민주노총 산하에 사회공공성위원회를 구성했다. 2004년 4월에 있었던 공공연대 확대간부 수련회에서 오건호 민주노총 전 정책부장은 사회공공성 투쟁을 “민주노조운동의 새로운 정체성 찾기”로 정의하면서, 이후 민주노조운동의 새로운 전략적 좌표로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맥락에서 공공운수연맹, 공무원노조, 전교조 등 공공서비스 부문 노동조합들은 각각 산업별 차원의 활동뿐만 아니라 공공부문노조 연대회의를 구성해 사회공공성운동을 공동으로 모색하고 있다(박용석, 2004:55; 오건호, 2004, 2008:373~374).

최근 공공부문 노동운동에서는 ‘투쟁’에서뿐 아니라 ‘일상 사업’에서도 사회공공성을 확보하려는 주체적인 노력들이 가시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의료노조가 ‘돈보다는 생명을’이라는 구호 아래 건강보험 재정 확대 및 보험 적용 의료서비스 확대, 그리고 이용자 중심의 각종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일상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것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이 밖에도 철도노조, 발전노조, 가스공사노조 등 국가 기간산업노조들이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배구조의 민주적 개선을 위한 일상적 정책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운동의 사회공공성 운동은 많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오히려 모호한 이론 및 원칙과 구체적 내용의 부재로 인해 사회공공성이 남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오건호, 2008 : 374).

이처럼 지배담론에 대해 노동운동은 대항담론을 제시함으로써 담론투쟁을 전개해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현재 ‘이기주의자’, ‘귀족노조’, ‘경제위기 주범’이라는 지배담론이 최종적으로 사회적으로 승인된 것으로, 즉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앞선 논의에 기반하여 볼 때 대체로 구조적·환경적 조건, 제도적 조건, 그리고 주체적 조건으로 나누어서 설명될 수 있다.

우선, 경제적·정치적 환경이 변화되었다는 것이 지적되어야 한다. 1980년대부터 시작된 범지구적 차원의 세계화는 1997년 말 경제위기를 배경으로 본격적으로 한국사회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 이로 인해 한국 사회는 ‘조절되지 않은 유연화’에 따라 사회 전반이 신자유주의적 방식의 사회경제 시스템으로 변했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권력관계의 변형을 수반했는데, 자본의 영향력이 커진 반면 노동의 힘이 축소되었다. 이로 인해 노동운동과 진보운동은 수세적·방어적 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었다. 담론투쟁은 힘 관계를 반영한다고 했을 때, 이기주의 담론은 이러한 경제적·정치적 환경 속에서 대항담론에 대해 손쉽게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 이것은 민주화와 경제호황 시기에 대항담론이 사회적 승인을 얻었던 것과 비교될 수 있다.

제도적 조건의 차원에서는 기업별노조 체제가 우선적으로 지적되어야

한다. 기업별노조 체제는 대기업 노동자를 주로 자기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익대변 자체도 이러한 조직원리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유연화는 대기업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을 우회해서 노동시장의 가장 취약한 부분, 즉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 노동자, 여성 노동자 등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이처럼 고용불안이 발생하면 할수록 정규직 노동자들은 자기들의 성과에 머물기 위해 단결했다면, 주변부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조직과 비정규직에 대해 불평을 하기 시작했다. 한편, 기업별노조의 대안으로 2007년부터 본격화된 산별노조 조직화는 기업별 노조의 관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무늬만 산별인 모습을 여전히 띠고 있다. 이러한 조직구조는 노동운동이 이기주의 담론의 공격에 취약하도록 만들었다.

주체적 조건으로는 노동조합의 역량과 실천이 지적될 수 있다. 노동조합은 기본적으로 노동시장 유연화와 분절화를 막지 못했음은 물론이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내는 데 실패했다. 즉 노동운동 리더들은 국제 자본 앞에서 서 있는 왜소한 자신을 발견했다. 모든 경제위기 탈출을 위한 프로그램은 IMF 각서로부터 나왔고 모든 역량은 경제위기의 탈출에 있었다. 이런 맥락에서 노동운동은 위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는데, 노동에게 부여된 임무는 노동시장 유연화의 제도화를 승인해 주는 것이었다. 노동운동은 정리해고제가 담긴 사회협약을 승인해야 했는데, 나중에 이것이 노동운동이 리더십을 상실해 가는 첫 걸음이 되었다. 왜냐하면 노동시장 유연화가 법적·제도적으로 날개를 달자마자 많은 것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한편, 노동운동은 노동정치에서 점차 체계적으로 배제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노동시장 유연화의 법제화를 위한 모임 외에는 노동운동이 초대되지 않았다. 즉 재벌개혁, 금융개혁, 구조조정, 사회정책 등의 영역에서 노동운동은 배제되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도 최종적으로 갈라지기 시작했다.

이처럼 신자유주의 시대의 노동운동은 무능했다. 그들이 그동안 누렸던 권력은 새로운 시대에 별로 효과적이지도 효율적이지도 않은 것에 불과했다. 그리고 이러한 권력행사 방식과 권력 효능은 겨우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을 지켜내는 데도 벅차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한편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갈등에 있어서 노동조합은 때론 방관하거나 때론 정규직 편을 드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해 노동조합은 연대성에 기반하기보다는 자기이익에 기반한 조직으로 인식되었다.

한편, 담론의 생산과 유통에 있어서의 주체적 조건의 한계가 지적되어야 한다. 민주노총은 사회공공성 어젠다를 선점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럴 능력도 없었다. 즉 양극화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이 사회개혁투쟁을 제대로 진행시키지 못한 이유는, 민주노총이 조직 역량을 배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중앙에서 이 사업을 기획·집행할 담당 간부가 턱없이 부족했고 형식적이거나 연맹과 지역본부 임원으로 구성된 사회개혁위원회 또는 사회공공성위원회가 설립되었지만 실제 활동은 미미했다(오건호, 2008: 377).

결론적으로 유연화 시대에 담론정치에서 패배했고 그 결과 노동운동은 이기주의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노동운동이 연대성과 대표성에서 정당성을 갖고 있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노동운동에 대한 정치적 과산 선고에 준하는 정치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노동운동에 덧씌워진 이기주의는 사회적으로 승인된 정치적 낙인을 의미한다.

제 5 장

요약과 토론

1. 요약

1997년 경제위기를 전후로 한국의 노동운동에 대한 노동자들과 시민 사회의 시선이 급격히 변화된 것으로 보인다. 즉 노동운동이 약자들과 국민을 위한 조직에서 강자, 즉 노동귀족을 위한 이익 집단으로 변모되었고 이 때문에 노동운동 리더십이 위기에 빠졌다고 평가되는 경향이 있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에 답하기 위해 우선 경제위기 이전의 노동운동이 해게모니를 가질 수 있었던 조건과 정치전략을 살펴 보고자 한다.

1980년대까지 노동자들은 사회적·정치적 약자였다. 사회적으로 그들은 ‘공돌이’와 ‘공순이’로 호명되었다. 당시 대부분의 육체노동자들은 저 임금 장시간 노동조건 속에서 노동을 했고 산업재해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다. 그들에게 자본과 국가 권력은 감히 쳐다볼 엄두조차 못 내는 신성한 것이자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감시탑(panopticon)’이었다. 이처럼 기업이 병영적 노무관리를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했다 면 국가 권력은 개발모델에 기반하여 경제성장에 관심을 집중했다. 한편 노동자의 대변자로 자처했던 노동조합은 실상 자본과 권력의 충실한 협조자였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노동자들을 억압하는 또다른 권력이었다. 이러한 거대한 억압 기계들 앞에서 노동자들은 자신의 몸을 소진시키고 있었다.

이처럼 1980년대까지 자본·국가·노동조합 등의 지배연합은 자신들에 저항하는 일체의 몸짓도 허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 자체도 불경스러운 일이었고 노동법상의 기본 권리인 단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노조운동을 전개했던 노동운동가들은 기존 권력, 즉 국가·자본·노조의 절대 권력에 저항하는 투사이자 이 권력으로부터 억압받는 박해자의 이미지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전태일 노동자의 분신과 학생출신 노동자들에 대한 정권의 가혹한 형벌은 노동운동과 그 지도부들이 순교자의 이미지를 갖게 만들었다. 이처럼 기존 권력으로부터 노동운동과 그 활동가들에 대한 억압과 탄압은 불의의 권력 또는 억압자들에 대한 저항자, 순교자 또는 박해자라는 노동운동 리더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고 이것은 노동운동 성장에 중요한 자양분이 되었다.

’87년 노동자대투쟁을 계기로 노동자들이 전면적으로 재조직화되기 시작했고 노동조합은 임금, 복지, 법개정 등의 다양한 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활동은 국민과 노동자 일반을 위한 투쟁으로 시민사회에 이해되었다. 이들의 투쟁이 노동자 일반을 위한 투쟁으로 인식된 이유는 노동법 개정 등을 통해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실현한 것에도 그 원인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들의 단체교섭과 임금인상투쟁이 기업 내 노동자들의 복지와 임금상승을 가져다주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우선 민주노조운동의 전투성에 대해 정부와 기업이 합법성이라는 이름으로 단죄했을지라도 노동자들과 시민사회는 이것을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점이다. 즉 전노협으로 대표되는 전투성은 임금인상과 노동자들의 지위 향상의 수단으로 인식되었고 어용노조와 구별짓는 민주노조의 정체성이었다. 또한 대기업 정규직 노동조합의 임금인상투쟁이 노동운동과 노동자들 사이에 선도적인 투쟁으로 인정되었고 실제로 이들의 성과는 일반 노동자들의 지위 향상을 이끄는 측면이 있었다.

더 나아가 노동조합 활동은 국민과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으로 인식되었다. 한국의 노동운동은 ’87년 노동자대투쟁을 통해 노동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옹호했고 1996년 말 총파업을 통해 변칙처리된 안기부법과 노동

법에 저항함으로써 민주주의와 고용불안정에 대한 국민과 노동자를 위한 투쟁으로 인식되었다.

이상에서 보듯이, 1987년 이후 1996년 총파업까지 노동운동 리더들 또는 한국 노동운동은 ‘약자’ 또는 ‘박해자’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었고 그들의 투쟁은 노동자들과 국민을 위한 투쟁이자 민주주의를 위해 귀중한 노력이라고 평가받았다. 이런 맥락에서 민주노조운동은 한국 정치에서 사회적 약자와 국민을 위한 의인의 등장으로 환호받을 수 있었다. 다시 말해 민주노조운동은 어용노조와 명확하게 대립되었고 열악한 노동조건과 저임금에 저항하여 노동해방을 가져오는 행위자였으며 일반 민주주의를 심화시키는 정치사회적 행위이자 조직이었다. 1997년까지 노동운동의 리더십은 노동자들과 시민사회의 이러한 평가에 기반하고 있었다.

한편 이 시기 노동운동의 리더십 확보는 3저 호황의 경제적 상황과 민주화라는 정치적 상황에서 기인했다는 것이 지적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시기 노동운동이 추구한 노동해방 담론과 임금인상 전략은 경제위기 담론에 우위성을 점할 수 있었으며, 정치경제적 민주화의 요구는 레드 콤플렉스에 기반한 반북 담론 또는 빨갱이 담론에 대해 우위에 있었다. 이러한 지지 속에 1996년까지 민주노조운동은 전노협에서 전노대로 그리고 민주노총으로의 조직화, 노개위라는 사회적 협의구조의 형성과 실험, 단체협약 체계의 정착 등을 통해 정치사회적 시민권을 획득했음은 물론 내부 정당성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노동운동이 의인으로 화려한 조명을 받고 있었지만, 노동운동의 리더십은 불안정한 지반 위에 기반하고 있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우선 노동조합 내부정치가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는데, 예를 들어 기업별노조 체제에 기반한 민주노조들의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은 단위노조들, 특히 대공장 노동조합에 대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일반 조합원들에 대한 리더십도 매우 취약한 상황에 있었다. 특히 조직되지 않은 노동자들이 80% 이상이었는데, 조직된 노동자들 중에서도 민주노조가 포괄하는 조직노동자는 5%를 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간의 조직경쟁은 자본과 국가에 대항한 노동의 연대와 단결을 저해하는 잠재적인 요소였다. 더욱이 대기업 정규

직 중심의 조직화는 항상 노동운동의 대표성과 연대성을 위협할 개연성을 가지고 있었다. 노동운동은 자신의 잠재화된 문제들에 대한 토론과 개선이 필요했다. 하지만 정파간 그리고 정파와 노동조합원들 간의 토론은 부재했고 이 과정에서 정파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분파적인 권력 집단으로 결집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계급으로 조직되기보다는 기업별로 ‘종업원’으로 조직되는 경향이 있었고 이것은 노동자들이 단위기업으로부터 제공되는 임금이나 복지와 같은 실리적인 이익에 관심을 갖도록 방치되었다.

1987년 이후 확보된 노동의 시민권의 경우도 노동운동이 아직 독자적인 정치세력화를 통해 제도화된 것이 아니었다. 기존 정당들에 대한 노동운동의 영향력은 매우 임의적이고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다. 또한 노동운동은 경제정책은 물론이고 국가의 사회정책에 실질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통로를 거의 가지고 있지 않았다. 특히 이 당시에 국가는 여전히 노동운동을 파트너로 인정하기보다는 정치상황에 따라 임의적으로 ‘이용’하려는 경향이 강했다. 민주화 이후에도 여전히 반공주의와 생산력주의 또는 국가경쟁력주의에 영향을 받고 있는 시민사회의 저성장도 노동운동의 향후 진로를 불안정하게 하는 요소였다.

이처럼 취약한 구조 위에 서 있는 노동운동 리더십은 그 취약성과 위협성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 경고를 받았다. 이미 1980년대 후반에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 중심의 노동운동이 갖는 한계에 대해 내부 비판이 제기되었다. 예를 들어 1992년에 제기된 위기 논쟁에서 노동운동은 ‘전투적 경제주의’에 불과하며 따라서 이미 위기에 빠져 있다는 경고를 들어야 했다. 하지만 노동운동은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큰 문제 의식을 갖고 있지 않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즉 이 당시에 노동운동은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과 기업별노조라는 자산 위에 안주하는 경향이 있었다.

한편, 자본과 정부는 이러한 전투적 노동조합주의 또는 노동운동에 우호적인 정치적·사회적 상황과 노동운동의 ‘전투성’을 제어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전개해 오고 있었다. 노동운동에 대한 물리적 억압이라는 고전적 수단은 물론, 임단협에 대한 개입, 노동시장 유연화 등이 시도되

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 담론 차원의 공세를 지속했다. 즉 정부는 때로는 반공주의에 기대어 노동운동을 공격하는가 하면, 때로는 경제위기설에 근거하여 노동운동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를 지속해 왔다. 이러한 시도들은 민주화와 지속적인 경제호황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언제든지 노동운동에 효과적인 공격의 무기가 될 여지를 갖고 있었다.

이처럼 정부와 자본의 공격과 노동운동 내부의 잠재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1997년 말 경제위기 이전까지 노동운동은 자신의 조합원들과 시민사회에 대해 리더십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앞서 언급했듯이 민주화라는 정치적 배경과 호황이라는 경제적 상황 이외에 ‘전투적 경제주의’로 상징되는 민주노조운동의 활동에 기인하는 바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전투적 경제주의는 노동운동 리더에게는 변혁을 향한 정치적 행위로서 ‘전투성’이 부각되어 강조되었다면 실리적 조합원들에게는 전투적인 전략을 통한 ‘경제적 실리’를 가져다 주는 것으로 환영받는 측면이 있었다. 따라서 전투적 경제주의는 이 시기에 변혁적 지도부와 실리적 조합원들 양자를 ‘기묘하게’ 만족시킬 수 있었다.

경제위기로 인해 강제된 신자유주의적 시장정책의 도입은 1990년대까지 지속되어 온 개발모델의 가치와 전략들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게 만들고 이것은 권력관계의 변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신자유주의적 시장체제는 특히 노동시장 분절화와 고용불안정 문제를 한국 사회의 핵심

〈표 5-1〉 경제위기 이후 노동운동 리더십과 담론의 전환

	민주화 시기	경제위기 이후
노동운동 리더	순교자, 박해자, 의인	이기주의자, 귀족노조, 경제위기 주범
관련 담론	민주노조, 노동해방, 평등세상	집단이기주의, 노동귀족
요인	민주노조 운동, ‘전투적 경제주의’를 통한 임금, 복지, 권리의 향상	정규직대기업 노동자의 고립, 비정규직 증가, 노동운동 내부정치 실패
정치경제 상황	3저 호황, 권위주의, 개발모델	외환위기, 절차적 민주주의, 신자유주의적 유연화 모델

적인 의제로 만들었다. 즉 이것은 노동자들간의 분단 현상을 심화시킴으로서 노동자들의 단일한 정체성을 갖기 힘들게 만들었으며, 기업별노조하에 고용불안정에 노출된 노동자들이 집합적으로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고용불안정을 해결할 길을 모색하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현상은 기업별노조 체제하에 있는 노동운동이 대표성과 연대성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동안 사회적 인정에 기반해 온 노동운동의 리더십은 점차 의심받기 시작했다. 노동운동이 소수 강자들의 이익을 위한 집단이자 경제위기의 주범이라는 비판이 시민사회에 설득력 있게 유포되면서 노동운동 리더십은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1997년 금융위기 이후 노동운동은 박해자와 약자를 위한 조직이라는 이미지가 걷히고 강자이자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만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로서 인식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귀족노동운동과 일반 노동자들의 이해관계가 제로섬적 관계라는 논리가 설득력을 갖기 시작했다. 즉 대기업 정규직의 임금인상은 바로 중소기업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임금삭감으로 귀결된다는 이데올로기가 설득력 있게 제시되었고 유포되었다. 특히 경제위기와 고용불안의 원인이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이기심에서 비롯된다는 주장으로 확대되면서 노동운동은 경제위기의 책임까지 짊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기정사실화되었다.

어떻게 이러한 인식, 담론, 이데올로기의 전환이 급격히 진행되고 사회적으로 승인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노동시장 유연화와 분절화가 노동자들을 내부적으로 균열시키기 시작했고 그동안 기업별노조를 기반으로 하는 전투적 경제주의에 노동운동에 잠재되어 있던 노동운동의 취약성들이 이것을 계기로 전면화되었기 때문이다. 유연화 공세는 조직된 노동의 저항에 우회하여 노동시장의 가장 취약한 부분, 즉 여성, 비정규직, 중소기업 노동자 등의 비조직적 부분으로 향했고 그 결과 고용불안과 유연화는 이 부분에 집중되었다. 이에 대해 조직노동은 정리해고제 도입, 실업대책, 비정규직법안, 노동시간 단축, 사회정책, 구조조정 등의 유연화와 분절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설계의 노동정치에 참여했지만, 자신들의 무능력과 힘의 부족, 그리고 자본과 정부로부터의 무시를 감수해야

했다. 한편 유연화의 공세 속에서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는 강력한 기업 별노조의 보호 속에 안전하게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와 행위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이 점차 확산되었다.

이처럼, 경제위기 이후 노동운동은 유연화와 분절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보다는 조합원들로부터 사회협약안의 거부, 노동운동 지도부의 내부 부패와 비리,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의 노동자들 간의 균열, 정파와 분파들 간의 생산성 없는 경쟁, 양대 상급노총 간, 지도부와 조합원 간 등의 단절이라는 위기의 징후를 경험해 오고 있었다.

이상의 상황은 기존부터 노동운동에 제기되어 온 ‘경제위기’ 및 ‘국제 사회의 무한경쟁’ 등의 이데올로기와 ‘집단이기주의’ 이데올로기가 비집고 들어올 틈을 만들어 주었다. 기업 연구소들과 보수언론, 그리고 보수주의에 기반한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이들 담론을 이용해 노동운동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특히 2004년 노동운동에 우호적일 것으로 기대된 노무현 대통령도 나서서 노동운동을 집단이기주의라는 병에 걸린 것으로 비판했다. 노동운동 내부에서도 비판이 봇물처럼 터져나왔는데, 제2차 위기논쟁 과정에서 제출된 ‘왕자병 걸린 노동운동’이라는 비판이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결과 노동운동은 약자를 위한 투쟁으로부터 강자의 이익을 위한 투쟁으로, 노동운동을 규정하는 담론은, 의인으로부터 귀족노조 또는 이기주의 집단으로 전환되었다.

2. 성찰과 토론

민주화 시기에 민주노조 리더들은 약자와 국민을 위한 순교자로 인식되었고, 민주노조는 ‘전투적 경제주의’에도 불구하고 국민적·대중적 프로그램의 실현자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경제위기 이후 노동운동 리더들은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은 노동운동에 대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이기주의자’ 또는 ‘귀족노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것은 노동운동 리더들의 활동이 ‘국민적·대중적’ 이익, 즉 보편적 이익이 아니라 특정이익을 대변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국의 노동운동 리더십의 위기는 정

당성의 위기로서 노동운동을 규정하는 ‘귀족노조’ 또는 ‘이기주의 집단’이라는 담론이 사회적으로 승인되어 정치적 효과를 갖는 데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노동운동에게 이러한 불명예스럽고 치욕적인 스티그마를 갖게 했는가? 이것은 두 가지 차원에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는, 어떤 담론이 생성되고 영향력을 갖게 되는 데 기반이 되는 근거, 즉 수긍할 만한 객관적인 ‘사실들’에 대한 논의이다. 왜냐하면 담론은 객관적인 사실을 재료로 해서 만들어진 특정한 의도를 갖는 해석 체계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이 담론이 사회적으로 유통되게 하는 일종의 권력 또는 권력 관계의 기제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이것이 논의되어야 하는 이유는 담론이 승인되어 효과를 발휘하는 데는 특정한 의도를 갖는 권력 또는 권력 관계를 전제한 전략 또는 통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선 이기주의 담론이 자라날 수 있는 토양은 무엇인가? 그것은 크게 두 가지 사실에 기인한다. 첫째, 노동시장 분절화에 앞에서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만이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객관적인 사실이다. 그리고 둘째, 그동안 노동운동이 임금인상의 정치에 몰입함으로써 시장에서 탈락한 노동자들이 사회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 또는 사회보장의 사회 제도를 만드는 데 기여해 오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두 가지 사실들은 대기업 정규직 노동조합이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정치에만 몰입하여 다른 노동자들, 즉 중소기업 조직 노동자와 비조직 노동자들은 물론이려니와 국민들의 이익에 무관심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들’ 중에 첫 번째 것은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즉 기업별노조와 관련이 있다면, 두 번째 것은 노동조합의 성격 및 전략, 즉 실리주의적 노동조합주의와 관련이 있다.

이상의 사실들을 참조한다면 노동운동이 이기주의자라는 정치적 낙인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대안들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기업별노조에 대한 대안으로서 산별노조 건설이고 실리주의적 노동조합주의에 대한 대안으로서 사회적 노동조합주의 또는 변혁적 노동조합주의이다.

산별노조 전환과 관련하여 보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미 노동운동은 산별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었고 현재 민주노총 조합원의 70% 이상 그리고 한국노총 조합원의 30% 이상이 산별노조에 조직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왜 산별노조가 대안으로 다시 등장하는가? 그것은 현재의 산별노조가 산별노조로의 선언과 이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업별노조의 잔재, 즉 구조, 의식, 행태의 그늘 아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별노조와 관련해서 우선 형태뿐만 아니라 내용까지도 진정한 산별노조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진정한 전환과 관련하여 계급적 차원의 단결과 통일성 확보와 비정규직을 포괄하는 연대성의 추구는 물론, 산업 내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임금조건 및 노동조건의 통일적 구조를 만드는 것을 지향해야 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조직형태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노동과 자본이 산별 노동조합을 승인하도록 만들어야 하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노동조합은 기업주들 및 정부와 임단협 및 정치적 요구들을 관철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실리주의적 노동조합의 극복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노동조합주의, 변혁적 노동조합주의, 사회운동적 노동조합주의 등의 다른 이름으로 다소 차별적인 내용의 대안이 그동안 도출되었다. 약간의 내용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은 공통적으로 모두 노동자 계급연대와 보편적 계급으로서의 노동자에 대한 대표성의 회복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세력들과 연대를 통해 사회적 문제에 개입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다면 연대와 개입 그리고 진보와 변화의 방향은 무엇인가? 이것은 노동조합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를 우선적으로 필요로 한다. 그동안 한국 노동운동 지도부의 이념적 정체성이 불분명하거나 정립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정파들간의 토론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즉 “정파별로 사고하고, 정파별로 판단하고, 정파별로 실천하는 내부정치의 구조”(배규식 외, 2008: 371) 속에 있었고, 따라서 이념에 따라 정책과 실천이 제시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우선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가운데, 이러한 자신의 정체성과 이에 기반한 어젠다는 외부화되고 수용될 수 있는 정치적·제도적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정치사회에서의 활동을 활성화해야 한다. 정치사회가 “국가의 정책과 조정능력을 시민사회에 전달하고 부과하며 시민사회의 요구와 갈등을 국가에 투영하는 국가와 시민사회의 매개체”(손호철, 2003:

558)이라고 할 때, 이것은 진보정당 또는 시민단체와 정치적 연대를 통한 정치사회에 대한 개입전략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시민사회와의 연대 강화가 모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노동자들의 요구를 기업 내의 문제로 한정하지 말고 노동 이외에 사회 문제, 즉 교육, 주택, 사회보험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이데올로기적 선을 따라 그어졌던 민중운동과 대립하는 시민운동과는 달리, 정책과 어젠다에 초점을 맞추어 ‘민중운동과 함께 가는 시민운동’의 접점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사회공공성이라는 담론하에 노동운동과 시민운동 간의 접점이 만들어지고 만들어질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지식인 운동조직인 대안연대회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결과를 ‘공공성의 위기’로 파악하여 사회공공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2002년 시작된 한국 사회포럼 역시 공공성 강화를 한국 사회의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로 삼고 있다.” 이것은 노동운동의 사회공공성을 위한 투쟁과 접점이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특히 “2003년 11월에는 문화연대, 민주노총, 범국민교육연대, 사회진보연대 등 개혁적·진보적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모여 ‘세계화·시장화를 넘어 사회공공성 운동으로’라는 제목의 공동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이것이 현실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오건호, 2008:379).

한편, 담론의 정치성이 인정된다면, 담론의 생산과 유포를 통한 헤게모니 장악의 전략이 논의되어야 한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담론 생산의 영역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담론 투쟁의 영역, 즉 판매와 유통의 영역에서 논의될 수 있다.

담론 생산과 관련해서는 어떤 어젠다와 정책을 개발할 것인지가 논의되어야 한다. 어젠다는 노동자들의 작업장 내에서의 이익, 즉 임금이나 기업복지뿐만 아니라 계급 전체의 이익 또는 국민으로서의 이익을 확보하는 것이야 한다. 후자와 관련해서는 어젠다를 사회임금의 확대를 넘어서서 삶의 환경과 관련된 어젠다에도 관계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사회공공성의 외연을 넓히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여기서 공공성이라는 것은 정규직 중심의 좁은

이해를 벗어나서 노동자계급 전체의 이해에 눈을 돌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시민사회 전체의 이해, 특히 아동 및 청소년, 여성, 이주노동자, 비정규노동자 등 사회적 배제집단의 인권 및 삶과 연관시켜 사회적 양극화를 완화 혹은 해소하고 사회적 복지를 증진시키려는 담론의 확립이자 이에 기초한 주해석틀 및 이슈(상징)의 형성을 의미한다. 이것은 연대성의 기초가 되지만 연대성은 공공성의 확립으로만은 부족하다. 공공성을 유지시킬 수 있는 관계구조의 확립이 구조적 측면과 행위적 측면 모두에서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은수미, 2005: 164).

이상의 어젠다들과 이와 연관된 담론의 생산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점은 소위 당파적 내용의 지식체계를 동원할 수 있는 유기적 지식인과 그들의 역할이다. 노동운동은 그동안 이 부분의 중요성에 주목하지 않거나 했다고 하더라도 그 실천은 빈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즉 정부와 기업의 연구소나 지식인 네트워크에 비해 노동운동의 연구소와 그 네트워크는 매우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노동조합과 사회단체 또는 진보정당의 연구소를 보다 체계적으로 활성화하고 유기적 지식인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어젠다와 담론은 구체적인 정책을 통해 실현되어야 한다. 이것은 노동운동이 정책을 만들고 동시에 정책형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을 의미한다. 사실 그동안 노동운동이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기간 동안에 새롭게 열린 정치적·정책적 공간을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노동운동은 이제 복지제도의 발전, 사회보험 운영 참여, 교육과 직업능력개발, 공공기관 운영 참여, 경제사회정책 참여 등 큰 틀에서 국가의 사회적 운영체제(governance)에 참여하는 구조 구축과 그런 참여구조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확보하는 매개로 활용하는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배규식 외, 2008: 245).

담론투쟁의 영역과 관련해서는 첫째, 소위 ‘조중동’으로 불리는 보수언론과 다양한 자본과 국가의 매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함께 대안언론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이것은 향후 인터넷을 활용하는 것에서부터 대안매체의 창출까지 다양하게 모색되어야 한다. 그리고 둘째, 조합원뿐만 아니라 일반 노동자 또는 국민들이 지배담론에 길들여지지 않도록 다양

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이것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내부민주주의 활성화와 함께 사회적 연대를 통한 시민사회와 정치사회에 대한 노동운동의 개입일 것이다.

참고문헌

- 강수돌·황기돈(1992), 『노동운동의 위기인가 노동운동론의 위기인가』, 『사회평론』, 제9, 10호.
- 강순희(1998), 『한국의 노동운동: 1987년 이후 10년간의 변화』, 한국노동연구원.
- 고세훈(2003), 『국가와 복지』, 아연출판부.
- 구해근(2001), 『한국 노동계급의 연구』, 창작과 비평사.
- 김동춘(1995), 『한국노동자연구』, 역사비평사.
- 김석준(2003),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진전』, <http://www.ohmybusan.com/>.
- 김세균(1998), 『한국민주주의와 노동자·민중정치』, 현장에서 미래를.
- _____(2001), 『한국에서 진보정당의 창설 및 의회진출 가능성에 대한 연구』(1998~99년도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지원논문), www.assembly.re.kr/html/98-99kims.htm.
- 김수행(2005), 『알기 쉬운 정치경제학』, 서울대출판부.
- 김승호(2004), 『한국 당대 노동운동의 평가와 과제』(사회진보연대 진보강좌 제4강).
- 김유선(2004. 3),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 구조변화』, 『아세아연구』 47 (1) 통권115호, pp.71~86.
- 김정훈(2000. 5), 『한국전쟁과 담론정치』, 『경제와 사회』, 제46호, pp.142~168.
- 김 준(1989), 『제6공화국의 노동통제정책』, 『경제와 사회』, 1989년 여름·가을.
- _____(1998), 『노동조합활동의 개선을 위한 모색』, 『희망찬 21세기를 열기 위한 노동조합활동』,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_____(2001), 『노동운동의 성장과 좌절』, 최영기 외, 『1987년 이후 한국의 노동운동』, 한국노동연구원.

- 김진균(2003. 1) 편저, 『저항, 연대, 기억의 정치 1』, 문화과학사.
- 김형기(1989), 『한국자본주의와 노동자계급』, 『한국사회 노동자연구 1』, 백산서당.
- 김호정(2001), 『변혁적 거래적 리더십이 조직 몰입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학회보』 35 (2).
- 노동부(1988. 2), 『1988 노사분규 사례』, 노동부.
- _____(1988a), 『1987년 여름의 노사분규평가보고서』, 노동부.
- 노중기(1995), 『국가의 노동통제전략에 관한 연구: 1987~1992』, 서울대 사회학과 박사논문.
- _____(1998), 『현실과 원칙의 혼동을 경계하며』, 『노동과 세계』, 제38호.
- 노희찬(2000), 『한국에서의 노동정치: 지난 10여년간의 진보정당운동과 새로운 도전』, 성공회대 사회교육원, 노동자와 정치특강 5, 사이버 NGO 자료관.
- 노천수(1994), 『민주노조운동의 결집과 조직적 전진』, 한국민주노동자연합 위임, 『1970년대 이후 한국노동운동사』 동년.
- 민경식·조정찬·노동부 공보실(1987), 『노동법 개정과 향후 정책방향』, 『노동』, 12월호.
- 박 동(2000), 『한국 노동체제의 변화와 사회협약의 정치에 관한 연구: 1987~1998』,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논문.
- _____(2002), 『한국노총 독자정당 창당의 조건과 전망』, 『2002년 대선, 한국노동자의 선택과 개혁적 국민정당』, 한국노총 대선선택을 위한 심포지엄(2002. 9. 5).
- 박병상(1997), 『한국의 진보정당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논문.
- 박상훈(2003), 『‘3김 청산론’의 담론동맹과 그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중심으로』, 조희연 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론과 민주주의의 동학』, 함께읽는책.
- 박승욱(1992a), 『한국의 노동운동 과연 위기인가』, 『창작과 비평』, 20 (2), 창작과 비평사.
- _____(1992b), 『‘사회발전적 노동운동’ 비판에 대한 답변』, 『사회평론』,

12월호.

_____(2004), 「‘왕자병’ 걸린 노동운동, 이대로 가면 죽는다」, 프레시안
(<http://www.pessian.com/>).

박승호(1992c), 「전투적 민주노조운동의 조합주의적 한계를 시급히 극복
하자」, 『노동운동』, 전국노동운동협의회.

박영균(2003), 「한국 진보주의의 최근 논의와 방향: 노동자계급 정치운
동의 모색이라는 관점에서」, 『민주주의는 종료된 프로젝트인가』,
학단협.

배규식(2005), 「노동조합 지배구조의 위기」, 『노동리뷰』, 한국노동연구원.

부천상공회의소 편(1987), 『불순노동운동: 수도권지역 활동상과 실체』.

삼성경제연구소(1998), 『IMF와 한국경제』.

서중석(2004), 「민주노동당은 역사에서 배워야 한다」, 『역사비평』, 가을.

손호철(1999), 『신자유주의 시대의 한국정치』, 푸른숲.

_____(2003), 『현대한국정치: 이론과 역사(1945~2003)』, 사회평론.

신광영(2003), 「복지정책의 변화와 한국의 복지개혁」, 『사회복지와 노동』,
통권 6호.

신구범(2007. 3), 「리더십 대체이론에 대한 연구」, 『인적자원관리연구』
14(1), pp.97~108.

심용보(1995), 「노동조합 지도자의 지도성에 대한 조합원의 인지가 노조
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 대학원 석사논문.

엄주웅(1994), 「노동운동의 폭발적 고양과 민주노조운동의 구축」, 한국민
주노동자연합 엮음, 『1970년대 이후 한국노동운동사』, 동녘.

여인길·김성수(2005), 「리더십 유형이 신뢰의 역할에 따라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대한경영학회지』 49, pp.557~581.

유범상(1996), 「폴란차스의 푸코 비판과 수용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
원 석사논문.

_____(2005), 『한국의 노동운동이념: 이념의 과잉과 소통의 빈곤』, 한국
노동연구원.

윤기설(1996), 『제5권력』, 한국경제신문사.

윤진호 외(1999),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조합의 정책과제』, 전국민주노동

조합총연맹.

- 은수미·오학수·윤진호(2008), 『비정규직과 한국 노사관계시스템 변화 (Ⅱ): 한·미·일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 이민영(1998),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조합원 의식조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 이병천(1999) 『박정희 정권과 발전국가 모형의 형성』, 『경제발전연구』 5 (2).
- 이병훈·유범상(1999), 『한국노동정치의 새로운 실험』, 한국산업노동학회, 『산업노동연구』 4 (1).
- 이영민(1988), 『노동자 대투쟁을 통해 본 현단계 한국노동운동의 과제』, 죽산.
- 이원보(1998), 『조직운영과 일상활동 개선방안』, 『희망찬 21세기를 열기 위한 노동조합활동』,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임승범(2003),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의 민주성』,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석사논문.
- 임영일(2003),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노동체제의 전환』, 임영일 외,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노동운동: 1997~2001』, 한울.
- 임영일·임호(1993), 『87년 이후 노동자층의 의식변화와 노사관계』, 『경제와 사회』, 제17호.
- 임혁백(2005), 『한국 자본주의의 성격과 노사관계』, 임상훈 외, 『한국형 노사관계 모델(Ⅰ)』, 한국노동연구원.
- 장태운·박찬식(2001), 『리더십 유형이 조직구조와 조직성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인적자원관리연구』, 제3호.
- 전국노동조합협의회(1997), 『전노협백서 1』, 전노협백서발간위원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1996), 『사업보고』, 민주노총.
- _____(1997b), 『사업보고』, 민주노총.
- _____(1999), 『사업보고』, 민주노총.
- 정승국(1992), 『전투적 노동조합주의자들의 현실인식 비판』, 『사회평론』, 3월호.
- 정영태(1999), 『한국노동조합의 정치세력화와 선거참여』, 『노동자 정치세력화 진단과 모색』,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_____(2006), 『노동자의 정치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정치의식 조사 결과: 한국노총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 정태석 외(1993), 『한국의 시민사회와 민주주의의 전망』, 『한국 민주주의의 현재적 과제·제도, 개혁 및 사회운동』, 학술단체협의회 제6회 연합 심포지엄 논문집, 창작과 비평사.
- 조희연 편(2003), 『저항론의 변화와 분화에 관한 연구』, 김진균 편저, 『저항, 연대, 기억의 정치』, 문화과학사.
- _____(2004), 『한국의 정치사회적 저항담론과 민주주의 동학』, 함께읽는 책.
- 최규엽(1992), 『사회발전적 노동운동론을 비판한다』, 『노동운동』, 전국노동운동협의회.
- 최영기(2002), 『구조조정기 노동개혁의 평가와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최영기·유범상(2001), 『사회협의 시스템과 노사관계의 갈등조정: 한국에서의 사회적 협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9 (4), 한국행정연구원.
- 최영기·전광식·이철수·유범상(2000), 『한국의 노동법 개정과 노사관계』, 한국노동연구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1997. 2), 『한국노총 중간평가서』, 한국노총.
- _____(1998), 『사업보고』 한국노총.
- _____(1999), 『사업보고』 한국노총.
- 한국노총 서울특별시지역본부(1998), 『한국노총 서울본부 30년사』.
- 홍광식(1997), 『카리스마리더십과 Bass의 변혁형 리더십의 비교분석』, 『교육행정학 연구』 15 (2).
- 홍상태(2000), 『경영자의 리더십이 조직 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인적자원관리연구』, 창간호.
- 홍성구(2004), 『코포라티즘적 계급정치와 언론보도』, 『언론과 사회』, 12 (4).

Burawoy, M.(1985), *The Politics of Production*, Verso Books.

Foucault, M.(1972), "The Discourse on Language," *The Archaeology of Knowledge*, Harper Torchbooks, 이정우 역 (1993), 『담론

- 의 질서』, 새길,
_____(1990), 『지식인과 권력』, 이정우 편역, 『구조주의를 넘어서』, 인간
사.
Ramasway, E. A. & U. Ramasway(1981), 『노동조합운동론의 제유형』,
정인 엮음, 『노동조합운동론』, 거름.

◆ 著者

• 유범상

- 서울대 정치학 박사
-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강사

한국 노동운동 리더십의 위기

- '이기주의자'라는 '정치적 낙인'에 관한 논의 -

- | | |
|-----------|--|
| ▪ 발행연월일 | 2008년 10월 20일 인쇄
2008년 10월 24일 발행 |
| ▪ 발 행 인 | 박 기 성 |
| ▪ 발 행 처 | 한국노동연구원
11500-74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길 35
☎ 대표 (02) 785-5080 Fax (02) 3775-0697 |
| ▪ 조판 · 인쇄 | 고려문화사 (02) 2277-1508 |
| ▪ 등 록 일 자 | 1988년 9월 13일 |
| ▪ 등 록 번 호 | 제13-155호 |

© 한국노동연구원 정가 11,000원

ISBN 978-89-7356-725-6